



2022-2027 유아교육·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문무경·양미선·송기창·김문정

2022-2027 유아교육·보육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저 자

문무경, 양미선, 송기창, 김문정

연구진

연구책임자 문 무 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양 미 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송 기 창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김 문 정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연구보고 2021-10

2022-2027 유아교육·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786-2999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90485-92-0 9337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리말

정부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유아교육 발전 기본 계획 및 보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다. 기존의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은 유보통합 및 격차해소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이원화체제에 기초하여 각각 별도로 수립되어 왔다. 이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보다 통합적 관점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부문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중장기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발전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 발전 방향 탐색을 위한 대내외 육아정책 환경변화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코로나19 팬데믹, 기후환경 위기, 디지털 전환,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사회변화가 유아교육과 보육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였다.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향후 방향 설정을 위하여 전국단위 대국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 권역별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향후 정책의 방향성과 핵심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현장, 학계, 공무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조사결과와 정책 제안이 향후 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정책 수립과 실행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21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요약	1
I.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 내용	18
3. 연구 방법	19
II. 국내외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동향과 미래환경 변화 전망	25
1. 관련 주요 통계	27
2. 주요 관련정책	45
3. 미래환경 변화 전망	64
III. 현 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성과와 한계 분석	73
1.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추진 성과와 한계	75
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추진 성과와 한계	82
3. 소결	90
IV. 2022-2027 유아교육과 보육 발전 방향과 정책과제	
관련 의견 및 요구 분석	93
1. 대국민조사 결과	95
2. 학계전문가 조사결과	159
3. 공무원 조사결과	173
4. 조사결과 비교분석	189
5. 권역별 정책토론회 및 자문회의 주요 결과	194
V. 2022-2027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발전 방안	203
1.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방향성	205
2. 핵심 정책과제	208
3. 누리과정 소요 재정 추계	211

참고문헌	221
-------------	------------

Abstract	225
-----------------	------------

부록	227
-----------	------------

부록 1. 다부문 전문가 서면자문(심층면담) 질의서	227
부록 2. 유아교육·보육 학계 전문가 조사 설문지	229
부록 3. 시도교육청 담당공무원 조사 설문지	236
부록 4. 시도청 담당공무원 조사 설문지	244
부록 5. 대국민 조사 설문지	252



표 목차

〈표 Ⅰ-3-1〉 다부문 전문가 협의회 구성	19
〈표 Ⅰ-3-2〉 설문조사 내용	21
〈표 Ⅰ-3-3〉 권역별 정책토론회 개요	22
〈표 Ⅰ-3-4〉 자문회의 개최 개요	22
〈표 Ⅱ-1-1〉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추이(2011-2020)	27
〈표 Ⅱ-1-2〉 0~6세 주민등록인구 추이(2011-2020)	29
〈표 Ⅱ-1-3〉 유치원·어린이집 수 추이(2011-2020)	30
〈표 Ⅱ-1-4〉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 추이(2011-2020)	32
〈표 Ⅱ-1-5〉 설립유형별 유치원 수 추이(2011-2020)	33
〈표 Ⅱ-1-6〉 설립유형별 유치원 원아 수 추이(2011-2020)	35
〈표 Ⅱ-1-7〉 연령별 유치원 원아 수 추이(2011-2020)	36
〈표 Ⅱ-1-8〉 연도별 유치원 교원 수 추이(2011-2020)	37
〈표 Ⅱ-1-9〉 직위별 유치원 교원 수 추이(2011-2020)	38
〈표 Ⅱ-1-10〉 자격별 유치원 교원 수 추이(2011-2020)	38
〈표 Ⅱ-1-11〉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수 추이(2011-2020)	39
〈표 Ⅱ-1-12〉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추이(2011-2020)	40
〈표 Ⅱ-1-13〉 연령별 어린이집 원아 수 추이(2011-2020)	42
〈표 Ⅱ-1-14〉 설립유형별 보육교직원 수 추이(2011-2020)	43
〈표 Ⅱ-1-15〉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 추이(2011-2020)	44
〈표 Ⅱ-2-1〉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주요 내용	46
〈표 Ⅱ-2-2〉 미래교육 전환 10대 정책과제(안) 중 유·초·중등교육 관련 내용 ..	48
〈표 Ⅱ-2-3〉 OECD의 핵심기반 중 인지적 기반의 요소와 정의	52
〈표 Ⅱ-2-4〉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주요 내용	56
〈표 Ⅱ-2-5〉 제2차 아동종합기본계획 중 유아교육·보육 관련 정책	58
〈표 Ⅱ-2-6〉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유아교육·보육 관련 정책 ..	61
〈표 Ⅱ-2-7〉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안)의 주요 내용	63
〈표 Ⅲ-2-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83
〈표 Ⅲ-2-2〉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국비 지원 단가	83
〈표 Ⅲ-2-3〉 보육지원체계 개편 전후 하원시각 변화: 부모대상	85
〈표 Ⅲ-2-4〉 연도별 보육료 지원단가	85

〈표 Ⅲ-2-5〉 보조대체교사 채용 현황 및 예산	87
〈표 Ⅲ-2-6〉 평가(인증) 추이	88
〈표 Ⅲ-2-7〉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및 예산	89
〈표 Ⅲ-3-1〉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2017-2020)	91
〈표 Ⅳ-1-1〉 응답자 특성: 전체	95
〈표 Ⅳ-1-2〉 응답자 특성: 영유아 부모	96
〈표 Ⅳ-1-3〉 성과가 높다고 인식하는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1순위)	97
〈표 Ⅳ-1-4〉 성과가 높다고 인식하는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1+2+3순위)	98
〈표 Ⅳ-1-5〉 정책 이행 수준에 대한 인식 (N=918)	99
〈표 Ⅳ-1-6〉 정책 이행 수준에 대한 인식: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	100
〈표 Ⅳ-1-7〉 정책 이행 수준에 대한 인식: 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100
〈표 Ⅳ-1-8〉 정책 이행 수준에 대한 인식: 취약계층 영유아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확대	101
〈표 Ⅳ-1-9〉 정책 이행 수준에 대한 인식: 유치원과 어린이집 서비스 질 제고 ..	102
〈표 Ⅳ-1-10〉 정책 이행 수준에 대한 인식: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및 운영 ..	103
〈표 Ⅳ-1-11〉 정책 이행 수준에 대한 인식: 사교육 억제 및 놀이와 쉼 중심 프로그램 ..	103
〈표 Ⅳ-1-12〉 정책 이행 수준에 대한 인식: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돌봄 기능 확대 ..	104
〈표 Ⅳ-1-13〉 정책 이행 수준에 대한 인식: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안전	105
〈표 Ⅳ-1-14〉 정책 이행 수준에 대한 인식: 아동 수당 지원	106
〈표 Ⅳ-1-15〉 정책 이행 수준에 대한 인식: 코로나19 대응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역 ..	106
〈표 Ⅳ-1-16〉 유아교육과 보육 만족도: 유아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107
〈표 Ⅳ-1-17〉 유아교육과 보육 만족도: 보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108
〈표 Ⅳ-1-18〉 정책별 만족도	108
〈표 Ⅳ-1-19〉 유아교육과 보육 만족도: 영아보육료 지원 수준	109
〈표 Ⅳ-1-20〉 유아교육과 보육 만족도: 누리과정 지원비 수준	109
〈표 Ⅳ-1-21〉 유아교육과 보육 만족도: 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충실성 ..	110
〈표 Ⅳ-1-22〉 유아교육과 보육 만족도: 교사교육 및 전문성 강화	111
〈표 Ⅳ-1-23〉 유아교육과 보육 만족도: 부모와의 소통 및 참여 수준	112
〈표 Ⅳ-1-24〉 유아교육과 보육 만족도: 교사 대 아동 비율	112
〈표 Ⅳ-1-25〉 유아교육과 보육 만족도: 급간식의 질적 수준	113
〈표 Ⅳ-1-26〉 유아교육과 보육 만족도: 시설환경	114
〈표 Ⅳ-1-27〉 유아교육과 보육 만족도: 돌봄서비스	114
〈표 Ⅳ-1-28〉 유아교육과 보육 만족도: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115

〈표 IV-1-29〉 유아교육과 보육 만족도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의무 평가제 전환	115
〈표 IV-1-28〉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방향 설정 시 고려할 사회 변화(1순위)-전체	116
〈표 IV-1-29〉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방향 설정 시 고려할 사회 변화(1+2순위) -전체	117
〈표 IV-1-30〉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방향 설정 시 고려할 사회 변화(1순위) -영유아부모	118
〈표 IV-1-31〉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방향 설정 시 고려할 사회 변화(1+2순위) -영유아부모	118
〈표 IV-1-32〉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방향 설정 시 고려사항(1순위)-전체 ..	119
〈표 IV-1-33〉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방향 설정 시 고려사항(1+2+3순위) -전체	121
〈표 IV-1-34〉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방향 설정 시 고려사항(1순위)-영유아부모 ·	122
〈표 IV-1-35〉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방향 설정 시 고려사항(1+2+3순위) -영유아부모	122
〈표 IV-1-36〉 영유아기에 함양해야 할 역량 및 기술(1순위)-전체	123
〈표 IV-1-37〉 영유아기에 함양해야 할 역량 및 기술(1+2+3순위)-전체	124
〈표 IV-1-38〉 영유아기에 함양해야 할 역량 및 기술(1순위)-영유아부모	125
〈표 IV-1-39〉 영유아기에 함양해야 할 역량 및 기술(1+2+3순위)-영유아부모 ·	126
〈표 IV-1-40〉 정책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시기-전체	127
〈표 IV-1-41〉 정책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시기-영유아부모	128
〈표 IV-1-42〉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 할 정책 과제 중요도 (1순위)_전체 ·	130
〈표 IV-1-43〉 5년간 정부가 추진 할 정책 과제 중요도: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 완성(0-5세)	130
〈표 IV-1-44〉 5년간 정부가 추진 할 정책 과제 중요도: 만5세 의무무상교육 ·	131
〈표 IV-1-45〉 5년간 정부가 추진 할 정책 과제 중요도: 유아교육과 보육의 체제 통합	132
〈표 IV-1-46〉 5년간 정부가 추진 할 정책 과제 중요도: 취약계층 영유아와 가정 지원 강화	134
〈표 IV-1-47〉 5년간 정부가 추진 할 정책 과제 중요도: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135
〈표 IV-1-48〉 5년간 정부가 추진 할 정책 과제 중요도: 틈새없는 돌봄서비스 제공 ·	136

〈표 IV-1-49〉 5년간 정부가 추진 할 정책 과제 중요도: 아동학대 예방	137
〈표 IV-1-50〉 5년간 정부가 추진 할 정책 과제 중요도: 부모의 자녀양육 역량 강화 지원	138
〈표 IV-1-51〉 5년간 정부가 추진 할 정책 과제 중요도: 초등학교교육과의 연계 강화	139
〈표 IV-1-52〉 5년간 정부가 추진 할 우선 정책 과제	141
〈표 IV-1-53〉 5년간 정부가 추진 할 우선 정책 과제(1+2+3+4+5순위)	142
〈표 IV-1-54〉 5년간 정부가 추진 할 정책 과제 중요도: 요구와 참여를 반영한 교육보육과정 운영	143
〈표 IV-1-55〉 5년간 정부가 추진 할 정책 과제 중요도: 우수한 교사 채용, 근속을 위한 처우 개선	144
〈표 IV-1-56〉 5년간 정부가 추진 할 정책 과제 중요도: 원장의 전문성과 리더십 강화	145
〈표 IV-1-57〉 5년간 정부가 추진 할 정책 과제 중요도: 스마트 교육과 돌봄 시설환경	145
〈표 IV-1-58〉 5년간 정부가 추진 할 정책 과제 중요도: 업무 경감을 위한 IOT 보육교육 환경 조성	146
〈표 IV-1-59〉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필요성 - 방과후 및 야간연장보육 이용대상 제한	146
〈표 IV-1-60〉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필요성: 유치원 무료급식 제공	148
〈표 IV-1-61〉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필요성: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확대 ·	149
〈표 IV-1-62〉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필요성: 감염병 대비 방역, 위생 청결, 안전 강화	149
〈표 IV-1-63〉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필요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 및 보육 정책	150
〈표 IV-1-64〉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필요성: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지원, 감독 강화	150
〈표 IV-1-65〉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필요성: 부모참여와 소통 강화	150
〈표 IV-1-66〉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필요성: 다른 아동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	151
〈표 IV-1-67〉 향후 출산 후 보내고 싶은 유아교육·보육 기관(1순위)	152
〈표 IV-1-69〉 영유아교사가 되기 위해 적합한 최소 자격 기준-전체	153
〈표 IV-1-70〉 영유아교사가 되기 위해 적합한 최소 자격 기준-영유아부모 ·	154
〈표 IV-1-71〉 0-1세 영아수당을 고려한 양육방식에 대한 의견-전체	155

〈표 IV-1-72〉 0-1세 영아수당을 고려한 양육방식에 대한 의견-영유아부모	156
〈표 IV-1-73〉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 차이 유무에 대한 인식	157
〈표 IV-1-74〉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차이를 보이는 항목(1순위)	158
〈표 IV-1-75〉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할 이원화 체제 통합 찬성 여부	159
〈표 IV-2-1〉 응답자 특성	159
〈표 IV-2-2〉 지난 4년(2018-2021년)간 유아교육 및 보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향상 정도	160
〈표 IV-2-3〉 지난 4년간(2018-2021년)질적 수준 향상도가 낮다고 응답한 이유 ·	160
〈표 IV-2-4〉 문재인 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별 이행 수준과 성과 우선순위	161
〈표 IV-2-5〉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의 방향 및 목표 설정 시 고려하여야 할 우리 사회의 변화	162
〈표 IV-2-6〉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방향 및 목표 설정에 고려해야할 기타 우리사회의 변화	163
〈표 IV-2-7〉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의 방향 및 목표 설정 시 고려대상 우선순위	163
〈표 IV-2-8〉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방향 및 목표 설정 관련 기타 고려사항	164
〈표 IV-2-9〉 영유아기부터 함양해야 할 능력(역량, 기술 등)	165
〈표 IV-2-10〉 향후 정부가 취학 전 영유아 시기 중 정책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시기	166
〈표 IV-2-11〉 정부가 정책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시기에 대한 이유 ·	166
〈표 IV-2-12〉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영역 주제	168
〈표 IV-2-13〉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영역별 세부과제 제안	169
〈표 IV-3-1〉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173
〈표 IV-3-2〉 지난 4년(2018-2021년)간 유아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향상 정도	174
〈표 IV-3-3〉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2-2027) 세부 핵심과제 실행수준	174
〈표 IV-3-4〉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우선순위 과제_유아교육	175
〈표 IV-3-5〉 시도교육청별 유아교육정책 우수사례 및 현안	176
〈표 IV-3-6〉 지난 4년(2018-2021년)간 보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향상 정도 ·	177

<표 IV-3-7>	제3차 보육 중장기 발전계획(2018-2022) 세부 핵심과제 실행수준	· 178
<표 IV-3-8>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우선순위 과제_보육	····· 179
<표 IV-3-9>	지역별 시도청/군청 보육정책 우수사례 및 현안	····· 179
<표 IV-3-10>	향후 유아교육 방향 및 목표 설정 시 고려하여야 할 우리사회의 변화요소	····· 182
<표 IV-3-11>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방향 및 목표 설정에 고려해야 할 기타 사회변화	····· 183
<표 IV-3-12>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의 방향 및 목표 설정 시 고려대상 우선순위	····· 183
<표 IV-3-14>	미래사회 대비 유아기부터 함양해야 할 능력(역량, 기술 등)	· 185
<표 IV-3-15>	정책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시기	····· 185
<표 IV-3-16>	정책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시기 선정 이유	····· 186
<표 IV-3-17>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주제	····· 187
<표 IV-3-18>	새로이 추가할 필요가 있는 정책주제영역	····· 187
<표 IV-3-19>	향후 정책영역별 포함되어야 할 주요 세부 과제	····· 188
<표 IV-5-1>	권역별 정책토론회 주요 결과	····· 194
<표 IV-5-2>	향후 유아교육·보육 정책 과제(공통)	····· 198
<표 IV-5-3>	향후 유아교육 정책 과제	····· 199
<표 IV-5-3>	향후 보육정책 과제	····· 199
<표 V-3-1>	2015~2020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본통계의 변화 추이	····· 211
<표 V-3-2>	유치원 월평균 학부모부담 교육과정비와 방과후과정비(2021)	· 214
<표 V-3-3>	2022~2027 누리과정 원아수 추정	····· 214
<표 V-3-4>	유아교육·보육료 소요재정 추계	····· 215
<표 V-3-5>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유아교육비 결산 변화추이	····· 216
<표 V-3-6>	국가 보육예산 변화 추이	····· 218
<표 V-3-7>	2015~2019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유아교육비 결산액 변화 추이	· 219
<표 V-3-8>	2016~2021 보육예산의 변화와 연평균 증감률	····· 219



그림 목차

[그림1] 연구추진체계 및 방법	3
[그림 I-3-1] 연구추진체계 및 방법	23
[그림 II-1-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2011-2020)	28
[그림 II-1-2] OECD 합계출산율(Fertility rates)	28
[그림 II-1-3] 0~6세 및 4-6세 주민등록인구 추이(2011-2020)	30
[그림 II-1-4] 최근 10년간 유치원·어린이집 수 비교	31
[그림 II-1-5]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와 기관 이용률	32
[그림 II-1-6] 연령별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2020)	33
[그림 II-1-7] 설립유형별 유치원 수 추이(2011-2020)	34
[그림 II-1-8] 설립유형별 유치원 원아 수 추이(2011-2020)	35
[그림 II-1-9] 연령별 유치원 원아 수 추이(2011-2020)	36
[그림 II-1-10] 연도별 유치원 교원 수 추이(2011-2020)	37
[그림 II-1-11]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수 및 비율 추이(2011-2020)	40
[그림 II-1-12]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원아 수 및 비율 추이(2011-2020)	41
[그림 II-1-13] 연령별 어린이집 원아 수 추이(2011-2020)	42
[그림 II-1-14] 설립유형별 보육교직원 수 추이(2011-2020)	44
[그림 II-2-1]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추진 방향	45
[그림 II-2-2]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47
[그림 II-2-3]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	50
[그림 II-2-4]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기본방향	55
[그림 II-2-4]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주요 내용	56
[그림 II-2-5]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 정책체계도	57
[그림 II-2-6]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체계도	60
[그림 II-2-7]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안)의 추진 방향	62
[그림 III-1-1]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	76
[그림 III-1-2]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사용 절차 간소화	81
[그림 III-2-1] 보육지원체계 개편	84
[그림 IV-1-1]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방향 설정 시 고려할 사회 변화(1순위)_ 일반국민과 영유아부모	119

[그림 IV-1-1]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방향 설정 시 고려할 사회 변화(1순위)_ 일반국민과 영유아부모	123
[그림 IV-1-2] 미래사회 대비 영유아기 함양해야할 역량 및 기술(1순위)_ 일반국민과 영유아부모	126
[그림 IV-1-3] 정책적 역점을 두어야 할 시기_일반국민과 영유아부모	129
[그림 IV-1-4]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할 우선순위 정책과제(1순위)_일반국민	143
[그림 IV-1-5] 향후 출산 후 자녀를 보내고 싶은 기관 선택기준(1순위)_ 일반국민(미혼)	152
[그림 IV-1-6] 0-1세 영아수당 이용 여부_일반국민과 영유아 부모	156
[그림 IV-4-1]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방향 설정 시 고려할 사회 변화(1순위) 비교	190
[그림 IV-4-2]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방향 설정 시 고려사항(1순위) 비교 ..	191
[그림 IV-4-3] 영유아기에 함양해야 할 역량 및 기술(1순위) 비교	192
[그림 IV-4-4] 미래사회 변화 고려 시 정책적으로 가장 역점을 둘 시기 비교 ..	192
[그림 IV-4-5] 향후 포함해야 할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영역 주제 비교	193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수행됨.
- 전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의 영향,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등의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방향성과 비전 제시가 요구됨.
- 그간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은 현재의 이원화체제에 기초하여 각각 별도로 수립되어 옴으로 인하여 종합적, 통합적 관점에서 중장기 발전 방향과 정책 과제 제시 및 국가정책 수립에 기여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중장기 발전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지난 정부의 주요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과 요구를 파악, 수렴함으로써, 향후 정책 방향성을 도출하고 향후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공통과제와 유아교육과 보육 부문별 세부 정책과제와 누리과정 소요예산을 제시하고자 함.

나. 연구 내용

-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과 제3차 보육 중장기 발전계획(2018-2022)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과 추진과제 성과와 한계 분석
- 육아정책 환경 및 미래사회 변화 전망 및 해외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동향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발전 방향 및 핵심 정책과제 등에 대한 다양한 관계집단의 의견과 요구 분석
- 2022-2027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발전 방안 제시
 -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의 방향성 및 핵심과제와 추진 전략, 누리과정 소요예산 추계결과 제시

다. 연구 방법

☐ 관련 통계현황 분석 및 유관 국내외 문헌 분석

☐ 다부문 전문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의 대내외 환경변화를 전망하기 위하여 교육일반, 과학기술, 경제, 의료보건, 여성가족, 문화예술, 건축공간 등의 다양한 유관 부문, 총 14명 내외로 전문가 협의회 구성 및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서면자문 방식으로 운영함.

☐ 학계전문가 의견조사

- 총 56명 참여(유아교육 전문가 29명과 보육 전문가 27명)
- 현 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성과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 목표와 정책과제, 우선순위, 전략 등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함.

☐ 시도청과 시도교육청 담당공무원 조사

- 17개 시도청과 시도교육청 담당공무원(과장, 보육팀장, 장학관 중심) 대상 각각 20명씩, 총 40여명으로 온라인 조사, 총 28명 참여(시도청 16명, 시도교육청 12명)
- 지난 4년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성과와 및 향후 중장기 발전을 위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비전, 목표, 우선 정책과제, 시도별 정책현안 및 우수사례 등

☐ 대국민 설문조사

- 일반국민 총 3,000여명 대상으로 전국 17개시도 인구수에 비례하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세대별, 성별로 표집, 총 3,115명 응답.
- 출생부터 초등 1학년까지 어린자녀를 둔 부모를 자녀연령대별로 할당하여 1,001명 포함 및 특히, 미래세대 부모가 될 10대(15세-19세)를 포함하였으며, 10대부터 40대까지 미혼인 국민을 약 1,000명 포함함.
- 조사내용: 미래사회(향후 5~10년간) 영유아기에 필요한 역량,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비전, 정책과제별 중요도, 기관 선택기준 등

☐ 권역별 정책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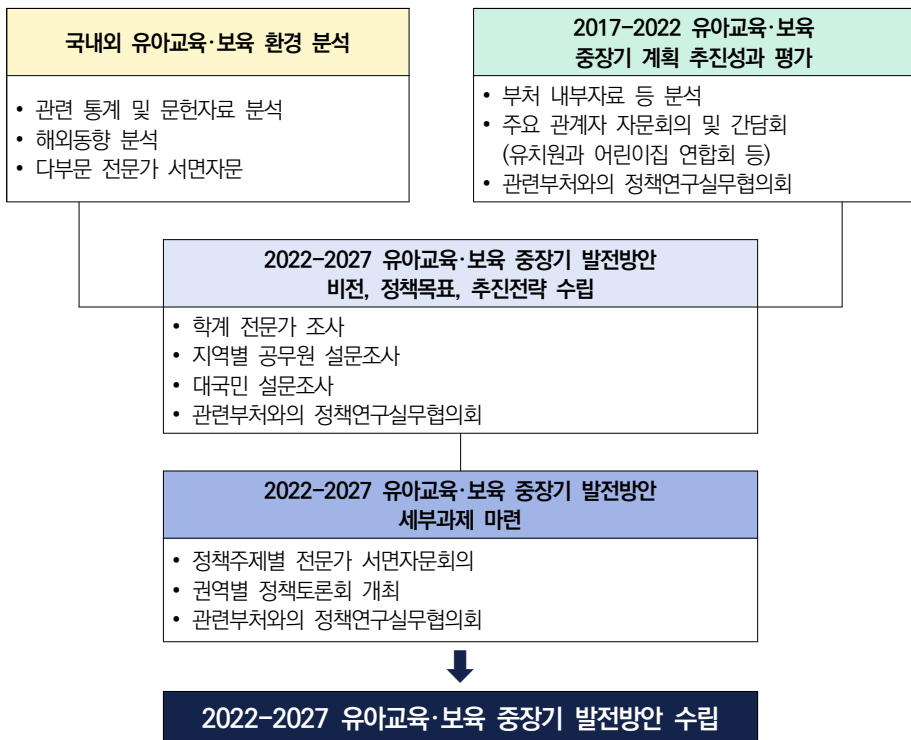
- 4개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로 각 20명씩 약 80여명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개최함.

- 주요 조사결과 공유 및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안)에 대한 권역별 시도청, 시도교육청 공무원, 유아교육진흥원, 유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 학계전문가, 현장교원의 의견 수렴

□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 주무부처인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의 의견 수렴

[그림1] 연구추진체계 및 방법



2. 국내외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동향 및 미래환경 변화 전망

가. 관련 주요통계

- 0~6세 영유아 수는 2020년 기준 256만명으로 10년 전보다 65만여명 감소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2020년 기준 총 1856,934명으로 0~6세 영유아 수 중 48.6%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음. 이는 2011년

42.0%에서 6%p가 상승한 것임.

□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는 2020년 기준 총 44,057개임(유치원 8,705개원, 어린이집 35,352개소).

- 유치원 수는 누리과정 지원 확대에 따라 2011년 8,424개원에서 2017년 9,029개원까지 증가함. 2018년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로 사립유치원이 줄 폐원하면서 2020년 8,705개원으로 감소함.

- 어린이집 수는 2012년 0~2세 무상보육으로 보육 수요가 늘면서 가정어린이집 중심으로 큰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3년 누리과정 3~4세 확대, 0~5세 전제층 양육수당 지원 등으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크게 줄고, 3~5세아는 유치원으로 이동하여 크게 감소함.

나. 주요 관련정책

□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교육회복 종합방안,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 시안 등이 발표됨.

□ 또한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발표하여 학생 선택권 확대,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 디지털기반 교육지원 교육과정 다양성 확대, 놀이·학습연계 등 발달수준에 대한 고려 등을 강화함.

□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통하여 학생 선택과 웰빙을 고려한 수업, 휴식, 감성, 놀이공간으로서의 '공간혁신', 교수학습 자원을 확장하고 개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술 기반의 '스마트한 학습환경', 친환경 · 생태학습 장으로서의 '그린학교', 지역사회와 연계된 '학교 복합화'를 통해 미래형 학교를 구현하고자 함.

□ 아동중심 공적 보호·돌봄체계 구축을 골자로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4), 개인의 '삶의 질 제고 전략'으로 기본관점으로 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함.

□ 취학 전 아동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의 장애아동 종합대책(안)(2021)을 발표하여 장애의 조기 발견-개입-치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장애아동의 의무교육 권리 보장 등 장애아동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다. 미래환경 변화 전망

- 인구구조의 변화, 세대변화에 따른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 변화, MZ세대와의 세대간 갈등, 경제 성장률 저하와 고용률 감소, 지방소멸 위험과 지역 격차 등 여러 위기요인에 당면해 있음.
-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정보와 기술과학의 발전 및 팬데믹으로 인한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과 디지털 환경 구축에 대한 수요 가속화.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가 요구됨.
- 코로나19 팬데믹은 심각한 돌봄 공백을 초래하여 영유아 양육에서 부모와 지역사회와의 역할을 재조명, 비대면 방식 교육과 돌봄 수요 증가로 인한 원격교육 실시, 교사 대응역량 강화, 영유아 안전과 위생 강화, 취약계층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의 연속성 보장과 격차 해소 등이 필요함.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영유아부문 지속가능발전목표 국내 이행과 모니터링 필요. 영유아의 사회심리적 안녕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및 측정도구 개발이 요구됨.
-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기후행동에 있어서 영유아의 참여와 주도 강조

3. 현 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성과와 한계 분석

가.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

- 제2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영역은 다음과 같음
 - 1)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국공립유치원 이용확대, 취약계층 유아지원 확대), 2) 유아놀이 중심의 교육 운영 강화(유아 중심으로 교육과정 및 지도방법 개선 추진, 현장교원 업무부담 완화, 유아중심 교육문화 선도, 유아대상 과도한 사교육 문화 개선), 3) 학부모와 함께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학부모 참여 강화), 4) 유아교육 혁신을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현장에 적합한 평가체계, 사립유치원 지원 체계 구성)
- 국공립유치원(매입·공영·부모협동형 등 포함)은 총 885학급 확충하여 당초목표를 177%, '20년 목표는 148%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함.

- 2019년까지 22만원이었던 지원단가를 2020년도에 24만원, 21년도에 26만원으로 2만원씩 연이어 인상하여 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유치원 학비 안정화 도모함.
- 유아·놀이중심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확정·고시함. 현장적합성 높은 교육과정 개편을 위하여 전국 토론회, 간담회 등 다각도로 현장의견 수렴함.
-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문화를 개선하고 유아의 놀이·쉼 보장을 위하여 '방과후 놀이유치원'을 선정, 운영함. 2018년도에 12개 시도교육청에서 51개 원을, 2019년에는 16개 시도교육청에서 540개원으로 확대함.
-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20년 3월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교육기관의 책무성 및 공공성 제고
-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에 대한 보조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공립-사립 유치원 교사 간 보수 격차 완화

나. 보육 정책의 성과

-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영역은 다음과 같음
 -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2) 보육체계 개편, 3)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4) 부모 양육지원 확대임.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인건비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국공립어린이집 2018년 450개소, 2019년 450개소, 2020년 550개소, 2021년 550개소 등으로 확충 목표의 106% 달성함.
- 연장보육 도입, 연장보육교사 신규 배치를 통해 부모는 원하는 만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16시 이후 담임교사가 연장반 전담교사와 교대 근무를 통하여 담임교사의 휴게 및 수업 준비 시간 확보로 근무여건 개선함.
-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확대, 전체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제를 2019년도에 의무화함.

다. 유보 정책의 성과와 한계

- 문재인 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한시적이거나 누리과정 지원비를 22년도말까지 재정 확보 및 국공립시설 확충, 모든 0-7세

아동수당 지급, 유아놀이중심으로 누리과정 개정 및 다양한 연수 제공과 아이 누리포털 구축을 통한 현장 안착 지원 등을 포함함.

- 반면, 정책 실행의 한계로는 서비스 유형에 따른 질적 격차 해소 미흡, 보육교사 자격기준, 양성체계 미정비, 처우 개선 미흡,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미비, 높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등을 들 수 있음.

4. 2022-2027 유아교육과 보육 발전 방향과 정책과제 관련 의견 및 요구 분석

가. 대국민 조사결과

- 모든 연령대에서 정책 방향 및 목표 설정에 고려하여야 할 사회변화로 ‘저출산으로 인한 취학 전 아동 수 감소’를 가장 많이 응답함(46.3%).
 - 그 다음으로 10, 20대, 40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영향을, 30대는 맞벌이 가정의 증대를, 50대는 사회 양극화 및 지역 격차의 심화를 많이 응답하여 차이를 보임.
-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1순위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10대~40대는 영유아 심신의 안녕(well-being)/행복을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50대는 각종 차별 없는(사회경제적 배경, 다문화, 특수장애 등) 포용과 공존을 응답함.
 - 그 다음으로 많이 응답한 것은 10대는 모든 영유아의 출발점 평등 보장을, 20대와 40대는 각종 차별 없는 포용과 공존을, 30대는 부모의 자녀양육과 돌봄 지원 강화(틈새없는 돌봄서비스)를, 50대는 급변하는 사회변화(코로나 19, 기후변화, 초저출산 등)에 대한 적응력 강화로 나타남.
-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영유아기부터 함양해야 하는 역량과 기술에 대해서 모든 연령대에서 신체건강을 응답함.
 - 그 다음으로 많이 응답한 역량과 기술로는 10대는 타인배려, 20대와 50대는 창의성, 30-40대는 정서/감정 조절능력으로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임.
 - 반면, 협력, 시민의식, 리더십, 봉사정신은 2%에도 미치지 않는 낮은 응답률을 보임.
- 향후 정부가 취학 전 영유아 시기 중 정책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시기에 대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취학 직전 연령인 만 5세를 응답

함. 한편, 20대는 만 3~4세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만 5세 응답과는 근소한 차이임

- 모든 연령대에서 만 1세 미만은 9% 미만으로 가장 적으며, 0-2세 영아기에 대한 응답률은 전반적으로 낮음.
-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정책과제의 중요도를 정책별로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9개 정책에 대해 3.7~4.1점으로 전반적으로 모두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요도 평균으로 살펴보면, 아동학대(4.1) > 틈새없는 돌봄서비스 제공(3.9) >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서비스 향상(3.9)이며, 나머지 과제의 중요도도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9개 정책 중 '1순위 우선 정책과제'로 영유아와 초등1학년 부모들과 초등2학년 이상 부모들은 0~5세 무상 유아교육·보육의 완성을, 미혼은 아동학대 예방을 가장 많이 응답함.
- 미혼 국민을 대상으로 향후 자녀가 생길 경우 어떠한 교육·보육 기관을 보내고 싶은지 조사한 결과, 집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기관(27.7%), 시설환경이 안전하고 좋은 기관(18.4%), 교사의 전문성이 높은 기관(11.1%), 프로그램이 우수한 기관(10.3%) 순으로 나타남. 연령별로 응답의 차이는 없음
 - 미혼의 경우, 교사전문성과 프로그램 보다는 집과의 거리, 시설환경을 2-3배로 높게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영유아 교사가 되기 위한 적합한 자격기준에 대해 모든 연령대에서 4년제 대학 졸업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48.1%), 그 다음으로 2,3년제 전문대 졸업(32.6%)로 나타남.
 - 한편 고등학교 졸업 후 일정기간 교육에 대한 응답은 미혼(14.3%)인 경우가 기혼(9.7%)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로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를 통합하는 것에 대하여 유치원·어린이집 이용경험이 있는 영유아 및 초등1학년 부모들은 찬성하는 비율은 전체의 80.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

나. 학계전문가 조사결과

- 지난 4년(2018-2021년)간 유아교육과 보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향상 정도

는 유아교육 3.5점 및 보육 3.5점(5점 만점)으로 나타나 두 분야가 유사하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됨

- 가장 성과가 높은 정책 1순위로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44.2%)가 현저히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과 운영(17.3%),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11.5%) 순임.
- 반면, 영유아 대상 사교육 억제 및 놀이와 쉼 중심 프로그램(2.2점) 및 격차 해소를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제고(2.4점)는 정책 이행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 학계전문가들은 향후 정책 방향 및 목표 설정에 고려하여야 할 1순위 사회변화로 저출산으로 인한 취학 전 유아 수 감소(71.4%)를 압도적으로 높게 응답하였고, 2순위는 사회 양극화 및 지역 격차의 심화(26.8%)임.

다. 시도청과 교육청 공무원 조사결과

-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추진과제 중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1순위 과제로는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증대(41.7%)와 유아 무상교육 지속 확대(33.4%)임.
- 그 다음 순으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를 응답함.
- 제3차 보육 중장기 발전계획(2018-2022)의 세부 추진과제 중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1순위 과제로 취약보육 지원 개선(18.8%),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증대(12.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강화(12.5%),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12.5%),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12.5%)임.

라. 조사결과 비교

- 일반국민과 영유아부모, 학계전문가, 공무원 모두 취학전 아동 수 감소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회변화로 응답함.
- 학계전문가와 일반국민들은 사회 양극화와 지역 격차를, 공무원들은 지식정보화사회의 가속화를 다음 순으로 응답함.
-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1순위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모든 집단이 (특히, 학계전문가들은 70% 가까이) 영유아 심신의 안녕과 행복을 응답함.

-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자녀양육과 돌봄 지원 강화,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많이 응답함.
- 일반국민과 영유아부모, 학계전문가, 공무원 모두 영유아기에 우선적으로 함양해야 할 능력과 기술로 신체건강을 가장 많이 응답함.
- 그 다음 순으로 영유아부모와 일반국민들은 정서감정조절 능력과 창의성을, 학계전문가들은 정서감정 조절능력을, 공무원들은 신체건강과 기본생활습관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함.
- 향후 5년간(2022-2027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정책주제로 학계전문가들은 약 56%가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 해소 및 체제통합을 응답함, 반면, 공무원은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의 완성은 가장 많이 응답함.

5. 2022-2027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발전 방안

가.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방향성

- 영유아의 웰빙과 건강한 성장을 최우선
- 영유아 주도과 참여를 강조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
- 포용적 공생 사회를 위한 생애초기부터 통합교육 강화
- 틈새없는 돌봄서비스 체계 마련 및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 강화
- 지역별 균형 발전과 조화

나.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통 핵심과제

-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의 완성
 - 만5세 무상교육 실시를 통한 단계적 공교육화
 - 누리과정 지원단가 현실화
- 교육과 돌봄을 함께 하는 유보체제 통합
 -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및 마스터 플랜 담당
 - ‘영유아학교’로 명칭 통일

- 미래형 영유아교원 자격기준 및 양성체제 통합, 양성기관의 질 관리(교육과정 교사, 기간제 교사, 보조교사 등 다양한 인력의 역할에 따른 자격기준과 업무 규정 마련 등)

□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감소
- 개정 누리과정 교원 연수체제 혁신(교육과정 리더십, 교사전문성 기준 설정 및 양성, 임용, 연수시 적용 등)
- 안전하고 창의적인 환경 제공

다. 부처별 핵심과제

□ 교육부

-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운영시간, 방과후 강사 배치기준 등)
- 공사립유치원 균형 발전

□ 보건복지부

- 0~2세 영아 대상 서비스의 질 제고 및 담당인력의 전문성
-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와의 연계 강화

라. 누리과정 소요 재정 추계

-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비·보육료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3만원씩, 2027년에는 2만원씩 인상, 2027년에 40만원을 달성
- 유치원 방과후 과정 교육비는 2023년에 3만원 인상하여 10만원을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 설정.
 -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별로 차등있는 방과후 과정 교육비는 2023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목표 설정

I

서론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 내용

03 연구 방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유아교육 발전 기본 계획 및 보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다. 2020년 초반에 시작된 전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기후변화의 영향, 저출산과 고령화 등과 같은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5년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간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은 유보통합(2013-2017) 및 유보 격차해소(2018-2022)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이원화 체제에 기초하여 각각 별도로 수립됨으로 인하여 종합적, 통합적 관점에서 중장기 발전 방향과 정책과제 제시 및 국가정책 수립에 기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간 유아교육과 보육은 상호경쟁적으로 발전해 온 경향이 있으므로 양 부문에 공통되는 정책과 아울러, 각 부문의 고유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3-5세 동일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물론 0-2세와 초등 저학년 6-8세 아동 대상의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즉 공공성과 형평성 강화를 정책의 기저에 두고 영유아의 행복을 추구해 오고 있다.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하여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국정과제 48),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국정과제 49)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과제로 일가정 양립지원 강화,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증대,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선상에서 교육부는 출발선 평등

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2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유아교육 혁신방안」(2017. 12월), 보건복지부는 「제3차 보육 중장기 발전계획」(2017. 12월)을 발표하여 누리과정 재정지원금 확보,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 해소, 유아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과 시행, 보육지원체계 개편 등을 구현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제4차(2021-202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포용국가 아동정책 등의 유관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여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아이 키우기 행복한 사회’ 조성,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전면 개편, 국가차원의 놀이혁신 정책을 전개해 오고 있다.

정부의 ‘포용과 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아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의 현장 안착, 누리과정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한 아동 안전과 보호,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교사 전문성 제고, 부모 참여와 소통을 통한 육아정책의 수립과 육아문화 창출, 취약빈곤계층, 다문화가정 영유아, 장애 영유아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등의 현안들을 당면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OECD는 회원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일련의 연구들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최근 영유아의 웰빙과 발달 및 학습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예: OECD Early Learning and Child-Well-Being).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핵심 지표를 투입, 산출, 성과로 구분하여 회원국들의 정책을 분석해 오고 있다(예: OECD ECEC Key Indicators, 2017).

무엇보다도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안에 169개의 세부목표 중의 하나로 Target 4.2 (양질의 보편적 영유아 교육과 보육)이 포함되어 글로벌 및 주제별 지표를 설정하고 국가별, 지역별 이행 모니터링을 하게 됨으로써 한층 본격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의 총괄로 K-SDG, 국내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수준에서는 영유아의 총체적 발달과 학습 지원을 위한 여성가족, 노동과 고용, 경제, 의료보건, 교육, 문화예술, 과학기술 등의 다부문, 다학제적 협력과 조정을 통한 지원 정책이 강조되어 오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 전반은 전례없는 변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팬데믹의 장기화 추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과 가정내 양육과 돌

봄에 지대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무엇보다 양육에 대한 부모와 지역사회의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으며, (영유아 자녀와 부모 관계, 부모,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 영유아 부문의 대응 체계화와 교육, 보육, 돌봄 서비스의 개편이 요구된다. 즉, 기관 서비스와 가정내 양육의 운영,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방식의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대면, 비접촉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대면 상호작용에 기반한 기존의 전통적인 유아교육과 보육의 방식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시스템 도입, 긴급재난 상황에서의 영유아교원교육, 부모역량 강화, 아동학대 감시체계 강화 등의 새로운 현안들을 초래하였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취약계층가정 영유아의 학습격차 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과 사회적 관계 형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교육회복 종합계획(2021. 4월)을 발표하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구성된 국가교육회의가 내년 7월, 공식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로 출범할 예정이므로 유아교육의 경우, 초·중등교육과 같이 시도교육청을 주된 행정기관으로 하여 교육자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유아교육은 학제에 편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현재의 기능중심 행정체계에서는 초·중등학교급 부서와의 업무 조정이 요구된다. 반면, 보육사업은 현재와 유사한 방식으로 중앙부서와 지자체가 분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 부문간의 격차 해소 및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방식을 지자체별 여건에 맞추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를 분석하여 미래사회에의 이행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선도할 수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패러다임의 창출과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특히, 추진 정책의 성과와 효과 파악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므로 정책의 효율적 실행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정부의 주요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추진 현황(예: 유아교육과 보육의 국공립시설 확충, 유아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과 시행, 유보 격차해소, 아동수당 시행, 보육지원체계 개편 등), 성과와 제한점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주요 정책과제와 세부전략, 누리과정 지원 소요예산(교육비와 보육료)을 제시하는데 있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 혁신방안 및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과 제3차 보육 중장기 발전계획(2018-2022)을 중심으로, 국공립시설 확충, 누리과정 개정, 유보격차 해소, 보육지원체계 개편 등의 주요 정책과 추진과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주요 기본 현황 및 연도별 변화 추이 파악을 비롯하여 각 중장기 기본계획의 정책영역 및 세부과제가 성공적으로 또는 미진하게 추진된 원인을 분석한다.

둘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유아교육과 보육에의 직간접적 영향을 비롯하여 육아정책 환경 및 미래사회 변화를 전망하고 해외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동향을 파악한다. 중장기 발전 방향 탐색을 위한 대내외 육아정책 환경변화를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미래사회의 변화 트렌드가 유아교육과 보육에 미칠 영향을 전망한다. 최근 국제기구 정책연구사업 및 주요 선진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현 문재인 정부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성과와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발전 방향 및 비전, 목표, 세부 정책과제 등에 대한 다양한 관계자, 즉 학계 전문가, 현장, 시도교육청 공무원, 일반국민의 의견과 요구를 분석한다. 향후 정부에서 지속, 발전되어야 할 정책과제 및 새로이 설계,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와 그 우선순위 등을 파악한다.

넷째, 2022-2027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의 종합적인 비전,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통 정책영역과 우선순위 과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서비스 접근성 및 질, 개정 누리과정의 현장 안착, 방과후 과정 운영과 돌봄서비스, 영유아교육 전문성 및 근무여건, 서비스 질 모니터링, 지원체계 등), 영유아 교육비와 보육료 소요예산 추정 및 연차별 실행안 제시한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차별적 우선순위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통계 현황, 현 정부의 주요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특히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제3차 보육 중장기 발전계획의 정책영역과 세부과제별 추진실적 관련 교육부와 복지부의 내부자료 분석, OECD, UNESCO 등 국제기구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동향,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변화 및 미래사회 관련 문헌 등을 검토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현주소와 주요 이슈를 파악하였다.

나. 다부문 전문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다양한 부문을 아우르는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유아교육정책의 대내외 환경변화를 전망하기 위하여 교육일반, 과학기술, 경제, 의료보건, 여성가족, 문화예술, 건축공간 등의 다양한 유관 부문의 전문가 총 14명 내외로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다부문 전문가 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이 영유아 부문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등을 비롯하여 해당 전문분야의 동향과 전망, 주요 이슈와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에의 시사점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주로 서면자문의 형태로 진행하였다.

〈표 I-3-1〉 다부문 전문가 협의회 구성

다부문 영역	전문가	비고
교육일반	홍OO (대학교수) 손OO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 동향과 초등과의 연계
과학기술	박OO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OO (대학교수)	디지털 기술 활용
경제/재정	우OO (한국개발연구원) 김OO (대학교수)	중앙과 지방 재정, 교육재정 유아교육보육 재정
인구/ 여성가족	한OO (대학교수) 모OO (대학교수) 김OO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출산고령화, 다문화사회와 교육
기후환경	이OO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변화와 환경, 건강 영향

다부문 영역	전문가	비고
건축공간	유OO (건축공간연구원)	건축과 공간정책 동향
문화예술	김OO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 정책
세계시민교육	박OO (대학교수) 정OO (대학교수)	세계시민 교육과정과 교수법

다. 전문가 조사

전문가 조사는 현 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성과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 목표와 정책과제, 우선순위, 전략 등에 대한 유아교육과 보육부문 학계 전문가(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하였다. 유아교육과 보육, 각 집 단별 30명씩, 총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56명(유아교육 전문가 29명, 보육 전문가 27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응답자 특성은 IV장 2절 참조).

라. 시도청과 시도교육청 담당공무원 조사

17개 시도청과 시도교육청 담당공무원(과장, 보육팀장, 장학관 중심)을 대상으로 지난 4년간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성과와 및 향후 중장기 발전을 위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비전, 목표와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각각 20명씩, 총 40여명으로 온라인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8명의 공무원(시도청 16명, 시도교육청 12명)이 참여하였다(응답자 특성은 IV장 3절 참조).

마.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대국민 조사의 목적은 중장기 유아교육의 방향 및 목표 설정 시 고려해야 할 가치 및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등의 우선순위(중요도) 파악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일반국민 총 3,000여명 대상으로 전국 17개 시도 인구수에 비례하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세대별, 성별로 표집하였다(응답자 특성은 IV장 1절 참조). 이에는 출생부터 초등 1학년까지 어린자녀를 둔 부모를 자녀연령대별로 할당하여 1,000여명을 포함하였다. 특히, 본 대국민조사에는 특히, 미래

세대 부모가 될 10대(15세-19세)를 포함하였으며, 10대부터 40대까지 미혼인 국민을 약 1,000명 포함하였다.

조사내용은 미래사회(향후 5~10년간) 영유아기에 필요한 역량,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비전, 우선적인 정책과제, 지원 요구 등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조사 결과의 일부를 활용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 2018-2022 유아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문무경, 박창현, 송기창, 김문정, 2017)에서 사용한 문항의 일부를 동일하게 활용하였으며, 정책 변화로 세부항목의 내용은 변경하였다.

〈표 I-3-2〉 설문조사 내용

구분		일반 국민	
		전체	0-6세, 자녀부모
지난 4년간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평가/만족도	제2차 유아교육 혁신방안 및 제3차 보육 중장기 발전계획(2018-2022)의 핵심과제 평가 (실행수준과 성과가 높은 정책)	●	
	최근 4년간(2018-2021)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도, 만족도		●
향후 5년간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방향 및 과제	영유아기 함양해야할 역량	●	
	코로나19 등 사회환경 변화의 영향 및 미래 변화 전망	●	
	정책 지원이 중요한 영유아기 연령대	●	
	사회변화를 반영한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방향과 목표	●	
	정부의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전반적 정책 관련 의견 (중요도, 우선순위)	●	
	세부과제별 중요도		●
기 타	유아교육·보육 기관 선택 기준	(미혼 대상) ●	
	영유아교사의 최소 자격기준	●	
	0-1세 영아수당 이용 여부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점	●	
	유보 통합 찬성 여부	●	

바. 권역별 정책토론회 개최

권역별 정책토론회의 목적은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안)에 대한 권역별 주요 관계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다. 참석대상은 지역별 유아교육과 보육 담당공무원, 학계 전문가, 유아교육진흥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병설유치원의 경우, 원감) 등 권역별로 약 20여명이며, 학계 전문가가 소집단 토론의 사회를 담당하였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은 오프라인으로, 나머지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은 온라인으로 12월 동안 총 4회 개최하였다.

〈표 I-3-3〉 권역별 정책토론회 개요

지역	일시	방식	참석자
수도권	12월 17일	오프라인	해당 시도청,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학계 전문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교사, (각 권역별 약 20여명씩, 총 80여명)
충청권	12월 23일	온라인	
경상권	12월 22일	온라인	
전라권	12월 23일	온라인	

주: 충청권에 강원 및 제주지역 포함하여 개최함.

사.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연구방향, 연구내용, 연구범위, 설문조사 문항 구성 및 정책 제언 도출 등 연구수행의 전반적 과정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관계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들과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현장교원, 유치원과 어린이집 연합회 대표, 학계 전문가, 지방공무원들과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4년간의 정책 성과 및 향후 방향성과 추진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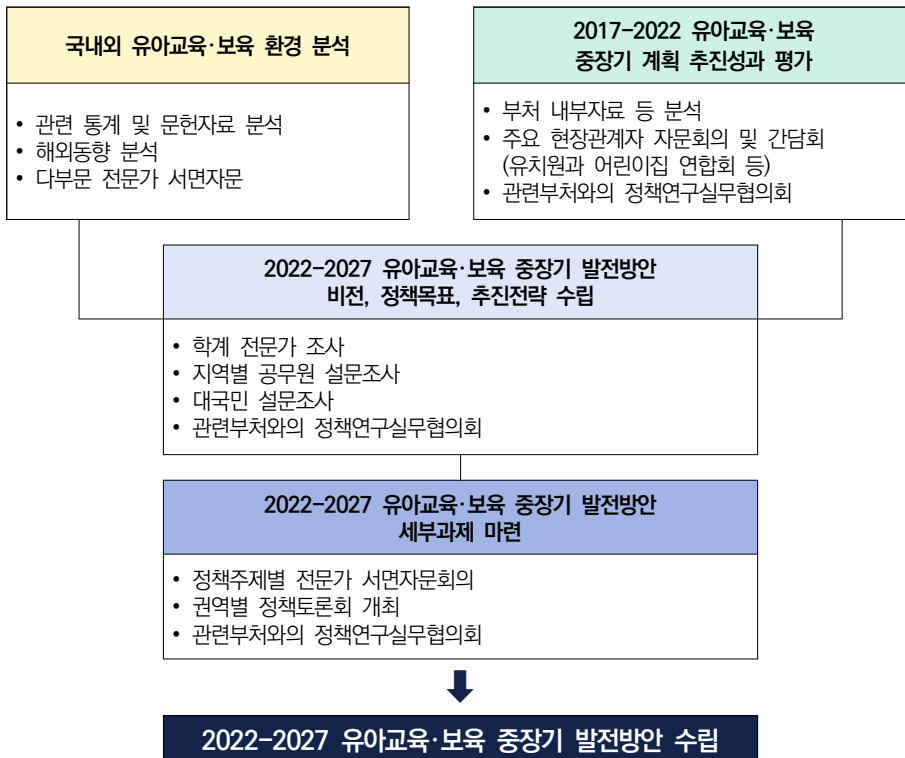
〈표 I-3-4〉 자문회의 개최 개요

일시	분야 및 참석자	회의내용
2021. 3. 24.	유아교육 담당 공무원 2인	연구방향 및 향후 유아교육 정책과제
2021. 4. 2.	보육 현장 원장 2인	연구방향 및 향후 보육 정책과제
2021. 4. 14.	유아교육 현장 교사 2인	연구방향 및 향후 유아교육 정책과제
2021. 5. 18.	유아교육 현장 원장 2인	제2차 유아교육 기본계획의 성과 및 향후 과제

일시	분야 및 참석자	회의내용
2021. 8. 26.	유아교육 연합회 대표 등 2인	제2차 유아교육 기본계획의 성과 및 향후 유아교육 정책과제
2021. 9. 2.	보육 연합회 분과장 2인	제3차 보육중장기 기본계획의 성과 및 향후 보육 정책과제
2021. 9. 16.	학계 전문가 2인	유보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2021. 9. 17.	보육 유관기관 담당자 2인	제3차 보육중장기 기본계획 성과 및 향후 과제
2021. 10. 8.	유아교육 연합회 대표 등 3인	제2차 유아교육 기본계획의 성과 및 향후 과제
2021. 10. 13.	보육 연합회 회장, 분과장 2인	제3차 보육중장기 기본계획 성과 및 향후 과제
2021. 12. 6.	다부문 학계 전문가 5인	주제별 정책방안 검토
2021. 12. 18.	유아교육 보육 현장전문가 6인	교육·보육과정 운영 및 교원 연수
2021. 12. 21.	유아교육 보육 학계전문가 12인	세부 정책방안 검토

이상의 연구 추진방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3-1] 연구추진체계 및 방법



II

국내외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동향과 미래환경 변화 전망

01 관련 주요 통계

02 주요 관련정책

03 미래환경 변화 전망

II. 국내외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동향과 미래환경 변화 전망

1. 관련 주요 통계

가. 인구 통계

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출생아 수는 그간 40만명 대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7년 35만명 선까지 떨어졌고, 2019년에는 30만명, 2020년에는 코로나19까지 확산되면서 출생아 수가 272,400명으로 30만명 선마저 무너졌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의 저위가정 기준 280,201명(2020년 기준)보다도 낮은 수치이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자료, 국가통계포털, 2021. 4. 11 인출).

〈표 II-1-1〉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추이(201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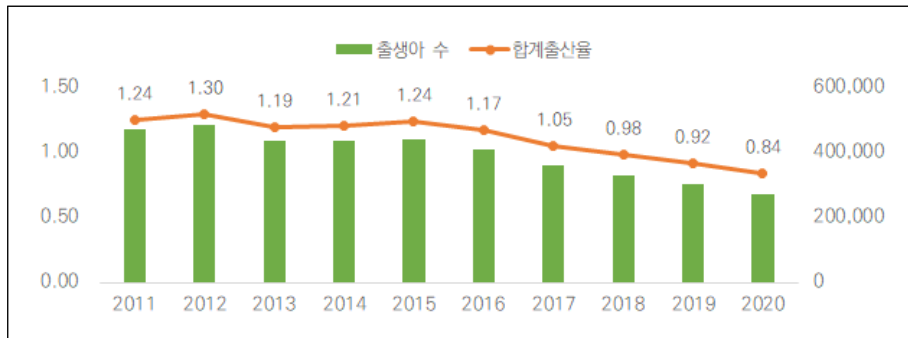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출산율	1.24	1.30	1.19	1.20	1.24	1.17	1.05	0.98	0.92	0.84
출생인구	471,265	484,550	436,455	435,435	438,420	406,300	357,771	326,800	302,676	272,400

자료: 국가통계포털-통계청, 인구동향조사-출생, 합계출산율 통계(2011-2020)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000F_01&conn_path=I2 (2021.3.11. 인출)

[그림 II-1-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201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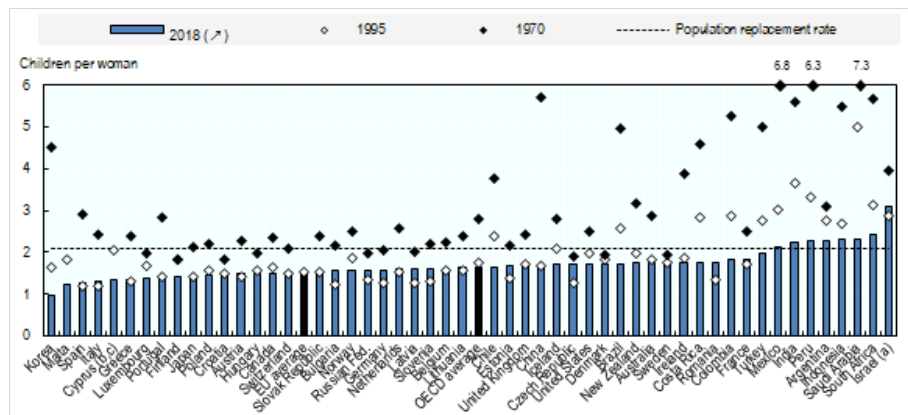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통계청, 인구동향조사-출생, 합계출산율 통계(2011-2020)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000F_01&conn_path=12 (2021.3.11. 인출)

합계출산율 또한 2017년까지 1명대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8년 1명 이하로 떨어졌고, 이후 매년 급감하고 있어 심각한 초저출산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 10년간 0.4명이 줄었고,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4.53명)과 비교하면 1/5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

OECD회원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기준 평균 1.6명으로 우리나라는 가장 1.0명으로 회원국 중 가장 낮다.

[그림 II-1-2] OECD 합계출산율(Fertility rates)



자료: OECD Family database <https://www.oecd.org/social/database.htm> SF.2.1 Fertility rates. p. 2 (2021.6.17. 인출).

2) 0~6세 영유아 수

최근 10년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원 대상인 0~6세 주민등록인구 수를 살펴보았다.

0~6세 영유아 수는 2020년 기준 256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65만 명 정도가 줄었다. 특히, 출생아 수 급감으로 0~3세가 4~6세보다 감소폭이 크다. 어린이집 입소 대상인 0~6세 인구는 2013년, 유치원 취원 대상인 3~6세 인구는 2016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이다.¹⁾ 이는 유치원·어린이집 수, 원아 수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표 II-1-2〉 0~6세 주민등록인구 추이(2011~2020)

단위: 명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6세	4~6세	0~6세
2011	451,579	470,224	445,437	466,807	494,388	448,774	435,724	1,378,886	3,212,933
2012	464,374	472,275	470,956	446,256	467,432	494,810	449,057	1,411,299	3,265,160
2013	421,465	486,655	474,098	472,047	447,055	467,935	495,221	1,410,211	3,264,476
2014	419,833	438,778	488,030	474,932	472,731	447,531	468,321	1,388,583	3,210,156
2015	424,563	437,994	439,989	488,716	488,519	473,120	447,817	1,409,456	3,187,718
2016	393,674	441,720	439,207	440,530	489,140	475,817	473,401	1,438,358	3,153,489
2017	345,786	409,814	442,943	439,700	440,872	489,401	476,061	1,406,334	3,044,577
2018	317,778	361,837	411,301	443,666	440,101	441,402	489,324	1,370,827	2,905,409
2019	295,132	330,970	362,900	412,018	444,102	440,483	441,362	1,325,947	2,726,967
2020	265,087	304,651	331,606	363,250	412,429	444,367	440,710	1,297,506	2,56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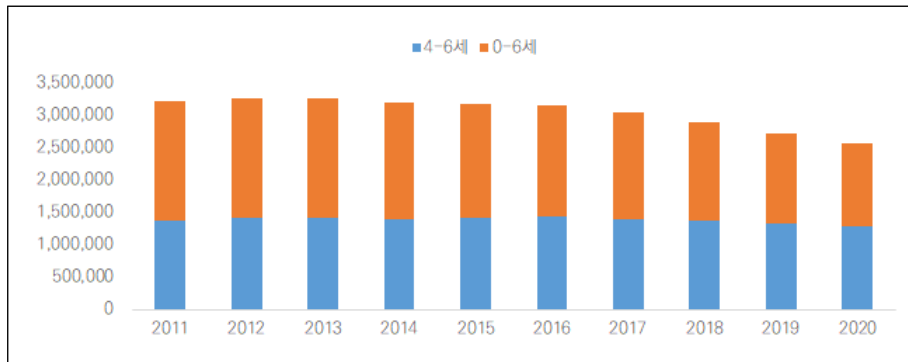
주: 각년도 12월 31일 기준임. 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

자료: 국가통계포털-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11~2020).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l2 (2021.3.11. 인출).

1) 생활연령(각년도 12월 31일 기준)과 취원연령 간에 차이가 있음(예: 2020년 유치원 취원 대상은 2014.1.1.~2016.12.31. 출생아이고, 어린이집 취원 대상은 2014.1.1.~2019.1.1.이후 출생아임).

[그림 II-1-3] 0~6세 및 4~6세 주민등록인구 추이(2011~2020)



주: 각년도 12월 31일 기준임. 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
 자료: 국가통계포털-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11~2020).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l2 (2021.3.11.인출).

나. 유아교육·보육통계

1) 개요

가) 유치원·어린이집 수

최근 10년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를 추이를 살펴보았다. 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 확대에 따라 2011년 8,424개원에서 2017년 9,029개원까지 늘어났지만, 2018년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로 사립유치원이 줄 폐원하면서 2020년 8,705개원까지 줄었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매입, 공영형 등의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 규모는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표 II-1-3〉 유치원·어린이집 수 추이(2011~2020)

단위: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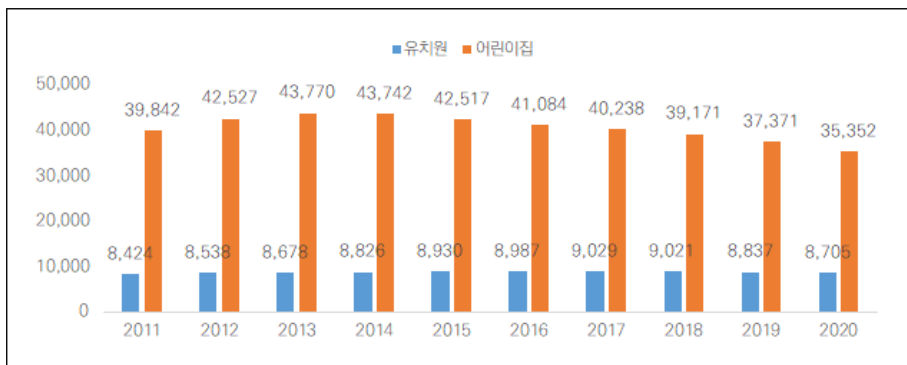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유치원	8,424	8,538	8,678	8,826	8,930	8,987	9,029	9,021	8,837	8,705
어린이집	39,842	42,527	43,770	43,742	42,517	41,084	40,238	39,171	37,371	35,352
계	48,266	51,065	52,448	52,568	51,447	50,071	49,267	48,192	46,208	44,057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https://kess.kedi.re.kr/index> (2021.3.10. 인출); 보건복지부(2020). 보육통계. p. 2.

한편, 어린이집은 2012년 0~2세 무상보육으로 보육 수요가 늘면서 가정어린이

집 중심으로 큰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듬해인 2013년 누리과정 3~4세 확대, 0~5세 전계층 양육수당 지원 등으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크게 줄고, 3~5세는 유치원으로 이동하면서 그 수가 크게 줄기 시작하였고, 그 폭은 매년 커지고 있다. 최근 출생아 수가 크게 줄면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은 줄을 잇고 있고 신규보다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더 많아졌다.

[그림 II-1-4] 최근 10년간 유치원·어린이집 수 비교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https://kess.kedi.re.kr/index> (2021.3.10. 인출); 보건복지부(2020). 보육통계. p. 2.

나)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2020년 기준 총 1,856,934명으로 0~6세 영유아 수 중 72.5%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2011년 59.6%에서 12.9%가 상승하였다.

유치원 이용하는 유아는 2020년 총 612,538명으로 2011년 564,834명에서 약 5만여 명이 늘었다. 누리과정으로 교육비 부담이 줄자 어린이집 이용 유아가 대거 유치원으로 이동하면서 2016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이 704,138명까지 증가하였고, 이후 저출산 고착화와 2018년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따라 사립유치원이 크게 줄면서 이용 아동 수도 4년만에 10만명 가까이 줄었다.

〈표 II-1-4〉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 추이(201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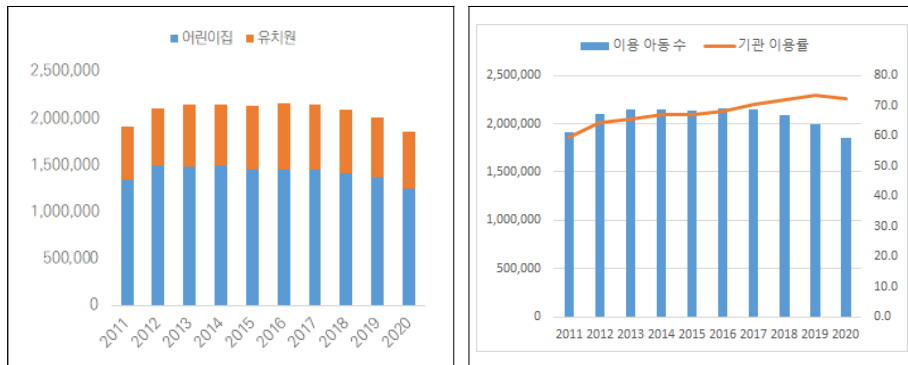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유치원	564,834	613,749	658,188	652,546	682,553	704,138	694,631	675,998	633,913	612,538
어린이집	1,348,729	1,487,361	1,486,980	1,496,671	1,452,813	1,451,215	1,450,243	1,415,742	1,366,085	1,244,396
계	1,913,563	2,101,110	2,145,168	2,149,217	2,135,366	2,155,353	2,144,874	2,091,740	1,999,998	1,856,934
이용률	59.6	64.3	65.7	67.0	67.0	68.3	70.4	72.0	73.3	72.5

주: 이용률은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아 수/해당연도 0-6세 주민등록인구*100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https://kess.kedi.re.kr/index> (2021.3.10. 인출); 보건복지부(2020). 보육통계. p. 3; 국가통계포털-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1-2020).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l2 (2021.3.11. 인출).

〈그림 II-1-5〉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와 기관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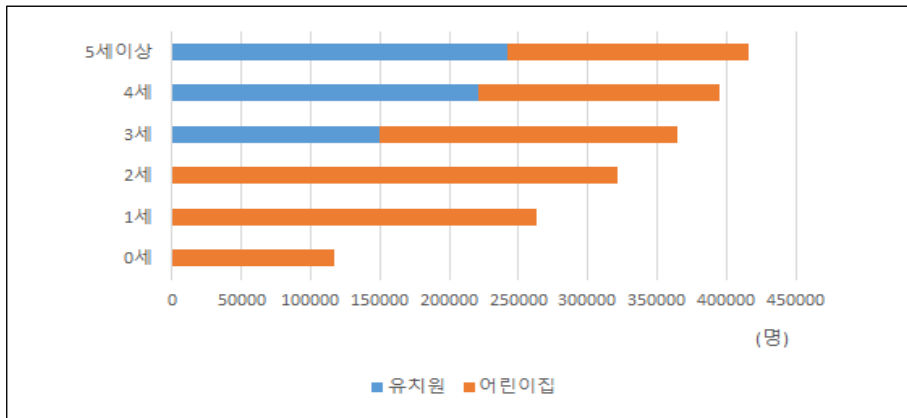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https://kess.kedi.re.kr/index> (2021.3.10. 인출); 보건복지부(2020). 보육통계. p. 3; 국가통계포털-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1-2020).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l2 (2021.3.11. 인출).

한편,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0~2세 무상보육과 누리과정 지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확대, 출생아 수 급감 등의 영향으로 이용 아동 수가 줄고 있다. 2014년 215만명 정도까지 늘어났으나 이후 감소추세를 보여서 2019년에는 200만명 선이 무너졌고, 2020년에는 185만명 정도까지 줄었다.

2020년 전체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원아의 연령별 이용기관을 살펴보면 3~5세 이상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치원 이용 원아가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II-1-6] 연령별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2020)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https://kess.kedi.re.kr/index> (2021.3.10. 인출); 보건복지부(2020). 보육통계. p. 103.

2) 유아교육 현황

가) 유치원 수

최근 10년간 유치원의 설립유형별 기관수 추이를 살펴보았다. 공립 유치원, 특히 단설 유치원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40% 정책에 힘입어 증가추세를 보이나, 사립유치원은 2017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다. 국공립유치원은 2011년 전체 유치원 중 53.4% 정도에서 2020년 57.2%로 상승하였다.

2018년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정책으로 사립유치원이 대거 폐원하면서 2016년 4,291개원에서 2020년 3,729개원으로 약 600개원 가까이 줄었다. 전체 유치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47.7%에서 2020년 42.8%로 5%가 하락하였다.

〈표 II-1-5〉 설립유형별 유치원 수 추이(201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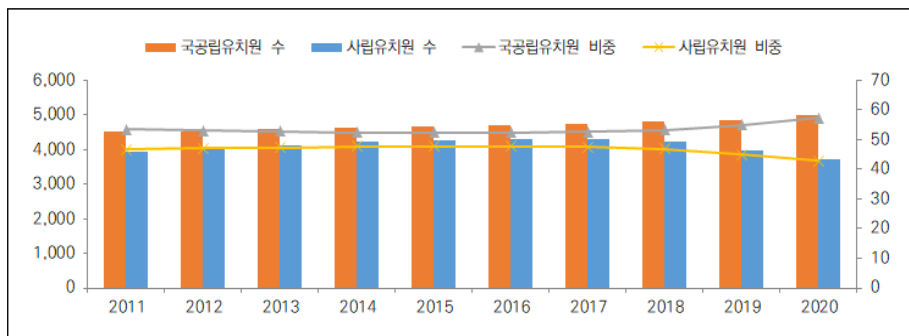
단위: 개원, %

연도	국공립						사립		계		
	계		국립	공립 단설		공립 병설					
	수	비율	수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2011	4,499	53.4	3	146	1.7	4,353	51.7	3,922	46.6	8,424	100.0
2012	4,525	53.0	3	168	2.0	4,354	51.0	4,013	47.0	8,538	100.0
2013	4,577	52.7	3	184	2.1	4,390	50.6	4,101	47.3	8,678	100.0

연도	국공립								사립		계	
	계		국립	공립 단설		공립 병설						
	수	비율		수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2014	4,619	52.3	3	228	2.6	4,388	49.7	4,207	47.7	8,826	100.0	
2015	4,678	52.4	3	272	3.0	4,403	49.3	4,252	47.6	8,930	100.0	
2016	4,696	52.3	3	305	3.4	4,388	48.8	4,291	47.7	8,987	100.0	
2017	4,744	52.5	3	351	3.9	4,393	48.7	4,282	47.4	9,029	100.0	
2018	4,798	53.2	3	381	4.2	4,417	49.0	4,220	46.8	9,021	100.0	
2019	4,856	55.0	3	403	4.6	4,453	50.4	3,978	45.0	8,837	100.0	
2020	4,976	57.2	3	460	5.3	4,513	51.8	3,729	42.8	8,705	100.0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https://kess.kedi.re.kr/index> (2021.3.10. 인출)

[그림 II-1-기] 설립유형별 유치원 수 추이(2011-2020)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https://kess.kedi.re.kr/index> (2021.3.10. 인출)

나) 유치원 원아 수

다음의 표는 최근 10년간 유치원 이용 원아 수를 정리한 것이다. 국공립유치원 이용 원아수는 2011년 126,095명에서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서 2020년에는 178,901명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의 공립유치원 증설 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사립유치원 이용 원아 수는 2011년 438,739명에서 2016년 533,789명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공립유치원 증설과 2018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 사립유치원 폐원이 늘면서 이용 아동 수도 급감하고 있다.

〈표 II-1-6〉 설립유형별 유치원 원아 수 추이(201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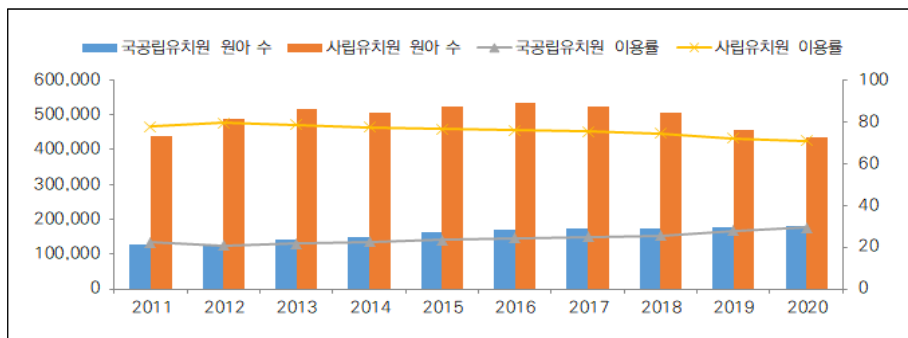
단위: 명, %

연도	국공립		사립		계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2011	126,095	22.3	438,739	77.7	564,834	100.0
2012	127,347	20.7	486,402	79.3	613,749	100.0
2013	142,052	21.6	516,136	78.4	658,188	100.0
2014	148,269	22.7	504,277	77.3	652,546	100.0
2015	161,339	23.6	521,214	76.4	682,553	100.0
2016	170,349	24.2	533,789	75.8	704,138	100.0
2017	172,521	24.8	522,110	75.2	694,631	100.0
2018	172,370	25.5	503,628	74.5	675,998	100.0
2019	177,330	28.0	456,583	72.0	633,913	100.0
2020	178,901	29.2	433,637	70.8	612,538	100.0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https://kess.kedi.re.kr/index> (2021.3.10. 인출)

그 결과로 국공립유치원 이용 원아 비율은 2011년 22.3%에서 2020년 29.2%까지 상승하였고, 사립유치원 이용 원아 비율은 2012년 79.3%에서 2020년 70.8%로 10% 가까이 하락하였다.

〈그림 II-1-8〉 설립유형별 유치원 원아 수 추이(2011-2020)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https://kess.kedi.re.kr/index> (2021.3.10. 인출)

2011~2020년 최근 10년간 유치원 이용 원아의 연령별 비율을 보면 2020년 3세이하 24.5%, 4세 36.0%, 5세 이상은 39.5%로 2011년에 비해 근소하게 3, 4세는 증가하고 5세의 비율을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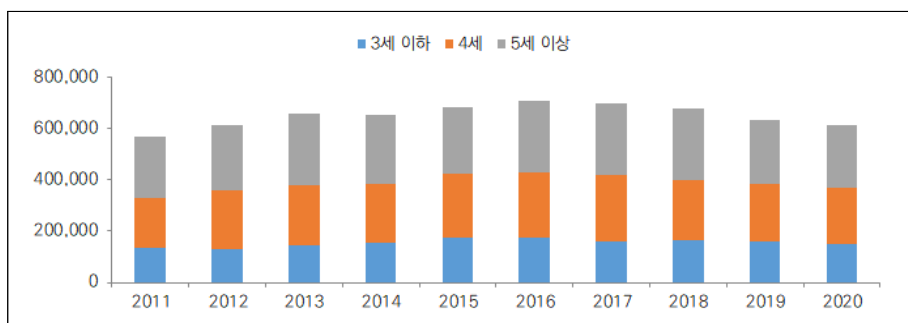
〈표 II-1-7〉 연령별 유치원 원아 수 추이(2011-2020)

단위: 명, %

연도	3세 이하		4세		5세 이상		계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2011	133,986	23.7	196,602	34.8	234,246	41.5	564,834	100.0
2012	130,986	21.3	229,911	37.5	251,897	41.0	613,749	100.0
2013	145,778	22.1	233,926	35.5	278,484	42.3	658,188	100.0
2014	156,089	23.9	228,129	35.0	268,328	41.1	652,546	100.0
2015	172,114	25.2	249,197	36.5	261,242	38.3	682,553	100.0
2016	174,907	24.8	253,076	35.9	276,155	39.2	704,138	100.0
2017	161,172	23.2	256,361	36.9	277,098	39.9	694,631	100.0
2018	163,885	24.2	234,844	34.7	280,264	41.5	675,998	100.0
2019	159,232	25.1	224,750	35.5	249,931	39.4	633,913	100.0
2020	150,199	24.5	220,658	36.0	241,681	39.5	612,538	100.0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https://kess.kedi.re.kr/index> (2021.3.10. 인출)

[그림 II-1-9] 연령별 유치원 원아 수 추이(2011-2020)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https://kess.kedi.re.kr/index> (2021.3.10. 인출).

다) 유치원 교원 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유치원 교원 수를 살펴보았다.

국공립유치원 증설에 따라 유치원 교원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9,239명에서 2020년 19,109명으로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단설 유치원 등의 규모가 큰 유치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사립유치원은 2011년 29,423명에서 2017년 39,625명까지 늘어났으나 이후 사립유치원 폐원으로 교원 수도 감소추세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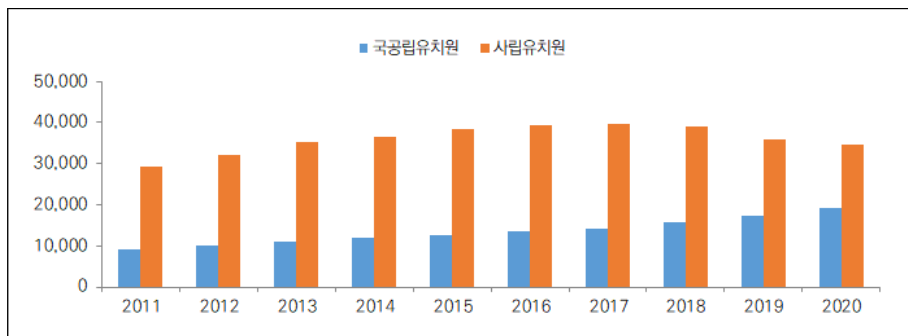
〈표 II-1-8〉 연도별 유치원 교원 수 추이(2011~2020)

단위: 명, %

연도	국공립		사립		계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2011	9,239	23.9	29,423	76.1	38,662	100.0
2012	9,969	23.6	32,266	76.4	42,235	100.0
2013	10,997	23.8	35,129	76.2	46,126	100.0
2014	11,931	24.6	36,599	75.4	48,530	100.0
2015	12,619	24.7	38,379	75.3	50,998	100.0
2016	13,412	25.3	39,511	74.7	52,923	100.0
2017	14,183	26.4	39,625	73.6	53,808	100.0
2018	15,869	28.9	39,023	71.1	54,892	100.0
2019	17,334	32.5	36,028	67.5	53,362	100.0
2020	19,109	35.6	34,542	64.4	53,651	100.0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https://kess.kedi.re.kr/index> (2021.3.10. 인출)

[그림 II-1-10] 연도별 유치원 교원 수 추이(2011~2020)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https://kess.kedi.re.kr/index> (2021.3.10. 인출).

다음은 유치원 교원을 직위별로 살펴보았다. 원장은 2011년 3,704명에서 2017년 4,425명까지 증가하였으나 사립유치원 폐원에 따라 원장 수도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원감과 교사, 기간제교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II-1-9〉 직위별 유치원 교원 수 추이(2011-2020)

단위: 명

연도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보건교사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기타	계
2011	3,704	1,248	-	32,792	4	914	369	-	38,662
2012	3,670	1,327	14	35,760	3	1,461	356	-	42,235
2013	3,818	1,385	29	37,599	2	2,343	207	950	46,126
2014	4,379	1,489	42	38,042	2	2,397	88	2,179	48,530
2015	4,295	1,542	22	40,217	3	2,618	80	2,301	50,998
2016	4,391	1,645	30	41,474	2	2,936	58	2,445	52,923
2017	4,425	1,725	24	41,861	4	3,082	65	2,687	53,808
2018	4,360	1,787	23	42,818	1	3,490	1	2,413	54,892
2019	4,101	1,905	22	40,720	1	4,067	3	2,546	53,362
2020	3,960	2,000	22	40,353	1	4,457	4	2,858	53,651

주: 기타에는 보직교사와 특수교사가 포함됨. 교원수 합계에 강사(특성화) 수는 포함되지 않음.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https://kess.kedi.re.kr/index>
 (2021.3.10. 인출)

다음의 표는 유치원 교원을 자격별로 정리한 것이다. 1급 정교사는 매년 증가지만, 2급 정교사는 2011년 22,872명에서 2018년 33,984명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추세를 보인다.

〈표 II-1-10〉 자격별 유치원 교원 수 추이(2011-2020)

단위: 명

연도	원장	원감	수석교사	1급 정교사	2급 정교사	준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기타	계
2011	3,834	1,235	-	10,649	22,872	24	-	3	45	38,662
2012	3,864	1,289	-	11,253	25,757	21	-	7	44	42,235
2013	4,116	1,387	-	12,002	28,566	11	-	6	38	46,126
2014	4,571	1,517	16	12,363	30,008	7	1	10	37	48,530
2015	4,618	1,609	25	12,816	31,896	16	-	12	6	50,998
2016	4,737	1,727	29	13,458	32,945	7	-	9	11	52,923
2017	4,786	1,818	31	13,754	33,388	12	-	11	8	53,808
2018	4,698	1,858	24	14,290	33,984	16	-	19	3	54,892
2019	4,450	2,007	22	14,865	31,975	16	-	25	2	53,362
2020	4,388	2,101	23	15,583	31,502	11	-	43	-	52,770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https://kess.kedi.re.kr/index>
 (2021.3.10. 인출)

3) 어린이집 현황

가) 어린이집 수

최근 10년간 어린이집 추이를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에 따라 증가추세를 보여서 2011년 2,116개소에서 2020년 4,958개소로 늘어났고, 전체 어린이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5.3%에서 14.0%로 지난 10년간 10% 가까이 상승하였다.

이에 반해 민간어린이집은 2011년 14,134개소에서 2014년 14,822개소까지 늘어났다가 이후 감소추세를 보여서 2020년 11,510개소까지 줄었다. 가정은 민간어린이집보다 감소 규모가 크다. 2013년 23,632개소로 전체 어린이집 중 54.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15,529개소로 43.9%까지 떨어졌다.

〈표 II-1-11〉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수 추이(201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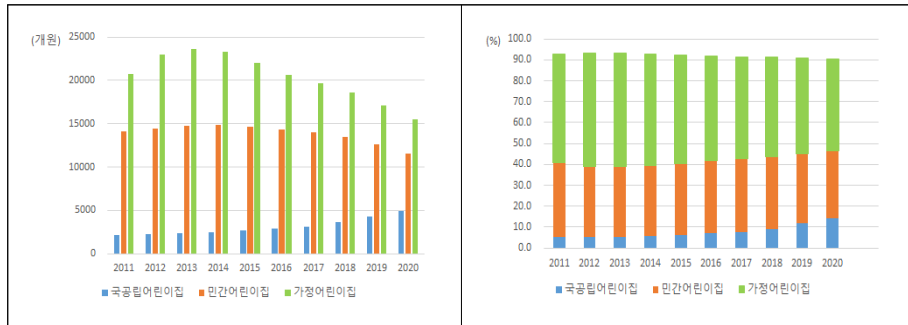
단위: 개원(%)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2011	39,842 (100.0)	2,116 (5.3)	1,462 (3.7)	870 (2.2)	14,134 (35.5)	20,722 (52.0)	89 (0.2)	449 (1.1)
2012	42,527 (100.0)	2,203 (5.2)	1,444 (3.4)	869 (2.0)	14,440 (34.0)	22,935 (53.9)	113 (0.3)	523 (1.2)
2013	43,770 (100.0)	2,332 (5.3)	1,439 (3.3)	868 (2.0)	14,751 (33.7)	23,632 (54.0)	129 (0.3)	619 (1.4)
2014	43,742 (100.0)	2,489 (5.7)	1,420 (3.2)	852 (1.9)	14,822 (33.9)	23,318 (53.3)	149 (0.3)	692 (1.6)
2015	42,517 (100.0)	2,629 (6.2)	1,414 (3.3)	834 (2.0)	14,626 (34.4)	22,074 (51.9)	155 (0.4)	785 (1.8)
2016	41,084 (100.0)	2,859 (7.0)	1,402 (3.4)	804 (2.0)	14,316 (34.8)	20,598 (50.1)	157 (0.4)	948 (2.3)
2017	40,238 (100.0)	3,157 (7.8)	1,392 (3.5)	771 (1.9)	14,045 (34.9)	19,656 (48.8)	164 (0.4)	1,053 (2.6)
2018	39,171 (100.0)	3,602 (9.2)	1,377 (3.5)	748 (1.9)	13,518 (34.5)	18,651 (47.6)	164 (0.4)	1,111 (2.8)
2019	37,371 (100.0)	4,324 (11.6)	1,343 (3.6)	707 (1.9)	12,568 (33.6)	17,117 (45.8)	159 (0.4)	1,153 (3.1)
2020	35,352 (100.0)	4,958 (14.0)	1,316 (3.7)	671 (1.9)	11,510 (32.6)	15,529 (43.9)	152 (0.4)	1,216 (3.4)

자료: 보건복지부(2020). 보육통계. p. 2.

직장어린이집도 설치의무 사업장 지원과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 공표와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강력한 후속 조치로 2011년 449개소에서 2020년 1,216개소로 10년간 2배 이상 늘어났다.

[그림 II-1-11]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수 및 비율 추이(2011-2020)



자료: 보건복지부(2020). 보육통계. p. 2.

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2011년 143,035명으로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10.6% 정도이었으나 이후 이용 아동 수가 매년 늘어나면서 이용 아동 비율이 2020년 20.4%까지 상승하였다. 여기에 사회복지법인과 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더하면 공보육 이용 아동 비율이 2011년 20% 정도에서 2020년 32.0%까지 상승한 것이다. 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도 2011년 24,987명에서 2020년 66,401명으로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2011년 706,647명(52.4%)에서 2014년 775,414명까지 늘어나다가 이후 감소추세이다. 가정어린이집도 2014년 365,250명까지 늘어났으나 이후 감소하여 2020년에는 230,444명까지 줄었다. 이용 아동 수가 6년 만에 13만 명이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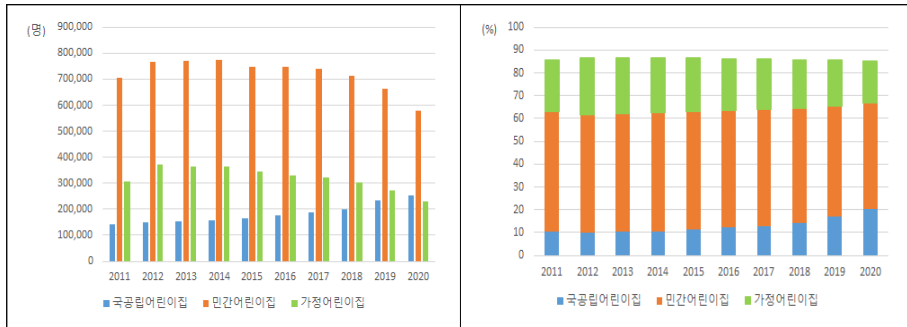
〈표 II-1-12〉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추이(2011-2020)

단위: 명(%)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2011	1,348,729 (100.0)	143,035 (10.6)	112,688 (8.4)	50,676 (3.8)	706,647 (52.4)	308,410 (22.9)	2,286 (0.2)	24,987 (1.9)
2012	1,487,361 (100.0)	149,677 (10.1)	113,049 (7.6)	51,914 (3.5)	768,256 (51.7)	371,671 (25.0)	2,913 (0.2)	29,881 (2.0)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2013	1,486,980 (100.0)	154,465 (10.4)	108,834 (7.3)	51,684 (3.5)	770,179 (51.8)	364,113 (24.5)	3,226 (0.2)	34,479 (2.3)
2014	1,496,671 (100.0)	159,241 (10.6)	104,552 (7.0)	49,175 (3.3)	775,414 (51.8)	365,250 (24.4)	3,774 (0.3)	39,265 (2.6)
2015	1,452,813 (100.0)	165,743 (11.4)	99,715 (6.9)	46,858 (3.2)	747,598 (51.5)	344,007 (23.7)	4,127 (0.3)	44,765 (3.1)
2016	1,451,215 (100.0)	175,929 (12.1)	99,113 (6.8)	45,374 (3.1)	745,663 (51.4)	328,594 (22.6)	4,240 (0.3)	52,302 (3.6)
2017	1,450,243 (100.0)	186,916 (12.9)	96,794 (6.7)	43,404 (3.0)	738,559 (50.9)	321,608 (22.2)	4,508 (0.3)	58,454 (4.0)
2018	1,415,742 (100.0)	200,783 (14.2)	92,787 (6.6)	41,298 (2.9)	711,209 (50.2)	302,674 (21.4)	4,360 (0.3)	62,631 (4.4)
2019	1,365,085 (100.0)	232,123 (17.0)	86,775 (6.4)	38,538 (2.8)	664,106 (48.6)	273,399 (20.0)	4,121 (0.3)	66,023 (4.8)
2020	1,244,396 (100.0)	253,251 (20.4)	78,322 (6.3)	34,066 (2.7)	578,196 (46.5)	230,444 (18.5)	3,716 (0.3)	66,401 (5.3)

자료: 보건복지부(2020). 보육통계. p. 3.

[그림 II-1-12]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원아 수 및 비율 추이(2011-2020)



자료: 보건복지부(2020). 보육통계. p. 3.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를 연령별로 정리하였다. 저출산 고착화로 0세 아동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이는 전 연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영아 비중이 유아에 비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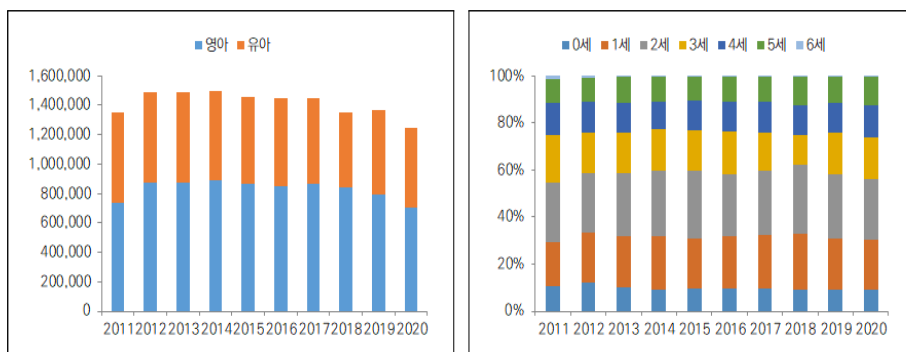
〈표 II-1-13〉 연령별 어린이집 원아 수 추이(2011-2020)

단위: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348,729 (100.0)	1,487,361 (100.0)	1,486,980 (100.0)	1,486,671 (100.0)	1,452,813 (100.0)	1,451,215 (100.0)	1,450,243 (100.0)	1,415,742 (100.0)	1,355,085 (100.0)	1,244,396 (100.0)
0세	146,666 (10.9)	177,757 (12.0)	148,273 (10.0)	138,563 (9.3)	137,117 (9.4)	141,013 (9.7)	139,654 (9.6)	126,793 (9.0)	126,216 (9.2)	116,468 (9.4)
1세	249,787 (18.5)	321,716 (21.6)	325,921 (21.9)	342,056 (22.9)	308,227 (21.2)	318,245 (21.9)	330,868 (22.8)	319,016 (22.5)	294,242 (21.6)	263,128 (21.1)
2세	342,879 (25.4)	372,811 (25.1)	400,781 (27.0)	409,954 (27.4)	419,252 (28.9)	386,726 (26.6)	391,715 (27.0)	397,955 (28.1)	376,041 (27.5)	321,294 (25.8)
3세	272,034 (20.2)	259,112 (17.4)	255,786 (17.2)	265,338 (17.7)	253,294 (17.4)	263,652 (18.2)	236,665 (16.3)	169,328 (12.0)	240,429 (17.6)	214,853 (17.3)
4세	182,999 (13.6)	194,413 (13.1)	184,513 (12.4)	177,014 (11.8)	180,249 (12.4)	180,255 (12.4)	188,540 (13.0)	169,328 (12.0)	173,715 (12.7)	174,394 (14.0)
5세	137,349 (10.2)	149,522 (10.1)	161,877 (10.9)	155,510 (10.4)	147,278 (10.1)	153,893 (10.6)	156,093 (10.8)	163,314 (11.5)	148,832 (10.9)	149,201 (12.0)
6세 이상	17,015 (1.3)	12,030 (0.8)	9,829 (0.7)	8,236 (0.6)	7,396 (0.5)	7,431 (0.5)	6,708 (0.5)	6,062 (0.4)	5,610 (0.4)	5,058 (0.4)
영아	739,332 (54.8)	872,284 (58.6)	874,975 (58.8)	890,573 (59.5)	864,596 (59.5)	845,984 (58.3)	862,237 (59.5)	843,764 (59.6)	796,499 (58.3)	700,890 (56.3)
유아	609,397 (45.2)	615,077 (41.4)	612,005 (41.2)	606,098 (40.5)	588,217 (40.5)	605,231 (41.7)	588,006 (40.5)	508,032 (35.9)	568,586 (41.7)	543,506 (43.7)

자료: 보건복지부(2011). 보육통계, p. 70; 보건복지부(2012). 보육통계, p. 89; 보건복지부(2013). 보육통계, p. 89; 보건복지부(2014). 보육통계, p. 93; 보건복지부(2015). 보육통계, p. 94; 보건복지부(2016). 보육통계, p. 98; 보건복지부(2017). 보육통계, p. 99; 보건복지부(2018). 보육통계, p. 100; 보건복지부(2019). 보육통계, p. 100; 보건복지부(2020). 보육통계, p. 103.

[그림 II-1-13] 연령별 어린이집 원아 수 추이(2011-2020)



자료: 보건복지부(2011). 보육통계, p. 70; 보건복지부(2012). 보육통계, p. 89; 보건복지부(2013). 보육통계, p. 89; 보건복지부(2014). 보육통계, p. 93; 보건복지부(2015). 보육통계, p. 94; 보건복지부(2016). 보육통계, p. 98; 보건복지부(2017). 보육통계, p. 99; 보건복지부(2018). 보육통계, p. 100; 보건복지부(2019). 보육통계, p. 100; 보건복지부(2020). 보육통계, p. 103.

다) 보육교직원 수

최근 10년간 어린이집 수가 크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육교직원 수는 2011년 248,635명에서 2018년 333,420명까지 늘어났다가 이후 감소추세를 보인다. 원장 및 담임교사 외에 보조교사 지원이 확대되었고, 2020년부터 시행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연장반 전담교사까지 지원되면서 보육교직원 수가 크게 줄지 않은 것이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2011년 22,229명에서 2020년 59,974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도 마찬가지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는 각각 2017년 146,920명, 2015년 105,124명까지 늘어났다가 2020년 129,306명, 89,552명으로 줄었다. 즉, 가장 교직원수가 많았던 시기에 비하여 민간은 17,614명, 가정은 15,572명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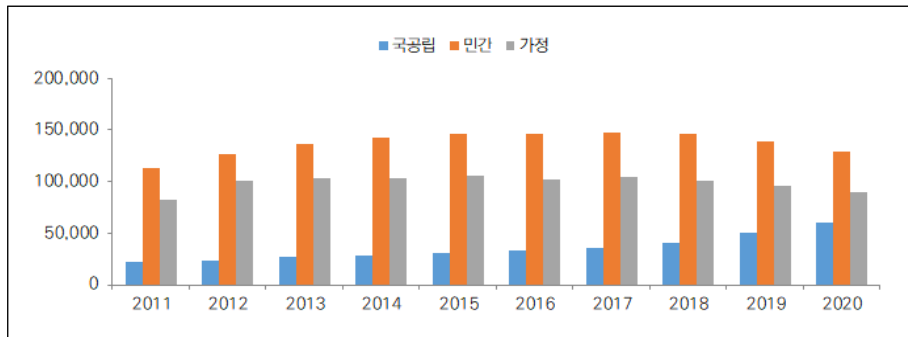
〈표 II-1-14〉 설립유형별 보육교직원 수 추이(2011~2020)

단위: 명, %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2011	248,635	22,229	17,491	7,724	112,779	82,911	485	5,016
2012	284,237	23,725	18,011	8,094	126,239	101,273	614	6,281
2013	301,719	26,750	18,765	8,703	136,180	102,731	730	7,860
2014	311,817	28,977	19,045	8,749	141,977	102,947	856	9,266
2015	321,067	30,823	18,933	8,637	145,724	105,124	970	10,856
2016	321,766	32,937	18,920	8,436	145,609	101,891	979	12,994
2017	330,217	36,098	18,845	8,254	146,920	104,176	1,066	14,858
2018	333,420	41,122	19,139	8,259	146,386	100,987	1,051	16,476
2019	331,444	50,436	18,835	8,062	139,344	95,763	1,043	17,961
2020	325,669	59,974	18,313	7,695	129,306	89,552	1,030	19,799

주: 보육교직원 수는 정상운영중인 어린이집에서 임용, 출산휴가 상태인 보육교직원 수임.
자료: 보건복지부(2020). 보육통계. p. 4.

[그림 II-1-14] 설립유형별 보육교직원 수 추이(2011-2020)



자료: 보건복지부(2020). 보육통계. p. 4.

직무별로 보육교직원 추이를 살펴보았다. 원장 수는 어린이집 수와 연동하여 2011년 이후 증가하다가 2013년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감소에도 2018년 239,996명까지 증가하였지만 이후 감소추세를 보인다.

〈표 II-1-15〉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 추이(2011-2020)

단위: 명

구분	계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사무원	조리원	기타
2011	248,635	39,546	180,247	1,341	550	706	891	934	17,457	6,963
2012	284,237	42,164	204,946	1,717	520	771	1,118	1,138	22,866	8,997
2013	301,719	43,550	212,332	1,776	529	848	1,211	1,171	26,710	13,592
2014	311,817	43,532	218,589	1,856	546	926	1,254	1,140	28,568	15,406
2015	321,067	42,338	229,116	1,981	549	914	612	1,154	28,112	15,677
2016	321,766	40,901	229,548	2,115	567	934	1,296	1,142	28,999	16,264
2017	330,217	40,085	235,704	2,106	600	944	1,249	1,135	30,180	18,214
2018	333,420	38,975	239,996	2,017	633	927	1,170	1,099	30,634	17,968
2019	331,444	37,168	239,973	2,014	658	923	1,121	1,103	31,090	17,394
2020	325,669	35,199	237,966	1,908	650	902	1,055	-	30,182	17,8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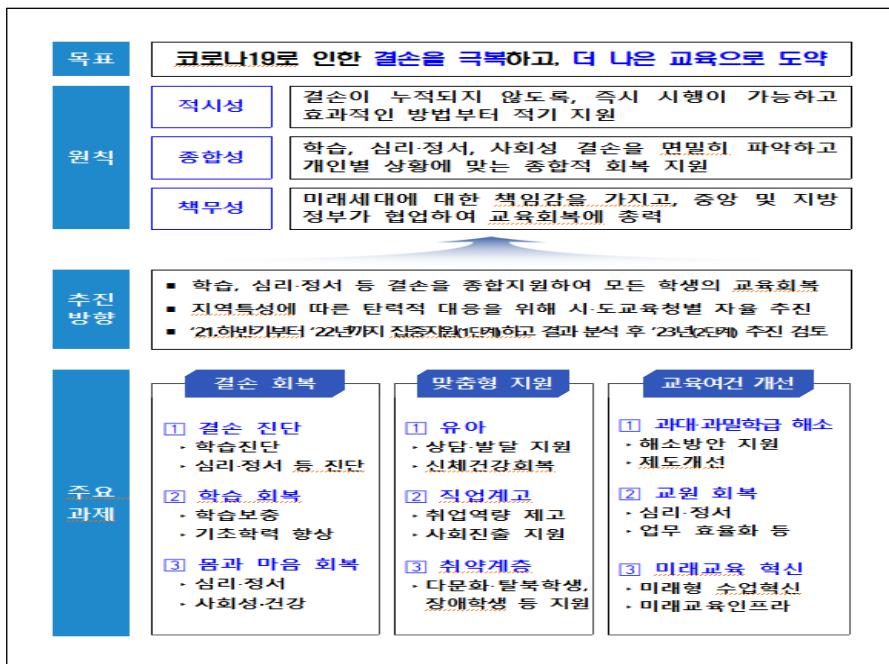
주: 보육교직원 수는 정상운영중인 어린이집에서 임용, 출산휴가 상태인 보육교직원 수임.
 자료: 보건복지부(2011). 보육통계, p. 113; 보건복지부(2012). 보육통계, p. 150; 보건복지부(2013). 보육통계, p. 150; 보건복지부(2014). 보육통계, p. 156; 보건복지부(2015). 보육통계, p. 160; 보건복지부(2016). 보육통계, p. 167; 보건복지부(2017). 보육통계, p. 165; 보건복지부(2018). 보육통계, p. 166; 보건복지부(2019). 보육통계, p. 176; 보건복지부(2020). 보육통계, p. 174.

2. 주요 관련정책

가.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²⁾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 및 등교·원격수업 병행 지속에 따라 등교일수가 평년(190일)의 50% 내외 감소로 인하여 학습결손이 발생되며, 이러한 학습결손은 초기에 해결되지 않고 누적되는 경우, 취업 등 개인 생애 전반은 물론 국가경쟁력까지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등교 축소에 따른 교우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아지고 사회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일상복원을 넘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교육여건 구축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교육부는 교육회복을 위한 종합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림 II-2-1]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추진 방향



출처: 교육부(2021a).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 모든 학생의 코로나19 극복 지원 -, p. 4

2) 교육부(2021a).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정리함.

아래는 유아 관련한 주요 내용은 상담지원, 발달지원, 신체건강 회복, 교원정서 지원, 교육환경 조성으로 구분하여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2-1〉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주요 내용

구분	세부내용
상담 지원	• 유아행복감 감소, 학부모 양육스트레스 증가 등 코로나19 영향을 진단·해소하기 위해 유아·학부모의 심리·정서 상담 지원
발달 지원	• 코로나19로 저해된 유아 행복감 회복 및 언어·정서·신체발달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과후 과정 모델 운영 - 언어·정서·신체발달 지원 및 방과후 과정 학부모 대상(맞벌이 가정 등) 놀이코칭 등
신체건강 회복	• 외부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유아의 충분한 신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후 유치원의 놀이환경 조성
교원 정서 지원	• 수업 외에 방역·돌봄 등의 업무 과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 대상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 코로나19로 불안·우울 등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원장의 인식 질문 : 교원의 불안·우울 등 증가 80%이상(「코로나19 유치원·어린이집 대응체계 점검 및 현황 분석」 최윤경, '20)
교육환경 조성	• 교육콘텐츠 제작·활용* 등 디지털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유치원·교사별 노트북 등 기기 제공 및 무선망 구축 지원

출처: 교육부(2021a).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 모든 학생의 코로나19 극복 지원, p. 11.

나.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 시안」³⁾

1) 추진배경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및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식을 암기하며 학습하던 기존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자기주도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성, 협업능력 등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현재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이 가능해지는 등 교육현장의 혁신적 변화를 기반으로 미래교육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는 교육현장의 변화를 미래교육을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 하에(교육부 보도자료, 2020. 10. 5)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 시안’을 발표하였다.

3) ‘교육부(2020).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의 내용을 정리함.

2) 정책 방향 및 과제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 시안」은 코로나 이후 시대 미래교육 전환이라는 비전하에 미래교육체제 준비를 위한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유·초·중등교육, 고등·평생교육, 기반 구축의 세 영역의 총 10개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유·초·중등교육 영역의 정책과제로는 ‘미래형 교육과정 마련’, ‘교원제도 혁신’, ‘미래형 학교 구현’, ‘교육안전망 강화’가 제시되었다. 이 중 유치원 교육과 관련된 정책과제는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디지털 환경 경험 반영하는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 도입’과 수요 맞춤형 돌봄 확충 및 통학버스 단계적 확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공립유치원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이 있다.

[그림 II-2-2]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출처: 교육부(2020).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 p.3.

〈표 II-2-2〉 미래교육 전환 10대 정책과제(안) 중 유·초·중등교육 관련 내용

정책 과제		추진내용
미래형 교육과정 마련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 본격 추진	• 학생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주제중심 교육과정 개선 • 교육과정 다양화 및 분권화, 자율성 강화 • 교육의 책무성, 공공성 강화 • 한국형 원격수업 확대, 교육과정의 유연화 및 다양화 등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준비	• 학점제형 교육체제 마련 • 자기주도적 학점 이수 지원 • 학점제 지원체제 구축
	중등 직업교육 고도화	• 맞춤형 직업교육 체제 구축 • 실습환경 혁신 • 사회진출 기회 확대
	교과서 패러다임 전환	• 온라인 교과서 도입 추진 • 교과서 개발·제공 형식 다양화, 학교 자율선택 기회 제공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 도입	• 미래형 유아·놀이중심 유치원 교육과정 도입 - 3~5세 유아를 위한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디지털 환경 경험 반영(코로나 이후 융합형 유아교육에 대비, 유치원 원격수업 체제 및 기본 방침 제시)
교원제도 혁신	새로운 교원 양성체제 개편 논의 추진	• 교원양성기관 개편 방향에 대한 사회적 협의 추진 • 미래형 교원양성체제 구축 추진
	미래 수요에 대응한 적정규모 교원수급 정책	• 지속가능성 및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한 교원수급 모델 마련 • 탄력적 교원수급을 위한 기간제 교원 제도 개선
	학교현장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교원정책 추진	• 학교장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및 책무성 강화 • 미래형 교사 직무 재구조화(지식전달자→학습촉진자·지원자) • 교무 업무의 효율화 방안 마련(보직교사의 업무전문성 및 교사의 교육활동 전념도 제고)
미래형 학교 구현	민주적 학교 모델 구현	• 교육과정 운영, 예산 집행, 교원인사 등에서 학교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 학생 참여 제도화 • 민주시민교육 체계화
	새로운 학교 모델 구현	• 미래형 혁신학교 운영 •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학생 안전 및 디지털 기반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 디지털 환경 조성(초·중·고 교실에 무선환경 구축)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 안전한 환경 조성(안전점검 상시 점검 시스템 구축, 내진보강 조기 완료,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등) • 등 하굣길 안전(교통안전 환경 조성 및 지도 강화) • 안전 급식 제공(국공립유치원 및 50인 이상 사립유치원 급식에 「학교급식법」 적용, 영양(교)사 배치 기준 강화) • 전문 상담교사 확충을 통한 학생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정책 과제		추진내용
교육 안전망 강화	교육적 배려 필요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 교육급여 개편(필요한 교육활동에 개인이 자율적으로 지출) • 지역 중심 교육안전망 구축(취약학생 사례관리 및 지원을 위한 교육 지원청에 (가칭)교육복지안전망 센터 설치)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	• 국 공립 확충(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를 목표로 '21년까지 매년 500 학급 이상 확충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설립 유형 다양화) • 수요 맞춤형 방과후 돌봄 확대 및 통학버스 단계적 확충 - 학급 증설, 운영시간 및 참여 대상 확대, 연계 돌봄(공립 및 공 사립 간, 초등 지역 등) 활성화 등 - 농어촌 단설에 우선 지원하되, 시도별 자체계획 수립 후 확충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책임 보장	• 비대면 수업에 따른 학습격차 해소 노력(등교수업 확대, 소규모 대면 지도 추진, 교사-학생 간 소통 활성화 등) •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추진 • 학교 중심 지원을 통한 기초학력 지원 강화

출처: 교육부(2020).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 p. 5~13.

다.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

1) 비전 및 추진방향

교육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의 비전으로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 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제시하고, 추진방향으로 개방성과 다양성, 분권화와 자율화, 공공성과 책무성, 디지털 기반 교육의 네 가지로 설정하였다. 이는 학생 개별 성장 및 진로와 연계된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을 강조한다. 추진과제로는 1)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포용교육기반 마련, 2) 학생개별 맞춤형 교육 기반 마련, 3) 교육과정 개정 체제 개선, 4) 교육과정 안착지원 체제 구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II-2-3]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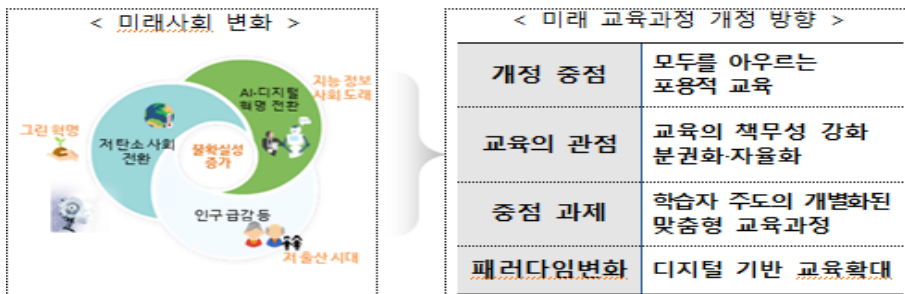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2021b).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 p. 10

2) 추진과제4)

가)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포용 교육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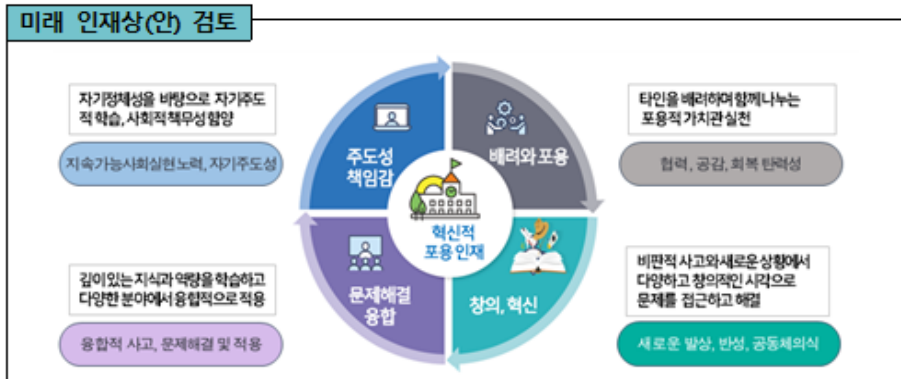
(1) 미래 교육의 기본 방향 및 인재상 설정



출처: 교육부(2021b).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 p. 11

4) 추진과제 4개 중 관련 있는 2개만 제시함.

「미래를 이끌어 갈 혁신적 포용 인재」라는 목표하에 인구 구조 변화의 뉴노멀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분석하고 미래 인재상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출처: 교육부(2021b).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 p. 11

검토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인재상 및 핵심 역량과 미래 패러다임 변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1. 4. 20, p.1).

- 자기주도성 및 삶과 연계한 미래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구현
-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학생 개별 성장 및 진로 설계 지원 교육과정 개발
-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내용 강화
- 지역 분권화 및 학교·교사 자율성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운영 체제 구축
- 디지털·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
-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교육과정 개발 체제 구축

초·중등교육을 통해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상을 중심으로 국가·사회적 요구, 학습자, 현행 교육과정과 교과 내용 분석 등을 통해 주요 개정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학생 선택권 확대,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 디지털기반 교육지원 교육과정 다양성 확대, 놀이·학습연계 등 발달 수준에 대한 고려 등이다.

나) 기초학력 및 배려대상 교육 체계화

기초·기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3R(읽고, 쓰고, 셈하기)에서 벗어나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을 기초소양으로 강조하였다.

〈표 II-2-3〉 OECD의 핵심기반 중 인지적 기반의 요소와 정의

주요 내용	세부 사항
언어소양	• 다양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형식과 상황에서 텍스트와 시각적 정보를 이해, 해석 사용하고 창출하는 능력(부호/부호시스템의 인코딩 및 디코딩을 기반으로 의미 만들기)
수리소양	• 디지털 환경을 포함한 일상생활에서 수학도구, 추리 및 모델링을 사용하는 능력
디지털소양	• 전통적인 literacy와 동일한 기초능력에 의존하지만, digital literacy는 디지털 상황에서 적용되며, 새로운 디지털 도구와 역량에 의존함
데이터소양	•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 데이터 읽기, 작업, 분석 및 데이터와의 논쟁 능력, 그리고 '데이터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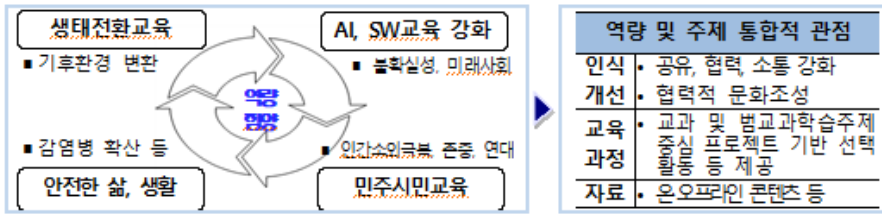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2021b).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 p. 14

또한 장애 학생들의 특성 및 요구 분석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온·오프라인 교육내용 적용 방안 검토를 포함하고 있다(발달장애를 포함하는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내용 수준, 비중 등을 고려하여 체계화).

아울러,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다문화 교육내용을 범교과 학습주제 및 교과 교육과정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역량 강화 및 맞춤형 교육지원, 특히, 다문화학생의 인권 및 다양성 존중 교육 확대,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등 강화하고자 한다.

다) 지속가능한 미래 및 불확실성에 대비한 교육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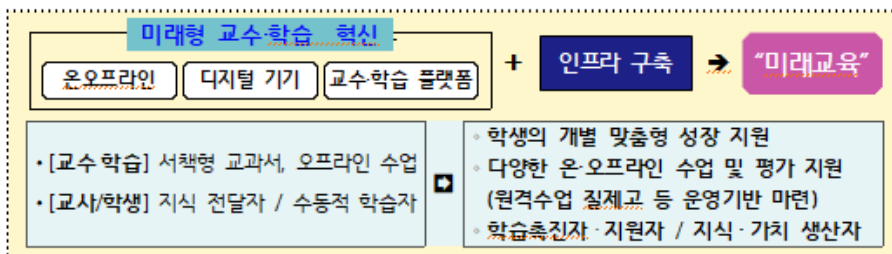
인공지능·기후환경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미래사회 대응을 위해 양립 불가능한 요구들 간의 균형을 찾아가는 역량 함양 교육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존중, 자율, 연대 등 시민가치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과정 목표 및 내용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 교육을 반영한다.



출처: 교육부(2021b).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 p. 17

라) 디지털 기반 교육을 통한 미래교육 여건 마련

에듀테크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협력수업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및 평가를 적용 등 새로운 교육 전반의 혁신을 도모한다. 디지털 기반으로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학습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하는 창의적인 온·오프라인 수업 활성화, 시·공간의 경계 없이 교실 밖 세상과 연결된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콘텐츠, 교수·학습, 수업공간 등 활용자원을 무한 확장, 빅데이터, AI 등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준 진단, 학습특성 분석을 기반으로 개별학습 제공, 학습경로 설계 등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교과서·학습 동영상 활용, AR·VR을 이용한 현장견학, 과학실험, 안전체험 등 풍부한 디지털 교수·학습 콘텐츠 활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 교육부(2021b).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 p. 21.

라.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⁵⁾

1) 추진배경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사회 급변과 불확실성을 체감하며 미래 변화를 선도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새로운 학교 모델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또한 기존 시설사업은 노후시설 개선에 집중되어 있어, 에듀테크 활용 및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체계의 전환·지원에 한계를 절감하고 새로운 형태의 미래학교 구현을 계획하게 되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미래학교’라는 비전하에 다양성, 창의융합, 시민교육을 구현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조성, 그린학교 구현, 학교 복합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2) 기본방향

가) 미래학교 전환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및 혁신적 교수학습을 지원하고, 학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공간인 미래학교로 단계적 전환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실질적 학교 변화, 교수학습 변화를 추진하고,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학교 개선에 우선 적용하고, 시설을 포함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단계적 사업을 추진한다.

나) 사용자 참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원하는 학교 모습을 함께 만들어 가는 사용자 참여 원칙으로 미래학교를 조성한다. 학교 구성원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공간과 시설을 스스로 제안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협업, 의사소통역량, 공동체 의식 함양한다.

5) '교육부(2021c).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안)'의 내용을 정리함.

[그림 II-2-4]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기본방향



출처: 교육부(2021c).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안), p.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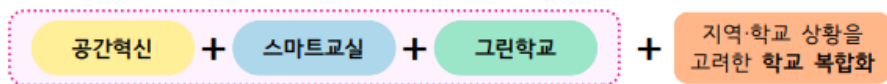
다) 특화모델 운영

미래학교의 주요 요소를 고루 갖추되, 지역 · 학교 · 공동체의 요구에 따라 비중을 달리하여 특정요소를 강조한 모델을 운영한다. 농산어촌 등 교육 · 문화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학교는 복합화 모델, 기후 환경에 관심이 많은 지역의 학교는 그린학교 등을 강조한다. 또한 학교 급별 및 학교 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적 공간혁신 모델을 운영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편안한 놀이 · 휴식공간, 중학교는 자유학기(학년)제 연계 공간, 고등학교는 교과수업 공간 등을 강조한다. 특수학교, 특성화 중·고등학교는 학생의 특성과 학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학습공간 및 실습장 등을 조성한다.

3) 주요 내용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학생 선택과 웰빙을 고려한 수업, 휴식, 감성, 놀이공간으로서의 ‘공간혁신’에서 나아가, 교수학습 자원을 무한히 확장하고 개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술 기반의 ‘스마트한 학습환경’, 친환경 · 생태학습 장으로서의 ‘그린학교’, 지역사회와 연계된 ‘학교 복합화’를 통해 미래형 학교를 구현하고자 한다.

[그림 II-2-4]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주요 내용



출처: 교육부(2021c).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안), p.11.

<표 II-2-4>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주요 내용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 다양한 학습과 융합적 경험이 가능한 공간 조성 - 크기와 용도가 유연한 공간 - 창의융합 공간 - 온라인 교육, 토의·토론이 가능한 소규모 공간 • 학생의 휴식과 소통이 있는 공간 조성 - 참여·소통공간 - 개방성 있는 다목적 공간 •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교수학습 운영 - 통합·분반 수업, 온·오프라인 수업 등 선택학습 확대 - 주제 중심 수업 활성화 - 인성·공동체 교육	•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학습환경 구축 - 무선 인터넷 환경 구축 - 개별 디바이스 활용 지원 - 교수학습통합플랫폼 구축 • 스마트한 학교 운영 체계 구축 - 지능형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디지털 기자재 효율적 관리 - 첨단 안전기술 활용한 위험요인 통제·관리 • 디지털 전환 기반의 교수학습 혁신 - 블렌디드 수업, 교수학습 확장 - 맞춤형 개별학습, 학생활동 중심 수업
그린학교	학교복합화
•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학교 - 제로에너지 실현, 관리 자동화 • 학습·휴식이 함께하는 건강한 생태학교 - 생태교육 공간 조성 - 학생·교직원 휴식 및 주민 커뮤니케이션 거점 공간 제공 -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공간 조성 • 환경생태교육의 장으로 제공되는 학교 - 학교환경의 학습 교재화 및 환경교육 거점 역할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체험형 환경교육 실시	• 지역 상행을 위한 학교 복합시설 조성 - 지역사회와의 시설 공유 - 복합시설 블록화 • 효율적인 운영 방식 도입 및 프로그램 다양화 -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운영 다양화 - 마을 공동체 지원

출처: 교육부(2021c).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안), p.11~20.

마.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⁶⁾

정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정부의 포괄적인 아동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 8. 27: 1). 그간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15~'19)을 수립·추진하여 아동의 보편적 복지 확대 등 노력하였으나, 아동의 행복수준 향상에 한계가 있었다(관계부처합동, 2020a: 1). 이에 이번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에서는 ‘아동 중심’, ‘권리 주체’라는 기조가 정책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0a: 1).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및 추진전략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II-2-5]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 정책체계도



출처: 관계부처합동(2020a).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p. 14.

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8.27.)와 관계부처합동(2020a)의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안)’(‘20~'24)’을 토대로 작성함.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중 유아교육·보육과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2-5〉 제2차 아동종합기본계획 중 유아교육·보육 관련 정책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세부과제	세부 목표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지원	놀이와 학습이 조화로운 학교와 지역사회	지역, 연령 등 감안한 맞춤형 놀이·여가 지원	〈영유아-초등학교 놀이 시간과 공간 확충〉 - 영유아 놀이시간 보장 및 놀이공간 확보 - 창의 활동 중심의 학교 공간 개선 및 시간 확보 - 부모, 교사 등 놀이지원자 인식 및 역량 강화 〈아동 특성을 고려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 - 아동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생활 체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스마트폰·인터넷 등의 바른 사용 역량 강화〉 연령 등 발달단계 고려하고, 아동-가족이 함께하는 각종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과의존 예방 및 건강한 이용습관 형성
	아동 신체와 마음건강 관리 강화	새로운 건강 위협요인 대응 강화	〈‘유아 성행동 문제’ 발생시 아동관점 대응체계 강화〉 - 아동중심, 아동보호 관점에 따라 현장 대응 매뉴얼 마련(‘20~) - 조사·상담·치료 등을 포괄한 전문기관 연계시스템 마련(‘20~) - 아동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 병행 추진
		아동 성범죄 및 ‘유아 성행동 문제’ 관리 강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폭력과 각종 안전사고로부 터 보호	교통, 학교, 식품·공산품 등 생활 속 안전관리 강화	〈「학부모안심유치원」 확대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학부모안심유치원」 확대 -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및 교육 〈어린이 주요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 - 유해화학물질 노출 감소를 위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전면개정안 마련(‘20.12)
			〈어린이 먹거리 안전·위생관리 강화〉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아동중심 공적 보호·돌봄체계 구축	아동 돌봄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강화〉 유아, 청소년 등 아동발달 단계별 맞춤형 교육 실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가정-지역사회 돌봄지원 강화〉 ‘21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550개소 이상

II. 국내외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동향과 미래환경 변화 전망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세부과제	세부 목표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재난상황에 대응가능한 돌봄체계 마련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확충, 공공보육 이용률 40% 조기 달성 〈개정 유치원 3법 이행관리 강화〉 •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보호·돌봄시설의 감염병 재난 대응 역량 강화	〈감염병 예방 교육 및 대응 매뉴얼 체계화〉 • 종사자 교육 강화 • 기관별 지침에 감염병 대응 매뉴얼 마련 〈시설 면적기준, 인원비율 등 개선〉 • 시설의 아동 1인당 면적, 보육교사 대 아동 수 등 조정 검토 • 감염 예방을 위한 탄력적 학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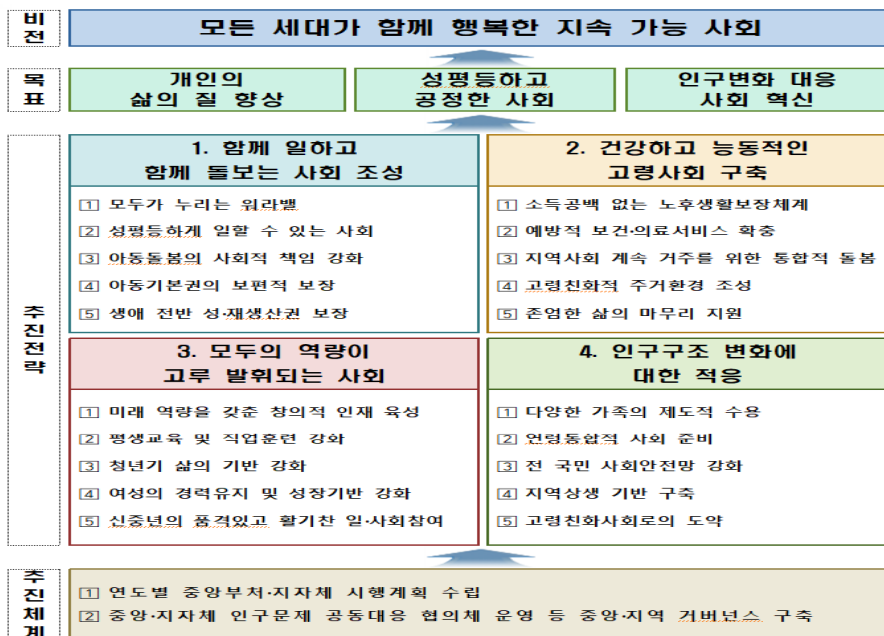
출처: 관계부처합동(2020a).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p. 28-72.

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⁷⁾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한 이후 제 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왔다(관계부처합동, 2020b: 6). 하지만 우리 사회의 초저출산 현상 및 급격한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고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관계부처합동, 2020b: 5).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정부는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였으며, 정책 체계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

본 기본계획에서는 개인을 노동력·생산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가발전 전략’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 전략’으로 기본관점을 전환하고 핵심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층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정책체감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자 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12. 15.: 3).

[그림 II-2-6]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체계도



출처: 관계부처합동(2020b).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p. 38.

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12.15.)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관계부처합동, 2020b)을 바탕으로 작성함.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유아교육·보육과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2-6〉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유아교육·보육 관련 정책

추진전략	대과제	중과제	세부 목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공보육 확대	•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550개소씩 확대, 공보육 이용률 2022년 3월 40% 달성 후 2025년까지 50% 달성 • 교사 대 아동비를 적정화, 시간제보육 확충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 확대·강화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영아기 집중 투자	• 2022년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 도입. 모든 0세 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 지급. 돌봄서비스(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아이돌봄 등) 또는 직접육아 비용으로 부모가 선택하여 사용 • 2025년도 50만원 지급 목표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12.15.).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더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수립. p. 4, 8, 9.

사. 장애아동 종합대책(안)⁸⁾

1)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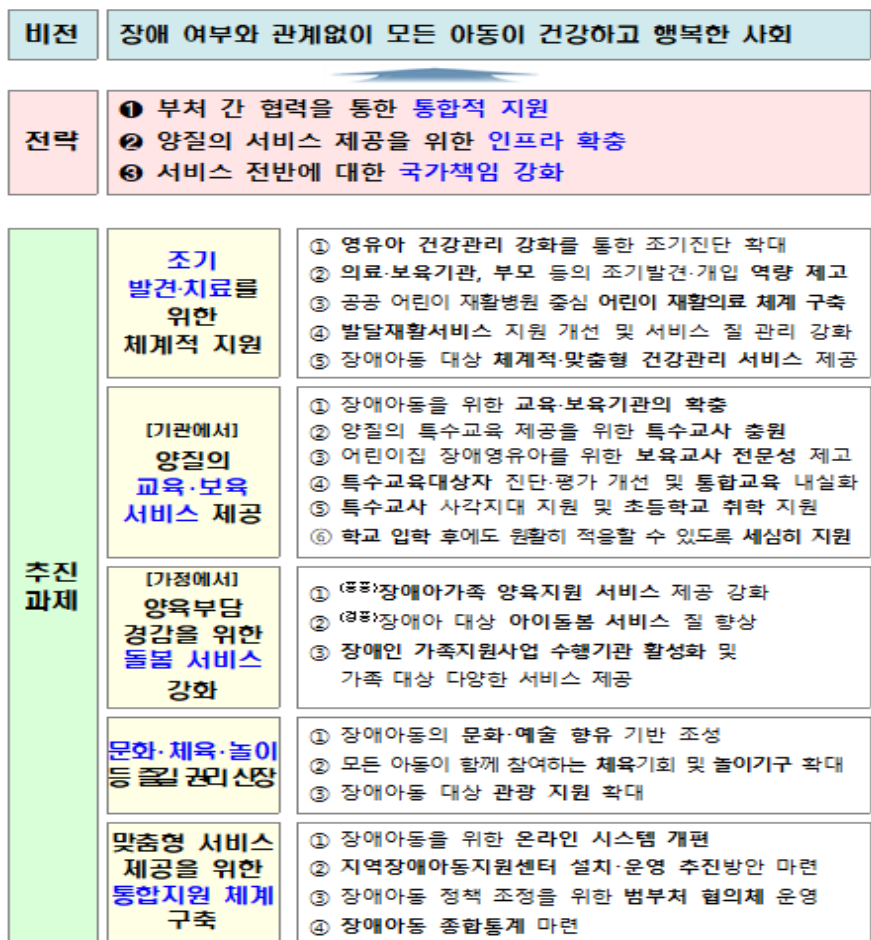
‘정부는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1: 1). 그러나 그동안의 정책들은 성인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 중심으로 전개되어 장애아동에 대한 정책은 분절적으로 제공될 뿐 장애 영유아에 대한 종합적 접근과 지원을 부족한 실정이다(관계부처 합동, 2021: 1). 이에 정부는 취학 전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의 장애아동 지원 정책을 검토한 결과, 장애의 조기 발견-개입-치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부족, 장애아동의 의무교육 권리 보장 미흡,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과 돌봄 부담 과중, 장애아동 눈높이에 맞는 문화, 체육, 놀이 등 인프라 부족, 장애아동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지원체계 미비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취학전 아동을 중심으로 한 장애아동 종합대책(안)을 발표하였다.

8) '관계부처 합동(2021).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안)-취학전 아동을 중심으로-'의 내용을 정리함.

2) 추진 방향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의 비전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이며,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체계적 지원,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서비스 강화, 문화, 체육, 놀이 등 즐길 권리 신장,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의 5가지 정책과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II-2-7]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안)의 추진 방향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1).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안)-취학전 아동을 중심으로-, p. 9

3) 주요 내용

주요 내용으로는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를 통한 조기진단 확대,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 보육기관 확충,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 강화, 장애아 대상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 II-2-7〉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안)의 주요 내용

정책 목표	세부 추진전략	
조기 발견·치료를 위한 체계적 지원	일상생활에서 장애가 조기 발견될 수 있도록 기능, 역량 강화	•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를 통한 조기진단 확대 • 의료·보육기관 등 현장 인력의 조기발견 역량 제고 • 장애 조기 개입을 위한 부모 역량 제고 및 지원 확대
	치료·재활 서비스의 국가 책임성 강화	•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중심으로 어린이 재활의료 체계 구축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서비스 질 관리 강화 • 장애아동 대상 체계적·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	교육·보육기관 인프라·인력 확충	•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보육기관의 확충 • 양질의 특수교육 제공을 위한 특수교사 충원 • 어린이집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로 보육의 질 개선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체계 재정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개선 • 통합교육 제공 확대 및 내실화 • 특수교육 사각지대 지원 및 개별화교육 내실화 • 치료 중에도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 초등학교에 적령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학교 입학 후에도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	• 특수교육기관 신설 등 인프라 지속 확충 •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등 지원 내실화
[가정에서]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 서비스 강화	장애아동 대상 돌봄·양육 서비스 지원 개선 및 질 관리 강화	• (중증)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 강화 • (경증) 장애아 대상 아이돌봄 서비스 질 향상
	장애아동 가족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 활성화 등 인프라 구축 • 장애아동 가족 대상 다양한 서비스 제공 확대
문화·체육·놀이 등 즐길 권리 신장	• 장애아동의 문화·예술 향유 기반 조성 •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체육 기회 확대 •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통합놀이터 확대기반 조성 • 장애아동 대상 관광 지원 확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온·오프라인	• 장애아동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추진방안 마련

정책 목표	세부 추진전략	
구축	연계시스템 구축	
	장애아동에 대한 총체적 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강화	• 장애아동 정책 조정·개선을 위한 범부처 협의회 구축·운영 • 장애아동의 전반적 실태파악을 위한 범부처 종합통계 마련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1).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안)-취학전 아동을 중심으로, p. 10~25.

3. 미래환경 변화 전망

가. 인구구조 변화

정부의 다각적인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및 인구 수축 사회에 머물고 있다. 저출산 장기화의 원인으로 1) 정부의 인구정책 실패(근시안적 시각에서 출산억제정책을 지속), 2) 인성교육, 시민교육이 결여된 입시위주의 교육, 3) 저성장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경제적 기반 약화, 4) 저출산의 원인분석 실패에 따른 출산정책 방향의 오류(결혼의 중요성과 출산의 사회적 의미에 관한 교육, 노동안정성 및 주거안정성 제고 등은 배제한 채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 지원 등 출산율 자체를 높이는 데에만 집중하는 동안 젊은층은 결혼과 출산의 개인적 의미만 강조하고 사회적 책임감 및 생명존중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음), 5) 근로환경, 기업 문화의 미숙함 등을 들 수 있다(한정란, 2021. 6월, 서면자문)

저출산은 인구 고령화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인구 고령화 자체가 출산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젊은 세대가 가족 안에서 조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출산과 육아의 가치와 방식 등을 체득하거나 육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노인 또한 가족 안에서 늙어가기보다는 가족 밖의 여러 서비스에 의지하여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개인적 노인부양부담 가중은 출산의 부담을 높이고 결혼 및 출산에 방해요인을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서로 맞물려 있으며, 함께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Rich, Myrick, & Campbell(1983)에 의하면, 8세가 되면 아이들은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므로, 그 이전에 노인과 노화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이미지 구축이 중요하다. 이에, 초·중·고등 학교교육 내 결혼과 출산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저출산은 하루아침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어린 시기부터 결혼의 개인적 의미(사랑) 뿐 아니라 결혼과 가족구성이 갖는 사회적 의미(시민사회의 책임의식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를 계승, 발전)를 교육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주인은 사회의 모든 시민임과 사회의 주인인 시민으로서 사회를 존속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또한 결혼과 출산이 주는 삶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돌봄 공백 해소에 고령인력 활용을 통해 고령층에게는 보람과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부모에게는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아이들에게는 안정적인 보육환경과 안정된 정서발달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나. 과학기술(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활용

코로나 19 발생 이전부터 유아를 위한 디지털 기술 도입의 필요성은 논의되어 왔으나, 전통적으로 유아교육분야에서는 상호작용을 통한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중시하고 어린시기부터 과도한 미디어 매체 노출에 대한 우려로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편이었다. 이주연(2011)은 유아의 집중력 증진과 흥미 유발을 위한 스마트 학습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유구중(2012) 역시 유아의 탐구적 태도 함양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디지털 매체의 가능성을 보고하였다.

최근 OECD는 코로나19 시기 동안 G20 국가들이 유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기술 활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다(OECD, 2021).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의 주체와 책임은 단위학교/기관 및 지역수준에 있으며, 응답국가의 60%가 유아가 스크린에 노출되지 않고 부모와 디지털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주요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또한 80%의 국가는 유아가 원격교육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술을 1일 평균 1시간 미만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디지털 기술 활용의 어려움으로는 유아원격교육을 지원하는 부모 역량 문제, 시설설비, 디지털 기기 부족, 인터넷 연결 문제와 아울러 특히, 유아를 위해 고안된 디지털 콘텐츠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 OECD(2021)은 가장 우선적인 정책적 권고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유아교원 대상 디지털 기술 관련 전문성 강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원격교육 및 특히 유아의 발달수준을 고려하면서 테크

놀로지 사용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메카니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문무경, 정호연, 2021).

OECD 국가사례를 통하여 국내 유아교육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을 연구한 문무경과 정호연(2021)에 의하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유아원격교육 방식으로 교육 동영상 및 콘텐츠 시청, 실시간 쌍방향, 강의형 교육, 놀이꾸러미 활용 등의 다양한 학습 유형을 2개 이상 활용하고 있으며, 이 중 놀이꾸러미, 쌍방향 교육, 시청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지역이 가장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교육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향후 유아교육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우선과제로는 유아교원의 디지털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OECD(2021)의 G20 국가 대상 조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강주 외(2021)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인터넷 준비지수를 갖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교수·학습용 디지털기기 등 ICT 교육환경, 특히 학교에서 ICT 교육환경은 OECD 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임을 지적하였다. 초중등학교보다도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에서는 디지털 기술 활용 및 ICT 환경 구축이 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토대가 되는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영역의 발달을 위한 교육매체로서 활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장이 혈액을 펌프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등 일부 주제는 가르치기 어렵다. 유아학습자에게 역동적인 과정의 짧은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여 주면 따라 가기에 너무 빠르거나 너무 작거나 접근할 수 없는 측면이 드러날 수 있다. 애니메이션은 전문가가 복잡한 방정식 풀기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줄 수 있고 도시의 성장과 같은 현실 세계의 추상화를 보여줄 수 있다. 애니메이션은 관심을 자극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데 유용하며,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학습자는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과 같이 중요한 아이디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하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학습자가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애니메이션은 자기표현을 지원하는 방법이며 스토리 작성과 같은 창의적인 활동을 위한 프롬프트로 사용되는 등 강력한 학습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손찬희, 서면자문, 2021, 6월).

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코로나19 팬데믹이 유아교육과 보육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은 초중등교육보다 훨씬 치명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영유아부문이 초중등교육과 달리 의무 교육이 아니므로 경기침체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기회와 양질의 서비스 접근 기회가 크게 제약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취약한 계층 영유아를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적극 권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Shaeffer, 2020).

정부는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 제공하고 있으며, 돌봄공백 해소, 사립 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교사 고용유지, 원활한 교육과 보육활동 제공 및 방역, 원격교육 활용과 교사 연수 등을 중심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코로나 백신 접종과 더불어 위드 코로나 및 포스트 코로나 단계로 접어드는 시점까지 초중등학생보다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 및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다각도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은 심각한 돌봄 공백을 초래하여 영유아 양육에서 부모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재조명하게 하였으며, 건강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비대면 방식 교육과 돌봄 수요 증가로 인한 원격교육 도입 및 유아에게 적합한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보육서비스의 재구조화, 교사 대응역량 강화, 시설 및 공간 구성, 영유아 안전과 위생 강화, 보건교사 배치 등이 요구된다. 더불어, 영유아의 심리정서적 불안과 스트레스 심화, 취약계층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의 연속성 보장과 격차 해소 등의 이슈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라. 지속가능발전과 미래교육⁹⁾

영유아 교육과 보육이 UN의 세계발전목표 중 하나로 포함된 것은 역사상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최초이며, 이는 세계 발전과 개혁에 있어서 영유아기가 필수적

9) 문무경(2018). 양질의 보편적 영유아 교육: 국내 이행 현황 및 향후 과제, 문무경(2021). SDG4 모니터링 이행 현황 2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토대로 작성됨.

이라 인식에 기인한다. SDG 4는 교육부문 전반에 대한 목표이며, 두 번째 세부목표(Target 4.2)가 영유아 부문의 목표로 ‘2030년까지 모든 남아와 여아에게 양질의 유아기 발달, 보육과 교육에의 접근성을 보장하여 초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문무경, 2018). 이 목표에서 강조하는 점은 크게 양질(quality)의 영유아 서비스의 접근성(access), 초등교육을 위한 준비(school readiness)이다.

SDG Target 4.2의 달성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다음의 2가지 글로벌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첫 번째는 신체적 건강, 학습, 심리사회적 특성의 측면에서 발달 정도가 정상적인 5세 미만 아동의 (성별)비율(4.2.1), 두 번째는 정규 초등학교 입학연령 전 1년 동안 체계화된 학습 참여 (성별)비율(4.2.2)이다. 또한 주제별 지표(thematic indicator)로 긍정적인 가정학습환경을 경험한 5세 이하 영유아 비율, 취학 전 교육기관 취원율, 무상 및 의무 유아교육 법적 연한을 지표가 고려되고 있다. 이행 방안 관련 글로벌 지표 가운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4.a.1), 최소한의 양성교육과 현직연수를 받은 교사(4.c.1)에도 영유아부문이 포함되어 있다(문무경, 2018).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모든 만 5세 아동 대상 누리과정의 도입 및 2013년 3-4세아 대상 확대 시행을 통하여 현재까지 3-5세 취원율은 90%를 상회해 오고 있으므로, 두 번째 글로벌 지표(4.2.2)는 이미 수년 전에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부모의 비용부담 수준이 높으므로, “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통상적으로 “무상”교육은 (부모) 비용부담이 전혀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에 사용한다)(문무경, 2018).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경우 영유아의 건강, 학습 및 사회심리적 안녕, 행복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고려되고 그 개념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의 합의된 정의가 없으며, 측정할 도구 역시 부재한 상태로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한 향후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최근 개발된 UNICEF(2021)의 ECDI, OECD(2020)의 Early Learning and Child Well-Being 연구사업의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하거나, 이를 벤치마킹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도구를 통한 실증적인 데이터 없이 SDG 4.2 모니터링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UNESCO(2021)는 현재의 기후 위기, 사회적 불평등으로 예측되는 여러

미래에 대하여 평화로운 사회, 살기 좋은 지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동의 진보를 추구하기 위한 미래의 교육을 주창하여, 그 주요 골자로 인본주의적 관점, 공공재(public good), 공동재(common good)으로서의 교육 강화를 촉구하였다. 교육시스템의 설계, 교육과정 및 교수법 접근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50년을 위한 재창조적 교육(Regenerative Education)으로 지칭하며, 공동의 탐구과정을 의미하는 교수법의 공동화(Pedagogical commoning) 촉진을 주요 수단으로 강조하였다.

마. 세계시민교육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y)과 상호연결성(interconnectedness)이 증대되었으며, 빈곤, 인권, 환경, 불평등, 테러, 질병 등 단일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전 지구적 문제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지구 공동체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 함양을 역설하고있다(유혜영, 김남순, 박환보, 2017).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은 다양한 주체들의 관점과 입장에서 정의되고 역사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해석되어 왔기 때문에, 그 구성요소나 교육내용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합의된 바는 없다(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5). 유네스코는 전 지구적인 문제의 해결과 세계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식을 강조하며, 평화교육, 인권교육,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 지속가능발전교육,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인정, 대화를 통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상호의존성과 공유하는 미래에 대한 인식 등을 세계시민교육의 핵심가치로 제시하였다(UNESCO, 2015,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5 재인용).

세계시민은 법적 기반을 토대로 하는 전통적인 시민 개념과는 다르게 구체적인 법적 지위와 의무를 수반하는 개념이 아닌 일종의 기풍으로 이해되며, 근래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국제이해교육, 평화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개발교육, 등 기존의 다양한 교육적 논의가 진화하고 수렴된 형태의 포괄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박환보·조혜승, 2016).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시민의식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 내용과 강조점도

다르게 나타나며, 국내에서는 영어의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이라는 용어를 ‘세계시민교육’, ‘지구시민교육’, ‘글로벌시민교육’, ‘글로벌시티즌십 교육’ 등으로 명명하는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상이한 입장과 관점이 존재한다(김진희, 2015).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국내의 논의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전 지구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체성과 소속감 형성, 2) 인권,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 추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치관과 태도 함양, 3) 글로벌 시민사회의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책무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시민의식 함양, 4)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 필요한 글로벌 역량 개발(박환보, 2016).

세계시민교육 실천을 위한 세부방안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1) 교육시스템 내에 세계시민교육 통합, 2) 교실 내 세계시민교육 전달, 3) 세계시민의식 측정. 이러한 구분에 의하여 세계시민교육의 주제와 내용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세계시민교육 정책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주제로 지속가능발전,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을 포함하기도 한다(박환보, 조대훈, 박경희, 엄정민, 2020).

바. 기후환경 변화

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국정과제 61¹⁰⁾

환경부에서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예측·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사회 구현과 ‘2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상당한 수준 감축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21년~)하여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성 제고 및 기후·대기·에너지정책 통합성을 제고하고 2030 지속가능발전 국가목표·비전 및 이행전략 수립·확정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 전반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 평가·점검체계 구축하여 기후적응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환경분야 유망기업 지정(50개, ~’22년) 및 스마트생태공장 조성, 녹색금융활성화 등을 통한 녹색경제 전환 촉진 및 자원 순환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

10) <https://www1.president.go.kr/government-projects#page3> (2021. 7. 10. 인출)

2) 유니세프 기후위기 대응¹¹⁾

유니세프는 ‘for every child, a safe environment’를 발표하여 기후변화는 어린이의 모든 권리를 위협하여, 기후변화에 가장 책임이 없는 어린이가 기후변화 피해를 입게 됨을 강조하였다. 유니세프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는 노력, 즉 기후 행동은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보장할 수 있는 기회이자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방법임을 역설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다음의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가) 어린이 중심 기후변화 전략과 대응 계획 수립

기후변화 전략 및 재난 대응 계획에 어린이가 중요한 구성원이 되도록 정부 및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파푸아뉴기니에서는 학교에서 기후 재난 대응 계획을 만드는 데 어린이가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나) 어린이를 변화의 주체로 인식

어린이는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결정할 때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으므로 어른들은 어린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근거하여, 유니세프는 유엔정상회의와 같이 어린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기후변화에 대한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한다.

다)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로부터 어린이 보호

또한 유니세프는 학교, 보건소, 수자원 및 위생 시설 등 어린이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지원하고, 다가올 재난에 대해 대비하고, 오늘날의 불평등이 기후변화에 의해 악화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라) 학교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과 재난 위험 대응

11) <https://www.unicef.or.kr/what-we-do/building-future/climate-change> (2021. 6. 18 인출)를 토대로 작성함.

학교교육은 자연재해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태양열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는 전력 공급이 열악한 지역 학교의 전등, 급식 등 교육 제반 시설에 에너지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마) 보건 시설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과 재난 위험 대응

또한 조명, 난방 기기,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기본적인 전기 공급은 보건 서비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태양광 활동 백신 저온 보관 기술 지원 등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재난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협력하도록 한다.

바) 온실 가스 배출 및 오염 감소 노력

유니세프는 각국이 대기 오염을 모니터링하고 폐렴이나 기타 호흡기 질환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며, 특히 기후 위기 대응 전략이 미비하거나 실행하기 어려운 국가 및 지역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III

현 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성과와 한계 분석

- 01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추진 성과와 한계
- 0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추진 성과와 한계
- 03 소결

Ⅲ. 현 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성과와 한계 분석

1.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추진 성과와 한계¹²⁾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은 제1차 기본계획(2013-2017)의 한계점과 보완사항들을 진단하여 수립되었다. 낮은 국공립 유치원 분담 비율, 소외계층 유아교육 기회 부족, 교사 계획서 중심의 경직된 유아교육 체제로 인하여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적 경험 제공 한계, 정부주도의 교원교육과 관리자 중심의 유치원 운영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자율성 존중 부족 및 학부모들의 참여 미흡 등이다.

2차 기본계획은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비전으로 유아교육의 공교육 책임을 강화하여 출발선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질 담보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추진 정책과제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1)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국공립유치원 이용확대, 취약계층 유아지원 확대), 2) 유아·놀이 중심의 교육 운영 강화(유아 중심으로 교육과정 및 지도방법 개선 추진, 현장교원 업무부담 완화, 유아중심 교육문화 선도, 유아대상 과도한 사교육 문화 개선), 3) 학부모와 함께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학부모 참여 강화), 4) 유아교육 혁신을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현장에 적합한 평가체계, 사립유치원 지원체계 구성)([그림 II-1-1] 참조). 이러한 4가지 정책과제의 지난 3년간(2018-2020)의 성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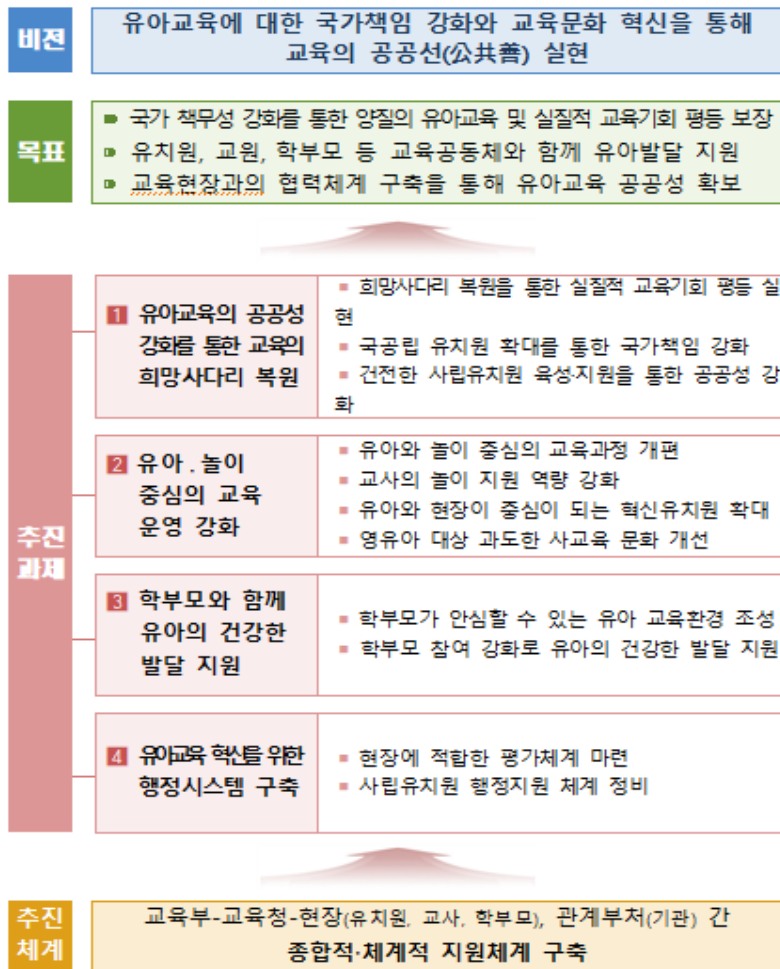
가. 유아교육의 공공성 실현

1) 국공립유치원 확대

12) 본 절의 내용은 교육부 내부자료(2021d)를 토대로 작성됨. 2020 국정과제 실적보고서.

국공립유치원(매입·공영·부모협동형 등 포함)은 총 885학급 확충하여 당초 목표를 177% 상회하고 '20년 목표는 148%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당초 국정 과제 목표는 연간 500학급을 확충하는 것이었으나, 2020년에 연 600학급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하였다(교육부, 2021d, 내부자료).

[그림 III-1-1]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



자료: 교육부(2018).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018-2022): 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p. 8.

국공립유치원 학급 수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정원을 확보함으로써 전체 유아

대상 국공립유치원 입학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와, 19년도 36%이던 인가정원 비율을 20년도에는 39%로 확대하게 되었다(교육부, 2021d, 내부자료).

또한 45개의 새로운 유형의 유치원(공영형 8개, 매입형 35개, 부모협동형 2개)이 개원함으로써 부모 선택의 폭을 확대하게 되었다. 매입형유치원은 공립 선호 높으나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심 및 공립유치원 확충이 곤란한 지역의 사립유치원을 매입 후 공립으로 전환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형태이다. 공영형은 재정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을 확보하여 국·공립에 준하여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유형이며, 부모협동형은 유치원 재원 대상인 유아를 둔 보호자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방식이다.

2) 누리과정 재정 지원

2013년 3~5세 유아 대상 누리과정 도입 이후 16년도에 30만원까지 지원하려던 당초 계획에 비하면 미흡한 실정이나, 2019년까지 22만원이었던 지원단가를 거의 8년 차인 2020년도에 24만원, 21년도에 26만원으로 2만원씩 연이어 인상함으로써 교육비에 대한 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유치원 학비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효력을 2022년까지 연장하여 안정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즉,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매년 약 2조)을 국고로 편성, 2017년 41.2%에서 18년부터 100% 국고로 집행하게 되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은 2019년 3조 8,153억원에서 2020년도에 3조 9,900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747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이외에 코로나 시기에는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 50%를 지원하는 한시재정지원사업(총 760억)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였다(교육부, 2021d, 내부자료).

3)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저소득층 자녀의 국공립유치원 우선 입학기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저소득층 유아 대상 교육비를 추가로 월10만원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 지원하였다. 이러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사업’ 예산을 ‘19~’20년

보통교부금에 반영하였으며,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하였다.

또한 다문화유아의 언어발달을 통합교육 형태로 지원하고, 전체 유아 및 학부모 대상 다문화교육을 운영하였다. 다문화 학부모를 위한 국내 유치원·학교교육 안내 자료인 ‘우리아이 학교보내기(13개 언어)’ 제작·배포하였다. 다문화유치원은 2016년도 60개원에서 시작하여 2018년도에는 131개원, 2019년도에는 139개원으로 확대되었다. 중도입국·외국인 유아 대상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학급(유치원)을 2018년부터 4개원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19년도에는 6개원으로 소폭 확대하였다(교육부, 2021d, 내부자료).

공립유치원 내 특수유아를 위한 통합교육 확대하기 위하여 '17년 731개 학급에서 '18년 853개 학급, '19년 949개 학급으로 2년 간 총 218학급 신·증설하였다. 2018년도에 통합유치원 운영 모델 개발 연구를 수행하여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1:1 비율로 배치하여 완전 통합교육 실시하며, 학급 수업 시 특수, 일반교원을 각각 배치하여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집중 관리하는 통합유치원을 2019년도에 1개원 신설하였으며, 대전, 경남, 경기도에서 설립 추진 중이다. 또한 2018년에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영유아접진 기관과 연계를 통해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 즉시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교육부, 2019, 내부자료).

4) 저소득층 유아 우선 입학

온라인접수-전자추첨 방식으로 편리하게 유치원을 배정받을 수 있는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관계부처 시스템과 연계하여 사회배려계층 유아 대상 우선 입학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8년에 17개 시도교육청에 조례를 제정, 복지부(법정저소득층), 보건처(국가보훈대상자), 통일부(북한이탈주민) 시스템과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우선 입학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부터 저소득층 유아의 국공립유치원 우선 입학기회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유아·놀이중심의 교육 강화

1) 누리과정 개정

누리과정 개정 연구진* 구성 및 단계적 개편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현장적합성 높은 교육과정 개편을 위하여 전국 토론회, 간담회 등 다각도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아·놀이중심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확정·고시하였다(2019년 7월).

2) 교사의 놀이지원 역량 강화

2020년 3월 개정 누리과정의 전면적인 적용을 대비하여 교사의 놀이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지원 자료 개발·보급하였으며, 전국단위의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개정 누리과정 시범 유치원 24개원을 운영(‘19. 3월부터)하여 우수사례 공유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한 교사의 지도 방법 개선을 지원하였다. 또한 개정 누리과정 운영 교사 지원을 위한 놀이자료를 탑재하고 교사·전문가 간 온라인 소통 창구 마련을 위한 누리과정 포털(i-Nuri)을 2019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4학급 이상 신증설 병설유치원에 행정인력을 별도로 배치하여 현장 교원의 과도한 행정업무를 경감함으로써 교원의 수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2019년부터 17개 시도교육(지원)청별 교원상담(치유)센터 등을 통한 개인 및 집단상담, 치유캠프 등 다양한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3) 방과후 놀이유치원 운영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문화를 개선하고 유아의 놀이·쉼 보장을 위하여 ‘방과후 놀이유치원’을 선정, 운영하였다. 2018년도에 12개 시도교육청에서 51개원을, 2019년에는 16개 시도교육청에서 540개원으로 확대 운영하였다.

다. 학부모와 함께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1) 안심환경 조성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유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학부모안심유치원은 시도교

육청이 건강·안전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유치원을 컨설팅 및 평가하여, 안심 교육 여건이 조성된 유치원을 선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부모안심유치원은 2018년 7개 시·도교육청의 141개원에서 2019년 11개 시도교육청의 187개원으로 확대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17개 전체 시도교육청으로 확대되어 2019년 대비 75% 증가한 328개원이 선정, 운영되었다.

2) 학부모 소통 및 참여 강화

유아·놀이중심 문화 조성을 위한 권역별 학부모 워크숍을 총 3회 개최 및 다큐멘터리(EBS, ‘놀이의 힘’, ‘놀이의 기쁨’) 제작·방영하여 부모 대상 홍보를 강화하였다. 또한 학부모의 유치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매뉴얼을 개정하여 (「2019 유치원운영위원회 길라잡이」)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활용하고 있다.

3) 돌봄 공백 해소

2020년 9월 기준, 전체 유치원 8,440개원 중 8,421개원이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전체 유아 612,538명 중 498,784명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전체 유치원의 99.8%가 방과후 과정을 운영, 전체 유치원 유아의 81.4%가 방과후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써, 3-5세 유치원 재원아 대상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하였다(교육부, 2021d, 내부자료).

특히, 코로나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전체 유치원의 90% 이상이 긴급 돌봄을 제공하였으며, 전체 원아의 40%가 긴급 돌봄을 이용하였다. 유치원 휴업기간 (‘20.3.2.~5.26.)동안 긴급돌봄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긴급돌봄 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여 학부모 수요를 파악하고 불편 해소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학부모의 돌봄 공백 불안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라. 유아교육 혁신을 위한 행정시스템 정비

1) 유치원 투명성·공공성 제고

사립유치원 100%(총 3,584개원)가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20년 3월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 및 공공성 제고를 도모하게 되었다. 2019년 16개 시도교육청, 2020년 7개 시도교육청의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치원 원장과 회계담당 직원들의 의견 청취 및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였다. 또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지출단계를 기존의 4단계에서 3단계로 최소화, 원장 회계관직 겸직 및 1인 결재 허용 등 소규모 사립유치원 대상 사용 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장 맞춤형 제도 개선을 도모하였다.

[그림 III-1-2]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사용 절차 간소화



자료: 교육부(2021). 2020 국정과제 실적보고서. 내부자료

이로써 사립유치원이 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을 교육과 돌봄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사립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하였다.

2) 유치원 평가의 현장적합성 제고

제5주기('20~'22) 유치원 평가 지표(안) 및 유치원 평가 개선 지원(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여 개선방향을 다음 표와 같이 도출하였다.

구분	제4주기('17~'19)	제5주기 개선(안)('20~)
주요특징	평가의 객관성, 일관성 중시	평가의 내실화, 자율성 보장을 통한 현장 적합성 제고
평가절차	서면평가→현장평가→종합평가	정량평가 (필요시 정성평가)
평가기준	교육과정, 방과후 과정, 교원연수 등	기존의 평가기준 + 유아의 건강·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평가지표	유치원·어린이집 통합평가 지표	통합평가 지표 유지, 건강·안전 공통 평가항목 + 시도별 평가 항목 수정·보완
평가결과	절대평가 방식의 등급제(4등급) 총평공개 권장 및 영역별 소견 공개	운영의 개선사항, 우수사례 등 평가 총평 또는 평가영역별 평가 결과 공개

출처: 교육부(2021d). 2020 국정과제 실적보고서. 내부자료

3)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에 대한 보조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공립-사립 유치원 교사 간 보수 격차를 완화하게 되었다. 사립유치원 교사 1인당 2017년 월 53만원에서 2018년 월 59만원으로, 2019년에는 월 65만원(장기근속수당 3만원 포함)으로 지원금이 증가하였다.

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추진 성과와 한계¹³⁾

본 절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

1) 국공립이용률 40%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17년 13%에서 '22년까지 4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체적으로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과 공공임대 주택 단지 안에 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그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인건비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국공립

13) 본 절은 보건복지부(2020, 2021) 내부자료(2019 & 2020 국정과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됨.

어린이집 2018년 450개소, 2019년 450개소, 2020년 550개소, 2021년 550개소 등으로 확충 목표의 106% 달성하였다.

〈표 III-2-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산	428	684	688	748 (60 ↑)	609
물량(개소수)	360	450	450	550 (100 ↑)	550

자료: 보건복지부(2021). 국정과제 실적보고서. 내부자료.

이 외에도 국공립·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축 시 친환경·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도입에 따른 사업비 추가 지원(개소당 6천만원, 30개소), '21년 모든 신축사업(82개소)에 적용하여 단가를 증액하는 등 지자체 재정부담 대폭 경감하였다.

〈표 III-2-2〉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국비 지원 단가

단위: 명,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산	2.1	3.9	3.9	3.9	4.7

자료: 보건복지부(2021). 국정과제 실적보고서. 내부자료

2) 국공립 운영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의 확충과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현장평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시간연장, 장애통합보육 등 취약 보육 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3)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취업 부모 선호가 높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도 확대하여 의무이행률을 90%이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설치의무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운영토록 위탁보육 인정을 최소화하고, 사업장 내 보육수요에 맞는 적정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토록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나. 보육 체계 개편

1)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

어린이집 이용 욕구, 이용의사 등 부모의 보육 수요에 부응하고, 영유아 발달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설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를 개선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림 III-2-1] 보육지원체계 개편



출처: 보건복지부(2021). 국정과제 실적보고서. 내부자료.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연장보육 도입, 연장보육교사 신규 배치를 통해 부모는 눈치보지 않고 원하는 만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16시 이후 담임교사가 연장반 전담교사와 교대 근무할 수 있게 되어, 담임교사의 휴게 및 수업 준비 시간 확보로 근무 여건 개선되었다. 특히, 아래 표와 같이,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후 오후 17시 30분 이후에 하원하는 아동 수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도 연장보육에 따른 보육료 수입으로 재정 운영이 개선되었다.

〈표 III-2-3〉 보육지원체계 개편 전후 하원시간 변화: 부모대상

단위: 명

구분		16시 이전	16:30 이전	17시 이전	17:30 이전	18시 이전	18:30 이전	19시 이전	19:30 이전	19:30 이후	계
맞춤반	개편 전	60.2	30.8	3.4	3.4	1.1	-	1.1	-	-	100.0
→											
기본보육	개편 후	37.6	46.6	4.6	6.8	1.1	1.1	1.1	1.1	-	100.0
종일반	개편 전	8.7	29.6	11.3	17.4	9.6	13.8	6.1	3.5	-	100.0
→											
연장보육	개편 후	1.7	11.3	8.7	15.7	14.8	22.6	10.4	13.9	0.9	100.0

자료: 보건복지부(2021). 2020 국정과제 실적보고서. 내부자료.

정부는 어린이집의 연장보육료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하여 출결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어린이집에 아동의 출결 태그(tag)을 비치해 두거나, 부모에게 하원시간을 미루도록 하는 등의 행태는 여전히 남아 있다.

2)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보장과 적정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정한 보육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보육과정, 시설 규모·유형, 지역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표준보육비용 재계측을 2018년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 및 표준보육비용 단가에 근접하도록 보육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였다.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평균 3.3%를 인상하였고, 2021년에는 표준보육비용 단가의 97.9%까지 인상하였다(보건복지부, 2021).

〈표 III-2-4〉 연도별 보육료 지원단가

단위: 천원

구분	보육료			기관보육료		
	만0세	만1세	만2세	만0세	만1세	만2세
2017년	430	378	313	395	191	125
2018년	441	388	321	437	238	161
2019년	454	400	331	485	264	179
2020년	470	414	343	500	272	184
2021년	484	426	353	528	287	194

자료: 보건복지부(2017, 2018, 2019, 2020, 2021). 보육사업안내.

이 외에 연장보육 운영에 따른 어린이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연장보육료를 운영하는 어린이집 2020년 기준 3.2만개소, 영유아 50.6만명에게 연장보육료를 지원하였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보육료를 인상함에 따라 어린이집 재정 운영이 일정 부분 개선되었다. 다만, 2018년 재계측한 표준보육비용 단가에 대한 현장의 불만을 감안한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표준보육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산출결과에 대한 신뢰도 담보가 시급하다.

3) 보육과정 개편

영유아 교육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누리과정의 개편이 진행될 계획('18년~, 교육부·복지부)으로 0~2세 표준보육과정도 영아의 놀 권리 및 균형적 발달을 고려하여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정부는 2018년 '놀이' 중심의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2019년 0~2세 표준보육과정을 개정하였다. 한편,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이 '긴급돌봄' 중심으로 운영되고, 보육이 방역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정 표준보육과정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개정 표준보육과정 관련 교사 연수가 전면 비대면으로 실시되고, 교사들이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는 기회가 적어 개정 표준보육과정을 실행화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다.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1)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와의 양성체계 및 자격체계간 격차 해소를 위해 자격체계를 1·2급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유치원 교사와 같이 대학을 중심으로 한 신규 자격취득 과정을 활성화하고, 대학 외 보육교사 교육원, 학점은행제 방식의 양성과정을 정비해나간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아직 실행하지는 않고 있다.

2)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보육교사가 영유아에게 집중 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17년 1만 9000명) 및 대체교사(17년 2,000명)를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확대하고, 보육체계 개편과 함께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과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보장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표 III-2-5〉 보조대체교사 채용 현황 및 예산

단위: 명,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보조·연장 보육교사	19,000	40,000	52,000 (12,000 ↑)
대체교사	2,036	2,736	3,436 (700 ↑)
예산	1,282	2,291	3,319(1,028 ↑)

자료: 보건복지부(2021). 2020 국정과제 실적보고서. 내부자료.

정부는 지속적으로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확충하여 보조연장 보육교사는 2018년 19,000명에서 2020년 52,000명까지 늘었고, 대체교사는 2,036명에서 2020년 3,436명까지 늘어났다. 관련 예산도 같은 기간 2000억 원 이상 증액되었다(보건복지부, 2021). 보조연장 보육교사나 대체교사 추가 배치로 담임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교사대 아동 비율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다만, 보조교사가 전담으로 배치되고 있지 못하고, 업무 범위나 역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담임교사의 업무를 경감해 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문재인정부 들어 담임교사보다는 4시간 또는 6시간 등의 단시간 근무 교사들이 크게 늘어 보육 분야가 질 나쁜 일자리로 전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영유아가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탄력보육을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토록 하고, 어린이집의 영유아 반 구성 기준(교사 대 아동비율)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4)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가) 평가제 전환

정부는 어린이집 질 관리를 위해 2006년부터 실시한 평가인증제를 2019년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제로 의무화하였다. 어린이집 평가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평가 수준별 사후관리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제공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평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평가지표도 대폭 축소하였다.

〈표 III-2-6〉 평가(인증) 추이

단위: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38,021	39,842	42,527	43,770	42,517	41,084	40,238	39,171	37,371	35,352
인증	29,882	36,128	30,955	33,050	33,496	32,795	32,630	31,625	30,061	23,909
B등급이상	-	-	-	-	-	-	-	-	1,812	6,140
통과율	78.6	90.7	72.8	75.5	78.8	79.8	81.1	80.7	85.3	85.0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연도별 어린이집 평가현황 <https://www.kcpi.or.kr/kcpi/cyberpr/childcarestat2.do> (2021. 6. 18 인출)

신청제로 운영되던 평가인증제가 평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20% 정도의 어린이집에 대한 질 관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평가 참여 이후 질 유지 및 상시 관리 문제, 부모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등과의 중복점검에 대한 현장의 비판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나) 건강영양안전관리

다음으로 정부는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안전 체험관과 안전컨설팅을 연 100개소 이상 실시하고,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 통학차량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조체제를 통한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점검 주체나 점검대상, 점검 내용에 따라 정기점검, 특별(기획)점검, 수시(긴급)점검 등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그간 정부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도점검의 효율적 수행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항목을 대폭 확대 및 구체화하였다.

정부는 2018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로 인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매년 1,000개소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2019년에는 한국보육진흥원에 현지조사 지원조직을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어린이집 점검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지도점검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가 어린이집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 및 전문성 부족으로 어린이집의 품질을 상시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담당공무원 수를 늘리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라. 부모 양육지원 확대

1)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지원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관련 정보와 가정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임신출산 포털에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시 자녀양육 및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안내를 확대하고, 교육 커리큘럼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정부는 가정양육가구의 단시간 및 일시적 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간제보육반을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020년까지 거점형 및 이동형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는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및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제공기관은 2017년 437반에서 2020년 690반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250개소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시간제 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관련 예산이 2017년 90억원 정도였으나 2020년에는 166억원까지 증액되었다.

〈표 III-2-7〉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및 예산

단위: 개소(반),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제공기관	437	443	490	690
예산	90	97	110	166

자료: 보건복지부(2021). 2020 국정과제 실적보고서, 내부자료

정부는 시간제 보육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간제 보육 예약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의 회계관리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무회계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지원하였으며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매년 보육교사와 이용자, 예비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간제 보육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당초 목표는 일정 부분 달성하였으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에 시간제 보육반을 설치, 운영하는 기존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시간제 보육 운영 모델 개발 용역을 추진하였고, 2021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운영모델을 새로이 개발하여 시범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시간제 보육은 박근혜정부의 시간제일자리 활성화 정책에 따라 2014년 ‘일시보육’에서 ‘시간제 보육’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고 시범사업을 재추진한 바 있다. 사업 목표 또한 가정내 양육지원에서 맞벌이 부모 특히, 시간제 일자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데 방점을 두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집,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 수요를 수용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목표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 증가한 반면, 출생아 수는 줄어들면서 정원충족률이 하락하여 대기수요 기능보다는 어린이집 입소 전 적응기관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취약보육 지원 개선

장애아·다문화아동 등 부모가 양육과정에서 보다 취약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취약보육 관련 실태조사(‘18년) 등을 거쳐 지원방안 등도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아·다문화아동 보육실태 및 이용 부모의 양육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에도 그간 변화를 살펴보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가 22년도에 공개될 예정이다.

3. 소결

이상의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과 제3차 보육중장기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을 토대로 그간의 성과를 요약하고 제한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표적 공통적 성과로는 무엇보다도 첫째 유아교육특별회계법 제정 및 그 효력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여 한시적이거나 누리과정 재정지원의 안정성을 도모한 점이다. 또한 당초 2016년도 제시한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나, 그동안 담보상 태였던 지원단가를 2019년도부터 2만원씩 증액하여 2021년도에는 26만원까지 상향한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부문 모두 국공립시설 확충을 통한 국공립이용률을 제고한 점이다. 국공립시설 확충 측면에서는 모두 100% 이상으로 초과 달성하였으나, 이용률 측면에서는 현재 속도로는 22년 말 목표치인 40% 달성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2017년도의 24.8%, 12.8%에서 2020년도 말에는 29.2%로, 20.4%로 이용률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의 조사와 각종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주요관계자 집단들이 현 정부정책의 성과로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표 III-3-1〉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2017-2020)

단위: 명, %

연도	유치원 (3-5세)			어린이집 (0-5세)		
	계	국공립	사립	계	국공립	국공립 이외
2020	612,253	178,758(29.2%)	433,495	1,239,338	252,212(20.4%)	987,126
2019	633,520	177,140(28.0%)	456,380	1,359,475	230,900(17.0%)	1,128,575
2018	675,559	172,125(25.5%)	503,434	1,409,680	199,335(14.1%)	1,210,345
2017	693,830	172,099(24.8%)	521,731	1,443,535	185,413(12.8%)	1,258,122

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2020) 연도별 교육통계연보
보건복지부(2017-2020), 연도별 보육통계

셋째, 2012년 제정 및 7년차로 시행되어 오던 누리과정 개정(2019. 7월)을 통하여 만 3-5세 대상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방향을 그동안 강조했던 ‘창의적 인재양성’보다는 유아중심(개별성)을 강조하고 놀이중심으로 대전환을 단행한 점이다. 이는 유아의 웰빙과 행복을 궁극적인 교육의 목표로 지향하는 국제적 추세(OECD 2030 learning framework 등)와 병행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하기 위하여 0-2세 표준보육과정의 제4차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교육부는 개정 누리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하여 국가수준에서 다양한 놀이지원 자료 개발 및 I-Nuri

포탈 구축을 통한 교사는 물론 부모대상으로 각종 자료 공유, 컨설턴트 양성을 비롯한 무수한 교원연수 실시 및 지원 등은 우수한 정책적 투입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년 보육시설평가인증제 도입 이래 처음으로 어린이집 평가제를 의무화하여 그간 신청제에 의하여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던 20% 정도의 어린이집도 서비스의 질 담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유치원의 경우는 시도교육청간의 편차는 있으나 자율평가제로 전환하여 단위기관의 자체적이고 상시적인 질 모니터링을 독려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여 개편하여 시간제 보육 확대와 연장보육 실시 등으로 부모의 양육지원, 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리와 지원 등의 성과를 들 수 있다.

다섯째, 당초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없었으나,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20년도 초반부터 5월 중순 등원까지의 휴원기간 동안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 각종 방역지침과 마스크 등의 방역 물품, 구청과 교육청의 정기방역을 지원하여 사립기관의 운영난 완화와 감염 위험을 감소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시기 동안 원격교육 프로그램 개발(EBS TV 유치원 등)과 교원연수를 전면 원격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실시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여 유아의 학습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반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진한 정책들이 있다. 서비스의 질적 격차 해소, 보육교사 자격기준과 양성체제 정비, 양성기관의 질 관리, 교사 대 영유아의 높은 비율, 안전하고 창의적인 환경과 충분한 공간(어린이집 1인당 면적 협소) 등을 들 수 있다.

IV

2022-2027 유아교육과 보육 발전 방향과 정책과제 관련 의견 및 요구 분석

- 01 대국민조사 결과
- 02 학계전문가 조사결과
- 03 공무원 조사결과
- 04 조사결과 비교분석
- 05 권역별 정책토론회 및
자문회의 주요 결과

IV. 2022-2027 유아교육과 보육 발전 방향과 정책과제 관련 의견 및 요구 분석

1. 대국민조사 결과

가. 응답자 특성

1) 전체

15~59세 대국민 조사 대상은 전체 3,115명으로 미혼이 32.6%, 기혼이 67.4% 분포하였고, 영유아와 초등자녀가 있는 부모가 44.4%이었다.

〈표 IV-1-1〉 응답자 특성: 전체

단위: %(명)					
구분	비율	(수)	구분	비율	(수)
계	100.0	(3,115)			
연령			월평균 소득		
15-19세	6.4	(198)	300만원 미만	22.2	(692)
20대	15.0	(466)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5.2	(1,096)
30대	30.7	(956)	5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22.7	(707)
40대	30.0	(935)	700만원 이상	19.9	(620)
50대	18.0	(560)			
미혼/기혼			성별		
미혼	32.6	(1,015)	남자	47.1	(1,468)
기혼	67.4	(2,100)	여자	52.9	(1,647)
결혼여부*자녀여부			지역규모		
미혼	32.6	(1,015)	대도시	41.0	(1,277)
영유아초등자녀 있는 부모	44.4	(1,383)	중소도시	46.2	(1,438)
영유아초등자녀 없는 부모	23.0	(717)	읍면지역	12.8	(400)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2) 영유아 부모(초등1학년 부모 포함)

영유아 부모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 40.7%, 여성 59.3%으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연령은 30대가 53.4%로 과반을 차지하였고 40대 41.2%, 20대 4.0% 등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 88.0%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 7.6%, 전문대나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가 4.4%이었다.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가 42.0%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인 24.5%, 700만원 이상 18.3%, 300만원 미만이 15.3%로 나타났다. 대상자 중 기혼가구는 99.4%이었고, 이 중 맞벌이는 47.6%, 외벌이는 51.8%이었다. 지역규모는 중소도시가 49.1%로 가장 많았고, 대도시 38.54%, 읍면지역 12.54%로 나타났다.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는 어린이집 60.0%, 유치원 24.0%이었고, 두 기관 모두 이용해본 비율은 4.7%이었으며, 11.12%는 기관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 이용자 중 국공립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31.5%이었다.

〈표 IV-1-2〉 응답자 특성: 영유아 부모

단위: %, (명)					
구분	비율	(수)	구분	비율	(수)
계	100.0	(1,001)			
지역			학력		
서울	15.8	(158)	고졸 이하	7.6	(76)
인천/경기	34.8	(348)	전문대/4년제재학	4.4	(44)
대전/충청	12.0	(120)	전문대/4년제 대졸이상	88.0	(881)
광주/전라	9.1	(91)	월평균 소득		
대구/경북	9.2	(92)	300만원 미만	15.3	(153)
부산/울산/경남	14.8	(148)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42.0	(420)
강원/제주	4.4	(44)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24.5	(245)
지역규모			700만원 이상	18.3	(183)
대도시	38.5	(385)	혼인상태		
중소도시	49.1	(491)	미혼	0.6	(6)
읍면지역	12.5	(125)	기혼-맞벌이	47.6	(476)
성별			기혼-외벌이	51.8	(519)
남자	40.7	(407)	이용 경험 기관		
여자	59.3	(594)	어린이집만 다님	60.0	(507)

구분	비율	(수)	구분	비율	(수)
계	100.0	(1,001)			
연령			유치원만 다님	24.0	(203)
15-19세	0.1	(1)	둘 다 다님	4.7	(40)
20대	4.0	(40)	기관 미이용	11.2	(95)
30대	53.5	(536)	이용 기관 유형		
40대	41.2	(412)	국공립	31.6	(267)
50대	1.2	(12)	그 외 기관	57.2	(483)
			기관 미이용	11.2	(95)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나. 지난 4년간(2018-2021년) 전반적인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성과평가

1)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 성과 우선순위 및 이행수준

영유아와 초등1학년 부모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N=918), 정부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책 중 성과가 높다고 여기는 정책에 대해 질문하였다. 1순위 응답결과를 보면,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19.8%, 아동 수당 지원 19.2%,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17.3%,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및 운영 10.5%, 취약계층 영유아의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확대 8.2%,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돌봄 기능확대 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3〉 성과가 높다고 인식하는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1순위)

단위: %(명)

구분	누리과정 예산 국가책임 확대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취약 계층 영유아 국공립 기관 이용 확대	격차 해소 유보서비스 질 제고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운영	영유아 사교육 억제 놀이와 학습 중심 프로그램	유치원과 어린이집 돌봄 기능 확대	유치원어린이집 안전	아동 수당 지원	코로나19 대응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역	수
전체	17.3	19.8	8.2	4.0	10.5	3.4	7.0	4.2	19.2	6.4	(918)
지역											
서울	13.9	20.8	11.8	4.2	9.0	4.9	3.5	6.3	18.8	6.9	(144)
인천/경기	18.0	20.5	8.2	5.0	7.6	2.8	6.9	3.8	19.2	7.9	(317)
대전/충청	20.9	24.5	3.6	1.8	11.8	0.9	5.5	8.2	19.1	3.6	(110)
광주/전라	27.6	17.2	9.2	6.9	16.1	1.1	3.4	1.1	12.6	4.6	(87)
대구/경북	15.5	10.7	8.3	2.4	13.1	4.8	8.3	3.6	26.2	7.1	(84)
부산/울산/경남	7.4	24.3	8.1	2.2	9.6	5.9	12.5	2.9	22.1	5.1	(136)

구분	누리과정 예산 국가책임 확대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취약 계층 영유아 국공립 기관 이용 확대	격차 해소 유보서비스 질 제고	놀이중심 누리 과정 개정 운영	영유아 사회교육 역제 놀이와 쉽 중심 프로그램	유치원과 어린이집 돌봄 기능 확대	유치원 어린이집 안전	아동 수당 지원	코로나19 대응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역	수
전체	17.3	19.8	8.2	4.0	10.5	3.4	7.0	4.2	19.2	6.4	(918)
강원/제주	30.0	7.5	5.0	5.0	20.0	2.5	10.0	2.5	10.0	7.5	(40)
χ^2 (df)	86.642(54)**										
성별											
남자	19.8	25.9	9.0	4.2	6.6	2.6	6.3	5.6	15.6	4.2	(378)
여자	15.6	15.6	7.6	3.9	13.1	3.9	7.4	3.3	21.7	8.0	(540)
χ^2 (df)	37.129(9)***										
연령											
10대-20대	15.6	9.4	6.3	0.0	9.4	6.3	15.6	6.3	21.9	12.5	(33)
30대	14.3	18.8	9.1	3.7	11.6	3.5	7.5	5.0	19.5	7.0	(483)
40대	21.8	21.5	7.2	4.9	9.0	2.8	5.9	3.1	18.5	5.4	(390)
50대	0.0	33.3	8.3	0.0	16.7	8.3	0.0	8.3	25.0	0.0	(12)
χ^2 (df)	60.077(36)**										

** $p < .01$, *** $p < .001$.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성과가 높다고 인식하는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에 대해 중복응답으로 3가지 (1+2+3순위)를 조사한 결과, 아동수당 지원이 42.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돌봄 기능 확대 39.1%,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및 운영 36.8%,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35.2%,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33.0% 등의 순이었다.

〈표 IV-1-4〉 성과가 높다고 인식하는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1+2+3순위)

단위: %(명)

구분	누리과정 예산 국가책임 확대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취약계층 영유아 국공립 기관 이용 확대	격차 해소 유보서비스 질 제고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운영	영유아 사회교육 역제 놀이와 쉽 중심 프로그램	유치원과 어린이집 돌봄 기능 확대	유치 원 어린이 집 안전	아동 수당 지원	코로나19 대응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역	수
전체	35.2	33.0	24.1	23.5	36.8	20.2	39.1	22.4	42.0	23.6	(918)
지역											
서울	28.5	36.1	28.5	31.9	29.2	22.2	40.3	27.8	34.0	21.5	(144)
인천/경기	35.6	33.1	26.5	22.1	37.2	18.6	40.1	22.4	41.0	23.3	(317)

구분	누리과정 예산 국가책임 확대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취약계층 영유아 국공립 기관 이용 확대	격차 해소 유보사비 스 질 제고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운영	영유아 사교육 억제 놀이와 쉽 중심 프로그램	유치원과 어린이집 돌봄 기능 확대	유치 원 어린이 집 안전	아동 수당 지원	코로나19 대응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역	수
대전/충청	40.0	39.1	15.5	25.5	36.4	18.2	42.7	24.5	40.9	17.3	(110)
광주/전라	44.8	25.3	25.3	24.1	46.0	19.5	37.9	19.5	41.4	16.1	(87)
대구/경북	40.5	26.2	25.0	21.4	33.3	22.6	32.1	22.6	47.6	28.6	(84)
부산/울산/경남	25.7	37.5	21.3	16.9	41.2	19.1	39.7	19.1	49.3	30.1	(136)
강원/제주	42.5	20.0	17.5	25.0	35.0	30.0	32.5	15.0	47.5	35.0	(40)
성별											
남자	38.1	41.0	28.0	27.2	27.5	19.6	39.7	26.5	38.1	14.3	(378)
여자	33.1	27.4	21.3	20.9	43.3	20.6	38.7	19.6	44.8	30.2	(540)
연령											
20대	31.3	28.1	28.1	15.6	40.6	21.9	37.5	28.1	34.4	34.4	(32)
30대	32.7	32.1	24.2	22.4	37.9	20.9	38.5	23.6	41.4	26.3	(483)
40대	39.5	34.4	23.6	25.4	34.4	18.7	40.5	20.5	43.3	19.7	(390)
50대	8.3	41.7	16.7	33.3	58.3	25.0	25.0	25.0	50.0	16.7	(12)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정책별 현 정부의 이행수준에 대하여 조사한 전체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는 가장 낮게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2.8점).

〈표 IV-1-5〉 정책 이행 수준에 대한 인식 (N=918)

단위: %, 점

구 분	매우낮음	낮음	높음	매우높음	잘 모름	평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4.2	15.0	38.8	29.0	13.0	3.1
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7.5	24.5	32.1	25.7	10.1	2.8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및 운영	3.2	14.6	44.2	29.2	8.8	3.1
사교육 억제 및 놀이와 쉽 중심 프로그램 운영	7.4	21.8	36.1	24.8	9.9	2.9
유치원과 어린이집 돌봄기능 확대	4.4	18.8	40.2	28.1	8.5	3.0
유치원과 어린이집 안전	5.3	17.3	37.8	28.6	10.9	3.0
아동수당 지원	4.9	11.5	36.2	37.1	10.2	3.2
코로나19 대응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역	3.4	12.7	41.1	34.2	8.6	3.2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정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한 부모의 67.8%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는 높은 이행 수준을 보인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러나 이 정책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도 13.0% 있었으며, 특히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의 33.3%는 이 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 정책 이행 수준에 대한 인식: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높음	매우 높음	잘 모름	계(수)	평균
전체	4.2	15.0	38.8	29.0	13.0	100.0 (918)	3.1
맞벌이 여부							
맞벌이	5.8	14.4	35.0	31.0	13.9	100.0 (452)	3.1
외벌이	2.6	15.6	43.0	26.9	11.9	100.0 (461)	3.1
χ^2 (df)/F	16.710(8)*						0.3(a)

* $p < .05$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정책에 대해서는 이행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는 56.8%로 과반을 넘는 수준이었으나, 낮다는 응답 또한 32.0%로 상당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만, 현재 국공립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정책 이행 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응답자의 경우 이행 수준이 매우 높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여성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현재 국공립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정책의 이행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 정책 이행 수준에 대한 인식: 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높음	매우 높음	잘 모름	계(수)	평균
전체	7.5	24.5	32.1	25.7	10.1	100.0 (918)	2.8
성별							
남자	9.3	21.4	31.5	29.4	8.5	100.0 (378)	2.9
여자	6.3	26.7	32.6	23.1	11.3	100.0 (540)	2.8
χ^2 (df)/t	10.273(4)*						1
현재 이용기관 ²							
국공립	6.7	17.6	34.1	30.7	10.9	100.0 (267)	3.0
그 외 기관	8.5	29.8	29.8	21.7	10.1	100.0 (483)	2.7
기관 미이용	0.0	33.3	13.3	40.0	13.3	100.0 (15)	3.1
χ^2 (df)/F	21.787(8)**						7.2**(a)

* $p < .05$, ** $p < .01$.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취약계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의 64.4%가 이행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였으며 매우 높다고 여기는 비율도 25.6%이었다. 4점 만점을 기준으로 3.0점 수준을 보여 대체로 이행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이행 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비율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에 따라서도 고졸 이하의 경우 이 정책을 모르는 비율이 전문대나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V-1-8〉 정책 이행 수준에 대한 인식: 취약계층 영유아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확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높음	매우 높음	잘 모름	계(수)	평균
전체	4.9	19.3	37.8	25.6	12.4	100.0 (918)	3.0
지역규모							
대도시	5.2	24.2	31.1	25.6	13.8	100.0 (347)	2.9
중소도시	5.3	16.9	42.1	25.9	9.9	100.0 (456)	3.0
읍면지역	2.6	13.9	40.9	24.3	18.3	100.0 (115)	3.1
χ^2 (df)/F	21.662(8)**						1.7(a)
성별							
남자	6.3	21.4	32.5	27.2	12.4	100.0 (378)	2.9
여자	3.9	17.8	41.5	24.4	12.4	100.0 (540)	3.0
χ^2 (df)/t	9.669(4)*						-1
학력							
고졸 이하	8.5	19.7	22.5	25.4	23.9	100.0 (71)	2.9
전문대/4년제 재학	4.7	18.6	37.2	23.3	16.3	100.0 (43)	2.9
전문대/4년제 대졸 이상	4.6	19.3	39.2	25.7	11.2	100.0 (804)	3.0
χ^2 (df)/F	15.962(8)*						0.5(a)
현재 이용기관 ²							
국공립	3.7	16.1	40.4	27.3	12.4	100.0 (267)	3.0
그 외 기관	6.0	20.9	35.0	24.4	13.7	100.0 (483)	2.9
기관 미이용	0.0	20.0	13.3	46.7	20.0	100.0 (15)	3.3
χ^2 (df)/F	12.070(8)						3.1*

* $p < .05$, ** $p < .01$.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유치원과 어린이집 서비스 질 제고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의 56.2%가 이행 수준을 높게 평가하였으나, 낮게 평가한 비율도 32.4%로 상당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월평균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월소득 700만원 이상의 경우 이행 수준을 매우 낮게 평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 정책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도 11%를 넘었다. 응답한 기관 미이용 유아의 부모 수는 적으나, 3명 중 1명(33.3%)은 이 정책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표 IV-1-9〉 정책 이행 수준에 대한 인식: 유치원과 어린이집 서비스 질 제고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높음	매우 높음	잘 모름	계(수)	평균
전체	5.8	26.6	33.4	22.8	11.4	100.0 (918)	2.8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5.3	25.2	37.4	19.1	13.0	100.0 (131)	2.8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4.4	25.5	37.0	22.1	10.9	100.0 (384)	2.9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4.4	26.5	31.0	22.6	15.5	100.0 (226)	2.8
700만원 이상	10.7	29.9	26.0	27.1	6.2	100.0 (177)	2.7
χ^2 (df)/F	26.060(12)*						0.8(a)
현재 이용기관							
어린이집만 다님	6.5	24.9	32.9	24.9	10.8	100.0 (507)	2.9
유치원만 다님	3.4	31.5	38.4	16.3	10.3	100.0 (203)	2.8
둘 다 다님	10.0	20.0	32.5	17.5	20.0	100.0 (40)	2.7
기관 미이용	0.0	20.0	20.0	26.7	33.3	100.0 (15)	3.1
χ^2 (df)/F	24.459(12)*						1.0
현재 이용기관2							
국공립	5.6	22.8	33.7	27.7	10.1	100.0 (267)	2.9
그 외 기관	6.0	28.4	34.8	19.0	11.8	100.0 (483)	2.8
기관 미이용	0.0	20.0	20.0	26.7	33.3	100.0 (15)	3.1
χ^2 (df)/F	16.662(8)*						3.4*

* $p < .05$.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및 운영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의 73.4%가 이행 수준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매우 높은 이행 수준을 보인다고 응답한 비율도 약 30%에 달했다. 지역규모에 따라 4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정한 점수에 차이가 있어, 대도시나 읍면지역에 비해 중소도시의 점수가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력에 따라서도 고졸 이하의 경우 가장 점수가 낮았으며, 전문대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부모는 이행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IV-1-10〉 정책 이행 수준에 대한 인식: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및 운영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높음	매우 높음	잘 모름	계(수)	평균
전체	3.2	14.6	44.2	29.2	8.8	100.0 (918)	3.1
지역규모							
대도시	4.0	16.7	46.4	24.8	8.1	100.0 (347)	3.0
중소도시	2.6	13.6	42.5	32.7	8.6	100.0 (456)	3.2
읍면지역	2.6	12.2	44.3	28.7	12.2	100.0 (115)	3.1
χ^2 (df)/F	9.797(8)						3.5*
학력							
고졸 이하	7.0	18.3	40.8	19.7	14.1	100.0 (71)	2.9
전문대/4년제 재학	0.0	7.0	53.5	20.9	18.6	100.0 (43)	3.2
전문대/4년제 대졸 이상	3.0	14.7	44.0	30.5	7.8	100.0 (804)	3.1
χ^2 (df)/F	19.652(8)*						3.2*

* $p < .05$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사교육 억제 및 놀이와 쉽 중심 프로그램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의 60.9%가 이행 수준이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학력에 따라 고졸이하의 평정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의 경우에도 기혼 부모에 비해 이행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표 IV-1-11〉 정책 이행 수준에 대한 인식: 사교육 억제 및 놀이와 쉽 중심 프로그램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높음	매우 높음	잘 모름	계(수)	평균
전체	7.4	21.8	36.1	24.8	9.9	100.0 (918)	2.9
학력							
고졸 이하	12.7	25.4	28.2	15.5	18.3	100.0 (71)	2.6
전문대/4년제 재학	4.7	14.0	41.9	27.9	11.6	100.0 (43)	3.1
전문대/4년제 대졸 이상	7.1	21.9	36.4	25.5	9.1	100.0 (804)	2.9
χ^2 (df)/F	15.042(8)						4.0*
혼인상태							
미혼	40.0	20.0	20.0	0.0	20.0	100.0 (5)	1.8
기혼-맞벌이	7.3	21.7	34.3	25.7	11.1	100.0 (452)	2.9
기혼-외벌이	7.2	21.9	38.0	24.3	8.7	100.0 (461)	2.9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높음	매우 높음	잘 모름	계(수)	평균
χ^2 (df)/F	11.687(8)						3.1*

* $p < .05$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돌봄 기능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의 68.3%가 이행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였으며, 이 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 비율은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특히 전문대나 4년제 대학 졸업한 부모들은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4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평정 점수는 고졸 이하의 경우 2.7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돌봄기능 확대 정책에 대해 이행 수준을 비교적 높게 평가하는 것(3.4점)으로 나타났다.

〈표 IV-1-12〉 정책 이행 수준에 대한 인식: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돌봄 기능 확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높음	매우 높음	잘 모름	계(수)	평균
전체	4.4	18.8	40.2	28.1	8.5	100.0 (918)	3.0
학력							
고졸 이하	5.6	33.8	29.6	15.5	15.5	100.0 (71)	2.7
전문대/4년제 재학	2.3	9.3	44.2	27.9	16.3	100.0 (43)	3.2
전문대/4년제 대졸 이상	4.4	18.0	40.9	29.2	7.5	100.0 (804)	3.0
χ^2 (df)/F	26.274(8)**						6.4**
혼인상태							
미혼	40.0	20.0	20.0	20.0	0.0	100.0 (5)	2.2
기혼-맞벌이	5.3	17.3	40.5	27.4	9.5	100.0 (452)	3.0
기혼-외벌이	3.0	20.4	40.1	28.9	7.6	100.0 (461)	3.0
χ^2 (df)/F	20.773(8)**						2.5
현재 이용기관2							
국공립	3.0	17.6	38.2	32.6	8.6	100.0 (267)	3.1
그 외 기관	4.6	20.1	41.0	25.7	8.7	100.0 (483)	3.0
기관 미이용	0.0	13.3	26.7	46.7	13.3	100.0 (15)	3.4
χ^2 (df)/F	8.501(8)						3.4*

* $p < .05$, ** $p < .01$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유치원과 어린이집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의 66.4%가 이행 수준을 높

게 평가하였으며, 22.6%는 낮은 편으로 평가, 10.9%는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경우 이행 수준을 매우 높게 인식하는 비율이 여성에 비해 더 높았다. 전문대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부모의 70% 이상이 이행 수준을 높게 여기고 있었으며, 전문대나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부모들은 이행 수준을 매우 높게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의 부모들이 500만원 미만 소득의 부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평가한 비율이 높았다.

〈표 IV-1-13〉 정책 이행 수준에 대한 인식: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안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높음	매우 높음	잘 모름	계(수)	평균
전체	5.3	17.3	37.8	28.6	10.9	100.0 (918)	3.0
성별							
남자	6.1	17.5	30.7	35.4	10.3	100.0 (378)	3.1
여자	4.8	17.2	42.8	23.9	11.3	100.0 (540)	3.0
χ^2 (df)/t	19.846(4)**						1.6
학력							
고졸 이하	8.5	18.3	39.4	15.5	18.3	100.0 (71)	2.8
전문대/4년제 재학	0.0	9.3	55.8	18.6	16.3	100.0 (43)	3.1
전문대/4년제 대졸 이상	5.3	17.7	36.7	30.3	10.0	100.0 (804)	3.0
χ^2 (df)/F	21.278(8)**						2.7(a)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4.6	17.6	39.7	26.0	12.2	100.0 (131)	3.0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4	18.8	41.4	27.6	8.9	100.0 (384)	3.0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4.9	15.5	33.2	31.4	15.0	100.0 (226)	3.1
700만원 이상	10.7	16.4	34.5	29.4	9.0	100.0 (177)	2.9
χ^2 (df)/F	23.784(12)*						1.1(a)

* $p < .05$, ** $p < .01$.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아동수당 지원에 대해서는 전체의 73.3%가 이행 수준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4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3.2점으로 평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이행 수준이 ‘매우 높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여성의 경우에는 ‘높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더 높아 차이를 보였다. 또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는 3.4점, 국공립을 이용하는 부모는 3.3점, 그 외 기관을 이용하는

부모는 3.1점으로 평정하여 현재 이용 기관에 따라 아동 수당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표 IV-1-14〉 정책 이행 수준에 대한 인식: 아동 수당 지원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높음	매우 높음	잘 모름	계(수)	평균
전체	4.9	11.5	36.2	37.1	10.2	100.0 (918)	3.2
성별							
남자	5.3	12.2	30.4	41.8	10.3	100.0 (378)	3.2
여자	4.6	11.1	40.2	33.9	10.2	100.0 (540)	3.2
χ^2 (df)/t	10.022(4)*						1
현재 이용기관 ²							
국공립	2.6	9.4	37.8	40.1	10.1	100.0 (267)	3.3
국공립 외 기관	6.4	12.8	33.7	35.8	11.2	100.0 (483)	3.1
기관 미이용	0.0	13.3	26.7	53.3	6.7	100.0 (15)	3.4
χ^2 (df)/F	10.938(8)						3.6*

* $p < .05$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코로나19 대응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의 75.3%가 이행 수준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매우 높다고 평가한 경우도 34.2%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평균점수는 4점 만점 기준 3.2점이었다.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50대가 83.3%로 이행수준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40대 75.8%, 30대 75.4% 등의 순이었으나, 40대와 30대는 매우 높다고 평가한 비율이 37.9%와 32.3%로 특히 높았다. 반면, 15~19세는 이 정책에 대해 모두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표 IV-1-15〉 정책 이행 수준에 대한 인식: 코로나19 대응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역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높음	매우 높음	잘 모름	계(수)	평균
전체	3.4	12.7	41.1	34.2	8.6	100.0 (918)	3.2
연령							
15-19세	0.0	0.0	0.0	0.0	100.0	100.0 (1)	
20대	0.0	28.1	43.8	21.9	6.3	100.0 (32)	2.9
30대	4.1	13.9	43.1	32.3	6.6	100.0 (483)	3.1
40대	2.8	10.3	37.9	37.9	11.0	100.0 (390)	3.2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높음	매우 높음	잘 모름	계(수)	평균
50대	0.0	8.3	58.3	25.0	8.3	100.0 (12)	3.2
$\chi^2(df)/F$	33.010(16)**						2.9*
현재 이용기관							
어린이집만 다님	4.7	13.2	40.6	32.9	8.5	100.0 (507)	3.1
유치원만 다님	1.0	8.4	41.4	39.9	9.4	100.0 (203)	3.3
둘 다 다님	5.0	12.5	35.0	40.0	7.5	100.0 (40)	3.2
기관 미이용	0.0	20.0	46.7	26.7	6.7	100.0 (15)	3.1
$\chi^2(df)/F$	13.286(12)						3.2*

* $p < .05$, ** $p < .01$.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2) 부모 만족도

가) 유아교육과 보육의 전반적 질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

영유아 및 초등1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5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 3.5점으로 평가하여 높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가 전체의 43.4%로 가장 많았으며, 높다고 답한 비율은 41.3%이었으나, 매우 높다고 응답한 경우는 7.1%에 불과하였다.

〈표 IV-1-16〉 유아교육과 보육 만족도: 유아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전체	2.0	6.3	43.4	41.3	7.1	100.0 (918)	3.5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보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5점 척도 기준으로 3.4점으로 평정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평가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보였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유아교육과 유사하게 43.78%이었으며,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39.7%로 유아교육에 대한 평가에 비해 비율이 다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여성 응답자의 만족도 점수가 3.5점으로 남성에 비해 0.1점 높았고,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보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17〉 유아교육과 보육 만족도: 보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전체	1.3	7.5	43.8	39.7	7.7	100.0 (918)	3.4
성별							
남자	1.1	10.8	44.2	37.3	6.6	100.0 (378)	3.4
여자	1.5	5.2	43.5	41.3	8.5	100.0 (540)	3.5
χ^2 (df)/t	11.746(4)*						-2.4*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0.0	4.6	44.3	42.0	9.2	100.0 (131)	3.6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0	7.6	44.3	39.6	7.6	100.0 (384)	3.5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1.3	5.8	41.2	44.2	7.5	100.0 (226)	3.5
700만원 이상	2.8	11.9	45.8	32.2	7.3	100.0 (177)	3.3
χ^2 (df)/F	16.744(12)						3.5*

* $p < .05$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나) 세부정책별 만족도

세부정책별 영유아 부모의 만족도를 살펴본 전체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펄9개 세부정책의 평균적인 만족도는 3.34 수준으로 보통이며, 전반적으로 시설환경에 대한

〈표 IV-1-18〉 정책별 만족도

단위: %(N=918),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평균
영아 보육료 지원	4.5	9.2	37.7	34.3	14.4	3.4
누리과정지원비	3.2	11.2	40.1	34.7	10.8	3.4
개정누리과정 운영의 충실성	1.2	9.3	42.4	38.5	8.7	3.4
교사교육 및 전문성	2.7	12.1	48.0	30.6	6.5	3.3
부모와의 소통 및 참여 수준	4.0	13.8	40.5	33.0	8.6	3.3
교사 대 아동 비율	8.0	17.4	42.3	26.1	6.2	3.1
급간식의 질적 수준	2.7	10.9	43.7	34.3	8.4	3.3
시설 환경	1.4	7.2	42.4	38.2	10.8	3.5
돌봄 서비스	3.4	11.0	38.7	36.6	10.3	3.4
재정 운영의 투명성	6.8	15.7	42.2	27.2	8.2	3.1

구 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평균
어린이집 평가 의무화	3.5	10.2	42.7	35.5	8.1	3.3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1) 영아 보육료와 누리과정비 지원 수준에 대한 만족도

영아 보육료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전체의 48.7%가 높게 만족하고 있었고, 보통이라는 응답도 37.7%로 나타났으며, 만족도 점수는 5점 척도 기준 평균 3.4점이 었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여성의 만족도 점수가 3.6점으로 남성에 비해 더 높았다.

〈표 IV-1-19〉 유아교육과 보육 만족도: 영아보육료 지원 수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전체	4.5	9.2	37.7	34.3	14.4	100.0 (918)	3.4
성별							
남자	5.6	13.0	41.0	31.5	9.0	100.0 (378)	3.3
여자	3.7	6.5	35.4	36.3	18.1	100.0 (540)	3.6
χ^2 (df)/t	28.247(4)***						-5.1***

*** $p < .001$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누리과정 지원비 수준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40.1%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높음 34.7%, 낮음 11.2%, 매우 높음 10.87% 등의 순이었다. 만족도 점수는 5점 척도 기준으로 3.4점으로 나타났다. 전문대나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경우에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V-1-20〉 유아교육과 보육 만족도: 누리과정 지원비 수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전체	3.2	11.2	40.1	34.7	10.8	100.0 (918)	3.4
학력							
고졸 이하	2.8	19.7	45.1	23.9	8.5	100.0 (71)	3.2
전문대/4년제 재학	2.3	18.6	41.9	18.6	18.6	100.0 (43)	3.3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전문대/4년제 대졸 이상	3.2	10.1	39.6	36.6	10.6	100.0 (804)	3.4
χ^2 (df)/F	17.472(8)*						2.6

* $p < .05$.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2) 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

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충실성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42.4%로 가장 많았고, 높음 38.5%, 낮음 9.3%, 매우높음 8.7% 등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점수는 5점 척도 기준에 평균 3.4점이었다.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만족도 점수가 높았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미혼이나 외벌이 가구보다는 맞벌이 가구가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을 국공립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높게 만족한다고 평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IV-1-21〉 유아교육과 보육 만족도: 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충실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전체	1.2	9.3	42.4	38.5	8.7	100.0 (918)	3.4
지역규모							
대도시	1.2	11.8	43.2	37.2	6.6	100.0 (347)	3.4
중소도시	1.1	7.9	42.5	39.5	9.0	100.0 (456)	3.5
읍면지역	1.7	7.0	39.1	38.3	13.9	100.0 (115)	3.6
χ^2 (df)/F	10.310(8)						3.1*
성별							
남자	1.3	12.4	43.4	35.7	7.1	100.0 (378)	3.3
여자	1.1	7.0	41.7	40.4	9.8	100.0 (540)	3.5
χ^2 (df)/t	10.308(4)*						-2.9**
혼인상태							
미혼	0.0	40.0	60.0	0.0	0.0	100.0 (5)	2.6
기혼-맞벌이	1.5	7.3	42.7	38.7	9.7	100.0 (452)	3.5
기혼-외벌이	0.9	10.8	41.9	38.6	7.8	100.0 (461)	3.4
χ^2 (df)/F	12.921(8)						3.3*
현재 이용기관2							
국공립	0.7	9.4	39.7	37.8	12.4	100.0 (267)	3.5
그 외 기관	1.7	8.7	44.3	38.7	6.6	100.0 (483)	3.4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기관 미이용	0.0	0.0	66.7	13.3	20.0	100.0 (15)	3.5
$\chi^2(df)/F$	16.479(8)*						1.8

* $p < .05$, ** $p < .01$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3) 교사교육 및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

교사교육 및 전문성에 대해서는 전체의 37.1%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48.0%는 보통 수준으로, 14.87%는 만족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5점 척도 기준으로 3.3점 정도의 만족 수준을 보였다. 국공립 기관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경우 다른 기관이나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들에 비해 만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V-1-22〉 유아교육과 보육 만족도: 교사교육 및 전문성 강화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전체	2.7	12.1	48.0	30.6	6.5	100.0 (918)	3.3
성별							
남자	3.4	14.8	46.3	31.5	4.0	100.0 (378)	3.2
여자	2.2	10.2	49.3	30.0	8.3	100.0 (540)	3.3
$\chi^2(df)/t$	12.199(4)*						-2.5*
현재 이용기관 ²							
국공립	2.2	12.4	44.6	32.6	8.2	100.0 (267)	3.3
그 외 기관	2.9	11.0	51.3	28.8	6.0	100.0 (483)	3.2
기관 미이용	0.0	26.7	53.3	0.0	20.0	100.0 (15)	3.1
$\chi^2(df)/F$	15.727(8)*						1.0

* $p < .05$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4) 부모와의 소통 및 참여 수준에 대한 만족도

부모와의 소통 및 참여 수준에 대해서는 전체의 41.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평균 만족도 점수는 5점 척도 기준으로 3.3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들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대도시나 중소도시 거주 부모에 비해 더 많이 나타났으며, 만족도 점수도 3.4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IV-1-23〉 유아교육과 보육 만족도: 부모와의 소통 및 참여 수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전체	4.0	13.8	40.5	33.0	8.6	100.0 (918)	3.3
지역규모							
대도시	5.5	13.5	45.0	29.1	6.9	100.0 (347)	3.2
중소도시	3.3	12.7	41.0	34.2	8.8	100.0 (456)	3.3
읍면지역	2.6	19.1	25.2	40.0	13.0	100.0 (115)	3.4
χ^2 (df)/F	21.417(8)**						3.5*(a)

* $p < .05$, ** $p < .01$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5)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한 만족도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해서는 전체의 32.3%만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 낮다고 응답한 비율도 25.4%에 달했다. 평균 만족도 점수는 5점 척도 기준으로 3.1점이었다.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여성에 비해 남성의 만족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4〉 유아교육과 보육 만족도: 교사 대 아동 비율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전체	8.0	17.4	42.3	26.1	6.2	100.0 (918)	3.1
성별							
남자	4.8	15.1	45.2	29.6	5.3	100.0 (378)	3.2
여자	10.2	19.1	40.2	23.7	6.9	100.0 (540)	3.0
χ^2 (df)/t	15.462(4)**						2.6**

** $p < .01$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6) 급간식의 질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

급간식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전체의 42.7%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 기준으로 3.3점 정도의 만족도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

월평균 소득 및 이용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은 응답자는 전문대나 4년제 대졸 이상인 부모였으며,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고졸 이하인 경우에 만족도 점수가 다소 낮았다. 또한 월평균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집단의 만족도 점수가 3.2점으로 가장 낮았고, 국공립 기관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5〉 유아교육과 보육 만족도: 급간식의 질적 수준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전체	2.7	10.9	43.7	34.3	8.4	100.0 (918)	3.3
학력							
고졸 이하	2.8	16.9	45.1	21.1	14.1	100.0 (71)	3.3
전문대/4년제 재학	0.0	7.0	58.1	23.3	11.6	100.0 (43)	3.4
전문대/4년제 대졸 이상	2.9	10.6	42.8	36.1	7.7	100.0 (804)	3.4
χ^2 (df)/F	16.077(8)*						0.4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2.3	9.9	44.3	34.4	9.2	100.0 (131)	3.4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3	11.7	47.4	31.3	8.3	100.0 (384)	3.3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3.1	6.2	42.0	38.5	10.2	100.0 (226)	3.5
700만원 이상	5.6	15.8	37.3	35.6	5.6	100.0 (177)	3.2
χ^2 (df)/F	25.342(12)*						3.1*
현재 이용기관2							
국공립	3.0	7.5	41.9	35.2	12.4	100.0 (267)	3.5
그 외 기관	2.3	11.4	45.5	34.2	6.6	100.0 (483)	3.3
기관 미이용	13.3	6.7	46.7	20.0	13.3	100.0 (15)	3.1
χ^2 (df)/F	17.670(8)*						3.0*

* $p < .05$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7) 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

시설환경에 대해서는 전체의 49.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5점 척도 기준으로 3.5점의 만족 수준을 보였다.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 비해 유치원 이용 부모의 시설환경 만족도 점수가 더 높았으며, 특히, 국공립 기관을 이용하는 부모는 그 외

기관 이용 부모에 비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6〉 유아교육과 보육 만족도: 시설환경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전체	1.4	7.2	42.4	38.2	10.8	100.0 (918)	3.5
현재 이용기관							
어린이집만 다님	2.2	6.1	41.4	38.3	12.0	100.0 (507)	3.5
유치원만 다님	0.0	3.9	44.3	41.4	10.3	100.0 (203)	3.6
둘 다 다님	2.5	15.0	30.0	47.5	5.0	100.0 (40)	3.4
기관 미이용	0.0	20.0	53.3	13.3	13.3	100.0 (15)	3.2
χ^2 (df)/F	23.587(12)*						1.5
현재 이용기관2							
국공립	1.5	6.0	36.0	42.3	14.2	100.0 (267)	3.6
그 외 기관	1.7	6.0	44.7	38.1	9.5	100.0 (483)	3.5
기관 미이용	0.0	20.0	53.3	13.3	13.3	100.0 (15)	3.2
χ^2 (df)/F	15.336(8)						3.6*

* $p < .05$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8) 돌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체의 46.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 점수는 5점 척도 기준으로 3.4점이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만족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IV-1-27〉 유아교육과 보육 만족도: 돌봄서비스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전체	3.4	11.0	38.7	36.6	10.3	100.0 (918)	3.4
성별							
남자	2.9	12.7	40.2	37.6	6.6	100.0 (378)	3.3
여자	3.7	9.8	37.6	35.9	13.0	100.0 (540)	3.4
χ^2 (df)/t	11.315(4)*						-2.0*

* $p < .05$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9) 재정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만족도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대해서는 전체의 35.4%만이 만족하고 있었으며,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은 22.5%이었다. 만족도 점수는 5점 척도 기준으로 3.1점인 보통 수준에 가까웠다.

〈표 IV-1-28〉 유아교육과 보육 만족도: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전체	6.8	15.7	42.2	27.2	8.2	100.0 (918)	3.1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10) 어린이집 의무 평가제에 대한 만족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의무 평가제 전환에 대해서는 전체의 43.6%가 만족하였으며, 평균 만족도 점수는 3.3점으로 나타났다.

〈표 IV-1-29〉 유아교육과 보육 만족도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의무 평가제 전환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전체	3.5	10.2	42.7	35.5	8.1	100.0 (918)	3.3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다.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방향

1) 정책 방향 및 목표 설정에 고려하여야 할 사회변화

가) 전체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우리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모든 연령대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취학 전 아동 수 감소’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10, 20대, 40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영향을, 30대는 맞벌이 가정의 증대를, 50대는 사회 양극화 및 지역 격차의 심화를 많이 응답하여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맞벌이 가정의 증대’를 고려해야 할 변화로 더 많이 응답하였다.

〈표 IV-1-28〉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방향 설정 시 고려할 사회 변화(1순위)-전체

단위: %(명)

구분	저출산으로 취학전 아동수 감소	코로나19 등 감염병 영향	기후 환경 변화	사회 양극화 지역 격차심화	글로벌화	지식정보사 회가속화 과학기술의 침단화	산업 구조 변화로직 업 인력 수요 변화	개개인 개성, 가치관 생활방식 다양화	가족 형태 변화	맞벌이 가정 증대	기 타	계(수)
전체	46.3	12.3	4.9	9.5	3.7	2.7	1.3	5.2	4.7	9.3	0.1	100.0 (3,115)
성별												
남자	50.5	11.8	5.4	9.9	3.9	2.0	1.1	4.6	3.9	6.8	0.1	100.0 (1,468)
여자	42.6	12.7	4.5	9.2	3.6	3.3	1.5	5.6	5.3	11.5	0.1	100.0 (1,647)
χ^2 (df)	42.162(10)***											
연령												
15-19세	50.5	14.1	6.1	6.6	2.0	3.5	3.0	7.1	5.6	1.5	0.0	100.0 (198)
20대	42.7	16.1	4.9	8.6	4.7	2.6	1.5	3.9	4.7	9.9	0.4	100.0 (466)
30대	40.9	12.0	5.5	10.5	4.1	2.4	0.7	5.4	4.2	14.1	0.1	100.0 (956)
40대	47.3	13.0	4.0	8.8	3.4	3.6	1.1	6.4	4.4	8.0	0.0	100.0 (935)
50대	55.5	7.5	5.0	11.1	3.4	1.6	2.0	3.0	5.5	5.4	0.0	100.0 (560)
χ^2 (df)	130.540(40)***											
미혼/기혼												
미혼	49.1	13.2	6.1	8.7	3.9	2.6	1.7	3.7	5.9	4.9	0.2	100.0 (1,015)
기혼	45.0	11.8	4.3	10.0	3.6	2.8	1.1	5.9	4.0	11.4	0.0	100.0 (2,100)
χ^2 (df)	54.242(10)***											
결혼여부* 자녀여부												
미혼	49.1	13.2	6.1	8.7	3.9	2.6	1.7	3.7	5.9	4.9	0.2	100.0 (1,015)
영유아초등 자녀 있는 부모	40.7	13.7	4.1	9.6	3.8	3.0	0.8	6.9	3.4	14.0	0.1	100.0 (1,383)
영유아초등 자녀 없는 부모	53.3	8.2	4.7	10.6	3.3	2.4	1.8	3.9	5.3	6.4	0.0	100.0 (717)
χ^2 (df)	128.158(20)***											

*** $p < .001$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연령대별로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결과를 살펴보면 역시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모든 연령대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취학 전 아동 수 감소’였고, 그 다음으로 10대와 50대는 사회 양극화 및 지역 격차의 심화를, 20대와 40대는 코로나19 등 감염

병의 영향을, 30대는 맞벌이 가정의 증대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응답이 남성의 경우는 사회 양극화 및 지역 격차의 심화인 반면, 여성은 맞벌이 가정의 증대로 차이가 나타났다.

〈표 IV-1-29〉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방향 설정 시 고려할 사회 변화(1+2순위)-전체

단위: %(명)

구분	저출산으로 취학전 아동수 감소	코로나 19 등 감염병 영향	기후, 환경 변화	사회 양극 화 및 지역 격차 의 심화	글로벌 변화	지식정 보사회 가속화 과학기술 의 첨단화	산업 구조 변화로 직업 인력 수요의 변화	개개인 개성, 가치관 생활방 식의 다양화	가족 형태의 변화	맞벌이 가정 증대	기 타	계(수)
전체	56.9	23.2	9.8	24.9	9.0	10.0	7.9	15.6	19.1	23.4	0.2	(3,115)
성별												
남자	60.8	22.4	11.2	27.5	9.2	9.5	9.1	14.0	16.7	19.5	0.2	(1,468)
여자	53.4	23.9	8.6	22.6	8.9	10.6	6.8	17.0	21.3	26.8	0.2	(1,647)
연령												
15-19세	59.1	24.7	13.1	26.3	5.6	13.6	7.6	19.2	19.2	11.6	0.0	(198)
20대	51.7	28.1	10.5	21.5	12.2	11.8	10.1	12.0	19.5	22.1	0.4	(466)
30대	52.3	25.9	9.4	23.5	8.9	9.5	8.1	17.2	15.9	28.9	0.4	(956)
40대	58.9	22.6	8.6	25.9	9.2	10.4	6.8	17.2	18.2	22.2	0.0	(935)
50대	64.6	14.8	10.9	28.0	7.5	7.7	7.7	11.8	25.9	21.1	0.0	(560)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나) 영유아 및 초등1학년 부모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우리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영유아 및 초등1학년 부모들의 1순위 응답은 저출산으로 인한 취학 전 아동 수 감소가 40.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맞벌이 가정의 증대 17.2%,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영향 12.5%, 개개인의 개성, 가치관 및 생활방식의 다양화 8.2%, 사회 양극화 및 지역 격차의 심화 8.0%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저출산으로 인한 취학 전 아동 수 감소에 대해서는 남성 응답률이 더 높았고, 맞벌이 가정의 증대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영향에 대해서는 여성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에 비해 저출산으로 인한 취학 전 아동 수 감소와 맞벌이 가정의 증대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회 변화로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IV-1-30〉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방향 설정 시 고려할 사회 변화(1순위)-영유아부모

단위: %(명)

구분	저출산 으로 취학전 아동수 감소	코로나 19 등 감염병 영향	기후 환경 변화	사회 양극 화 및 지역 격차 심화	글로벌 변화	지식정 보사회 가속화 과학 기술 첨단화	산업구 조 변화로 직업 인력수 요변화	개개인 개성, 가치관 생활 방식 다양화	가족 형태 변화	맞벌 이 가정 증대	기 타	계(수)
전체	40.7	12.5	2.4	8.0	3.0	2.9	0.8	8.2	4.3	17.2	0.1	100.0 (1,001)
성별												
남자	49.1	9.6	2.9	8.1	2.2	2.0	1.5	8.4	3.7	12.5	0.0	100.0 (407)
여자	34.8	14.5	2.0	7.9	3.5	3.5	0.3	8.1	4.7	20.4	0.2	100.0 (594)
χ^2 (df)	34.965(10)***											
혼인상태												
미혼	50.0	16.7	16.7	0.0	0.0	0.0	0.0	0.0	16.7	0.0	0.0	100.0 (6)
기혼-맞벌 이	38.0	11.8	2.1	6.3	2.9	2.9	0.8	6.3	3.6	25.2	0.0	100.0 (476)
기혼-외벌 이	43.0	13.1	2.5	9.6	3.1	2.9	0.8	10.0	4.8	10.0	0.2	100.0 (519)
χ^2 (df)	54.763(20)***											

*** $p < .001$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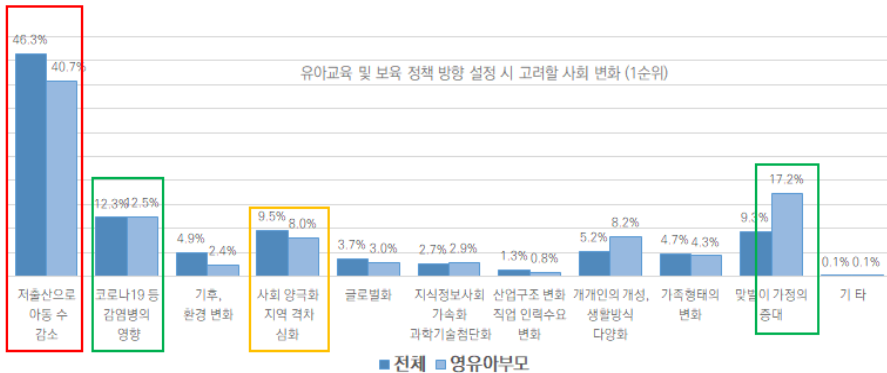
위와 같은 내용으로 2순위까지 중복응답으로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1순위 응답과 마찬가지로 저출산으로 인한 취학 전 아동 수 감소에 대한 의견이 54.2%로 가장 많았으며, 맞벌이 가정의 증대 33.1%,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영향 24.7%, 사회 양극화 및 지역 격차의 심화 21.7%, 개개인의 개성, 가치관 및 생활방식의 다양화 20.3% 등의 순으로 나타나 1순위 응답과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표 IV-1-31〉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방향 설정 시 고려할 사회 변화(1+2순위)-영유아부모

단위: %(명)

구분	저출산 으로 취학 전 아동 수 감소	코로나19 감염병의 영향	기후, 환경 변화	사회 양극화 및 지역 격차 심화	글로벌 변화	지식정 보사회 가속화 및 과학 기술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직업 인력수 요변화	개개인 개성, 가치관 생활 방식 다양화	가족 형태 변화	맞벌이 가정 증대	기 타	(수)
전체	54.2	24.8	5.7	21.8	8.3	10.0	5.2	20.3	16.3	33.1	0.4	(1,001)

[그림 IV-1-1]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방향 설정 시 고려할 사회 변화(1순위)_일반국민과 영유아부모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2) 정책 방향 및 목표 설정 시 우선적 고려 사항

가) 전체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1순위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영유아 심신의 안녕과 행복이 22.1%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차별없는 포용과 공존(15.2%),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14.9%) 순으로 나타났다. 10대~40대는 영유아 심신의 안녕(well-being)/행복을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50대는 각종 차별 없는(사회경제적 배경, 다문화, 특수장애 등) 포용과 공존을 응답하여 차이가 있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응답한 것은 10대는 모든 영유아의 출발점 평등 보장을, 20대와 40대는 각종 차별 없는 포용과 공존을, 30대는 부모의 자녀양육과 돌봄 지원 강화(틈새없는 돌봄서비스)를, 50대는 급변하는 사회변화(코로나19, 기후변화, 초저출산 등)에 대한 적응력 강화로 나타났다.

<표 IV-1-32>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방향 설정 시 고려사항(1순위)-전체

단위: %(명)

구분	영유아 심신의 안녕행복	모든 영유아의 출발점 평등 보장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적응력 강화	미래 인재 양성 (디지털기술 역량 등)	각종 차별 없는 포용과 공존	영유아의 요구/관점 존중 및 참여 강화	인종, 문화, 언어, 성별 다양성 존중	유아교육보육 지속가능발전 추구	부모의 자녀양육과 돌봄 지원 강화	기타	계(수)
전체	22.1	13.6	14.9	7.9	15.2	8.8	2.5	3.0	12.0	0.1	100.0 (3,115)

구분	영유아 심신의 안녕행 복	모든 영유아 의 출발점 평등 보장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적응력 강화	미래 인재 양성 (디지털 기술 역량 등	각종 차별 없는포 용과 공존	영유아 의 요구/관 점 존중 및 참여 강화	인종, 문화, 언어, 성별 다양성 존중	유아교 육보육 지속가 능발전 추구	부모의 자녀양 육과 돌봄 지원 강화	기타	계(수)	
성별												
남자	20.2	15.2	15.3	9.4	15.3	7.8	2.2	3.1	11.4	0.1	100.0	(1,468)
여자	23.9	12.2	14.5	6.5	15.1	9.7	2.8	2.9	12.5	0.1	100.0	(1,647)
X ² (df)	23.846(9)**											
연령												
15-19세	22.7	18.7	10.6	9.6	17.2	7.1	4.0	3.0	7.1	0.0	100.0	(198)
20대	17.6	13.7	15.9	13.9	16.5	6.7	2.6	2.8	10.3	0.0	100.0	(466)
30대	25.7	11.3	14.2	6.4	11.7	11.1	1.5	3.1	14.7	0.2	100.0	(956)
40대	24.7	13.2	14.0	5.8	14.9	10.5	3.0	3.1	10.9	0.0	100.0	(935)
50대	15.2	16.4	18.0	8.2	19.6	4.6	2.9	2.7	12.3	0.0	100.0	(560)
X ² (df)	136.781(36)***											
미혼/기혼												
미혼	17.8	14.1	15.0	10.4	19.2	7.0	3.0	3.3	10.1	0.1	100.0	(1,015)
기혼	24.2	13.4	14.8	6.6	13.2	9.7	2.3	2.9	12.9	0.0	100.0	(2,100)
X ² (df)	53.789(9)***											
결혼여부* 자녀여부												
미혼	17.8	14.1	15.0	10.4	19.2	7.0	3.0	3.3	10.1	0.1	100.0	(1,015)
영유아초등 자녀있는 부모	28.6	12.4	13.5	6.1	10.3	12.1	1.2	2.7	12.9	0.1	100.0	(1,383)
영유아초등 자녀없는 부모	15.6	15.3	17.3	7.7	18.7	5.0	4.5	3.1	12.8	0.0	100.0	(717)
X ² (df)	169.119(18)***											

*** $p < .001$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1, 2, 3순위 응답을 합한 결과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각종 차별 없는(사회경제적 배경, 다문화, 특수장애 등) 포용과 공존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30대에서는 영유아의 요구/관점 존중 및 참여 강화가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은 10대, 20대, 40대에서는 영유아의 요구/관점 존중 및 참여 강화, 30대와 50대에서는 부모의 자녀양육과 돌봄 지원 강

화로 나타났다.

〈표 IV-1-33〉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방향 설정 시 고려사항(1+2+3순위)-전체

단위: %(명)

구분	영유아 심신 안녕 행복	모든 영유아 출발점 평등 보장	급변 하는 사회 변화 적응력 강화	미래 인재 양성	각종 차별 없는 포용과 공존	영유아 요구/관 점 존중 참여 강화	인종, 문화, 언어, 성별 다양성 존중	유아교 육보육 지속 가능 발전 추구	부모 자녀 양육 돌봄 지원 강화	기타	(수)
전체	36.0	29.0	35.6	20.6	48.3	44.5	19.9	23.1	42.8	0.1	(3,115)
성별											
남자	32.4	32.3	37.2	23.9	49.4	41.8	20.1	23.4	39.5	0.1	(1,468)
여자	39.2	26.0	34.2	17.6	47.4	46.9	19.8	22.8	45.8	0.2	(1,647)
연령											
15-19세	33.3	30.3	31.8	26.3	56.6	38.9	31.3	18.7	32.8	0.0	(198)
20대	29.2	30.5	37.8	27.7	48.3	44.2	24.2	26.0	32.0	0.2	(466)
30대	42.4	28.3	33.9	18.9	42.5	47.8	16.7	23.1	46.0	0.3	(956)
40대	39.8	27.5	34.2	17.4	48.7	48.4	17.4	23.6	42.9	0.0	(935)
50대	25.4	30.9	40.5	20.7	55.0	34.5	22.0	21.3	49.8	0.0	(560)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나) 영유아 및 초등1학년 부모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영유아 및 초등1학년 부모들 역시 영유아 심신의 안녕과 행복을 32.7%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부모의 자녀양육과 돌봄 지원 강화(틈새 없는 돌봄서비스) 15.3%, 영유아의 요구/관점 존중 및 참여 강화 14.0%, 모든 영유아의 출발점 평등 보장 11.9%,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 10.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남성의 경우 모든 영유아의 출발점 평등 보장을, 여성은 영유아 심신의 안녕과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에 비해 부모의 자녀양육과 돌봄 지원 강화(틈새없는 돌봄서비스)를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여기고, 외벌이 가구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 영유아 심신의 안녕과 행복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표 IV-1-34〉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방향 설정 시 고려사항(1순위)-영유아부모

단위: %(명)

구분	영유아 심신 안녕/ 행복	모든 영유아 의 출발점 평등 보장	급변하 는 사회변 화 적응력 강화	미래인재 양성 (디지털 기술 역량 등)	각종 차별 없는 포용 공존	영유아 의 요구/ 관점 존중 참여 강화	인종, 문화, 언어, 성별 등의 다양성 존중	유아교 육 보육 지속가 능발전 추구	부모양 육돌봄 지원 강화	기타	계(수)
전체	32.7	11.9	10.4	3.9	7.7	14.0	1.1	3.0	15.3	0.1	100.0 (1,001)
성별											
남자	27.3	17.4	9.6	5.2	7.6	13.3	1.2	3.2	15.2	0.0	100.0 (407)
여자	36.4	8.1	10.9	3.0	7.7	14.5	1.0	2.9	15.3	0.2	100.0 (594)
X ² (df)	28.303(9)***										
혼인상태											
미혼	16.7	0.0	33.3	0.0	33.3	16.7	0.0	0.0	0.0	0.0	100.0 (6)
기혼-맞벌이	29.0	11.6	11.1	2.9	8.4	12.8	1.3	2.3	20.6	0.0	100.0 (476)
기혼-외벌이	36.2	12.3	9.4	4.8	6.7	15.0	1.0	3.7	10.6	0.2	100.0 (519)
X ² (df)	38.484(18)**										

** $p < .01$, *** $p < .001$.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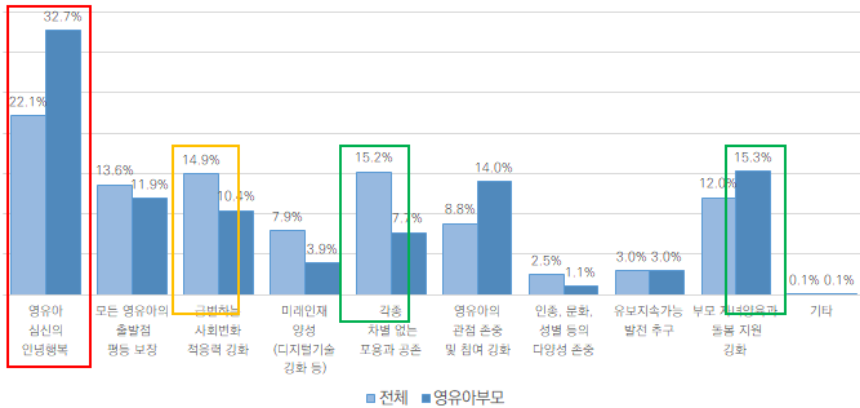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3순위까지의 응답 결과를 중복응답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영유아 심신의 안녕과 행복이 54.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보육활동 및 일상생활 등에 있어서 영유아의 요구·관점 존중 및 참여 강화 52.2%, 부모의 자녀양육과 돌봄 지원 강화(틈새없는 돌봄서비스) 50.8% 등이 유사한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각종 차별 없는(사회경제적 배경, 다문화, 특수장애 등) 포용과 공존이 1순위 응답 결과와는 다르게 37.8%로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모든 영유아의 출발점 평등 보장 27.6%, 유아교육과 보육의 지속가능발전 추구 23.3% 등이었다.

〈표 IV-1-35〉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방향 설정 시 고려사항(1+2+3순위)-영유아부모

단위: %(명)

구분	영유아 심신의 안녕/행 복	모든 영유아의 출발점 평등 보장	급변하 는 사회 변화 적응력 강화	미래 인재 양성 (디지털 기술역 량 강화)	각종 차별 없는 포용 공존	영유아요 구/관점 존중 참여 강화	인종, 문화, 언어, 성별 등의 다양성 존중	유아 교육 보육의 지속가 능발전 추구	부모 양육과 돌봄 지원 강화	기타	계(수)
전체	54.6	27.6	29.5	14.6	37.9	52.2	9.2	23.3	50.8	0.3	(1,001)

[그림 IV-1-1]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방향 설정 시 고려할 사회 변화(1순위)_일반국민과 영유아부모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3) 영유아기에 우선적으로 함양해야 할 능력과 기술

가) 전체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영유아기부터 함양해야 하는 역량과 기술에 대해서 신체건강(22.8%),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신체건강을 응답하였고 20대는 정서/감정 조절 능력을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응답한 역량과 기술로는 10대는 타인배려, 20대와 50대는 창의성, 30-40대는 정서/감정 조절능력으로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은 신체건강을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여성은 정서/감정 조절능력을 가장 많이 응답하여 차이가 있었다.

〈표 IV-1-36〉 영유아기에 함양해야 할 역량 및 기술(1순위)-전체

단위: %(명)

구분	창의성	신체건강	정서감정조절능력	타인배려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기본생활습관	협력	도덕성	정보기술활용능력	시민의식	리더십	봉사정신	계(수)
전체	19.2	22.8	20.9	10.4	4.3	6.7	6.3	1.8	4.7	1.0	1.2	0.4	0.4	1000 (3,115)
성별														
남자	22.2	23.8	17.1	10.6	5.0	6.5	5.2	2.1	4.1	1.0	1.6	0.2	0.5	1000 (1,468)
여자	16.6	21.9	24.3	10.2	3.8	6.9	7.2	1.5	5.2	0.9	0.7	0.5	0.3	1000 (1,647)

구분	창의성	신체건강	정서감정조절능력	타인배려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기본생활습관	협력	도덕성	정보기술활용능력	시민의식	리더십	봉사정신	계(수)
χ^2 (df)	53.303(12)***													
연령														
15-19세	15.2	22.2	12.6	17.2	4.5	7.6	6.6	2.5	5.6	3.0	1.0	0.5	1.5	1000 (198)
20대	18.0	17.2	18.7	15.5	6.2	6.7	6.7	2.6	4.5	0.9	1.3	0.9	1.1	1000 (466)
30대	18.9	23.0	22.4	8.2	4.7	7.0	7.7	1.5	4.3	0.9	0.9	0.3	0.1	1000 (956)
40대	18.6	24.6	24.1	8.3	3.7	7.2	5.3	1.7	4.1	0.7	1.2	0.3	0.1	1000 (935)
50대	23.2	24.3	17.9	11.1	3.0	5.4	5.0	1.4	6.1	0.7	1.4	0.2	0.4	1000 (550)
χ^2 (df)	112.336(48)***													
미혼/기혼														
미혼	17.2	19.5	17.1	13.7	5.7	7.3	6.4	3.0	6.3	1.2	1.4	0.4	0.8	1000 (1,015)
기혼	20.2	24.4	22.7	8.8	3.7	6.5	6.2	1.2	3.9	0.9	1.0	0.4	0.2	1000 (2,100)
χ^2 (df)	72.049(12)***													
결혼여부* 자녀여부														
미혼	17.2	19.5	17.1	13.7	5.7	7.3	6.4	3.0	6.3	1.2	1.4	0.4	0.8	1000 (1,015)
영유아초등자녀 부모	19.8	25.7	23.9	7.7	3.2	6.5	6.8	1.2	3.0	0.9	0.8	0.4	0.1	1000 (1,383)
영유아초등자녀 없는 부모	20.9	21.9	20.5	11.0	4.6	6.4	5.2	1.1	5.4	0.7	1.5	0.3	0.4	1000 (717)
χ^2 (df)	97.340(24)***													

*** $p < .001$.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1, 2, 3순위 응답을 합한 결과에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정서/감정 조절 능력이 가장 많이 나왔다. 그 다음으로 많이 응답한 역량은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10대, 20대, 50대는 타인배려를, 30-40대는 신체건강이었다.

〈표 IV-1-37〉 영유아기에 함양해야 할 역량 및 기술(1+2+3순위)-전체

단위: %(명)

구분	창의성	신체건강	정서감정조절능력	타인배려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기본생활습관	협력	도덕성	정보기술활용능력	시민의식	리더십	봉사정신	기타	계(수)
전체	30.2	39.1	53.2	34.5	17.6	30.4	30.0	13.6	25.3	8.8	9.8	4.6	2.7	0.0	(3,115)
연령															

구분	창의성	신체건강	정서감정조절능력	타인배려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기본생활습관	협력	도덕성	정보기술활용능력	시민의식	리더십	봉사정신	기타	계(수)
15-19세	24.2	33.8	47.0	40.9	17.2	33.8	27.3	16.2	30.3	11.6	11.6	3.0	3.0	0.0	(198)
20대	26.6	34.3	44.6	37.6	19.7	31.1	28.5	16.1	28.3	11.4	11.4	6.4	3.9	0.0	(466)
30대	31.4	39.7	57.2	28.2	19.9	31.0	33.3	13.4	21.9	9.5	8.1	4.5	1.9	0.1	(956)
40대	31.0	40.4	56.6	33.8	16.4	32.3	29.5	12.2	25.0	6.8	8.6	4.9	2.5	0.0	(935)
50대	32.0	41.4	50.2	41.6	14.3	24.6	27.5	13.6	27.3	7.9	13.0	3.4	3.2	0.0	(560)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나) 영유아 및 초등1학년 부모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하여 영유아기부터 함양해야 하는 역량과 기술에 대하여 먼저 1순위 응답 결과를 보면 신체건강 25.8%, 정서/감정조절능력 23.7%, 창의성 20.0%이 대체로 유사한 비율을 나타냈고, 기본생활습관 7.9%, 타인배려 6.5%, 의사소통능력 6.0%, 도덕성 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남성의 경우 신체건강 31.0%, 창의성 23.8%, 정서/감정조절능력 17.2%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는 정서/감정조절능력이 28.3%로 가장 높았고, 신체건강 22.2%, 창의성 18.7%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700만원 이상 가구의 경우 정서/감정조절능력에 대한 응답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창의성에 대한 응답은 다른 집단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표 IV-1-38〉 영유아기에 함양해야 할 역량 및 기술(1순위)-영유아부모

단위: %(명)

구분	창의성	신체건강	정서감정조절능력	타인배려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기본생활습관	협력	도덕성	정보기술활용능력	시민의식	리더십	계(수)
전체	20.8	25.8	23.8	6.5	2.3	6.0	7.9	0.8	3.6	1.1	0.9	0.6	100.0 (1,001)
성별													
남자	23.8	31.0	17.2	8.1	2.0	5.9	5.4	0.5	3.4	1.2	1.5	0.0	100.0 (407)
여자	18.7	22.2	28.3	5.4	2.5	6.1	9.6	1.0	3.7	1.0	0.5	1.0	100.0 (594)
X ² (df)	38.775(11)***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21.6	25.5	20.9	9.2	3.3	7.2	7.2	0.0	2.6	0.7	0.0	2.0	100.0 (153)

구분	창의성	신체건강	정서감정조절능력	타인배려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기본생활습관	협력	도덕성	정보기술활용능력	시민의식	리더십	계(수)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8.6	24.0	25.5	5.5	1.2	6.4	9.8	1.0	5.7	1.2	1.2	0.0	100.0 (420)
5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21.6	26.5	26.9	6.1	2.0	4.1	6.9	1.2	2.4	0.8	0.0	1.2	100.0 (245)
700만원 이상	24.0	29.0	18.0	7.1	4.4	6.6	5.5	0.5	1.1	1.6	2.2	0.0	100.0 (183)
χ^2 (df)	52.517(33)*												

* $p < .05$, *** $p < .001$.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위와 같은 내용으로 3순위까지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서/감정조절능력이 6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신체건강 44.4%, 창의성 37.1%, 기본생활습관 34.5%, 의사소통능력 30.6%, 타인배려 27.6%, 도덕성 20.5% 문제해결력 16.7%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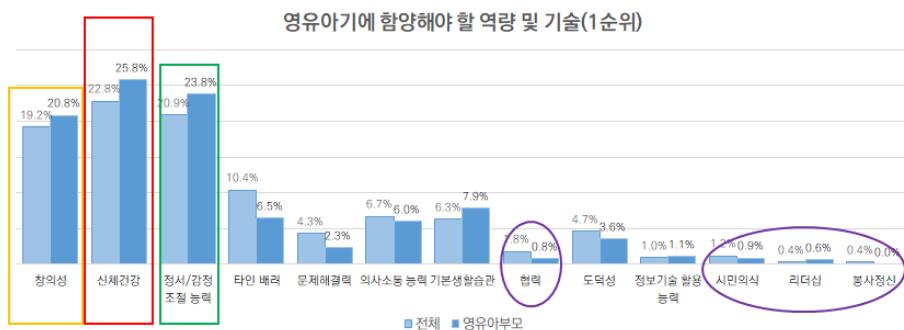
〈표 IV-1-39〉 영유아기에 함양해야 할 역량 및 기술(1+2+3순위)-영유아부모

단위: %(명)

구분	창의성	신체건강	정서감정조절능력	타인배려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기본생활습관	협력	도덕성	정보기술활용능력	시민의식	리더십	봉사정신	기타	(수)
전체	37.1	44.4	62.0	27.6	16.7	30.6	34.5	10.1	20.6	6.0	5.4	3.9	1.2	0.1	(1,001)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그림 IV-1-2] 미래사회 대비 영유아기 함양해야할 역량 및 기술(1순위)_일반국민과 영유아부모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4) 정책적 우선 지원 시기

가) 전체

미래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정부가 취학 전 영유아 시기 중 정책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시기에 대해 취학 직전 연령인 만5세가 45.2%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만3~4세는 38.2%로 그 다음 순이며 반면, 1세 미만은 4.5%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정책적 지원의 중요도가 낮게 인식됨을 알 수 있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취학 직전 연령인 만 5세를 응답한 반면, 20대는 만 3~4세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하지만 만 5세 응답과는 근소한 차이였다. 반면 모든 연령대에서 만 1세 미만은 9% 미만으로 가장 적었고 40~50대에서는 만 1~2세도 9%미만으로 적었다.

〈표 IV-1-40〉 정책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시기-전체

단위: %(명)

구분	만 1세 미만	만 1~2세	만 3~4세	만 5세 (취학 직전 연령)	계(수)	
전체	4.5	12.0	38.2	45.2	100.0	(3,115)
성별						
남자	4.8	11.0	37.7	46.5	100.0	(1,468)
여자	4.3	12.9	38.7	44.1	100.0	(1,647)
X ² (df)	4.344(3)					
연령						
15~19세	5.6	15.2	39.4	39.9	100.0	(198)
20대	8.4	14.4	39.5	37.8	100.0	(466)
30대	4.3	16.6	40.7	38.4	100.0	(956)
40대	2.9	8.3	37.9	50.9	100.0	(935)
50대	4.1	7.1	33.2	55.5	100.0	(560)
X ² (df)	106.066(12)***					
미혼/기혼						
미혼	6.3	13.3	36.7	43.7	100.0	(1,015)
기혼	3.7	11.4	39.0	46.0	100.0	(2,100)
X ² (df)	14.352(3)**					
결혼여부*자녀여부						
미혼	6.3	13.3	36.7	43.7	100.0	(1,015)
영유아초등자녀 있는	3.0	12.7	42.2	42.1	100.0	(1,383)

구분	만 1세 미만	만 1~2세	만 3~4세	만 5세 (취학 직전 연령)	계(수)	
부모 영유아초등자녀 없는 부모	4.9	8.9	32.8	53.4	100.0	(717)
χ^2 (df)	47.810(6)***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나) 영유아 및 초등1학년 부모

영유아 및 초등1학년 부모는 정책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시기로 만 3~4세가 42.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만 5세 41.0%, 만 1~2세 13.9%, 만 1세 미만 2.7%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 학력, 이용기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만 1~2세를 선택한 비율은 20대와 30대에 많았고, 만 5세를 선택한 비율은 40대와 50대에 많이 나타났다. 또한 유치원을 이용하는 부모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에 비해 만 5세를 선택한 비율이 더 높았고, 만 1~2세를 선택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에 비해 낮은 연령을 선택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V-1-41〉 정책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시기-영유아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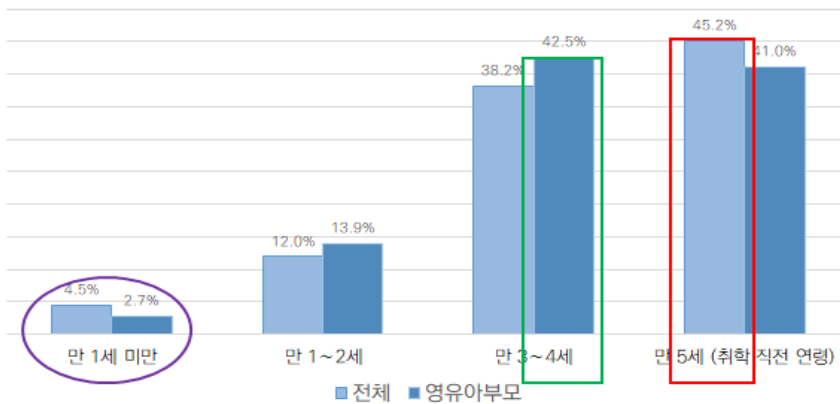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만 1세 미만	만 1~2세	만 3~4세	만 5세 (취학 직전 연령)	계(수)	
전체	2.7	13.9	42.5	41.0	100.0	(1,001)
연령						
20대	2.5	17.5	52.5	27.5	100.0	(40)
30대	3.4	17.4	42.4	36.9	100.0	(536)
40대	1.9	9.2	41.3	47.6	100.0	(412)
50대	0.0	8.3	50.0	41.7	100.0	(12)
χ^2 (df)	24.686(12)*					
학력						
고졸 이하	1.3	10.5	44.7	43.4	100.0	(76)
전문대/4년제 재학	6.8	27.3	43.2	22.7	100.0	(44)
전문대/4년제 대졸 이상	2.6	13.5	42.2	41.7	100.0	(881)
χ^2 (df)	13.617(6)*					
이용기관						

구분	만 1세 미만	만 1~2세	만 3~4세	만 5세 (취학 직전 연령)	계(수)
어린이집만 다님	2.4	16.6	46.7	34.3	100.0 (507)
유치원만 다님	2.5	8.9	40.9	47.8	100.0 (203)
둘 다 다님	0.0	10.0	27.5	62.5	100.0 (40)
기관 미이용	7.4	24.2	36.8	31.6	100.0 (95)
χ^2 (df)	39.073(9)***				
이용기관2					
국공립	3.0	13.1	40.4	43.4	100.0 (267)
그 외 기관	1.9	14.7	46.2	37.3	100.0 (483)
기관 미이용	7.4	24.2	36.8	31.6	100.0 (95)
χ^2 (df)	19.793(6)**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그림 IV-1-3] 정책적 역점을 두어야 할 시기_일반국민과 영유아부모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라.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과제

1) 정책 중요도 및 우선순위

가) 전체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정책과제의 중요도를 정책별로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9개 정책에 대해 3.7~4.1점으로 전반적으로 모두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아동학대

예방 정책(4.1점)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틈새없는 돌봄서비스 제공이 각 3.9점으로 다음 순이었다.

〈표 IV-1-42〉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 할 정책 과제 중요도 (1순위)_전체

단위: %(N=3,115),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평균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 완성(0-5세)	3.3	6.4	28.4	36.9	24.9	3.7
만5세 의무무상교육	2.2	6.5	28.3	36.0	27.0	3.8
유아교육과 보육의 체제 통합	1.9	6.6	29.3	38.3	23.9	3.8
취약계층 영유아와 가정 지원 강화	1.5	5.3	27.5	40.3	25.4	3.8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1.4	4.1	24.6	40.9	29.1	3.9
틈새없는 돌봄서비스 제공	1.3	4.6	27.1	38.4	28.7	3.9
아동학대 예방	1.4	5.1	19.7	27.6	46.1	4.1
부모의 자녀양육 역량 강화 지원	1.4	5.9	30.2	40.0	22.6	3.8
초등학교교육과의 연계 강화	1.8	6.3	34.0	37.8	20.1	3.7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나) 정책별 중요도

(1) 0~5세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 완성

정책별로 중요도를 살펴보면, 0~5세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 완성에 대해서 영유아/초등1학년 부모들이 미혼이나 초등2학년 이상 부모들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표 IV-1-43〉 5년간 정부가 추진 할 정책 과제 중요도: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 완성(0-5세)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전체	3.3	6.4	28.4	36.9	24.9	100.0 (3,115)	3.7
성별							
남자	4.1	6.9	29.0	34.5	25.5	100.0 (1,468)	3.7
여자	2.7	6.0	27.9	39.0	24.4	100.0 (1,647)	3.8
X ² (df)/t	10.735(4)*						-1.6
연령							
15-19세	3.0	4.5	32.8	40.9	18.7	100.0 (198)	3.7
20대	4.5	9.4	35.2	33.9	17.0	100.0 (466)	3.5
30대	3.8	5.8	24.8	34.6	31.1	100.0 (956)	3.8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40대	2.0	5.8	26.0	37.3	28.9	100.0 (935)	3.9
50대	3.9	6.8	31.4	41.1	16.8	100.0 (560)	3.6
χ^2 (df)/F	90.156(16)***						15.1***(a)
미혼/기혼							
미혼	4.7	9.0	34.3	35.6	16.5	100.0 (1,015)	3.5
기혼	2.7	5.2	25.6	37.5	29.0	100.0 (2,100)	3.9
χ^2 (df)/t	86.419(4)***						-9.1***
결혼여부*자녀여부							
미혼	4.7	9.0	34.3	35.6	16.5	100.0 (1,015)	3.5
영유아초등자녀 있는 부모	2.6	4.3	21.0	36.9	35.2	100.0 (1,383)	4.0
영유아초등자녀 없는 부모	2.8	7.0	34.3	38.8	17.2	100.0 (717)	3.6
χ^2 (df)/F	183.313(8)***						76.8***(a)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3.2	7.8	35.8	32.1	21.1	100.0 (692)	3.6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7	6.3	27.6	36.3	27.0	100.0 (1,096)	3.8
5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2.5	5.5	25.2	41.3	25.5	100.0 (707)	3.8
700만원 이상	5.5	6.1	25.2	38.2	25.0	100.0 (620)	3.7
χ^2 (df)/F	47.273(12)***						6.6***(a)

* $p < .05$, *** $p < .001$.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만5세 의무무상교육에 대해서도 영유아/초등1학년 부모들이 미혼이나 초등2학년 이상 부모들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표 IV-1-44〉 5년간 정부가 추진 할 정책 과제 중요도: 만5세 의무무상교육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전체	2.2	6.5	28.3	36.0	27.0	100.0 (3,115)	3.8
연령							
15-19세	3.0	7.6	33.3	34.8	21.2	100.0 (198)	3.6
20대	2.8	9.9	36.1	34.5	16.7	100.0 (466)	3.5
30대	2.4	5.3	26.3	33.6	32.4	100.0 (956)	3.9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40대	1.8	5.5	24.6	35.6	32.5	100.0 (935)	3.9
50대	2.0	6.8	29.5	42.5	19.3	100.0 (560)	3.7
X^2 (df)/F	94.719(16)***						16.9***
미혼/기혼							
미혼	3.0	8.8	34.4	35.9	18.0	100.0 (1,015)	3.6
기혼	1.9	5.3	25.3	36.1	31.4	100.0 (2,100)	3.9
X^2 (df)/t	81.064(4)***						-8.7***
결혼여부* 자녀여부							
미혼	3.0	8.8	34.4	35.9	18.0	100.0 (1,015)	3.6
영유아초등자녀 있는 부모	2.0	4.7	22.6	33.6	37.0	100.0 (1,383)	4.0
영유아초등자녀 없는 부모	1.7	6.6	30.4	40.9	20.5	100.0 (717)	3.7
X^2 (df)/F	148.483(8)***						56.8***(a)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3.0	8.7	33.1	33.7	21.5	100.0 (692)	3.6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9	5.1	28.6	35.7	28.6	100.0 (1,096)	3.8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1.6	6.2	23.2	39.2	29.8	100.0 (707)	3.9
700만원 이상	2.7	6.6	27.9	35.6	27.1	100.0 (620)	3.8
X^2 (df)/F	39.224(12)***						10.7***(a)

*** $p < .001$.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2) 유보체제 통합

유아교육과 보육의 체제 통합에 대해서는 미혼보다는 영유아/초등1학년 부모들과 초등2학년 이상 부모들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표 IV-1-45〉 5년간 정부가 추진 할 정책 과제 중요도: 유아교육과 보육의 체제 통합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전체	1.9	6.6	29.3	38.3	23.9	100.0 (3,115)	3.8
성별							
남자	2.2	6.1	27.6	40.1	24.0	100.0 (1,468)	3.8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여자	1.6	7.0	30.9	36.7	23.7	100.0	(1,647)	3.7
χ^2 (df)/t	7.513(4)							1.1
연령								
15-19세	3.5	5.1	36.4	36.4	18.7	100.0	(198)	3.6
20대	1.9	9.2	34.3	39.3	15.2	100.0	(466)	3.6
30대	1.6	6.5	30.4	35.3	26.3	100.0	(956)	3.8
40대	1.8	6.7	24.9	38.7	27.8	100.0	(935)	3.8
50대	2.0	5.0	28.2	42.7	22.1	100.0	(560)	3.8
χ^2 (df)/F	56.671(16)***							7.8***
미혼/기혼								
미혼	2.6	7.0	33.1	40.5	16.8	100.0	(1,015)	3.6
기혼	1.6	6.4	27.5	37.2	27.2	100.0	(2,100)	3.8
χ^2 (df)/t	44.000(4)***							-5.5***
결혼여부*자녀여부								
미혼	2.6	7.0	33.1	40.5	16.8	100.0	(1,015)	3.6
영유아초등자녀 있는 부모	1.7	6.6	26.2	35.3	30.2	100.0	(1,383)	3.9
영유아초등자녀 없는 부모	1.3	6.1	30.1	41.0	21.5	100.0	(717)	3.8
χ^2 (df)/F	66.401(8)***							18.2***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2.5	8.1	33.8	35.4	20.2	100.0	(692)	3.6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7	5.9	27.6	39.0	25.8	100.0	(1,096)	3.8
5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1.6	5.7	26.6	39.9	26.3	100.0	(707)	3.8
700만원 이상	1.9	7.3	30.6	38.5	21.6	100.0	(620)	3.7
χ^2 (df)/F	25.051(12)*							7.7***(a)

* $p < .05$, *** $p < .001$.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3) 취약계층 영유아와 가정 지원 강화

취약계층 영유아와 가정 지원 강화에 대해서는 영유아/초등1학년 부모들이 미혼이나 초등2학년 이상 부모들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근소한 차이였다.

〈표 IV-1-46〉 5년간 정부가 추진 할 정책 과제 중요도: 취약계층 영유아와 가정 지원 강화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전체	1.5	5.3	27.5	40.3	25.4	100.0	(3,115)	3.8
성별								
남자	1.6	5.7	27.4	42.2	23.1	100.0	(1,468)	3.8
여자	1.4	5.0	27.6	38.6	27.5	100.0	(1,647)	3.9
X^2 (df)/t	9.517(4)*							-1.9
연령								
15-19세	1.5	3.5	28.3	31.3	35.4	100.0	(198)	4.0
20대	2.1	6.7	29.2	39.7	22.3	100.0	(466)	3.7
30대	1.7	4.8	29.4	38.3	25.8	100.0	(956)	3.8
40대	1.2	5.0	26.4	41.1	26.3	100.0	(935)	3.9
50대	1.1	6.3	24.3	46.1	22.3	100.0	(560)	3.8
X^2 (df)/F	33.056(16)**							2.5*(a)
미혼/기혼								
미혼	2.2	6.4	28.8	38.1	24.5	100.0	(1,015)	3.8
기혼	1.1	4.8	26.9	41.3	25.9	100.0	(2,100)	3.9
X^2 (df)/t	11.256(4)*							-2.6**
결혼여부*자녀여부								
미혼	2.2	6.4	28.8	38.1	24.5	100.0	(1,015)	3.8
영유아초등자녀 있는 부모	1.2	4.0	26.9	39.4	28.5	100.0	(1,383)	3.9
영유아초등자녀 없는 부모	1.0	6.4	26.8	45.0	20.8	100.0	(717)	3.8
X^2 (df)/F	31.497(8)***							7.5**(a)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1.7	7.2	31.1	35.8	24.1	100.0	(692)	3.7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6	4.1	28.8	38.0	27.4	100.0	(1,096)	3.9
5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1.1	5.2	22.3	44.4	26.9	100.0	(707)	3.9
700만원 이상	1.3	5.5	26.9	44.5	21.8	100.0	(620)	3.8
X^2 (df)/F	36.261(12)***							4.6**(a)

* $p < .05$, ** $p < .01$, *** $p < .001$.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4)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해서는 영유아/초등1학년 부모들이 미혼이나 초등2학년 이상 부모들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표 IV-1-47〉 5년간 정부가 추진 할 정책 과제 중요도: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전체	1.4	4.1	24.6	40.9	29.1	100.0	(3,115)	3.9
성별								
남자	1.6	4.9	26.2	40.1	27.3	100.0	(1,468)	3.9
여자	1.2	3.4	23.2	41.6	30.6	100.0	(1,647)	4.0
X ² (df)/t	11.079(4)*							-3.2**
연령								
15-19세	1.5	3.5	26.3	42.4	26.3	100.0	(198)	3.9
20대	1.5	5.2	32.2	39.5	21.7	100.0	(466)	3.7
30대	1.3	3.3	22.9	39.6	32.8	100.0	(956)	4.0
40대	1.5	4.1	22.9	38.7	32.8	100.0	(935)	4.0
50대	1.3	4.8	23.4	47.1	23.4	100.0	(560)	3.9
X ² (df)/F	49.389(16)***							7.3***
미혼/기혼								
미혼	1.6	4.1	30.3	41.5	22.5	100.0	(1,015)	3.8
기혼	1.3	4.1	21.8	40.6	32.2	100.0	(2,100)	4.0
X ² (df)/t	43.336(4)***							-5.6***
결혼여부*자녀여부								
미혼	1.6	4.1	30.3	41.5	22.5	100.0	(1,015)	3.8
영유아초등자녀 있는 부모	1.2	3.3	19.2	38.9	37.5	100.0	(1,383)	4.1
영유아초등자녀 없는 부모	1.5	5.6	26.9	43.8	22.2	100.0	(717)	3.8
X ² (df)/F	101.915(8)***							40.2***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1.7	5.8	33.2	36.8	22.4	100.0	(692)	3.7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6	3.6	21.4	42.2	31.1	100.0	(1,096)	4.0
500만원 이상~	0.8	2.8	24.2	40.3	31.8	100.0	(707)	4.0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1.1	4.5	21.1	43.5	29.7	100.0 (620)	4.0
X^2 (df)/F	58.512(12)***						14.4*** ^(a)

* $p < .05$, ** $p < .01$, *** $p < .001$.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5) 틈새없는 돌봄서비스 제공

도 영유아/초등1학년 부모들이 미혼이나 초등2학년 이상 부모들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표 IV-1-48〉 5년간 정부가 추진 할 정책 과제 중요도: 틈새없는 돌봄서비스 제공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전체	1.3	4.6	27.1	38.4	28.7	100.0 (3,115)	3.9
성별							
남자	1.2	5.3	28.1	39.6	25.7	100.0 (1,468)	3.8
여자	1.3	3.9	26.2	37.2	31.4	100.0 (1,647)	3.9
X^2 (df)/t	14.286(4)**						-3.1**
연령							
15-19세	1.0	4.0	32.3	38.9	23.7	100.0 (198)	3.8
20대	2.4	4.7	28.3	41.0	23.6	100.0 (466)	3.8
30대	1.3	3.5	25.7	35.5	34.1	100.0 (956)	4.0
40대	0.9	5.2	24.5	39.3	30.2	100.0 (935)	3.9
50대	1.1	5.5	30.9	39.5	23.0	100.0 (560)	3.8
X^2 (df)/F	44.920(16)***						6.5***
미혼/기혼							
미혼	1.8	4.3	30.4	41.1	22.4	100.0 (1,015)	3.8
기혼	1.0	4.7	25.5	37.0	31.8	100.0 (2,100)	3.9
X^2 (df)/t	33.676(4)***						-4.6***
결혼여부*자녀 여부							
미혼	1.8	4.3	30.4	41.1	22.4	100.0 (1,015)	3.8
영유아초등자녀 있는 부모	1.1	4.1	22.6	36.2	36.0	100.0 (1,383)	4.0
영유아초등자녀 없는 부모	0.8	5.9	31.0	38.8	23.6	100.0 (717)	3.8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X ² (df)/F	75.401(8)***						26.2***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1.6	7.1	32.1	34.5	24.7	100.0 (692)	3.7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5	3.2	27.4	38.6	29.4	100.0 (1,096)	3.9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0.7	4.2	22.5	40.3	32.2	100.0 (707)	4.0
700만원 이상	1.1	4.7	26.3	40.0	27.9	100.0 (620)	3.9
X ² (df)/F	40.068(12)***						9.6***(a)

** $p < .01$, *** $p < .001$.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6)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도 영유아/초등1학년 부모들이 미혼이나 초등2학년 이상 부모들보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V-1-49〉 5년간 정부가 추진 할 정책 과제 중요도: 아동학대 예방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전체	1.4	5.1	19.7	27.6	46.1	100.0 (3,115)	4.1
성별							
남자	1.4	6.1	21.7	31.5	39.4	100.0 (1,468)	4.0
여자	1.5	4.3	17.9	24.2	52.2	100.0 (1,647)	4.2
X ² (df)/t	53.019(4)***						-5.6***
연령							
15-19세	1.0	3.5	25.3	19.2	51.0	100.0 (198)	4.2
20대	1.5	5.4	28.1	29.4	35.6	100.0 (466)	3.9
30대	1.3	4.2	18.4	27.2	49.0	100.0 (956)	4.2
40대	1.2	4.3	15.8	28.1	50.6	100.0 (935)	4.2
50대	2.1	8.4	19.5	29.1	40.9	100.0 (560)	4.0
X ² (df)/F	73.783(16)***						11.3***
미혼/기혼							
미혼	1.5	4.7	26.2	29.1	38.5	100.0 (1,015)	4.0
기혼	1.4	5.3	16.6	27.0	49.8	100.0 (2,100)	4.2
X ² (df)/t	52.693(4)***						-5.3***
결혼여부*자녀여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부								
미혼	1.5	4.7	26.2	29.1	38.5	100.0	(1,015)	4.0
영유아초등자녀 있는 부모	1.2	3.9	15.0	26.2	53.7	100.0	(1,383)	4.3
영유아초등자녀 없는 부모	1.7	7.9	19.5	28.5	42.4	100.0	(717)	4.0
χ^2 (df)/F	87.159(8)***							30.0***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1.9	6.6	25.4	25.7	40.3	100.0	(692)	4.0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5	4.4	18.4	26.4	49.4	100.0	(1,096)	4.2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0.4	5.0	15.6	28.3	50.8	100.0	(707)	4.2
700만원 이상	1.9	4.8	20.3	31.3	41.6	100.0	(620)	4.1
χ^2 (df)/F	48.613(12)***							11.8***a)

*** $p < .001$.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7) 부모의 자녀양육 역량 강화 지원

부모의 자녀양육 역량 강화 지원에 대해서는 영유아/초등1학년 부모들이 미혼이나 초등2학년 이상 부모들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근소한 차이였다.

〈표 IV-1-50〉 5년간 정부가 추진 할 정책 과제 중요도: 부모의 자녀양육 역량 강화 지원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전체	1.4	5.9	30.2	40.0	22.6	100.0	(3,115)	3.8
성별								
남자	1.3	6.5	30.7	42.6	18.9	100.0	(1,468)	3.7
여자	1.5	5.3	29.8	37.6	25.8	100.0	(1,647)	3.8
χ^2 (df)/t	23.180(4)***							-3.0**
연령								
15-19세	0.5	4.5	28.3	37.4	29.3	100.0	(198)	3.9
20대	1.7	7.1	33.7	36.9	20.6	100.0	(466)	3.7
30대	1.8	6.1	30.4	36.6	25.1	100.0	(956)	3.8
40대	1.3	5.3	27.6	42.8	23.0	100.0	(935)	3.8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50대	0.9	6.1	31.8	44.5	16.8	100.0	(560)	3.7
χ^2 (df)/F	35.257(16)**							3.5**(a)
미혼/기혼								
미혼	1.6	6.3	32.2	39.9	20.0	100.0	(1,015)	3.7
기혼	1.3	5.7	29.2	40.0	23.8	100.0	(2,100)	3.8
χ^2 (df)/t	7.302(4)							-2.6*
결혼여부*자녀여부								
미혼	1.6	6.3	32.2	39.9	20.0	100.0	(1,015)	3.7
영유아초등자녀 있는 부모	1.3	5.3	27.6	38.8	27.0	100.0	(1,383)	3.8
영유아초등자녀 없는 부모	1.3	6.6	32.2	42.3	17.7	100.0	(717)	3.7
χ^2 (df)/F	31.241(8)***							10.8***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2.3	6.6	35.1	36.8	19.1	100.0	(692)	3.6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4	5.1	29.2	40.1	24.2	100.0	(1,096)	3.8
5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0.4	6.1	27.4	40.7	25.3	100.0	(707)	3.8
700만원 이상	1.5	6.3	29.5	42.3	20.5	100.0	(620)	3.7
χ^2 (df)/F	30.031(12)**							7.3***

* $p < .05$, ** $p < .01$, *** $p < .001$.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8) 초등학교교육과의 연계 강화

초등학교교육과의 연계 강화에 대해서는 미혼보다는 영유아/초등1학년 부모들과 초등2학년 이상 부모들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표 IV-1-51〉 5년간 정부가 추진 할 정책 과제 중요도: 초등학교교육과의 연계 강화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전체	1.8	6.3	34.0	37.8	20.1	100.0	(3,115)	3.7
성별								
남자	2.0	7.3	34.3	38.4	18.1	100.0	(1,468)	3.6
여자	1.6	5.4	33.6	37.4	22.0	100.0	(1,647)	3.7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χ^2 (df)/t	11.320(4)*						-2.9**
연령							
15-19세	1.0	7.6	43.4	29.8	18.2	100.0 (198)	3.6
20대	1.9	6.9	39.7	38.0	13.5	100.0 (466)	3.5
30대	2.3	5.9	31.8	37.2	22.8	100.0 (956)	3.7
40대	1.6	6.4	31.1	37.4	23.4	100.0 (935)	3.7
50대	1.3	5.9	34.3	42.3	16.3	100.0 (560)	3.7
χ^2 (df)/F	47.360(16)***						5.1***
미혼/기혼							
미혼	2.4	7.8	38.7	36.7	14.5	100.0 (1,015)	3.5
기혼	1.5	5.6	31.7	38.4	22.9	100.0 (2,100)	3.8
χ^2 (df)/t	42.812(4)***						-6.4***
결혼여부*자녀 여부							
미혼	2.4	7.8	38.7	36.7	14.5	100.0 (1,015)	3.5
영유아초등자녀 있는 부모	1.6	5.4	29.6	37.6	25.8	100.0 (1,383)	3.8
영유아초등자녀 없는 부모	1.3	5.9	35.7	40.0	17.2	100.0 (717)	3.7
χ^2 (df)/F	66.804(8)***						26.8***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2.3	8.8	38.0	33.2	17.6	100.0 (692)	3.6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2	4.8	33.1	38.5	21.4	100.0 (1,096)	3.7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1.0	5.8	31.8	39.9	21.5	100.0 (707)	3.8
700만원 이상	1.3	6.6	33.4	39.5	19.2	100.0 (620)	3.7
χ^2 (df)/F	30.262(12)**						6.7***(a)

* $p < .05$, ** $p < .01$, *** $p < .001$.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요약하면, 9개 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영유아/초등1학년 부모들과 초등2학년 이상 부모들은 0~5세 무상 유아교육·보육의 완성을, 반면 미혼은 아동학대 예방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영유아/초등1학년 부모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초등2학년 이상 부모들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체제 통합을, 미혼은 만5세 의무·무상교육을 많이 응답하였다.

연령대별로는 가장 우선과제로 10-20대는 아동학대 예방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30-50대는 0~5세 무상 유아교육·보육의 완성을 가장 많이 응답하여 차이가 있었다. 남녀 모두 0~5세 무상 유아교육·보육의 완성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남성은 만5세 의무·무상교육을, 여성은 아동학대 예방을 많이 응답하여 차이가 있었다.

〈표 IV-1-52〉 5년간 정부가 추진 할 우선 정책 과제

단위: %(명)

구분	무상 유아 교육 보육 완성	만5세 의무 무상 교육	유아 교육 과 보육 체제 통합	취약 계층 영유 아와 가정 지원 강화	유아 교육 보육 질적 수준 향상	틈새 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	아동 학대 예방	부모 자녀 양육 역량 강화 지원	초등학 교교육 과의 연계 강화	기타	계(수)
전체	19.0	14.7	14.3	9.1	13.5	9.2	13.6	3.9	2.6	0.1	100.0 (3,115)
성별											
남자	20.6	16.9	14.6	9.5	12.0	9.2	10.9	3.5	2.7	0.1	100.0 (1,468)
여자	17.5	12.7	14.0	8.7	14.8	9.3	16.1	4.3	2.5	0.2	100.0 (1,647)
X ² (df)	36.257(9)***										
연령											
15-19세	11.6	15.2	9.6	14.1	9.1	5.6	27.3	3.5	4.0	0.0	100.0 (198)
20대	12.0	11.4	14.2	14.8	13.3	10.3	16.3	4.3	3.2	0.2	100.0 (466)
30대	21.5	14.2	14.1	6.8	15.5	11.8	10.8	3.3	1.7	0.2	100.0 (956)
40대	20.0	16.5	14.3	7.4	14.2	8.6	13.0	3.7	2.2	0.0	100.0 (935)
50대	21.3	15.0	16.4	9.3	10.4	6.4	12.5	5.0	3.6	0.2	100.0 (560)
X ² (df)	139.163(36)***										
미혼/기혼											
미혼	13.0	14.2	12.1	13.5	13.1	8.7	18.4	4.0	2.9	0.1	100.0 (1,015)
기혼	21.9	14.9	15.4	7.0	13.6	9.5	11.3	3.9	2.4	0.1	100.0 (2,100)
X ² (df)	92.395(9)***										
결혼여부* 자녀여부											
미혼	13.0	14.2	12.1	13.5	13.1	8.7	18.4	4.0	2.9	0.1	100.0 (1,015)
영유아초등자 녀 있는 부모	23.4	14.9	14.8	5.4	15.4	10.1	10.5	3.5	1.8	0.1	100.0 (1,383)
영유아초등자 녀 없는 부모	18.8	14.9	16.5	9.9	10.2	8.4	13.0	4.6	3.6	0.1	100.0 (717)
X ² (df)	129.873(18)***										

*** $p < .001$,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우선순위 5개를 응답한 결과를 합하여 살펴보면, 영유아/초등1학년 부모들과 미혼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초등2학년 이상 부모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연령대별로는 10대는 취약계층 영유아와 가정지원 강화를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그 외 연령대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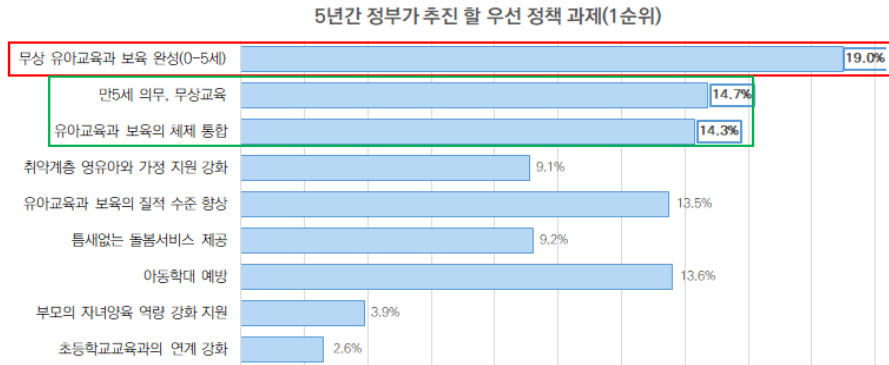
〈표 IV-1-53〉 5년간 정부가 추진 할 우선 정책 과제(1+2+3+4+5순위)

단위: %(명)

구분	무상 유아교 육과 보육 완성 (0-5 세)	만5세 의무, 무상 교육	유아 교육과 보육의 체제 통합	취약 계층 영유아 와 가정 지원 강화	유아교 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틈새 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	아동 학대 예방	부모의 자녀 양육 역량 강화 지원	초등학 교교육 과의 연계 강화	기타	(수)
전체	50.1	56.1	58.9	55.7	72.1	60.3	65.2	47.5	33.7	0.3	(3,115)
성별											
남자	53.3	60.1	62.6	58.6	68.5	58.9	60.1	44.1	33.5	0.1	(1,468)
여자	47.2	52.6	55.6	53.2	75.4	61.5	69.8	50.6	33.8	0.4	(1,647)
연령											
15-19세	42.4	57.1	51.5	71.2	66.7	55.1	69.2	57.1	29.8	0.0	(198)
20대	41.4	52.1	53.9	65.9	71.2	61.2	66.5	54.3	33.3	0.2	(466)
30대	55.3	57.8	59.9	46.8	75.5	63.6	62.9	44.1	33.6	0.4	(956)
40대	51.9	59.9	59.9	51.6	73.6	57.1	65.6	44.9	35.4	0.2	(935)
50대	48.0	50.0	62.3	64.1	66.6	61.1	66.3	48.8	32.7	0.2	(560)
미혼/기혼											
미혼	44.1	53.9	56.5	67.1	68.5	60.3	66.7	51.9	30.9	0.1	(1,015)
기혼	53.0	57.2	60.1	50.2	73.9	60.3	64.5	45.4	35.0	0.3	(2,100)
결혼여부* 자녀여부											
미혼	44.1	53.9	56.5	67.1	68.5	60.3	66.7	51.9	30.9	0.1	(1,015)
영유아초등자녀 있는 부모	56.7	61.1	59.9	44.1	77.6	60.3	62.8	41.9	35.1	0.4	(1,383)
영유아초등자녀 없는 부모	45.7	49.8	60.4	62.1	66.8	60.3	67.8	52.3	34.7	0.1	(717)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그림 IV-1-4]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할 우선순위 정책과제(1순위)_일반국민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나) 영유아 및 초등 1학년 부모

영유아 및 초등 1학년 부모는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우선적인 정책 과제로 영유아의 요구와 참여를 반영한 교육과 보육과정 운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64.3%이었다(평균 3.8점/5점 척도). 여성의 평점점수가 남성에 비해 약간 높았으며, 월평균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부모들은 중요도를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54〉 5년간 정부가 추진 할 정책 과제 중요도: 요구와 참여를 반영한 교육보육과정 운영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전체	0.8	5.0	30.0	39.8	24.5	100.0	(1,001)	3.8
성별								
남자	1.0	4.7	34.6	39.8	19.9	100.0	(407)	3.7
여자	0.7	5.2	26.8	39.7	27.6	100.0	(594)	3.9
X ² (df)/t	11.297(4)*							-2.7**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0.7	6.5	32.7	38.6	21.6	100.0	(153)	3.7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2	4.0	31.7	38.3	24.8	100.0	(420)	3.8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0.4	1.6	26.1	45.7	26.1	100.0	(245)	4.0
700만원 이상	0.5	10.4	29.0	36.1	24.0	100.0	(183)	3.7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χ^2 (df)/F	25.083(12)*						3.0*(a)

* $p < .05$, ** $p < .01$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우수한 교사 채용과 근속을 위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전체의 78.2%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높다고 응답한 비율도 40.1%로 높게 나타났다. 평정점수 또한 5점 척도 기준으로 4.1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고, 점수 차가 크지는 않았으나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의 경우 중요도를 가장 낮게 평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55〉 5년간 정부가 추진 할 정책 과제 중요도: 우수한 교사 채용, 근속을 위한 처우 개선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전체	0.7	3.5	17.7	38.1	40.1	100.0 (1,001)	4.1
성별							
남자	1.0	4.4	17.2	43.7	33.7	100.0 (407)	4.0
여자	0.5	2.9	18.0	34.2	44.4	100.0 (594)	4.2
χ^2 (df)/t	15.371(4)**						-2.6*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0.0	4.6	24.8	34.0	36.6	100.0 (153)	4.0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2	3.1	19.8	34.5	41.4	100.0 (420)	4.1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0.4	1.6	12.2	45.7	40.0	100.0 (245)	4.2
700만원 이상	0.5	6.0	14.2	39.3	39.9	100.0 (183)	4.1
χ^2 (df)/F	26.677(12)**						1.9(a)

* $p < .05$, ** $p < .01$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원장의 전문성과 리더십 강화에 대해서는 전체의 71.7%가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중요도 점수 또한 5점 만점에 4.1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여성의 중요도 점수가 남성의 점수에 비해 다소 높았다.

〈표 IV-1-56〉 5년간 정부가 추진 할 정책 과제 중요도: 원장의 전문성과 리더십 강화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전체	0.7	3.9	23.8	32.7	39.0	100.0 (1,001)	4.1
성별							
남자	0.7	4.4	27.8	35.6	31.4	100.0 (407)	3.9
여자	0.7	3.5	21.0	30.6	44.1	100.0 (594)	4.1
χ^2 (df)/t	16.861(4)**						-3.6***

** $p < .01$, *** $p < .001$.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스마트 교육과 돌봄 시설환경에 대해서는 전체의 66.56%가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보통 수준으로 평정한 비율도 27.1%로 나타났다. 평균점수는 3.9점으로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에 가까웠으며,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인 가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57〉 5년간 정부가 추진 할 정책 과제 중요도: 스마트 교육과 돌봄 시설환경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전체	1.0	5.4	27.1	37.6	29.0	100.0 (1,001)	3.9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0.0	4.6	35.3	30.7	29.4	100.0 (153)	3.8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0.7	4.8	27.9	37.1	29.5	100.0 (420)	3.9
5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0.8	4.9	24.5	38.0	31.8	100.0 (245)	4.0
700만원 이상	2.7	8.2	21.9	43.7	23.5	100.0 (183)	3.8
χ^2 (df)/F	23.513(12)*						1.5

* $p < .05$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업무 경감을 위한 IOT 보육 및 교육 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전체의 59.4%가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하였으며, 38.7%는 중요도가 보통 또는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58〉 5년간 정부가 추진 할 정책 과제 중요도: 업무 경감을 위한 IOT 보육교육 환경 조성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계(수)		평균
전체	2.2	6.4	32.1	33.6	25.8	100.0	(1,001)	3.7
성별								
남자	2.9	6.6	33.9	34.4	22.1	100.0	(407)	3.7
여자	1.7	6.2	30.8	33.0	28.3	100.0	(594)	3.8
χ^2 (df)/t	6.252(4)							-2.2*

* $p < .05$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2) 세부과제 필요성 수준

영유아 및 초등1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과제의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유아가 가정에서 부모와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방과후 돌봄 및 야간연장보육 이용대상을 현재의 모든 가정 영유아에서 맞벌이가정 영유아로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의 66.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 중 28.5%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 서울이나 인천/경기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령에 따라서도 15~19세를 제외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용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전문대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부모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에 비해 이 정책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1-59〉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필요성 - 방과후 및 야간연장보육 이용대상 제한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별로 필요하지 않음	어느정도 필요	매우 필요	모르겠음	계(수)		평균
전체	11.1	18.8	37.9	28.5	3.8	100.0	(1,001)	2.9
지역								
서울	10.1	19.6	35.4	29.1	5.7	100.0	(158)	2.9
인천/경기	14.9	15.8	33.6	31.3	4.3	100.0	(348)	2.8
대전/충청	11.7	25.0	32.5	28.3	2.5	100.0	(120)	2.8
광주/전라	4.4	22.0	45.1	28.6	0.0	100.0	(91)	3.0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별로 필요하지 않음	어느정도 필요	매우 필요	모르 겠음	계(수)		평균
대구/경북	5.4	15.2	43.5	31.5	4.3	100.0	(92)	3.1
부산/울산/경남	10.8	20.9	45.9	18.2	4.1	100.0	(148)	2.7
강원/제주	9.1	15.9	40.9	31.8	2.3	100.0	(44)	3.0
χ^2 (df)/F	37.687(24)*							1.4(a)
연령								
15-19세	0.0	0.0	0.0	100.0	0.0	100.0	(1)	4.0
20대	15.0	22.5	42.5	17.5	2.5	100.0	(40)	2.6
30대	13.8	19.8	36.6	25.9	3.9	100.0	(536)	2.8
40대	7.5	17.2	38.6	32.8	3.9	100.0	(412)	3.0
50대	0.0	16.7	58.3	25.0	0.0	100.0	(12)	3.1
χ^2 (df)/F	21.953(16)							4.2**(a)
학력								
고졸 이하	15.8	15.8	44.7	17.1	6.6	100.0	(76)	2.7
전문대/4년제 재학	4.5	15.9	40.9	38.6	0.0	100.0	(44)	3.1
전문대/4년제 대졸 이상	11.0	19.2	37.1	28.9	3.7	100.0	(881)	2.9
χ^2 (df)/F	13.376(8)							3.1*
혼인상태								
미혼	0.0	16.7	66.7	0.0	16.7	100.0	(6)	2.8
기혼-맞벌이	9.0	15.3	38.4	33.4	3.8	100.0	(476)	3.0
기혼-외벌이	13.1	22.0	37.0	24.3	3.7	100.0	(519)	2.8
χ^2 (df)/F	23.285(8)**							8.0***(a)

* $p < .05$, ** $p < .01$, *** $p < .001$.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유치원 무료급식 제공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의 89.4%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63.2%로 매우 높았다. 5점 만점으로 평정한 점수를 보면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강원/제주 지역은 3.7점,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은 3.6점이었으며, 서울 지역은 3.5점으로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적게 느끼고 있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두 다 다녀본 경우에 유치원 무료급식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인식하였다.

〈표 IV-1-60〉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필요성: 유치원 무료급식 제공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별로 필요하지 않음	어느정도 필요	매우 필요	모르겠음	계(수)	평균
전체	1.2	4.6	26.2	63.2	4.8	100.0 (1,001)	3.6
지역							
서울	0.6	10.1	24.7	57.6	7.0	100.0 (158)	3.5
인천/경기	2.3	3.7	27.0	61.2	5.7	100.0 (348)	3.6
대전/충청	1.7	3.3	21.7	70.8	2.5	100.0 (120)	3.7
광주/전라	0.0	1.1	30.8	67.0	1.1	100.0 (91)	3.7
대구/경북	1.1	4.3	20.7	69.6	4.3	100.0 (92)	3.7
부산/울산/경남	0.0	4.7	31.8	58.8	4.7	100.0 (148)	3.6
강원/제주	0.0	2.3	20.5	72.7	4.5	100.0 (44)	3.7
χ^2 (df)/F			37.442(24)*				1.6(a)
성별							
남자	0.7	3.4	25.1	63.6	7.1	100.0 (407)	3.6
여자	1.5	5.4	26.9	63.0	3.2	100.0 (594)	3.6
χ^2 (df)/t			11.320(4)*				1.7
혼인상태							
미혼	16.7	0.0	16.7	66.7	0.0	100.0 (6)	3.3
기혼-맞벌이	1.5	5.7	26.7	62.8	3.4	100.0 (476)	3.6
기혼-외벌이	0.8	3.7	25.8	63.6	6.2	100.0 (519)	3.6
χ^2 (df)/F			20.199(8)*				1.6(a)
현재 이용기관							
어린이집만 다님	1.4	5.1	23.9	65.3	4.3	100.0 (507)	3.6
유치원만 다님	0.5	3.0	27.1	64.0	5.4	100.0 (203)	3.6
둘 다 다님	0.0	2.5	15.0	80.0	2.5	100.0 (40)	3.8
기관 미이용	1.1	5.3	36.8	52.6	4.2	100.0 (95)	3.5
χ^2 (df)/F			15.128(12)				2.7*(a)
현재 이용기관2							
국공립	0.4	4.1	21.3	69.3	4.9	100.0 (267)	3.7
그 외 기관	1.4	4.6	25.9	63.8	4.3	100.0 (483)	3.6
기관 미이용	1.1	5.3	36.8	52.6	4.2	100.0 (95)	3.5
χ^2 (df)/F			11.836(8)				3.8*(a)

* $p < .05$.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의 90%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58.6%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61〉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필요성: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확대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별로 필요하지 않음	어느정도 필요	매우 필요	모르겠음	계(수)		평균
전체	0.5	4.1	31.4	58.6	5.4	100.0	(1,001)	3.6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감염병 대비 방역, 위생 청결, 안전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의 90.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도 72.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4점 만점을 기준으로 3.7점의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남성보다는 여성이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62〉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필요성: 감염병 대비 방역, 위생 청결, 안전 강화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별로 필요하지 않음	어느정도 필요	매우 필요	모르겠음	계(수)		평균
전체	0.5	2.0	18.1	72.0	7.4	100.0	(1,001)	3.7
성별								
남자	1.0	2.9	20.4	68.3	7.4	100.0	(407)	3.7
여자	0.2	1.3	16.5	74.6	7.4	100.0	(594)	3.8
χ^2 (df)/t	9.655(4)*							-2.9**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 및 보육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의 79.6%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며,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13.1%이었다. 월평균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근소하게 낮게 나타났다.

〈표 IV-1-63〉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필요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 및 보육 정책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별로 필요하지 않음	어느정도 필요	매우 필요	모르 겠음	계(수)		평균
전체	2.8	10.3	39.7	39.9	7.4	100.0	(1,001)	3.3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2.0	12.4	32.0	45.8	7.8	100.0	(153)	3.3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1	7.1	46.2	36.9	6.7	100.0	(420)	3.3
5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2.9	11.0	38.8	38.8	8.6	100.0	(245)	3.2
700만원 이상	2.7	14.8	32.2	43.2	7.1	100.0	(183)	3.2
$\chi^2(df)/F$	21.913(12)*							0.3(a)

* $p < .05$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을 지원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의 88.2%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필요성 점수는 4점 만점을 기준으로 3.6 점이었다.

〈표 IV-1-64〉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필요성: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지원, 감독 강화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별로 필요하지 않음	어느정도 필요	매우 필요	모르 겠음	계(수)		평균
전체	1.3	4.0	29.5	58.7	6.5	100.0	(1,001)	3.6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부모참여와 소통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의 88.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4점 만점을 기준으로 3.5 수준으로 평정하였다.

〈표 IV-1-65〉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필요성: 부모참여와 소통 강화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별로 필요하지 않음	어느정도 필요	매우 필요	모르 겠음	계(수)		평균
전체	0.7	4.6	38.1	50.7	5.9	100.0	(1,001)	3.5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다른 아동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89.7%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도 59.3%로 높게 나타났다. 4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정한 점수는 3.6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IV-1-66〉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필요성: 다른 아동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별로 필요하지 않음	어느정도 필요	매우 필요	모르 겠음	계(수)	평균
전체	0.5	3.1	30.4	59.3	6.7	100.0 (1,001)	3.6
현재 이용기관							
어린이집만 다님	0.6	3.9	31.2	56.6	7.7	100.0 (507)	3.6
유치원만 다님	0.5	1.5	34.5	61.6	2.0	100.0 (203)	3.6
둘 다 다님	0.0	0.0	27.5	67.5	5.0	100.0 (40)	3.7
기관 미이용	0.0	3.2	24.2	60.0	12.6	100.0 (95)	3.7
χ^2 (df)/F	21.135(12)*						1.3(a)

* $p < .05$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마. 기타 의견

1) 향후 자녀 출산 후 보내고 싶은 교육·보육 기관

미혼인 국민을 대상으로 향후 자녀가 생길 경우 어떠한 교육·보육 기관을 보내고 싶은지 조사한 결과, 집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기관(27.7%), 시설환경이 안전하고 좋은 기관(18.4%), 교사의 전문성이 높은 기관(11.1%), 프로그램이 우수한 기관(10.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응답의 차이는 없었다. 미혼의 경우, 교사전문성과 프로그램 보다는 집과의 거리, 시설환경을 2-3배로 높게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67〉 향후 출산 후 보내고 싶은 유아교육·보육 기관(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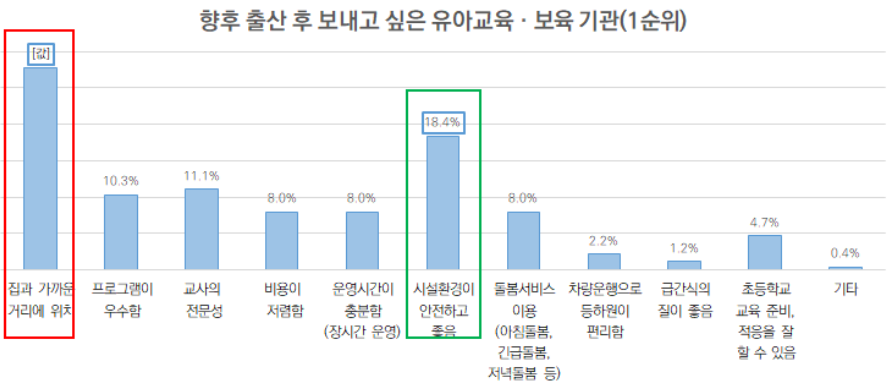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집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	프로그램 우수	교사 전문성	비용 저렴	운영시간충분 (장시간 운영)	시설환경 안전하고 좋음	돌봄서비스 이용	차량운행등하원이 편리	급간식의 질이 좋음	초등학교 교육 준비적용	기타	계(수)
전체	27.7	10.3	11.1	8.0	8.0	18.4	8.0	2.2	1.2	4.7	0.4	1000 (1,015)
성별												
남자	27.0	10.9	11.2	10.3	8.6	14.8	8.1	2.4	0.9	5.4	0.4	1000 (534)
여자	28.5	9.8	11.0	5.4	7.3	22.5	7.9	1.9	1.5	4.0	0.4	1000 (481)
X ² (df)	18.871(10)*											

* $p < .05$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그림 IV-1-5] 향후 출산 후 자녀를 보내고 싶은 기관 선택기준(1순위)_일반국민(미혼)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2) 영유아교사에 적합한 학력 수준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영유아 교사가 되기 위한 적합한 자격기준에 대해 모든 연령대에서 4년제 대학 졸업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48.1%), 그 다음으로 2,3년제 전문대 졸업을 많이 응답하여(32.6%) 경향성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한편 고등학교 졸업 후 일정기간 교육에 대한 응답은 미혼(14.3%)인 경우가 기혼(9.7%)인 경우보다, 남성(12.3%)인 경우가 여성(10.2%)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V-1-69〉 영유아교사가 되기 위해 적합한 최소 자격 기준-전체

단위: %(명)

구분	고졸 후 일정기간 교육	2,3년제 전문대 졸	4년제 대학 졸	대학원 졸(석사)	기타	계(수)	
전체	11.2	32.6	48.1	6.5	1.6	100.0	(3,115)
성별							
남자	12.3	29.8	49.3	7.0	1.6	100.0	(1,468)
여자	10.2	35.0	47.0	6.1	1.7	100.0	(1,647)
X ² (df)	11.770(4)*						
연령							
15-19세	19.2	25.8	44.4	8.1	2.5	100.0	(198)
20대	12.4	26.2	54.3	6.4	0.6	100.0	(466)
30대	7.7	29.3	53.7	7.0	2.3	100.0	(956)
40대	10.2	38.3	43.6	6.2	1.7	100.0	(935)
50대	15.0	36.3	42.1	5.7	0.9	100.0	(560)
X ² (df)	82.297(16)***						
미혼/기혼							
미혼	14.3	28.9	48.4	7.2	1.3	100.0	(1,015)
기혼	9.7	34.3	48.0	6.2	1.8	100.0	(2,100)
X ² (df)	21.292(4)***						
결혼여부*							
자녀여부							
미혼	14.3	28.9	48.4	7.2	1.3	100.0	(1,015)
영유아초등자녀 있는 부모	7.7	34.3	50.0	6.0	2.1	100.0	(1,383)
영유아초등자녀 없는 부모	13.7	34.4	44.1	6.6	1.3	100.0	(717)
X ² (df)	42.160(8)***						

*** $p < .001$.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한편,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 교사가 되기 위한 적합한 자격 기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4년제 대학 졸업이라는 응답이 47.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2, 3년제 전문대 졸업 37.0%, 고졸 후 일정기간 교육 8.1%, 대학원 졸업 4.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교육받는 것이 적합하다는 응답을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하였고, 전문대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부모는 2, 3년제 전문대 졸업이 적합하다는 응답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였다. 또한 4년제 대학 졸업이나 대학원 졸업이 적합하다는 응답은 전문대나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모가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0〉 영유아교사가 되기 위해 적합한 최소 자격 기준-영유아부모

단위: %(명)

구분	고졸 후 일정기간 교육	2,3년제 전문대 졸	4년제 대학 졸	대학원 졸(석사)	기타	계(수)	
전체	8.1	37.0	47.4	4.8	2.8	100.0	(1,001)
학력							
고졸 이하	31.6	39.5	22.4	3.9	2.6	100.0	(76)
전문대/4년제 재학	13.6	50.0	31.8	0.0	4.5	100.0	(44)
전문대/4년제 대졸 이상	5.8	36.1	50.3	5.1	2.7	100.0	(881)
χ^2 (df)	78.357(8)***						

*** $p < .001$.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3) 바람직한 0~1세 양육 방식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1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될 아동 1인당 월 30만원의 영아수당과 관련하여, 양육방식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바우처로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선택한 비율이 더 많아졌다. 한편 영유아와 초등1자녀가 있는 경우는 미혼과 초등2학년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보다 바우처로 보육기관을 이용보다는 가정에서 양육을 선택한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가정에서 양육한다는 선택한 경우가 더 많았다.

〈표 IV-1-71〉 0-1세 영아수당을 고려한 양육방식에 대한 의견-전체

단위: %(명)

구분	영아수당을 지급받아 가정에서 자녀 양육	현재와 같이 바우처로 보육기관(어린이집) 이용	계(수)	
전체	49.8	50.2	100.0	(3,115)
성별				
남자	48.6	51.4	100.0	(1,468)
여자	50.8	49.2	100.0	(1,647)
X ² (df)	1.572(1)			
연령				
15-19세	50.0	50.0	100.0	(198)
20대	56.0	44.0	100.0	(466)
30대	52.2	47.8	100.0	(956)
40대	46.8	53.2	100.0	(935)
50대	45.2	54.8	100.0	(560)
X ² (df)	17.433(4)**			
미혼/기혼				
미혼	48.1	51.9	100.0	(1,015)
기혼	50.6	49.4	100.0	(2,100)
X ² (df)	1.701(1)			
결혼여부*				
자녀여부				
미혼	48.1	51.9	100.0	(1,015)
영유아초등자녀 있는 부모	53.0	47.0	100.0	(1,383)
영유아초등자녀 없는 부모	45.9	54.1	100.0	(717)
X ² (df)	11.263(2)**			

*** $p < .001$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영유아 및 초등1학년 부모 전체의 52.4%는 영아수당을 지급받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47.54%는 현재와 같이 바우처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맞벌이 여부, 이용기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여성, 맞벌이 부모, 기관 이용 경험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할 것이라는 응답을 더 많이 하였다. 그러나 국공립 기관을 이용하는 부모는 다른 기관 이용 부모와는 달리 가정에서 양육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V-1-72〉 0-1세 영아수당을 고려한 양육방식에 대한 의견-영유아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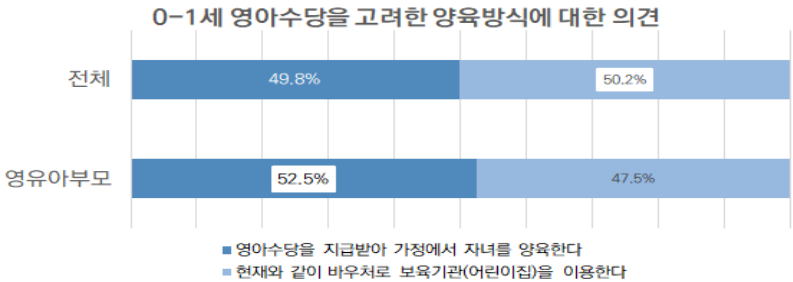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영아수당을 지급받아 가정에서 자녀 양육	현재와 같이 바우처로 보육기관(어린이집) 이용	계(수)	
전체	52.5	47.5	100.0	(1,001)
성별				
남자	45.0	55.0	100.0	(407)
여자	57.7	42.3	100.0	(594)
X ² (df)	15.822(1)***			
혼인상태				
미혼	50.0	50.0	100.0	(6)
기혼-맞벌이	45.2	54.8	100.0	(476)
기혼-외벌이	59.3	40.7	100.0	(519)
X ² (df)	20.028(2)***			
이용기관				
어린이집만 다님	48.9	51.1	100.0	(507)
유치원만 다님	48.8	51.2	100.0	(203)
둘 다 다님	42.5	57.5	100.0	(40)
기관 미이용	86.3	13.7	100.0	(95)
X ² (df)	48.915(3)***			
이용기관2				
국공립	52.8	47.2	100.0	(267)
그 외 기관	46.2	53.8	100.0	(483)
기관 미이용	86.3	13.7	100.0	(95)
X ² (df)	51.337(2)***			

*** $p < .001$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그림 IV-1-6〉 0-1세 영아수당 이용 여부_일반국민과 영유아 부모



4)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서비스 차이

다음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유치원·어린이집 이용경험이 있는 영유아 및 초등1학년 부모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이다. 두 기관의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2.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의 96.9%, 30대의 79.9%, 30대의 84.4%가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였고, 50대는 58.3%가 차이를 인식하여 여러 연령 집단 중에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용기관에 따라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모두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부모의 92.5%가 두 기관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만 이용해본 부모는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또한 국공립 이외의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는 국공립 기관을 이용하거나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 비해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IV-1-73〉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 차이 유무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82.1	17.9	100.0	(918)
연령				
15-19세	100.0	0.0	100.0	(1)
20대	96.9	3.1	100.0	(32)
30대	79.9	20.1	100.0	(483)
40대	84.4	15.6	100.0	(390)
50대	58.3	41.7	100.0	(12)
χ^2 (df)	12.522(4)*			
이용기관				
어린이집만 다님	78.5	21.5	100.0	(507)
유치원만 다님	88.7	11.3	100.0	(203)
둘 다 다님	92.5	7.5	100.0	(40)
기관 미이용	80.0	20.0	100.0	(15)
χ^2 (df)	13.329(3)**			
이용기관2				
국공립	80.9	19.1	100.0	(267)
그 외 기관	82.6	17.4	100.0	(483)
기관 미이용	80.0	20.0	100.0	(15)
χ^2 (df)	0.380(2)			

* $p < .05$, ** $p < .01$,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보육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영유아부모를 대상으로 차이가 있는 항목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항목은 프로그램으로 전체의 48.8%가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교사의 전문성 23.3%, 시설환경 10.8%, 비용 8.0%, 운영시간 5.0%, 교사 대 아동 비율 3.7%의 순이었다. 맞벌이 부모는 외벌이 부모에 비해 교사의 전문성과 운영시간에서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모두 이용한 경험에 있는 부모는 프로그램에서 차이가 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67.6%). 유치원만 이용해본 부모는 교사의 전문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기관을 이용해보지 않은 부모가 교사의 전문성을 선택한 비율이 41.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IV-1-74〉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차이를 보이는 항목(1순위)

단위: %(명)

구분	프로그램	시설 환경	교사의 전문성	운영 시간	비용	교사 대 아동 비율	기타	계(수)	
전체	48.8	10.9	23.3	5.0	8.0	3.7	0.3	100.0	(754)
혼인상태									
미혼	40.0	0.0	20.0	0.0	40.0	0.0	0.0	100.0	(5)
기혼-맞벌이	50.0	12.2	19.3	7.4	7.1	3.7	0.3	100.0	(378)
기혼-외벌이	47.7	9.7	27.5	2.7	8.4	3.8	0.3	100.0	(371)
χ^2 (df)	22.814(12)*								
이용기관									
어린이집만 다님	48.7	10.8	19.3	6.8	9.8	4.3	0.3	100.0	(398)
유치원만 다님	48.9	8.3	30.0	3.3	6.7	2.2	0.6	100.0	(180)
둘 다 다님	67.6	10.8	2.7	5.4	5.4	8.1	0.0	100.0	(37)
기관 미이용	33.3	16.7	41.7	8.3	0.0	0.0	0.0	100.0	(12)
χ^2 (df)	29.214(18)*								

* $p < .05$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5)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할부처 이원화 체제

다음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로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를 통합하는 것에 대한 유치원·어린이집 이용경험이 있는 영유아 및 초등1학

년 부모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통합에 찬성하는 비율은 전체의 80.7%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IV-1-75〉유치원과 어린이집 관할 이원화 체제 통합 찬성 여부

단위: %(명)

구분	찬성	반대	계(수)
전체	80.7	19.3	100.0 (1,001)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2. 학계전문가 조사결과

가. 응답자 특성

학계전문가 응답자는 총 56명으로 여성이 85.7%로 대부분이며, 50대가 60.7%로 가장 많았다. 또한 유아교육전공 교수 51.8%(29명), 아동학 등 보육관련 전공 교수 48.2%(27명)로 비슷하며, 총 교수경력 평균은 약 18.7년이었다.

〈표 IV-2-1〉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전체		100.0	(56)
성별	남	14.3	(8)
	여	85.7	(48)
연령	30대	0	(0)
	40대	21.4	(12)
	50대	60.7	(34)
	60대	17.9	(10)
전공	유아교육	51.8	(29)
	보육	48.2	(27)
총 경력	대학교수	18.7년(8.03)	
	유치원	2.2년(4.9)	
	어린이집	0.8년(0.9)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2) 2018-2021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성과 평가

지난 4년(2018-2021년)간 유아교육과 보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향상 정도를 살펴본 결과, 유아교육 3.5점 및 보육 3.5점으로 나타나 두 분야의 질적 수준이 비슷한 수준에서 향상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2〉 지난 4년(2018-2021년)간 유아교육 및 보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향상 정도

단위: 점

구분	M(SD)
유아교육	3.5(.6)
보육	3.5(.6)

주: 매우 낮음 1점~매우 높음 5점으로 산출한 값임.
본 연구 조사결과임.

한편, 전반적인 질적 수준 향상 정도가 낮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 유아교육 전문가의 경우, 개정누리과정 운영의 이행 수준 및 교사교육 수준 편차, 낮은 사립 유치원 교사처우, 방과후 과정 교사 지원, 높은 교사 대 유아 비율 등을 지적하였다. 보육전문가는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선 미흡, 보육예산을 주로 국공립시설 확충과 누리과정 지원으로 사용하여 제4차 개정 표준보육과정과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과 장학 미흡, 낮은 교사처우,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등의 측면에서 질적 향상 수준이 낮다고 언급하였다.

〈표 IV-2-3〉 지난 4년간(2018-2021년)질적 수준 향상도가 낮다고 응답한 이유

단위: %(명)

구분	이유
유아교육	•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질적 편차 큼. • 교사교육기관(대학)간 편차로 교사교육의 질 담보가 어려움 • 지역별, 유아별 교육적 격차 여전함. • 교사 대 유아 비율 높음 •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임금 및 처우, 방과 후 과정 교사 지원, 교사 대 유아비율 • 방과 후 과정 교사 지원 • 사립유치원 관련 공공성의 발전이 미미한 수준임.

구분	이유
보육	• 보육예산이 주로 보육료지원과 국공립운영비 확충 및 지원에 사용되어 보육의 질향상을 위한 장학, 교육에 대한 투자 미흡 • 제4차 표준보육과정의 영아반 적용에 대한 교육 및 후속지원 부족 • 보육교사의 전문성은 양성체계의 한계로 크게 개선되지 못함.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민간어린이집의 교사의 낮은 임금, 근무시간, 복지 매우 미흡)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필요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또한 현 정부에서 추진한 유아교육 및 보육의 세부정책 이행 수준을 살펴본 결과, 아동수당 지원이 가장 높은 평정점수(4점 만점 기준, 평균 3.5점)를 받았다. 그 다음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3.2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안전(3.2점), 코로나19 대응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역(3.2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돌봄 기능 확대(3.1점) 순으로 평가되었다.

가장 성과가 높은 정책 1순위로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44.2%)가 현저히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과 운영(17.3%),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11.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유아 대상 사교육 억제 및 놀이와 쉽 중심 프로그램(2.2점) 및 격차 해소를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제고(2.4점)는 정책 이행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4〉 문재인 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별 이행 수준과 성과 우선순위

단위: %(명)

구분	이행수준	성과 우선순위		
	M(SD)	1순위	2순위	3순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3.2(0.9)	44.2 (23)	11.5(1)	9.6(5)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2.8(0.9)	11.5(6)	19.2 (10)	9.6(5)
취약계층 영유아의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확대	3.0(1.0)	7.7(4)	1.9(1)	11.5(6)
격차 해소를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제고	2.4 (0.8)	0.0(0)	3.8(2)	3.8(2)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및 운영	2.9(1.1)	17.3 (9)	15.4(8)	15.4 (8)
영유아 대상 사교육 억제 및 놀이와 쉽 중심 프로그램	2.2 (0.8)	0.0(0)	0.0(0)	0.0(0)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돌봄 기능 확대	3.1(0.7)	1.9(1)	9.6(5)	13.5(7)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안전	3.2 (0.8)	3.8(2)	15.4(8)	5.8(3)
아동 수당 지원	3.5 (0.7)	7.7(4)	19.2 (10)	21.2 (11)
코로나19 대응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역	3.2(0.7)	5.8(3)	3.8(2)	9.6(5)

주: 매우 낮은 1점~매우 높은 4점으로 산출한 값임.

본 연구 조사결과임.

3)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방향 및 추진 과제

가)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방향 설정에 고려할 사회변화

향후 5년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우리사회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1순위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회변화는 저출산으로 인한 취학 전 유아 수 감소(71.4%)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2순위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회변화로는 사회 양극화 및 지역 격차의 심화(26.8%)로 나타나, 유아교육 및 보육 전반에 관한 저출산의 영향력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5〉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의 방향 및 목표 설정 시 고려하여야 할 우리 사회의 변화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저출산으로 인한 취학 전 유아 수 감소	71.4(40)	12.5(7)
코로나19 감염병의 영향	0.0(0)	10.7(6)
기후·환경 변화	3.6(2)	0.0(0)
사회 양극화 및 지역 격차의 심화	8.9(5)	26.8(15)
글로벌화(사회경제문화의 세계화 및 다문화 추세)	1.8(1)	1.8(1)
지식정보사회의 가속화 및 과학기술의 첨단화(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	7.1(4)	14.3(8)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직업 및 인력수요의 변화	0.0(0)	0.0(0)
개개인의 개성, 가치관 및 생활방식의 다양화	3.6(2)	12.5(7)
가족형태의 변화(한부모의 증가 등)	0.0(0)	14.3(8)
맞벌이 가정의 증대	3.6(2)	7.1(4)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방향 및 목표 설정에 있어 추가로 고려해야 할 기타 우리사회의 변화에 관한 학계 전문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및 미래사회 포스트휴머니즘 시대 도래(인권, 평화 중시), 기후변화 등 사회변화에 대하여 준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MZ세대와 기성세대간의 차이를 고려한 정책, 특히 MZ 세대 교사와 부모, 원장간의 소통 등에 대한 우려와 대비를 언급하였다.

〈표 IV-2-6〉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방향 및 목표 설정에 고려해야 할 기타 우리사회의 변화

구분	내용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	• 사람과 사물, 공간의 초 연결 사회, 기계와 인간의 협업 구조 • 비대면 교육의 증가 또는 대면 교육 및 비대면 교육의 병행, - 온라인 교육 보육 수요 증대 및 온 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기후환경, 지속가능발전	• 재해 및 위험 환경의 노출 증가 • 에너지 다변화에 따른 그린스마트 유아교육 보육 환경 • 기후·환경 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 사회 추구
저출산고령사회	• 1인 및 소인수 가구의 증가, 고령 사회화, 저출산, 지역격차와 관련 있는 내용으로 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 만혼 및 고령 출산의 증가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 취약지역이 더 보육, 교육의 질, 접근성 등의 어려움
인간성 회복, 평화	• 미래사회 포스트휴머니즘 시대 도래와 인간성, 자연, 평화 등의 가치 반영 • 인권에 대한 인식
세대차이	• MZ세대로 불리는 세대간 격차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부모의 양육 가치관 및 양육태도의 변화, 양육 차이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나)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방향과 목표 설정에 고려해야 할 우선순위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 영유아 심신의 안녕과 행복을 1순위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나타났다(69.6%). 2순위로는 영유아의 요구/관점 존중 및 참여 강화가 높게 나타났으며(19.6%), 3순위로는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23.2%)가 높게 나타났다.

〈표 IV-2-7〉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의 방향 및 목표 설정 시 고려대상 우선순위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영유아 심신의 안녕과 행복	69.6(39)	8.9(5)	3.6(2)
모든 영유아의 출발점 평등 보장	12.5(7)	16.1(9)	3.6(2)
급변하는 사회변화(코로나19, 기후변화, 초저출산 등)에 대한 적응력 강화	3.6(2)	16.1(9)	23.2(13)
미래인재 양성(디지털기술 역량 강화 등)	0.0(0)	5.4(3)	5.4(3)
각종 차별없는(사회경제적 배경, 다문화, 특수장애 등) 포용과 공존	1.8(1)	12.5(7)	19.6(11)
영유아의 요구/관점 존중 및 참여 강화	7.1(4)	19.6(11)	14.3(8)
인종, 문화, 언어 등의 다양성 존중	1.8(1)	0.0(0)	3.6(2)
유아교육과 보육의 지속가능발전 추구	0.0(0)	14.3(8)	10.7(6)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부모의 자녀양육과 돌봄 지원 강화 (틈새없는 돌봄서비스 제공)	3.6(2)	7.2(4)	16.1(9)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향후 5년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방향 및 목표를 설정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유아교육 전문가의 경우,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 인식 및 역량 강화, 부모 및 교사의 역량 강화 등을 더욱 고려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보육전문가들은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재교육 강화 및 보육교사 배출 기관에 대한 정비(사이버대학 양성교육으로 인한 질적 수준 문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유아교육과 보육전공 전문가 모두 공통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표 IV-2-8〉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방향 및 목표 설정 관련 기타 고려사항

구분	내용
유아교육	• 유보 통합을 통한 유아교육 일원화 추구 • 세계시민으로서의 기본생활습관 형성 및 도덕성 함양, • 온라인, AI 교육 보육 수요 증대에 따른 사이버 안전(정보 선별 능력 및 안전 사이버 소통) 및 사이버 인성교육 • 유아교육기관과 가정,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활성화 • 책임감 있는 부모로서 바람직한 역할을 강화하는 부모역량 지원 • 유아교사의 자격 및 역량 강화, 교권 존중, 처우 개선 -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양성체계 및 교원자격 관리국의 일원화 • 사교육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 지침(최소한의 기준 마련, 누리과정을 적용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부모교육 등)
보육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일원화 - 교사 양성, 자격, 경력 등의 통합적 정책 수립과 질적 수준 확보 •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스마트 안심보육 •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해야 할 것과 연속성 • 교사들의 미래사회 역량 재교육 및 강화, 보육교사 배출 기관에 대한 정비, • 기관, 개인양육지원방안을 통합적으로 마련 • 영유아수당 및 아동수당 적극 상향조정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다) 영유아기부터 함양해야 할 역량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하여 영유아기부터 함양해야 할 역량에 대해 살펴본 결과, 1순위로는 정서감정 조절 능력(33.9%)과 신체건강(21.4%)가 높게 나왔고, 2순위로는 정서감정 조절 능력(26.8%)과 의사소통 능력(23.2%)이 높게 나왔고 3순위로는 문제해결력(17.9%)과 창의성(14.3%)이 높게 나타났다. 즉 정서감정 조절 능력을 영아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함양해야 하는 요소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표 IV-2-9〉 영유아기부터 함양해야 할 능력(역량, 기술 등)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창의성	14.3(8)	8.9(5)	14.3(8)
신체건강	21.4(12)	10.7(6)	3.6(2)
정서/감정 조절 능력	33.9(19)	26.8(15)	10.7(6)
타인 배려	5.4(3)	5.4(3)	5.4(3)
문제해결력	5.4(3)	14.3(8)	17.9(10)
의사소통 능력	3.6(2)	23.2(13)	14.3(8)
기본생활습관	3.6(2)	5.4(3)	8.9(5)
협력	3.6(2)	1.8(1)	10.7(6)
도덕성	7.1(4)	0(0)	1.8(1)
정보기술 활용 능력	0(0)	0(0)	1.8(1)
시민의식	1.8(1)	3.6(2)	10.7(6)
리더십	0(0)	0(0)	0(0)
봉사정신	0(0)	0(0)	0(0)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이외에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영유아기 함양 기타 능력으로는 회복탄력성, 인권 존중, 세계시민의식, 자기주도성, 놀이성, 예술적 소양,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의 폭넓은 방향, 온오프라인 의사표현 능력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라) 정책적으로 역점을 두어야 할 시기

향후 정부가 만 1세 미만~만 5세 영유아 시기 중 정책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어

야 하는 시기에 관한 응답 결과, 연령별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만 3~4세 시기(28.6%)에 가장 정책적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근소하게 높았다. 이어서 만 1세 미만(25.0%), 만 1-2세(23.22%) 및 만 5세(23.2%)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역점을 두어야 할 시기에 대한 이유에 대한 학계 전문가들의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영유아기의 모든 시기가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모두 중요하므로, 특정 연령대를 선택하여 집중하기보다는 모든 연령대를 고르게 중시하고 각 시기의 특성을 반영한 양질의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로 이해할 수 있다.

〈표 IV-2-10〉 향후 정부가 취학 전 영유아 시기 중 정책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시기

단위: %(명)

구분	비율(수)
만 1세 미만	25.0(14)
만 1-2세	23.2(13)
만 3-4세	28.6(16)
만 5세 (취학 직전 연령)	23.2(13)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다음으로 만 1세~만 5세 영유아의 시기 중 정책적으로 역점을 두어야 하는 구체적 이유는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만 1세 미만의 경우는 급속한 발달속도와 생애초기 애착과 관계형성, 만1-2세는 걷기로 이동이 가능하며, 실질적으로 영아 보육이용이 많은 시기, 만 3-4세는 집단생활의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교육과정 실행이 이루어짐, 만5세는 초등교육과의 연계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파악되었다.

〈표 IV-2-11〉 정부가 정책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시기에 대한 이유

구분	이유
만 1세 미만	- 만5세 미만의 모든 연령이 중요하나,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가장 취약한 연령 - 발달이 가장 급속히 이루어지고 특히 이 시기의 정서적 안정은 이후의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
	1세 미만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아이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부모라는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판단됨
	또한 출산을 저하 문제, 출생 후 부모 양육의 질이 평생 영향을 주기 때문임

구분	이유
	• 올바른 사회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기부터 부모 및 교사의 애정 어린 보살핌이 제공되어야 함. 미래사회는 기술력 향상으로 인해 대인관계의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회정서발달에 취약한 상황이 될 것. • 만 1세 미만의 경우 가능하면 어머니가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많은 경우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 많음. 육아휴직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요구됨
만 1-2세	• 기관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는 시점, 전 영역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교사의 역량과 전문성도 더 높아야 함 - 영아보육에 대한 대학교육이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고 이 연령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질적 수준도 보다 상승시켜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이기 때문임. 교사의 질적 점검이 요구됨 • 만1세 이후 자유롭게 이행이 가능해지면서 동시에 자율성이 발현되는 시기에 어른은 여러 제한을 두게 되는데, 오히려 잘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잠재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확장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임 •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많이 오는 최소연령집단임. 재원시간도 길어짐 - 즉, 어린이집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이며, 성장과 발달, 놀이 속 배움, 일상의 행복 등 모든 영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대도시의 경우,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의 경쟁률이 높아 입소하기 어려움
만 3-4세	• 만 3-4세: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유아들이 영아기를 지나 본격적으로 공동체에서 집단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영유아교육 및 보육의 영향력이 가장 많이 미칠 수 있는 시기임 - 대부분 교육기관 참여가 이루어져 가정에서 기관으로 영유아 발달에 대한 기관의 책임과 역할 비중이 커지는 시기임 • 어린이가 첫 학교에 다니는 만 3세 유아부터 개별화 교육과정, 맞춤형 교육 시스템 운영으로 유아의 최대한 성장을 이끌어 내야 함 • 영유아기의 중간지대이며 유아기 1~5세 전체를 연계해주는 시기임 • 이 시기 놀이행동이 점차 연합놀이, 협동놀이로 변화하면서 또래와의 적극적 상호작용 및 협력적 놀이행동이 활발해지므로 활성화되는 또래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정서적 역량이 잘 발달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만 3세부터 기본적인 생활습관 및 학습(배움) 경험이 이후 발달에 있어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일 뿐 아니라 발달적으로 적합한 시기임. • 실행기능 등 자기조절의 기초가 되는 전두엽의 발달이 활발한 시기임
만 5세 (취학 직전 연령)	• 놀이 발달 및 주도성, 협력, 창의성 발산 측면에서 만 5세 연령이 가장 큰 확대와 확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한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이러한 창의성, 협력, 주도적 놀이에 대한 참여가 매우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만 5세에게 놀이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유아학교의 관점에서 5세는 초등 직전의 학년에 해당되므로 1학년 준비학년 혹은 유치원 3 학년을 기본 학제(1-6-3-3)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아, 5세에 정책적으로 역점을 두어야 함 • 취학 전 유아기가 모두 중요하지만 만5세는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공교육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역점을 두어야 하는 시기라고 봄 - 만5세는 학령전기로 초등교육과의 연계가 중요함. 그리고 3~4세를 포함한 유

구분	이유
	아기는 습관 및 태도 형성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 - 다양성, 공평함, 도덕성 등에 대한 태도가 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필요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마)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영역의 우선순위 주제

향후 5년간(2022-2027년)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영역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정책주제 11가지 중 5개 우선순위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2-12>에 제시된 바와 같다. 1순위로는 56.4%가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 해소 및 체제 통합을 응답하여 가장 요구가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의 완성이 12.5%로 높았다. 한편 2순위와 3순위 응답을 모두 합하면 영유아교원의 수급, 근속 및 전문성 강화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통합 다음으로 요구가 높은 정책영역이었다.

<표 IV-2-12>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영역 주제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 완성	12.5(7)	12.5(7)	10.7(6)	7.1(4)	6.4(3)
만5세 무상의무교육	7.3(4)	8.9(5)	5.4(3)	0(0)	2.1(1)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 해소 및 체제 통합	56.4(31)	10.7(6)	3.6(2)	8.9(5)	0(0)
취약계층 유아와 가정 지원	3.6(2)	3.6(2)	10.7(6)	8.9(5)	4.3(2)
아동학대 예방	5.4(3)	5.4(3)	10.7(6)	3.6(2)	19.1(12)
틈새 없는 돌봄 제공	1.8(1)	5.4(3)	5.4(3)	8.9(5)	4.3(2)
영유아, 부모, 교사가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교육보육과정	0(0)	7.1(4)	3.6(2)	3.6(2)	0(0)
영유아교원의 수급, 근속 및 전문성 강화	8.9(5)	26.8(7)	26.8(15)	16.1(9)	8.5(4)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 및 부모역량 강화	1.8(1)	14.3(8)	17.8(6)	23.2(13)	19.1(12)
유아교육과 보육의 행재정 지원체계 강화	0(0)	3.6(2)	1.8(1)	8.9(5)	19.1(12)
정책수립, 실행 및 효과평가를 위한 연구와 데이터 수집 및 활용	3.6(2)	1.8(1)	3.6(2)	1.8(1)	17.0(8)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이외에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주제로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영역으로는 기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 정책 수립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유아교육 보육 정

책 수립, 실행, 평가, 전체 아동의 발달수준과 특성을 파악하고 요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아동 센세스, 그리고 지능정보기술(AI, ICBM) 활용, 무상보육과 교육으로 인한 영유아발달에 대한 지속적 효과 연구,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현장 실행 평가와 개선방안 모색,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민주적 공동체 실현, 유아교육과 보육의 행정부서 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바)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세부과제

다음으로 2022-2027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세부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반적으로 유보통합에 대한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만5세 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근거제시, 영유아 교원의 보수체계, 자격증 갱신 제도 도입, 영유아교원의 역할별(담임교사, 방과후,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등) 자격 기준 마련, 교권 존중 방안 및 법적 근거 마련, 부모 교육 의무화, 아동학대 예방 등에 대한 과제들이 다양하게 제안되었다.

〈표 IV-2-13〉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영역별 세부과제 제안

	구분	내용
1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 완성	• 전면적 무상교육과 보육 제공 • 3,4,5세 기본과정의 연령별 표준 교육비 산출 연구 • 공공형 유치원, 어린이집 확충 방안 • 재정 지원 기준 확립 및 추진방향 정비 • 영유아들이 다니는 기관의 질(quality) 평등 • 방과후 프로그램 무상 지원 • 무상교육을 위한 비용과 가치, 행재정의 변화 • 취학전 사교육의 최소화를 위한 학습제공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일반법 전환으로 안정적 누리과정 운
2	만5세 무상 의무교육	• 5세 의무교육 추진, 초등 진입 전 공교육 제공 • 의무교육 실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국가경쟁력을 위하여 만5세 유아들의 의무교과 초등과정과의 연계 강화 • 만5세 유아들의 학습자 준비도 진단 • 5세반 교육과정 편성 및 수업시수 기준안 • 5세반 기본과정 교사의 자격기준안 • 취학 준비 대상으로서의 만5세의 의무교육이 아닌 유아교육 연령에 대한 의무교육이 필요 • 다양성 존중의 의무교육 보완조치 구축1) 재정 지원 • 만 3-5세 의무교육 제도(법) 및 체제, 무상교육 비용 산출
3	유보 격차해소 및 체제 통합	• 유아교육과 보육의 담당부처 통합, 관련 법, 행재정 지원체계 통합 - 부처간 예산 누수 및 비효율적인 집행 예방

	구분	내용
		• 동일한 대상에 중복된 행정체제는 불필요함. 교육부로 일원화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체제를 정비할 필요있음 •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자격제도, 양성과정 기관, 체계 정비와 통합 • 유아교육 보육 지원금 격차 해소 • 유아교육과 보육의 평가체제 단일화 및 의무시행
4	취약계층 유아와 가정 지원	• 취약계층의 정의와 지원방안 도출 • 취약 지역, 저출산 지역의 기관 통폐합 운영 방안 •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영유아들의 돌봄 공백과 학습 격차 지원 •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의 다양화 방안 • 취약계층 영유아 학습과 발달을 위한 진단과 조기 개입 지원 시스템 개발 • 연소부모(미성년부모)의 양육 실태와 지원 방안 • 취약계층 유아의 다각적(심리적, 물리적 측면 등) 지원 방안 • 반편견교육 강화- 장애, 다문화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지원프로그램 강화 • 취약계층 유형별(보호필요한 유아, 장기 입원유아 등) 지원프로그램 다양화 • 장애아 통합교육 지원 강화, 발달지연, 경계성 유아 선별검사 및 지원 • 취약계층 영유아 가정 맞춤형 지원 체제 확립(영유아교사양성기관 재학 대학생들의 멘토링 체제 도입 방안: 현재 한국장학재단의 멘토링 제도는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시행 중임) • 저소득층 유아를 위한 통합교육프로그램 개발 • 한부모 가정을 위한 돌봄시스템 도입 • 취약계층 완전 무상교육비 지원 및 가정 돌봄을 위한 부모교육/ 놀잇감/ 사회시설 이용 바꾸쳐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 사회성 발달 지원
5	아동학대 예방	• 학대 방지 체제 구축(정서, 심리 등 안전 환경 법적 제도 강화) • 건강 안전 환경 마련(학대, 약물, 흡연 등으로 부터의 안전할 권리 누릴 환경 법적 제도 강화) • 대대적 아동권리 홍보, 체벌금지 • 실천 및 미실천 사례 중심의 소규모 교사 연수 • 아동학대 사례 분석 AI 상담시스템 구축 • 담당 영유아 수 및 근무시간 조정 • 기관학대발생처리과정에 대한 체계마련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교원(인성/전문역량 함양), 일반시민 대상 교육 • CCTV 부모 확인 절차 간소화
6	틈새 없는 돌봄 제공	• 아침돌봄, 방과후, 저녁돌봄, 야간연장보육 및 시간제보육 활성화와 내실화 • 틈새없는 돌봄에 관한 수요 조사 • 다양한 유형의 돌봄을 수행할 전문인력양성 체계 구축(양성과정 교육기관) • 틈새없는 돌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안정적인 재원마련, 사립 및 민간에도 교사지원 • 가정양육비 지원 현실화로 선택권 보장 • 신중년, 선배 시민의 육아 참여 지원 • 취약가정, 위기가족 육아지원 돌봄미 파견 • 단기: 재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돌봄 체제 지원 강화 • 장기: 신설 및 폐교활용을 통한 방과후 학교 신설로 영유아 및 초등학교 돌봄 기능 전환(돌봄전담교사 양성정책 병행)
7	영유아,	• 빅데이터 기반 개별 유아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구분	내용
	부모, 교사가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교육보육과정	• 영유아/부모/ 교사가 상호존중하고 지원하는 교육풍토 조성 및 동반 성장하는 놀이중심교육과정운영 운영 우수사례 발굴 • 공동체 중심 교육·보육과정 운영 • 창의·감성 기반 혁신 공간 구축 • 영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모니터링, 교사의 실천력 강화
8	영유아교원의 수급, 근속 및 전문성 강화	• 영유아 교권 존중 방안 및 법적 근거 마련, • 영유아교원 양성기관의 질 평가인증체제 확립, • 전문성 평가 시스템 개발과 적용 • 지역사회 기반 마을 교사제 도입 • 교사의 직업윤리와 원장의 리더쉽 • 임용고시 방식 변화 필요(현재의 임용체제에서 놀이중심 교사배출 어려움) • 보육교사 원격교육기관 자격증발부 폐지 및 역할 변화 • 영유아교원 역할별 자격 기준 마련(담임교사, 방과후,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등) • 보조교사 확대를 통해 영유아교원의 근무 시간 시 휴게시간 및 업무시간 보장 • 자격증 갱신 제도 도입 • 유아교사 양성기관의 교육 연한 4년 과정으로 단일화 • 1년제 보육교사양성과정 폐지 • 양성과정 인성 및 소양 역량 함양, 실습교육 강화 • 지역별 영유아교원 수급 방안 마련, 학기 중 교사이동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 교원의 근속 및 승급 현황 분석과 적용 방안 • 연차별 직무교육의 다양성(승급교육 이후의 직무교육에 있어 연차에 따른 전문성 강화 교육이 필요)- 맞춤형 보수교육 • 보수교육 및 승급교육 정책의 제고 • 생애 주기별 연수체제 구축(평생학습 체제 구축) • 영유아교원이 대학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예비유아교사의 현장 역량 강화 및 영유아교원의 전문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 교원 연수의 혁신 :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적용 • 평생학습자로서의 교사에 대한 연구 및 지원 • 유형별 교원 임금 격차 해소 (누리보조교사, 연장전담교사의 확대 지원 포함)
9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 및 부모역량 강화	• 공공적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 지위 규정 • 학부모의 교육 참여 역량 강화, 교육기관 참여 확대를 통한 소통 강화, 기관-가정 연계활동 강화 • 가정에서 영유아를 잘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 방안 • 가정연계 우수 사례 수집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정신건강 실태와 지원 방안 •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 예비부모교육 강화 • 자녀 연령에 맞는 단계별, 체계적 부모교육을 통한 부모역량 강화 • 지자체 중심의 맞춤형 부모지원기관 확충-부모교육과 지원 접근성 제고 • 0~2세 영아들의 부모양육지원확대를 위한 정책 • 부모자녀양육경력에 대한 가치 보상(군가산제와 유사함) • 권리 및 책임부모양육역량 강화 교육 의무이수제 도입 • 다양한 부모교육 역량 증진 프로그램(고등학생, 대학생, 예비부모, 부모(영유아 연령별) 연구 및 실행 • 직장 등을 통한 부모교육 필수/의무화 추진

	구분	내용
10	유아교육과 보육의 행재정 지원체계 강화	• 행재정 관리를 위한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 전담 행정요원 배치 및 예산지원 • 감염병상황이나 기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체교사 지원 • 미화원 등의 교사 이외 관련 인력 지원 필요
11	정책수립, 실행 및 효과평가를 위한 연구와 데이터 수집 및 활용	• 정책수립, 실행, 효과 평가 연구- 전문가 면담 • 영유아교육기관 관찰을 통한 데이터 수집 • 교사, 유아, 부모, 교사교육자 등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료수집 및 결과 분석(다양한 자료수집 방법 모색 필요) • 개정 누리과정 실행이 영유아들의 발달 및 학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연구 • 유아교육, 보육 실태조사 고도화 • 누리과정 예산 지원기관과 지원대상 영유아에 대한 건강 및 발달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 데이터화하여 기초연구와 정책수립의 자료로 활용 • 아동 패널처럼 어떠한 정책이나 사업 관련 변인에 대한 지속적 수집을 통해 효율성을 점검, 보완할 수 있는 틀 마련 • 유아의 건강과 웰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개발 • 보육평등 지표 마련 • 학회, 대학연구소 등 자료 활용한 연구 활성화
12	기 타	• 사회적 격차에 따른 영유아 발달적 격차에 대한 국가적 대응 • 영유아, 교사에 대한 다양한 차별적 사례들과 반편견 개별적, 기관적, 사회적 노력 • 주도적 바깥놀이와 신체적 자발성 향상을 위해- 실외(바깥)놀이의 활성화를 위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실외환경 현황, 질적 수준 평가 및 정책적 실제적 지원과 제언 • 영유아 실내외 놀이 예술 문화 공간 확충 • 정부지원 영유아 놀이 예술 문화 전문인력 배치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이외에도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관련하여 차기 정부에 다양한 건의 및 제안들이 제시되었다. 서비스와 방법론적 지원에 대한 정책고민에서 미래에 인간사회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 등이 더 반영되는 숙의를 통한 정책 필요, 의견 수렴 과정 및 방식 다양화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채널 마련, 예측가능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 필요, AI 기술 활용 유아교육 보육 온 오프라인 플랫폼 개발 및 보급, 큰 슬로건보다는 실제 영유아와 가정, 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격차 해소와 같은 실질적 정책 등에 대한 지원, 실증주의 연구와 주제 이외에도 포스트휴머니즘 등 미래 인간사회와 유아교육을 고민하는 새로운 주제 등의 학술연구 수행, 부모가 최소 일정 시기 동안은 어린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될 필요가 있으며, 유치원(幼稚園)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반적으로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3. 공무원 조사결과

가. 응답자 특성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시도교육청과 시도청 및 군청의 유아교육 및 보육 담당자의 특성은 아래 표와 같다. 총 28명(시도청 담당공무원 16명, 시도교육청 담당공무원 12명)이 응답하였다. 여성이 78.6%, 남성이 21.4%이며, 50대(71.4%)가 가장 많았다. 시도교육청 공무원은 91.7%가 유아교육 전공자였고, 시도청 공무원은 아동/사회복지 전공자와 기타 학과 전공자들이 비슷하게 분포하였다. 시도교육청 유아교육 담당공무원의 현 전문직 근무기간은 평균 7.9년, 유치원 근무기간 평균 26.5년 이었고, 시도청 보육 담당공무원의 행정직 근무기간은 평균 22.1년, 보육 관련 담당업무 기간은 1.8년으로 나타났다.

〈표 IV-3-1〉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구분		전체 (n=28)	구분	시도청 (n=16)		시도교육청 (n=12)	
성별	남	21.4(6)	전공	아동/사회복지	43.8(7)	유아교육	91.7(11)
	여	78.6(22)		아동학 기타 (행정학 등)	6.3(1) 50.0(8)	기타 (행정학 등)	8.3(1)
연령	30대	7.1(2)	경력	행정직	평균 22.1년	시도교육청 담당전문직	평균 7.9년
	40대	14.3(4)		보육 관련 담당업무	평균 1.8년	유치원	평균 26.5년
	50대	71.4(20)					
	60대	7.1(2)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나. 2018-2022 유아교육과 보육 기본계획 성과 평가

1) 지난 4년(2018-2021년)간 유아교육 성과평가

유아교육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4년(2018-2021년)간 유아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향상 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평균 3.9점으로 질적 수준이 높게 향상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3-2〉 지난 4년(2018-2021년)간 유아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향상 정도

단위: 점

구분	M(SD)
유아교육 질적 향상도	3.9(.7)

주: 매우 낮음 1점~매우 높음 5점으로 산출한 값임.
본 연구 조사결과임.

유아교육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2-2027)에서 추진해 온 세부 핵심과제의 실행수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한 부모 참여(4.3점)와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실행수준(4.3점)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반면,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3.2점)과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3.3점), 유치원평가 개선(3.3점) 과제에 대한 실행수준은 보통정도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실행수준 낮은 이유로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유치원의 급, 간식에 대한 규정 미흡(특히 방학중급간식에 대한 규정 미흡),보건교사 정원 미확보 등 보건,급식법 적용초기 방과후과정 확대를 시도교육청의 책임으로 전가함에 따라 공무원 증대(초등 온종일돌봄 등과 같이 시스템으로 돌봄 접근 필요, 방과후 예산 및 인력 활용에 대한 정부적 지원과 방향성이 전혀 없음)평가방법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교육감의 통제를 받도록 법 규정이 바뀌지 않아 자율과 자치적 측면에서 불일치 체계적인 유치원 평가 시스템의 어려움(병설, 사립 등)

〈표 IV-3-3〉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2-2027) 세부 핵심과제 실행수준

단위: 점

구분		M(SD)
유아교육 기회 확대	유아 무상교육 지속 확대	4.0(1.0)
	국공립유치원 이용율 증대	3.7(0.9)
	취약계층 유아 지원	4.0(1.0)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3.2(1.3)
유아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 운영	개정 누리과정의 안착화 및 질적 발전	3.5(0.8)
	교사 누리과정 운영 역량 강화 지원	3.4(0.7)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	3.3(1.0)
부모와 함께 유아의 건강한 발달지원	안심유치원 운영	3.5(0.8)
	돌봄 공백 해소	3.8(0.9)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한 참여	4.3(0.8)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도입	4.3(0.6)
	유치원 평가 개선	3.3(1.3)
	행정시스템 고도화	3.6(0.9)

주: 매우 낮음 1점~매우 높음 5점으로 산출한 값임.
본 연구 조사결과임.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추진과제 중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IV-3-4>와 같다.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1순위 과제로는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증대(41.7%)와 유아 무상교육 지속 확대(33.4%)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2순위까지는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를 많이 응답하였고, 3순위까지는 개정 누리과정의 안착화 및 질적 발전을 많이 응답하였다.

〈표 IV-3-4〉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우선순위 과제_유아교육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유아교육 기회 확대	유아 무상교육 지속 확대	33.3(4)	-	16.7(2)	25.0(3)	16.7(2)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증대	41.7(5)	16.7(2)	16.7(2)	-	8.3(1)
	취약계층 유아 지원	8.3(1)	8.3(1)	-	8.3(1)	8.3(1)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	8.3(1)	-	16.7(2)	16.7(2)
유아놀이중 심 개정 누리과정 운영	개정 누리과정의 안착화 및 질적 발전	-	16.7(2)	16.7(2)	-	-
	교사 누리과정 운영 역량 강화 지원	8.3(1)	-	25.0(3)	8.3(1)	8.3(1)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	8.3(1)	25.0(3)	8.3(1)	8.3(1)	8.3(1)
부모와 함께 유아의 건강한 발달지원	안심유치원 운영	-	-	-	-	-
	돌봄 공백 해소	-	-	8.3(1)	-	-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한 참여	-	-	-	-	8.3(1)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도입	-	8.3(1)	-	8.3(1)	8.3(1)
	유치원 평가 개선	-	16.7(2)	-	8.3(1)	-
	행정시스템 고도화	-	-	8.3(1)	16.7(2)	16.7(2)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지역별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난 5년간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 지원 및 공영형,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다양한 여러 정책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유아교육정책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지난 2020년 1월에 발병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 안착을 지원하는 원격교육 프로그램 개발, 놀이중심 교육과정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내실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왔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해당 소속기관에서는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교원연수 및 적응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학급당 영유아 수 하향 조정하는 등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들을 적용하여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V-3-5〉 시도교육청별 유아교육정책 우수사례 및 현안

항목	소속	정책	세부 내용
지난 5년간 가장 크게 발전/향상된 대표적 정책	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공공성확보	• 공영형 유치원 운영 및 에듀파인 안착, 입학시스템 구축 • 저소득층, 특수교육 무상교육지원 확대 공립 유치원 확대 및 매입형 유치원 추진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시스템 선도적 도입 지원	•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 초기년도인 2019년에 사립유치원 전체 중 75% 이상 시스템 운영 참여
	부산시교육청	지속가능환경교육 (아기교래를 살려주세요!)	• 전 유치원 환경교육 실시, 모든 행사 및 협의회에 1회용 사용 없애기 실천 중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	• 방과후과정 희망유아 전원 수용 • 방과후과정 담당자를 교육공무직으로 전환 및 배치 • 외부강사 활용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공립 주2회, 사립 주3회 이내 운영 • 방학 중 방과후과정 직영급식 실시 • 방과후과정 시설환경개선 지속 지원 • 학교지원센터에서 소규모 유치원 방과후과정 업무 지원: 간식 구입, 특성화강사 인건비 지출 등
시도교육청별 유아교육정책 우수사례	서울시교육청	코로나시대 원격수업 안착	• 원격교육 프로그램개발, 원격수업자료 200여종, 과학활동 동영상자료 제작배포 • 집콕유치원 운영 코로나시기 놀이중심교육과정 적용운영 시범운영 및 일반화
	경기도교육청	코로나19 시기 교육과정 운영 안착 지원	• 놀이중심교육 실행력 지원을 위한 자료개발 및 연수 지원 • 2017~2020 놀이이해자료 개발, 놀이부, 놀이콘서트, 놀이컨설팅 진행 • 원격수업 지원: 온라인플랫폼 '놀이온' 사이트 구축 운영 활성화
	부산시교육청	책 읽어주는 학부모, 책으로 자라는 유아	• 전 유치원 학부모 책 읽어주기 실천, 유아들이 책을 좋아하게 됨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자연친화적 유치원 놀이환경조성 및 제주유아체험 교육원 추진	• 유아의 놀 권리 보장 및 행복감 증진을 통한 유아 전인적 발달 지원 • 정형화, 획일화된 유치원 놀이터 개선 및 창의적인 놀이 공간 조성 • 유아·놀이중심 누리과정 적용 및 교구·설비 기준 개정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 유치원 바깥놀이장 설비 필수 기준을 우선적으로 개선 • 놀이기구 위주가 아닌 유아 스스로 놀이를 결정하고 다양한 놀이형태가 가능한 공간 조성

항목	소속	정책	세부 내용
			• 교육과정 내 1일 1시간이상 바깥놀이를 위한 놀이환경 조성 • 놀이환경 조성 자문과 대안 제시를 위한 도교육청 현장지원팀 운영 • 제주 자연친화적인 (가칭)제주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
시도교육청별 가장 개선 시급한 유아교육 현안	서울시교육청	•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교원연수 및 적응능력 향상 • 학급별 인원수 감축	
	경기도교육청	• 학급당 유아수 하향 조정 • 소규모 유치원(공립 병설) 통합	
	부산시교육청	• 방학중 종일반 운영에 대한 교사 지원 • 공립유치원 확충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급당 유아수 감축 •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위한 초등학교 급간식, 보건, 안전, 행정업무지원 체계 구축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2) 지난 4년(2018-2021년)간 보육 성과평가

보육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4년(2018-2021년)간 보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향상 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평균 3.9점으로 질적 수준이 높게 향상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3-6〉 지난 4년(2018-2021년)간 보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향상 정도

단위: 점

구분	M(SD)
보육 질적 향상도	3.9(.3)

주: 매우 낮음 1점~매우 높음 5점으로 산출한 값임., 본 연구 조사결과임.

보육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제3차 보육 중장기 발전계획(2018-2022)에서 추진해 온 세부 핵심과제의 실행수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목표의 세부과제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증대(3.9점),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3.9점), 상시적 품질 관리 강화(3.9점)에 대한 실행수준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반면,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2.8점)과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지원(3.1점) 과제에 대한 실행수준은 보통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실행수준을 낮게 평가한 공무원의 경우, 그 이유로는 보육료와 누리과정비 지원

의 경우 현실 비용대비 낮음, 현장 필요수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며, 교사 적정처우 보장은 민간과 가장 어린이집 교사는 최저임금을 지급받아 열악하기 때문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부모 양육역량 지원의 경우, 부모참여가 미흡함을 낮게 평가한 이유로 응답하였다.

〈표 IV-3-7〉 제3차 보육 중장기 발전계획(2018-2022) 세부 핵심과제 실행수준

단위: 점

구분		M(SD)
보육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증대	3.9(0.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강화	3.8(0.4)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3.5(0.5)
보육체계 개편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	3.9(0.6)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3.4(1.0)
	보육과정 개편	3.7(0.9)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3.3(0.8)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2.8(0.9)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3.6(0.7)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3.9(0.7)
부모 양육 지원 확대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지원	3.1(0.7)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3.6(0.5)
	취약보육 지원 개선	3.4(0.5)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제3차 보육 중장기 발전계획(2018-2022)의 세부 추진과제 중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1순위 과제로는 취약보육 지원 개선(18.8%),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증대(12.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강화(12.5%),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12.5%), 을 많이 응답했다. 2순위와 3순위까지는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37.5%)를 많이 응답하였고, 4순위까지는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많이 응답하였다.

〈표 IV-3-8〉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우선순위 과제_보육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보육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증대	12.5(2)	18.8(3)	6.3(1)	6.3(1)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강화	12.5(2)	12.5(2)	-	-	18.8(3)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6.3(1)	-	6.3(1)	6.3(1)	-
보육체계 개편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	12.5(2)	6.3(1)	-	6.3(1)	12.5(2)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12.5(2)	-	12.5(2)	12.5(2)	12.5(2)
	보육과정 개편	6.3(1)	-	6.3(1)	-	-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6.3(1)	18.8(3)	6.3(1)	25.0(4)	12.5(2)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12.5(2)	37.5(6)	18.8(3)	12.5(2)	-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	-	12.5(2)	6.3(1)	12.5(2)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	-	12.5(2)	-	12.5(2)
부모 양육 지원 확대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지원	-	6.3(1)	12.5(2)	6.3(1)	12.5(2)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	-	-	12.5(2)	-
	취약보육 지원 개선	18.8(3)	-	-	6.3(1)	6.3(1)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전국 권역별 시도청 보육담당 부서에서 시행된 정책사업을 살펴보면, 차액보육료 지급,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등 민간보육시설 교사의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재정·행정적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상주시청에서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만3-5세 유아 부모에게 부모부담금 61~79천원을 지원해줌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취약보육계층 특별활동비 지원등의 사업이 시행되었다. 이외에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겪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감소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농어촌 보육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현안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표 IV-3-9〉 지역별 시도청/군청 보육정책 우수사례 및 현안

항목	소속	정책	세부 내용
지난 4년간 가장 크게 발전/향상된 대표적 정책	서울시청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	• 현장의 1순위 요구사항을 시범사업화함.
	경기도청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 도비 자체사업으로 월 150 ~310천원 추가 지원
	강원도청	보육지원체계 개편	• 어린이집 출결시스템, 보육과정 개선, 보육

항목	소속	정책	세부 내용
			교사 근무체계 개선 등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대폭 개선으로 실질적인 어린이집 투명성 증대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기여
	충북도청	시군 육아종합지원 센터 설치운영 확대	• 시, 군간 질 높은 보육서비스 형평성 제고, 양육부담 경감 등
	세종시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 16년대비 72개소 증가 • 공보육 이용률 8.7% 증가
	부산시청	차액보육료 지급	•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울산시청	부모부담 보육료 차액지원	• 민간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차액 전액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민간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도모
	경북도청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 장난감 및 교재교구 대여 사업으로 현재 도 내 22개소가 운영, 22년 설치 3개소(경주, 구미, 예천), 추가 2개소(경주, 구미)가 운영 예정으로 매년 확대 •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아이행복도우미 지원사업 (상주시청)	• 특별한 자격없이 채용가능한 아이행복도우미를 어린이집에서 활용함으로써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 어린이집 교사들의 잔업(청소, 조리 도움, 등하차 도움 등) 업무 부담 경감에 도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부모 만족도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안심 보육환경 조성과 종사자 처우개선에 효과적임. 장기임차 전환사업, 하나금융그룹 민관협력 국공립 지원 공모사업, 금융산업 공익재단 공모사업 등 활발한 연계사업 추진으로 사업비용 절감을 도모함
	전남도청	인건비 지원시설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확충
시도청별 보육정책 우수사례	서울시청	국공립 확충	• 타시도 평균 3배 이상
	경기도청	취약보육 지원사업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추진
	강원도청	어린이집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시설당 1명 50만원 지원)	• 조리원, 운전원, 사무보조 등 보육교사 외 어린이집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의 운영난 해소
	충북도청	아이행복도우미 지원사업, 읍면동법인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	•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보장 및 아동학대 예방 • 농촌 소재 사회복지복합인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

항목	소속	정책	세부 내용
	세종시청	전체어린이집(영유아, 교직원) 안전공제회 가입 지원	
	부산시청	대체교사(시간제) 지원	•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지원 및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대책으로 대체교사(시간제) 지원
	울산시청	보육재난지원금(총3회) 지원(만0~5세 아동 1인 1회 10만원)	• 코로나19로 어린이집의 잦은 휴원 등에 따른 부모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재난지원금 3회 지원('20년 1회, '21년 2회)
	경북도청	아이행복도우미 운영지원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업무부담 경감과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아이행복도우미를 선발·배치하였음 • 도시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시로 17년 하반기부터 아이행복일자리확대 플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
	전남도청	특별활동비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기타교직원 인건비 지원	• 취약보육계층 월 5만원 특별활동비 지원, 조리원이나 운전원 인건비 월 약60만원 지원
시도청별 가장 개선 시급한 보육 현안	서울시청	• 민가정 교사 최저임금 지급을 국공립교사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 보육교사의 휴가 등 처우 개선	
	경기도청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현실화 (정부에서 적절한 누리과정비 지원 필요) • 공보육 실현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강원도청	• 농어촌 지역 영유아감소에 따른 소규모 어린이집 폐원위기 대책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증대를 위한 공공보육 인프라 확보	
	충북도청	• 15년도 설치되어 현재 노후화된 CCTV 지원 필요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진단결과 문제아동 및 해당부모 컨설팅 추진	
	세종시청	• 도시기반 확충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보육정책 개선, 정비 • 공공보육품질 개선/지역별 인프라 격차 해소 등	
	부산시청	• 누리과정(3-5세) 교육체계 안정화 • 보육교사 처우개선(영아반 교사대 아동비율 1:3-)>1:2)	
	울산시청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전국 평균 미달) • 부모 돌봄지원 강화(취약보육, 시간제보육 등 확대)	
	경북도청	• 농어촌 보육환경개선 및 활성화 •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감소로 어린이집 운영 애로(특히 사회복지법인)	
	전남도청	• 어린이집 경영난 악화에 따른 보육 질 저하에 대한 대책 •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시설측면) 열악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다.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방향 및 추진 과제

1) 향후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 방향, 목표 수립시 고려해야 할 사회적 변화

향후 5년간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 방향 설정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회적 변화에 대해 공무원들은 89.3%가 저출산으로 인한 취학 전 유아 수 감소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시도교육청 및 시도청/군청 담당 공무원 모두 공통적으로 응답한 결과로서, 현재 국내에서 직면한 심각한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인구 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실증적인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순위로는 사회양극화와 지역격차 심화(21.8%)가 응답되었다.

〈표 IV-3-10〉 향후 유아교육 방향 및 목표 설정 시 고려하여야 할 우리사회의 변화요소

단위: %(명)

구분	전체		시도청		시도교육청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저출산으로 인한 취학 전 유아 수 감소	89.3(25)	3.6(1)	93.8(15)	-	83.3(10)	8.3(1)
코로나19 감염병의 영향	-	3.6(1)	-	-	-	8.3(1)
기후·환경 변화	3.6(1)	-	-	-	8.3(1)	-
사회 양극화 및 지역 격차의 심화	-	21.4(8)	-	25.0(4)	-	16.7(2)
글로벌화	-	17.9(5)	-	25.0(4)	-	8.3(1)
지식정보사회의 가속화 및 과학기술의 첨단화	3.6(1)	7.1(2)	6.3(1)	-	-	16.7(2)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직업 및 인력수요 변화	-	3.6(1)	-	6.3(1)	-	-
개개인의 개성, 가치관 및 생활방식의 다양화	3.6(1)	7.1(2)	-	-	8.3(1)	16.7(2)
가족형태의 변화	-	17.9(5)	-	31.3(5)	-	-
맞벌이 가정의 증대	-	17.9(5)	-	12.5(2)	-	25.0(3)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이외에도 다문화 유아 포괄, 불안정한 심리 정서 치료 요구 증가, 농어촌 인구 고령화 및 지역소멸 위기에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보육시설 재정지원 방식을 통한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및 유보통합에 관한 검토가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IV-3-11〉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방향 및 목표 설정에 고려해야 할 기타 사회변화

구분	내용
시도청	• 농어촌지역 영유아 감소, 출산률 저하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대응 • 1인 세대 증가에 따른 자살률 증가 • 100세 시대에 따른 노인 취업 및 다양한 노후 프로그램 다양화 등 • 부모의 니즈 변화
시도교육청	• 다문화 유아들에 대한 정책이 시급함 • 영유아의 불안정한 심리 정서 치료 요구 증대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2) 향후 정책 방향 및 목표 설정 시 고려해야할 우선순위

향후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의 방향과 목표 설정시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해 공무원들은 유아 심신의 안녕(32.1%),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25.0)를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2순위까지의 응답을 합하면 부모의 자녀양육, 돌봄 지원 강화와 각종 차별없는 포용과 공존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미래인재 양성과 다양성 존중 측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교육 담당공무원과 보육 담당공무원 의견 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유아교육 담당공무원은 유아 심신의 안녕(50.6%)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보육 담당공무원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31.5%)와 부모의 자녀양육, 돌봄 지원 강화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 IV-3-12〉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의 방향 및 목표 설정 시 고려대상 우선순위

단위: %(명)

구분	전체		
	1순위	2순위	3순위
유아 심신의 안녕과 행복	32.1(9)	10.7(3)	3.6(1(3))
모든 유아의 출발점 평등 보장	14.3(4)	10.7(3)	10.8(2)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	25.0(7)	28.6(8)	7.1(2)
미래인재 양성	-	-	3.6(1)
각종 차별없는 포용과 공존	3.6(1)	25.0(7)	17.9(5)
유아의 요구/관점 존중 및 참여 강화	3.6(1)	3.6(1)	14.3(4)
다양성 존중	-	-	3.6(1)
지속가능발전 추구	7.1(2)	3.6(1)	21.4(6)
부모의 자녀양육과 돌봄 지원 강화	14.3(4)	17.9(5)	17.9(5)

구분	시도교육청			시도청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유아 심신의 안녕(well-being)/행복	50.0(6)	8.3(1)	-	18.9(3)	12.5(2)	6.3(1)
모든 유아의 출발점 평등 보장	16.7(2)	16.7(2)	16.7(2)	12.5(2)	6.3(1)	6.3(1)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	16.7(2)	25.0(3)	16.7(2)	31.3(5)	31.3(5)	-
미래인재 양성	-	-	8.3(1)	-	-	-
각종 차별없는 포용과 공존	-	41.7(5)	8.3(1)	6.3(1)	12.5(2)	25.0(4)
유아의 요구/관점 존중 및 참여 강화	-	-	8.3(1)	6.3(1)	6.3(1)	18.8(3)
다양성 존중	-	-	-	-	-	6.3(1)
지속가능발전 추구	8.3(1)	8.3(1)	25.0(3)	6.3(1)	-	18.8(3)
부모의 자녀양육과 돌봄 지원 강화	8.3(1)	-	16.7(2)	18.8(3)	31.3(5)	18.8(3)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기타 고려해야할 사항으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유아의 정서발달 지원을 대표적 예로 들 수 있으며,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보육서비스 차별적 요인 해소, 방과 후 과정(돌봄)의 공백 해소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 학급당 적정 유아 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이 조사되었다. 또한 시도청과 교육청 모두 이원화체제의 통합을 언급하였다.

3) 유아기부터 함양해야 할 능력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유아기부터 함양해야 할 능력에 관한 설문 결과, 신체건강(32.1%)을 가장 우선적으로 함양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2순위 응답까지 합하면 그 다음으로 정서/감정 조절 능력,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보기술 활용 능력과 리더십 등 도래하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능력은 유아기에 함양해야 할 능력으로 별로 인식되지 않았다

〈표 IV-3-14〉 미래사회 대비 유아기부터 함양해야 할 능력(역량, 기술 등)

단위: %(명)

구분	전체			시도청/군청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창의성	3.6(1)	25.0(7)	14.3(4)	6.3(1)	25.0(3)	18.8(3)	-	25.0(3)	8.3(1)
신체건강	32.1(9)	3.6(1)	3.6(1)	25.0(4)	6.3(1)	-	41.7(5)	-	8.3(1)
정서/감정 조절 능력	14.3(4)	17.9(5)	10.7(3)	12.5(2)	18.8(3)	12.5(2)	16.7(2)	16.7(2)	8.3(1)
타인 배려	10.7(3)	7.1(2)	17.9(5)	18.8(3)	12.5(2)	18.8(3)	-	-	16.7(2)
문제해결력	-	-	17.9(5)	-	-	18.8(3)	-	-	16.7(2)
의사소통 능력	3.6(1)	25.0(7)	7.1(2)	6.3(1)	12.5(2)	6.3(1)	-	41.7(5)	8.3(1)
기본생활습관	14.3(4)	7.1(2)	10.7(3)	12.5(2)	6.3(1)	-	16.7(2)	8.3(1)	25.0(3)
협력	-	10.7(3)	7.1(2)	-	18.8(3)	6.3(1)	-	-	8.3(1)
도덕성	7.1(2)	-	3.6(1)	12.5(2)	-	6.3(1)	-	-	-
정보기술 활용 능력	-	-	-	-	-	-	-	-	-
시민의식	14.3(4)	3.6(1)	3.6(1)	6.3(1)	-	6.3(1)	25.0(3)	8.3(1)	-
리더십	-	-	-	-	-	-	-	-	-
봉사정신	-	-	3.6(1)	-	-	6.3(1)	-	-	-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이밖에 영유아기에 함양할 필요성이 있는 기타 능력으로는 생명존중, 자율성 및 자신의 의도를 바르게 표현하는 말하기 능력이 제시되었다.

4) 정책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시기

미래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정부가 취학 전 영유아 시기 중 정책적으로 역점을 두어야 할 시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만 3-4세 시기가 57.1%로 가장 많이 나왔다. 이는 담당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유아교육 담당공무원은 만3-4세 다음으로 만 5세를, 보육 담당공무원은 만1세 미만을 선택하였다.

〈표 IV-3-15〉 정책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시기

단위: %(명)

구분	전체	시도청	시도교육청
만 1세 미만	21.4(6)	25.0(4)	16.7(2)
만 1-2세	7.1(2)	6.3(1)	8.3(1)
만 3-4세	57.1(16)	62.5(10)	50.0(6)
만 5세 (취학 직전 연령)	14.3(4)	6.3(1)	25.0(3)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미래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정부가 취학 전 영유아 시기 중 정책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시기별 구체적 이유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표 IV-3-16〉 정책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시기 선정 이유

구분	이유
만 1세 미만	• 만1세 미만에 가장 급속히 성장하는 시기이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및 삶의 질 고려가 필요.
만 1-2세	• 0세~3세까지 온전히 부모자녀가 함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면 분리에 의한 향후 온 일생을 거쳐 발생될 정서적 문제를 예방할수 있고 영유아의 온전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군단위 농촌지역에서는 문화생활, 다양한 체험이 부족한 환경, 영아를 위한 시설은 거의 없으므로 영아를 위한 다양한 정책 필요
만 3-4세	• 만3~4세는 영아기를 벗어나 교육 및 보육기관에 다니기 시작하는 연령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적인 지원과 개입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시기임. • 구체적인 의사소통 및 사회규범에 대한 인지가 가능하며 신체적 활동성 및 정서적 발달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 • 인격 형성 및 사회화의 시작으로 보육 및 교육의 중요성이 가장 높은 시기임. • 대화가능, 자기의견 표시 가능시기로 모든 역량 및 인격 등 자질의 기초단계라 생각 • 3세 이전에는 보육이 중심이지만 3세부터 누리과정이 운영되어 교육이 시작되는 시기
만 5세	• 초등학교 입학전 기본생활 습관, 공동체 의식 확립, 창의력 향상을 위한 유아교육 중점 지원 필요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5)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영역 우선순위

향후 2022-2027 유아교육 및 보육 중장기 발전을 위해 반드시 포함해야 할 정책영역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 완성(35.7%)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 해소 및 체제 통합(21.4%), 만5세 무상의무교육(17.9%)이 높게 나타났다. 3순위까지의 응답을 합하면 그 다음으로 틈새 없는 돌봄 제공과 영유아교원의 수급, 근속 및 전문성 강화가 높게 나타났다.

〈표 IV-3-17〉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주제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 완성	35.7(10)	3.6(1)	-	4.0(1)	3.6(1)
만5세 무상의무교육	17.9(5)	3.6(1)	3.6(1)	-	10.7(3)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 해소 및 체제 통합	21.4(6)	17.9(5)	3.6(1)	-	3.6(1)
취약계층 유아와 가정 지원	3.6(1)	7.1(2)	7.1(2)	10.7(3)	3.6(1)
아동학대 예방	3.6(1)	-	-	21.4(6)	7.1(2)
틈새 없는 돌봄 제공	7.1(2)	32.1(9)	14.3(4)	21.4(6)	7.1(2)
영유아, 부모, 교사가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교육보육과정	-	7.1(2)	7.1(2)	3.6(1)	-
영유아교원의 수급, 근속 및 전문성 강화	3.6(1)	10.7(3)	25.0(7)	21.4(6)	14.3(4)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 및 부모역량 강화	7.1(2)	7.1(2)	25.0(7)	7.1(2)	10.7(3)
유아교육과 보육의 행재정 지원체계 강화	-	7.1(2)	14.3(4)	7.1(2)	35.7(10)
정책수립, 실행 및 효과평가를 위한 연구와 데이터 수집 및 활용	-	3.6(1)	-	3.6(1)	-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새로이 추가할 필요가 있는 정책주제로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V-3-18〉 새로이 추가할 필요가 있는 정책주제영역

내용	
시도청	• 공보육 어린이집 확대 • 농어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 폐원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 어린이집 재정지원 방식 개편
시도교육청	• 환경교육 • 연령별 학급별 적정 유아수에 대한 법적 근거 • 보건교사, 영양교사의 유치원 업무 겸임 지정 • 유아학교 명칭 변경 • 초중등교육법 수준의 유아교육법 세밀화 • 만 3~5세 의무교육 • 사립유치원 법인화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6)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세부과제

시도청과 시도교육청 공무원들의 세부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은 다음 표와 같다. 시도청의 경우, 돌봄에 대한 세부 정책과제 의견이 많았으며(돌봄 통합 체제 구축,

시간제보육, 대체교사지원, 연장/야간보육 강화, 시설 및 가정양육 선택권 보장, 가정양육수당 현실화(영아수당)로 양육자의 보육 선택권 강화), 시도교육청 유아교육 담당공무원 또한 24시간 돌봄 및 시간제로 탄력적 운영, 지자체 돌봄 서비스 확대 방안, 돌봄 이용에 필요한 바우처 지원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 유보 행재정 지원체계(예: 사립유치원 나이스 시스템,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 일원화 등)에 대한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표 IV-3-19〉 향후 정책영역별 포함되어야 할 주요 세부 과제

	구분	시도청	시도교육청
1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 완성	•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육 지원 일치 개선	• 사립유치원 완전 무상교육 실시 •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 • 안정적 재원확보
2	만5세 무상 의무교육	•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 정비 • 보육료 지원 강화	• 유초연계 방안 • 만5세 무상의무교육 실행기관 확보 및 담당기관 인적·물적 환경 조성 • 만5세아를 위한 교원확충
3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 해소 및 체제 통합	•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등한 재정지원 • 교사의 동등한 대우 • 어린이집 누리과정교사 역량 강화	• 유보통합의 효율적 추진 • 시도차원의 통합시스템 도입 • 교사양성체제 통합 •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별 만3~4세 입학 대상 분리 •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통합 정비
4	취약계층 유아와 가정 지원	• 한부모 가정 지원 • 이주노동자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지원 정책 • 장애아 교육	• 다문화 유아 가정 지원 • 조손가정 유아 지원
5	아동학대 예방	• 보육시설 내 CCTV 사각지대 해소	•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강화
6	틈새 없는 돌봄 제공	• 돌봄 통합 체계 구축 • 시간제보육, 대체교사지원, 연장/야간보육 강화 • 시설 및 가정양육 선택권 보장 - 가정양육수당 현실화(영아수당)로 양육자의 보육 선택권 강화 • 0세반 아동비율 감소 (3→2명) • 취약보육 활성화 대책 마련 • 맞벌이 부부를 위한 특별대책 마련 • 야간 보육 및 주말 보육	• 1일 돌봄 제공(시간별 탄력적 운영) • 24시간 돌봄 제공 • 지자체 돌봄 서비스 확대 방안 • 돌봄 이용에 필요한 바우처 지원 방안
7	영유아, 부모, 교사가 함께 만들고	• 아동학대, 안전관련 • 열린어린이집 운영	

	구분	시도청	시도교육청
	운영하는 교육보육과정	•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님 참여 • 지역사회 참여 통한 다함께 돌봄	
8	영유아교원의 수급, 근속 및 전문성 강화	•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지원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 • 근무환경(52시간) 변화에 따른 대체교사 인력 활용 • 기본/보수 교육 등 관리체계화 • 근속에 따른 수당체계 마련 • 교사 지속적 교육 통한 전문성 제고	• 학급당 1명 이상의 담임교사 배치 지원 • 교사 대 유아의 비율 감소 • 돌봄시스템 개선
9	부모 자녀양육 지원 및 부모역량 강화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 부모교육	• 결혼, 출산 전 예비부모교육 강화 •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제이용 활성화 • 손자녀 양육 조부모 대상 교육 및 인건비 지원 방안
10	유아교육과 보육의 행정 지원체계 강화	• 유보통합 • 누리과정 운영 단일화	• 시도교육청 유아교육과 설치 • 초등 보건교사, 영양교사의 유치원 업무 겸임 지정 방안 • 교육청 세입세출 예산 중 일정비율 을 유아교육 예산으로 할당하는 기 준 마련 • 사립유치원 법인화 • 사립유치원 나이스시스템 구축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4. 조사결과 비교분석

본 절55에서는 향후 유아교육정책의 방향성 및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과 제에 대한 일반국민, 영유아부모, 학계전문가, 공무원의 인식을 비교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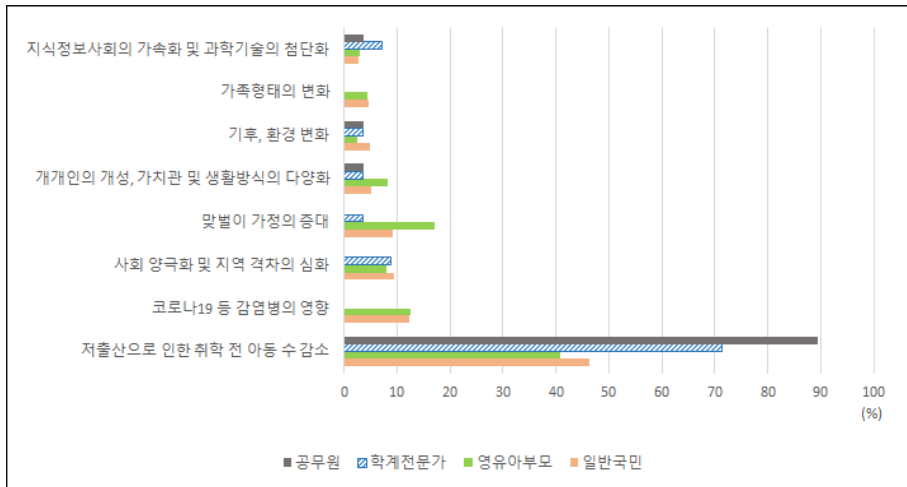
가. 향후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방향성

1) 정책 방향 및 목표 설정에 고려하여야 할 사회변화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야 할 우리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공무원들과 학계 전문가, 일반국민과 영유아부모 모두 취학전 아동 수 감소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화로 응답하여 저출산의 영향력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계 전문가와 일반국민

들은 사회 양극화와 지역 격차를, 공무원들은 지식정보화사회의 가속화를 다음 순으로 고려할 사회변화로 응답하였다. 일반국민과 영유아부모들은 코로나의 영향을 높게 응답하였고, 영유아부모들은 상대적으로 맞벌이 가정의 증대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화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IV-4-1]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방향 설정 시 고려할 사회 변화(1순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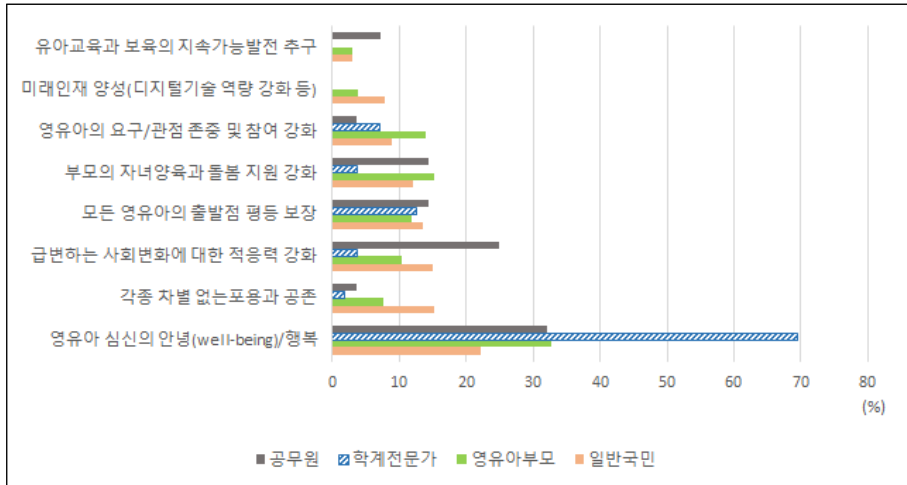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2) 정책 방향 및 목표 설정 시 우선적 고려 사항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1순위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모든 집단이 (특히, 학계전문가들은 70% 가까이) 영유아 심신의 안녕/행복을 응답하였다.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자녀양육과 돌봄 지원 강화,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 등에 대한 응답도 많아 집단간에 인식하는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4-2]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방향 설정 시 고려사항(1순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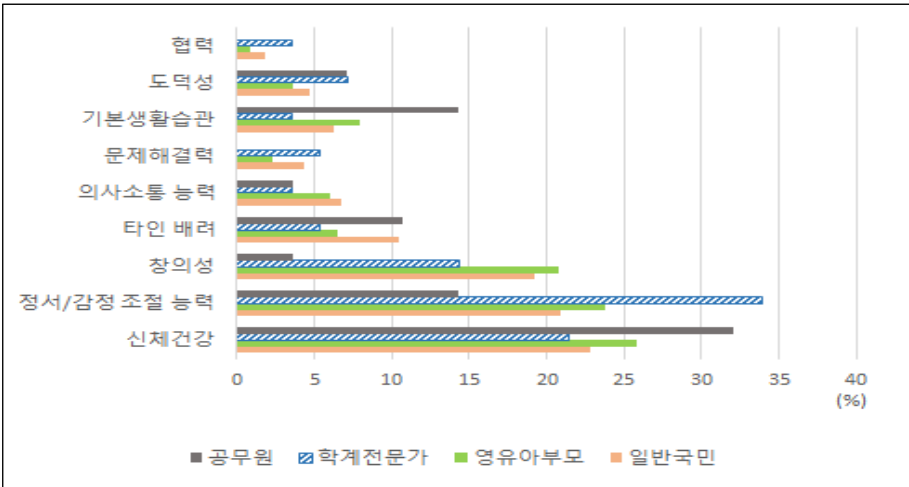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3) 영유아기에 우선적으로 함양해야 할 능력과 기술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영유아기부터 함양해야 하는 역량과 기술에 대해서도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다. 공무원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신체건강과 기본생활습관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였고, 학계전문가들은 정서·감정 조절능력을, 영유아부모와 일반국민들은 정서감정조절 능력과 창의성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모든 집단에서 협력은 매우 낮게 나타나, 그간의 영유아 인성교육 강조 정책 등을 고려할 때 협력의 가치에 대한 낮은 인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IV-4-3] 영유아기에 함양해야 할 역량 및 기술(1순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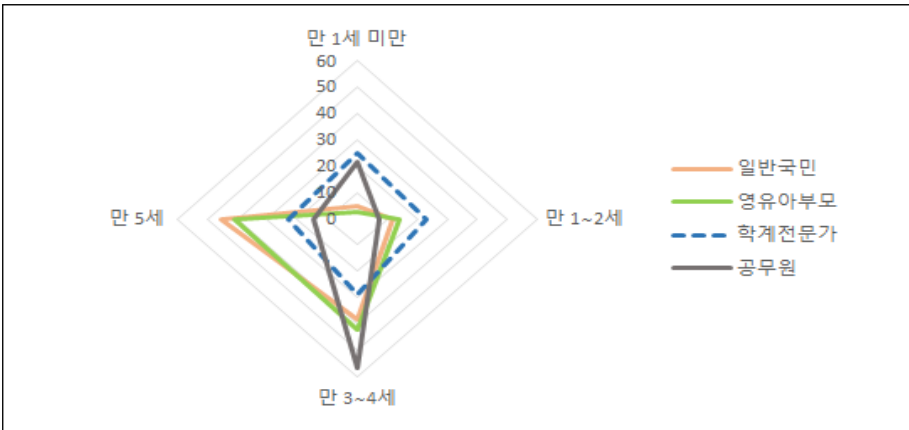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4) 정책적 우선 지원 시기

미래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정부가 취학 전 영유아 시기 중 정책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시기에 대한 의견도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다. 학계전문가들은 모든 연령에 대해 골고루 중요하다고 생각한 반면, 영유아부모와 일반국민은 만3-4세와 만5세를, 공무원들은 만3-4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4] 미래사회 변화 고려 시 정책적으로 가장 역점을 둘 시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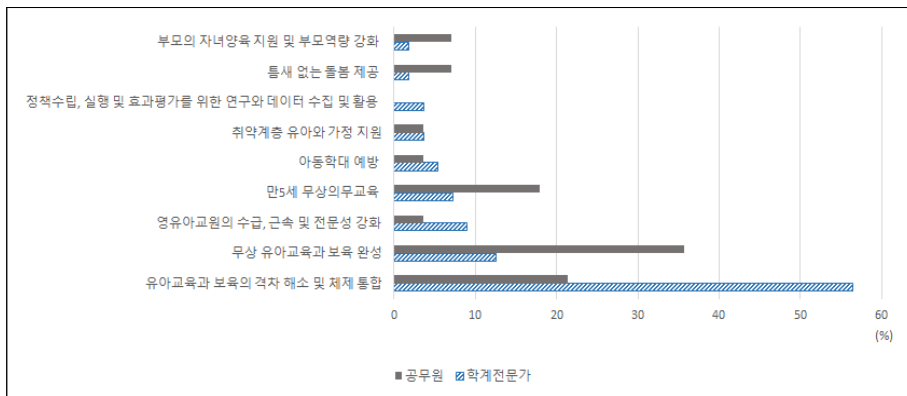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나. 향후 유아교육·보육 우선순위 정책과제

향후 5년간(2022-2027년)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우선 순위 정책과제에 대한 학계전문가와 공무원의 의견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학계전문가들은 약 56%가 유아교육과 보육 격차 해소 및 체제통합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공무원은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의 완성은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공무원들은 그 다음 순으로 유보 격차 해소와 체제통합을 응답하였으며, 만5세 무상의무교육, 부모의 자녀양육지원 및 부모역량 강화, 틈새 없는 돌봄 제공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계전문가 역시 그 다음 순으로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 완성을 응답하였으며, 또한 영유아교원의 수급, 근속 및 전문성 강화를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5] 향후 포함해야 할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영역 주제 비교



주: 본 연구 조사결과임.

이러한 우선순위 정책과제는 일반국민 조사결과와 유사하다. 비록 문항 선택지가 학계전문가 및 공무원 문항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지라도, 1순위로 무상유아교육과 보육 완성(19.0%), 만5세 의무무상교육(14.7%), 유보 체제통합(14.3%)로 조사되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연합회 대표, 현장관계자들과의 수차례 간담회 결과 역시, 유보체제 통합과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 완성이 대표적 우선과제였다. 요컨대, 여러 주요 관계집단들은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의 완성 및 유보통합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과제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5. 권역별 정책토론회 및 자문회의 주요 결과

가. 권역별 정책토론회 주요결과

총 4개 권역별 정책토론회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향후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핵심과제를 대주제 영역으로 범주화하면 권역별 공통적으로 유보통합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기존의 양체제를 조정, 통합하기 위한 고려사항들이 제안되었다(예: 영유아학교 명칭 통일, 공통업무 단일화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업무 지원 활성화 등). 그 다음으로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것이었다. 의무교육에 대한 의견은 대부분 교육과정의 획일화 및 초등교육의 하향화를 우려하여 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학교교육체제로 포함됨으로 인하여 초중등교육과 같이 마땅히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 또한 일부 피력되었다. 그 다음으로 주요한 핵심과제로는 교사 전문성 관련하여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상향 조정,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양성 및 연수체제 통합, 처우 개선이 논의되었다. 일부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보육교사 자격시험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서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감소가 우선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영유아교사를 위한 지원인력 제공, 노후화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환경 개선,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아동 1인당 면적 확대의 필요성,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처리 시스템 개발 등을 강조하였다.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창의적으로 보육, 교육사업을 개발 및 추진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지역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재원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공사립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수준에서의 협력 등이 제안되었다. 또한 다문화가정 영유아, 장애 영유아를 위한 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많은 보육과 교육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표 IV-5-1〉 권역별 정책토론회 주요 결과

지역	대주제	세부내용
수도권	정책방향	- 유아교육·보육 공동체 구성원의 존엄과 성장을 중요시 - 자녀양육보다 '자녀의 성장 가치 역량' 지원

지역	대주제	세부내용
	유보통합	- 부처 간의 통합과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 시도청과 시도교육청 간의 협의체제 구축 및 운영 필요 -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위해 학제화 필요. 0~2세 영아학교, 3~5세 유아학교 방식에 대한 합의 필요
	의무무상 교육보육	- 만5세 의무교육보다는 무상교육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임 - 공립유치원장은 의무교육에 동의. - 부모가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기관에 배치하는 방안
	공공성 강화	국공립 확충안에 대한 합의 필요
	교사 전문성	-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도 국가 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전입할 수 있는 통로 마련 - 교사양성 및 현직교육 체제 통합 및 질 제고 - 교사자격증 유지 정책 아화 필요: 일정 시험 통과 등 - 교사 처우 (인건비 지원) 및 직급 체계 개선
	부모지원	- 기관과 가정 양육을 모두 포함하여 부모 지원 정책 필요 - 입소 시 부모교육 수강 필수화
	돌봄	교육과 돌봄을 기관에서 모두 하기는 어려움. 돌봄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정책 필요
	자원체계	국공립과 민간(사립)간의 균형적인 발전 필요
	취약교육 보육	장애, 발달 지체, 다문화 지원 정책
	지방분권	지자체에 창의적으로 보육사업을 개발, 추진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유보통합	- 교육과 돌봄을 함께 하는 유보체제 통합이 필요함. 영유아기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와 관련된 업무를 하나의 독립된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 필요(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유보통합의 단기적 과제로 교육청의 교육적 인프라와 보육분야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력을 서로 공유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
충청권	의무무상 교육보육	만5세 의무교육 시 교육과정이 획일화되거나 성취지향으로 갈 수 있음. 이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하게 될 경향이 크며, 개정누리과정의 취지인 놀이중심아동중심 교육과정 실행이 어려울 수 있음.
	교사 전문성	- 보육교사의 교육 연한 3~4년으로 상향 조정 필요 - 보육교사 자격부여를 위한 학과제 도입 필요 - 국공립 유치원 교사처럼,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를 위한 시험 제도 필요 - 어린이집 교사를 위한 보다 교육적, 전문적인 자원체계 필요 - 교사 연수기회 증대 필요. 비대면 방식 보다는 학습공동체, 소규모 연구모임 등이 효과적임.
	서비스 질	-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한 인력지원 등 지원 필요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조정 및 이를 위한 인건비 지원 - 노후된 병설유치원 환경 개선 필요

지역	대주제	세부내용
경상권	교육보육 과정	교육부의 혁신유치원이 누리과정 운영에 효과가 있음. 지속적인 운영과 기관 수 확대 필요
	취약교육·보육	-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교사 수급 불균형 해소 필요. - 같은 도 내에서 시와 읍면 단위 지역의 불균형이 심각함. 읍면 단위에 취약계층 아동이 많음.
	전달체계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 시 필요한 비용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공유 시스템 필요
	유보통합	0~5세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한 국가수준의 명확한 비전제시 및 방향성에 대한 합의 필요 0~5세가 중요한 시기이므로 정책과 지원 단일화, 통일된 체계 구축 필요 0~2세 영아학교, 3~5세 유아학교 등 연령별 구분 시 장단점 파악 필요 - 통합시 현직교사들의 자격기준 통합 방안 필요
	의무·무상 교육·보육	- 국가책임의 완전 무상교육·보육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검토 필요 - 학제에 편입하면 안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 기관의 특색을 보장해야 함. 부모에게 기관 선택권 부여하여야 함. - 현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무상교육 실현 여부가 다름.(차액보육료 지원 단가 차이)
	교육보육 과정	다양한 영유아 교육과정 수용을 통한 교육보육의 다양성 확보 필요
	서비스 질	- 교사 대 아동비율 하향화를 통한 질 제고 필요 - 부산시청: 영영아반 1:2
		- 국공립과 민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인건비 격차를 줄여서 형평성 제고 필요 - 부산시청: 민간가정과 국공립 간 처우 통합해서 일률적인 급여 체계 협의 중임
	취약교육·보육	지역/소득격차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지원체계	- 초등연구관처럼 교육부에도 유아교육 전문 공무원(과장급)이 지속적으로 근무 필요 17개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유치원 유아에게도 개방 -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 간 MOU체결하여 우수사례 공유하고 있음.
	기타	- 인공지능시대를 대비하는 유아교육·보육 시스템 구축 필요 - 아동학대예방도 중요하지만 보육교직원 신분 보호 장치 필요
전라권	유보통합	- 영아기 돌봄과 유아기 교육이 지속적으로 연계 지원되는 체제 필요 - 두 체제를 한 순간에 통합하기보다 둘 간의 공통분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예: 각 지역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중심이 되어 공통의 업무를 단일화, 예산과 실무 등의 성격에 따라 공동 부담하기도 하고 공유하거나 협업 등을 한다면 두 체제 간 공

지역	대주제	세부내용
		- 동체 인식 및 협조체계를 발전시키면서 공통분모 확대 • 두 체제 간 공통된 업무를 단일화하여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마련 및 업무지원 활성화
	의무무상 교육보육	• 강제성/의무화에 대한 합의 필요 •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설치 현황과 영유아수의 비율 고려 • 이 기관 배치가 가능한 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의무보다는 무상교육·보육이 적절함.
	교사 전문성	• 국공립유치원교사와 같은 처우와 신분 보장이 될 때 전문성 있는 교사 확보 용이함. • 동등한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동등하게 높은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함. • 교사교육은 소규모로 실제적인 내용에 대한 연수가 필요함.
	교육보육 과정	•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질 제고를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누리과정 실행 자료 공유 시스템 필요 • 개정 누리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학부모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부모교육 병행 필요 • 국공립뿐 아니라 민간/사립 기관의 교사 인건비 지원 필요. - 인건비 부담으로 교사 근속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는 질 높은 교사를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호봉체계 단일화 필요. 단, 교원양성과 자격조건 개선과 병행되어야 함.
	부모지원	• 부모지원에 상응하는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함. • 입소 전 체계적인 부모교육 체제 마련 필요 • 부모지원 중심으로 정책이 이루어질 경우,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보육을 받을 기회가 박탈될 우려가 있음.
	돌봄	• 교육(누리과정)과 돌봄(일과 전, 일과 후, 야간 돌봄)을 분리 운영해야 함.
	취약교육 보육	• 조손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주: 연구진 작성

나. 자문회의 주요결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무원, 유치원과 어린이집 연합회 대표, 현장교원을 중심으로 수차례의 자문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한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먼저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통된 정책과제로는 유보통합과 격차 해소, 공공성 강화, 교육보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서비스 질 향상 등으로 범주화되었다. 특히,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을 선호하였으며, 보육 담당공무원들은 현재와 같은 유보 격차해소에 주력하는 것을 논의하였다. 마찬가지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축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는 비담임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표 IV-5-2〉 향후 유아교육보육 정책 과제(공통)

정책영역	분야	정책과제
유보 격차 해소·통합	담당공무원(유)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누리과정 운영, 시설, 면적 등)과 관련된 규제, 법적기준 등 격차 해소
	연합회(유)	(공)어린이집교원 자격기준을 유치원교원 기준으로 상향 필요 (공)어린이집교사 아동과의 면대면 수업시간 8시간에서 축소 필요(2명이 4시간씩)
	연합회(보)	0-5세 연계되도록 영아학교(0-2세)/영유아학교(0-5세)/유아학교(도시 3-5세) 중 선택하는 체제로 일원화 - 주무부처는 교육부로(원장, 부모, 교사 다수가 원함)-재원확보가 교육부가 용이, 현재 유아교육부문 수준이 더 높음. (가정)교육부로 일원화할 경우, 영아보육시스템(가정어린이집) 유사활용 필요 (민간)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교육부 예산 유치원 설립, 부처간 칸막이 해소)
	담당공무원(유) 연합회(유)	유아학교 추진, 의무교육 제도화, 완전 무상교육
공공성 강화	담당공무원(유) 연합회(유)	유아학교 추진, 의무교육 제도화, 완전 무상교육
교육보육과정 운영 내실화	담당공무원(유)	누리과정 장학지도 어린이집까지 확대
서비스의 질 향상	연합회(유)	(공)학급당 교사 대 아동비율 하향 조정 필요 (사)사립유치원의 경우 인건비 지원 없이 실행 어려움(경영난): 기관의 자율적 운영 허용 필요
	연합회(보)	(국공립)1:1,3,5,10,15,15가 이상적임. 그러나 아동수만 줄이고 인건비/보육료 지원 동결되면 운영이 어려움. (국공립)비담임제 도입: 보육교사 3급을 보조교사로 전환해서 원별로 1명 지원(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효과, 교사 휴가사용 원활 등)

유아교육과 보육 별도의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은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유아교육부문에서는 설립유형별 지원(공사립 균형 발전), 매입형 유치원의 선정기준 완화, 방과후과정 담당 교사에 대한 자격기준 통일, 업무범위 등 운영 체계 마련, 행정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현황자료 수집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표 IV-5-3〉 향후 유아교육 정책 과제

정책영역	분야	정책과제
설립유형에 따른 지원	담당공무원 연합회	- 유치원 설립유형별 운영방향의 차이 고려 (사)각종 정책이 많으나, 정책간 연결 필요
공공성 강화	연합회	(사)매입형, 공영형 기준 완화 필요 (대부분 지방의 사립유치원은 6학급 미만이므로, 6학급 이상의 현재 기준 충족 어려움)
교육보육과정 운영 내실화	연합회	(공)아침/오후돌봄 관리주체 변경(예: 초등은 지자체 관리), 운영의 방향성(교육 vs. 돌봄, 쉼) 정립 필요 (공)방과후과정 담당 교사에 대한 자격기준 통일, 업무범위 등 운영 체계 마련 필요 (사)방과후과정 운영시간과 프로그램 등에 기관(장)의 자율성 부여 필요 (학부모의 요구 및 지역별 차이 고려 필요)
서비스의 질 향상	담당공무원	병설유치원 급식, 보건과 관련한 초등학교와의 갈등 해결(관련 법령 개정 필요)
부모지원 및 참여 강화	연합회	(공)다문화 유아 증가로 더 많은 지원 정책 필요
지원체계 강화	연합회	(공)행정시스템 고도화 필요: 사립유치원의 경우 수십년 전 시스템 여전히 사용(예: 수기). - 교육부에서 관리 필요(경력, 교원관리 등)

보육부문에서도 유아교육부문과 마찬가지로 설립유형간 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 수준 제고,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폐원하는 가정어린이집을 위한 출구 전략 마련, 기본보육시간 축소, 교사대 영유아 비율 축소, 연장반 교사 지원, 21인 이상 교사실 확보, 대체교사 연중지원, 0-2세 표준보육과정 및 3-5세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연수체계 개선 및 지원 강화, 부모에게 각종 수당 지급시 부모교육과 연계 의무화, 취약보육 운영을 위해 인건비 지원, 농어촌 지역 정원충족률 기준 완화 등을 세부 정책과제로 제안하였다.

〈표 IV-5-3〉 향후 보육정책 과제

정책영역	분야	정책과제
설립유형간 격차 해소	연합회	(민간)지원과 미지원 시설 간 격차 해소(교사 인건비, 환경개선비지원, 아동지원)
공공성 강화	연합회	(민간)국공립 의무 설치 신축단지 세대수 조정 필요함. - 출산율 감소로 원아모집이 어려운 상황임. 국공립도 정원충족률 80%이상 많지 않음. (가정)국공립 신설보다 기존 국공립에 대한 개선(교사 대 아동비율, 아동당 면적 증가)이 더 필요함. 또는 기존시설의 국공립 전환 필요

정책영역	분야	정책과제
교육·보육과정 운영 내실화	유관기관	• (가정)직장어린이집 신규설치보다 위탁보육 등 기존시설과의 연계 방안 필요. 상생방안 필요. 운영의 다양성을 위해 필요함 • (국공립)민간시설의 국공립 전환시 국공립의 전반적인 질 보장 어려움. 전환시설 운영 및 원장교육에 대한 체제 마련 필요 • (가정)지역별로 회계관리시스템이 차이가 있어 정착이 필요 - 직책급, 제수당 관리 필요
		• 체계적인 교사교육 관리 담당기관 필요(예: 육아연). 대규모 집체교육 방식 개선 필요 • 표준보육과정 개정에 따른 컨설팅 필요 • (교육부 대비)보건복지부의 표준보육과정 중요성에 대한 인식 미흡
	연합회	• (가정)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에 대한 연수, 컨설팅 등 교육 필요(상호작용방법 등)
	유관기관	• 질관리에 대한 인식/방향성/목적에 대한 재설정 필요(기본수준향상→다양성 확보) • 영아보육교사 학력수준 향상 필요(교사자격 상향 필요)
서비스의 질 향상	연합회	• (민간)아동당 면적 개선 필요 • (가정)폐원 시 비용 필요하므로. 출구전략 필요 - 평가 C, D등급 기관 중 10명 미만인 기관 많음. 소규모 인력(2인)이 평가 준비하기 어려움. 강제 폐원은 어렵고 자연히 폐원 되게 되는데 폐원 시 비용 필요. • (국공립)오래된 기관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 필요 • (국공립)장애 담당교사(특수교사, 장애영유아교사 자격증소지자) 질 관리 필요
		•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 기본보육시간 축소, 교사대 영유아 비율 축소, 연장반 교사 지원, 21인 이상 교사실 확보, 대체교사 연중 지원
	어린이집 원장	• 경력직 교사 고용의 어려움: 퇴직금 부담, 인건비 부담(→인건비 지원이 되는 영아반 교사를 맡게됨) ⇒ 교사의 직업 불안정성에 따른 교사 전문성 하락 • 국공립어린이집 노후화 문제 개선 필요(예: 안성시의 경우 폐원하는 신축 어린이집으로 이전함) • 어린이집평가제와 열린어린이집 정책의 통합 필요
	유관기관	• 장애아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 교사자격관리 내실화 필요 • 부모책임 강조, 확대 필요 • 교사권리존중 필요
부모지원 및 참여 강화	연합회	• (가정)영아수당 지급 시 부모교육 의무화(스마트폰 사용·노출 위험, 아동 성교육 등) 필요 • (가정)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역내 가정어린이집 활용 필요 • (국공립)취약보육 운영을 위해 인건비 100%지원 필요 • (국공립)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감사하는 마음)
	연합회	• (국공립)국공립기관의 역차별 상황 파악 필요: 국공립 인건비 30% 지원으로는 운영이 어려움(정원기준 미달 시 지원 못 받음). 비지원

정책영역	분야	정책과제
		시설과의 역차별(민간은 차액보육료 지원받음) • (민간)국공립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민간시설에도 정부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표준보육비용 현실화가 우선되어야 함.
	어린이집 원장	• 지역별 지원 정책 차별화 필요(예: 농어촌 지역 국공립 원아모집 어려워 인건비 지원 못받음, 인건비 지원 기준인 정원충족률 기준 완화 필요) • 농어촌 자원 근거 수정 필요: 단순 행정구역이 아닌 인구기준으로 변경 • 표준보육비용 산출 기준 수정 필요: 정원 100%→70%



2022-2027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발전 방안

- 01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방향성
- 02 핵심 정책과제
- 03 누리과정 소요 재정 추계

V. 2022-2027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발전 방안

1.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방향성

가.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유아교육과 보육 환경 변화

앞서 제시한 2018~2022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과 제3차 보육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 분석, 국내외 정책동향 검토, 다부문 전문가 자문, 대국민 및 영유아 부모조사, 학계전문가 조사, 시도청과 시도교육청 담당공무원 조사의 주요 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방향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설정될 필요가 있다.

첫째, 여전히 지속되는 초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수 급감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회환경이다. 최근 4-5년간 0-5세 영유아수는 매년 20만명 가까이 감소하여 영유아기 인구절벽을 실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020년에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능가한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바와 같이 고령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한 실버산업이 부상하고, 영유아 산업은 이제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신설, 영유아 교원 수급 등을 보다 장기적이고 현실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코로나 팬데믹, 기후 변화와 같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및 적응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갈수록 변화 시기는 단축되고, 변화의 폭은 증폭되어 미래사회는 과거보다 훨씬 불확실하다. 특히 감염병, 긴급재난 등의 위기상황에 대한 예측과 대응은 물론, 인구감소로 다운사이징 된 사회 등 주어진 사회환경과 여건에 신속히 적응하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셋째, 세대변화에 따른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 변화와 코로나19와 같은 긴급재난 상황, 지속되는 맞벌이 가구의 증대에 따른 돌봄 수요 증대 및 틈새없는 서비스 제공이 요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돌봄이 함께 가기보다

는 분리되는 경향과 이로 인한 갈등이 강해지는 추세(예: 유치원 교육과정 교사와 방과후 과정 강사의 업무 갈등 등)이다.

넷째, 국제적 및 국가수준에서도 강조되어 오고 있는 차별없는 포용사회 실현을 추구한다. 이를 위하여 취약가정 영유아에 대한 양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는 물론, 가족단위의 정책을 발굴하여 보다 총체적인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수아, 다문화 영유아 등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치와 방식을 생애초기부터 실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많은 혁신의 시도와 해당 분야에 다양한 정책이 수립, 추진되어 왔으나, 지원 예산 부족 또는 중단, 현장의 낮은 정책 수용도 등으로 정책의 안정적 실행 및 지속성이 낮은 편이다.

여섯째,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정보와 기술과학의 발전은 유아교육과 보육 환경과 교수학습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한 디지털 환경 구축은 이미 현장에서 가속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사회에서 학교는 학생의 지능정보 역량을 함양하고 영유아 서비스 기관 안밖의 구분이 없어지는 학습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며, 교원 역시 지능정보 역량, 공동체 및 네트워크 역량 등이 요구되며,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나.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방향성

미래사회가 가져올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비전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적응력 강화와 공생하는 사회 구현”으로 제시한다.

첫째, 영유아의 웰빙과 건강한 성장을 최우선

OECD 교육2030 learning framework에서 제시되어, 국제사회에서 널리 채택된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의 웰빙(well-being)이다. 10년 이상 지속되는 저출산 문제로 출산을 제고를 위한 부모 양육지원이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의 주요한 목표로 대두되어 온 것은 사실이며, ‘유아 심신의 건강과 행복’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의 최우선의 방향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급감하는 인구 수 변화, 코로나19, 디지털 기술의 발달 등 급변하는 사회변화로 등장한 뉴노멀시대에 영유아가 안전하게 성장하고,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보육 부문의 적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긴급재난시기와 같은 위기상황에 대한 예측력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유아 주도와 참여를 강조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

수많은 국제기구 보고서와 연구결과에서 입증하였듯이, 일정수준의 질이 보장되지 않은 유아교육과 보육은 오히려 영유아의 학습과 발달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OECD, 2012). 유아놀이중심의 개정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그간의 창의인재 양성에서 유아중심을 강조하는 기조로 전환하여, 아동권리현장에 입각하여 기본적인 아동의 놀이권, 참여권을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과 보육활동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는 영유아 부모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별유아의 요구와 권리를 중시하는 부모의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수요와 기대를 충족시키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셋째, 포용적 공생 사회를 위한 생애초기부터 통합교육 강화

일반국민조사 및 공무원, 전문가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소득 불평등과 지역 격차, 특히, 최근 2년간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어 앞으로는 한층 더 취약소외계층 유아가 가정배경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고 생애초기부터 양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성별, 인종, 언어, 신체장애, 지역 등으로 인한 차별없이 함께 살아가는 경험, 즉 생애초기부터 통합교육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넷째, 틈새없는 돌봄서비스 체계 마련 및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 강화

코로나19 상황에서 단적으로 입증되었듯이, 안심할 수 있는 틈새없는 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은 향후 더욱 절실할 것이다. 영아수당 도입 등, 가정 양육을 권장하고 부모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50%에 가까운 응답자들은(특히, 기혼)은 기관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함을 대국민조사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전통적으로 취학전 부문은 가정과 공식적인 학교교육을 연계하는 위치에 있으며, 다른

상위학교급별에 비하여 기관과 부모, 가정과의 파트너십 형성과 협력을 강조해 왔다. 기관 중심의 아침돌봄, 저녁돌봄, 시간제 보육, 야간보육, 방과후 과정, 초등돌봄을 모두 연계하고, 아울러 가정내 돌봄(아이돌보미)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돌봄서비스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속되는 초저출산 현상과 맞벌이 가정의 증대로 불가피한 사회적 요구이다.

다섯째, 지역적 균형 발전과 조화

본 연구의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보이원화체제의 통합, 공사립/민간의 균형적 발전은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오래된 현안들이다. 향후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조화(유보통합),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균형,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균형, 유아교육에 대한 부모 관점과 전문가 및 현장교원 관점의 균형, 자율과 책무성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주요한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핵심 정책과제

과제 1.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의 완성

정부는 1999년 농어촌지역 만 5세 유아 대상의 무상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을 도입한 이래 2012년 누리과정의 도입과 2013년 3, 4세로의 확대 정책으로 보편적 유아교육과 보육을 성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곧이어 2014년부터 현재까지 누리과정 지원예산 확보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함으로써 새 정부가 내세우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국가책임 실현’을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증대 정책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직 설정된 목표인 40%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유치원 29.4%, 어린이집 24%)이다(문무경, 2021). 이미 수많은 지적을 받았고, 본 연구의 조사결과 및 자문회의에서도 논의되었듯이 단순히 시설을 신설하기보다는 지역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율을 토대로 보다 정교한 방안이 모색되는 것이 급

선무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원래 2016년도에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예: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실험적으로 누리과정 지원비를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과제 2. 교육과 돌봄을 함께 하는 유보체제 통합

본 연구의 주요 관계자 집단별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요구는 유보체제 통합이다. 20년이 넘도록 지속되어 온 현장의 갈등과 경쟁을 종식하고, 현재는 급감하는 영유아수로 인하여 현장, 공무원, 학계 전문가를 막론하고 유보통합이 절실함에 대하여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영유아의 발달적 특수성과 가정과 함께 지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교육과 돌봄이 함께하는 체제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착수, 추진한 유보통합의 과제를 향후 차기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요 관계집단들을 포함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통합을 위한 연차별 로드맵을 작성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유보통합 추진 방향과 구체적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모든 관계자 집단의 참여와 대립되는 이해관계 사항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유보통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주체적으로 실행하는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

과제 3. 만 5세 무상교육 실시를 통한 단계적 공교육화

초중등과 달리, 취학 전 영유아는 공교육 체제 안에 포함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간 지원상의 많은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공교육 체제에 포함되도록 우선 단계적으로 만 5세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의무교육을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린 만5세 시기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향후 통합하여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의무적으로 기관을 이용하여야 하는 영유아와 부모 선택권 등이다. 노르딕국가처럼 초등입학 직전에 preschool-class를 거의 99% 이용하는 것은 무상이지 의무는 아니다. 또한 3-5세 의무교육을 단행한

프랑스와 같이, 다문화, 이주배경 가정 유아의 경우 의무교육이 되면 수업일수 관계로 출신국 방문에 제약이 있는 등 우리나라의 경우도 논의와 실제 파생되는 현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과제 4. 질적 격차 해소를 통한 형평성 제고

양질의 영유아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현재에도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영유아의 취원 우선순위 부여를 한층 강화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질적 격차 해소, 공사립기관의 균형적·보완적 발전, 특히, 유치원평가와 어린이집 평가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체제로 전환하도록 하고 서류업무 간소화 및 필요한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

과제 5. 환경개선을 통한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질 제고

유아놀이중심 개정누리과정을 본연의 취지인 개별유아의 요구를 반영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축소가 관건이다. 이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분야의 오래된 과제이다. 각 주요 관계자 집단별로 이상적인 비율과 현실적인 비율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 운영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건비 계산과 확보가 필수적이며,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앞서 미래환경 전망에서 제시되었듯이 스마트 교육환경에 대한 실천은 이미 초·중등학교급에서는 시도되고 있으나, 영유아 부문은 낙후된 시설 및 1인당 협소한 면적에 대한 규정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래 여전히 변경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유아놀이중심 환경조성을 위해서라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경이 필요하다. 대국민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혼과 기혼 모두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관선택의 2순위가 시설환경이기 때문이다. 이는 교사 전문성 및 프로그램 우수성보다 앞서는 선택기준이다.

또한 설립이후 한 번도 리모델링하지 않은 유치원은 72.6%, 어린이집의 경우도 71.2%에 해당하므로 노후화된 시설의 안전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문무경, 강은진, 강현미, 성은영, 이해민, 박석환, 발간중). 이러한 노후화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환경을 고려하여 조진일 외(2020)은 시설의 성능을 진단하기 위한 지표와 도구 개발을 제안하였다.

과제 6. 우수 영유아 교원의 유입, 근속 및 처우 개선

그간 영유아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핵심과제로 선정해 왔으나, 향후에도 우수 영유아 교원을 분야에 유입하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교원 복지와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본 대국민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영유아 교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시설환경보다 낮은 우선순위다. 전문성 강화 방안과 함께 우수 교원 영입과 지속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명칭의 방과후 과정 전담 인력이 있음으로 전국단위로 명칭 통일 및 자격기준과 역할 등을 명료화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문무경, 김동훈, 정도영, 2021).

과제 7. 유아교육과 보육의 지원체제 강화

지역 기반의 유아교육과 보육 지원체제를 강화한다. 시도청과 교육청 공무원 조사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대한 지원 기능을 한층 강화하도록 한다. 무엇보다도 시도청과 교육청에 담당공무원 인력을 확충하고 유관 배경, 전공의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한다. AI 기반의 행정업무 효율화 시스템, 초중등학교와 같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유아교육과 보육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보다 총체적인 통계자료와 현황으로 정책 수립과 실행, 효과 평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누리과정 소요 재정 추계

가. 추계방법

계획기간 중 통계청의 영유아 연령별 인구수 추계자료를 바탕으로 2022-2027년 유치원 원아수와 어린이집 원아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2015-2020년 기관별 지

표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2015년을 기점으로 설정한 것은 2012년부터 시작된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다음 <표 V-4-1>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수, 원아수, 교원 및 직원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V-3-1> 2015-2020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본통계의 변화 추이

단위: 개소, 명, %

구분		설립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15-2020 연평균증감률
인구수		0~2세	1,339,380	1,298,759	1,255,888	1,157,018	1,049,915	972,015	-0.0621
		3~5세	1,392,718	1,412,324	1,364,497	1,335,495	1,301,410	1,249,666	-0.0214
유치원	유치원수	국공립	4,678	4,696	4,747	4,801	4,859	4,976	0.0124
		사립	4,252	4,291	4,282	4,220	3,978	3,729	-0.0259
		합계	8,930	8,987	9,029	9,021	8,837	8,705	-0.0051
	원아수	국공립	161,339	170,349	172,521	172,370	177,330	178,901	0.0209
		취원율	0.1158	0.1206	0.1264	0.1291	0.1363	0.1432	0.0433
		사립	521,214	533,789	522,110	503,628	456,583	433,637	-0.0361
		취원율	0.3742	0.3780	0.3826	0.3771	0.3508	0.3470	-0.0150
		합계	682,553	704,138	694,631	675,998	633,913	612,538	-0.0214
		취원율	0.4901	0.4986	0.5091	0.5062	0.4871	0.4902	0.00003
	교원수	국공립	12,619	13,412	14,183	15,869	17,334	19,109	0.0865
		사립	38,379	39,511	39,625	39,023	36,028	34,542	-0.0208
		합계	50,998	52,923	53,808	54,892	53,362	53,651	0.0102
	직원수	국공립	807	892	1,056	1,124	1,183	1,334	0.1057
		사립	4,118	4,745	6,873	5,299	4,069	3,702	-0.0211
		합계	4,925	5,637	7,929	6,423	5,252	5,036	0.0045
어린이집	어린이집수	국공립	2,629	2,859	3,157	3,602	4,324	4,958	0.1353
		사립	39,888	38,225	37,081	35,569	33,047	30,394	-0.0529
		합계	42,517	41,084	40,238	39,171	37,371	35,352	-0.0362
	보육아동수	0~2세	864,596	845,984	862,237	843,764	796,499	700,890	-0.0411
		3~5세	580,821	597,800	581,298	565,916	562,976	538,448	-0.0150
		취원율	0.4170	0.4233	0.4260	0.4237	0.4326	0.4309	0.0065
		합계	1,452,813	1,451,215	1,450,243	1,415,742	1,365,085	1,244,336	-0.0305
	교직원수	국공립	30,823	32,937	36,098	41,122	50,436	59,974	0.1424
		사립	290,244	288,829	294,119	292,298	281,008	265,695	-0.0175
		합계	321,067	321,766	330,217	333,420	331,444	325,669	0.0029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각연도). 교육통계연보; 보건복지부(각연도). 보육통계; 통계청(2019). 장래인구추계

0~2세와 3~5세 인구는 감소추세를 보여주며, 국·공립 유치원 수와 어린이집 수는 증가추세, 사립 유치원 수와 어린이집 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증가추세인 반면, 사립유치원 취원율은 감소추세며, 3~5세 보육아동 수는 감소하는 가운데 어린이집 취원율은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유아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연도별로 연령별·기관별·설립별 취원율 목표를 설정한 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관수, 원아수, 학급수, 교원수를 추계하고,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신규 교직원 인건비와 기존 교직원 처우개선비, 기관 신·증설비와 운영비 등을 추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누리과정이 완성된 2015년 이후 2020년에는 어느 정도 취원율의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목표 취원율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2020년 공사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3~5세 어린이집 취원율을 바탕으로 2023~2027 계획기간 중 장래 학령인구 추계를 적용하여 원아수와 보육아동수를 추정하여 누리과정 학비 소요액을 산출하였다. 계획기간 중 연도별 3~5세 영유아 인구수에 기관별 취원율을 곱하여 계획기간 중 기관별 영유아수를 추정하였으나,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전년도 원아수를 일부 보정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반영 원아수와 일치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21년 누리과정 예산편성 원아수에 취원율을 소폭 보정하여 연도별 원아수를 조정하였다.

학비 외 유아교육 및 보육재정을 추정하려면 유치원 및 어린이집 기관수와 교직원수의 변화를 추정하여 각각의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을 산출해야 하나, 영유아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표의 변화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5~2020년 평균 증감률을 적용하여 계획기간 중 연도별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을 추정하였다.

나. 2022~2027 교육비·보육료 소요예산 추정

연도별 유아교육·보육료 소요는 2021년 현행 단가(국·공립유치원 교육비 월 8만원, 방과후과정비 월 5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비·보육료 월 26만원, 방과후과정비 월 7만원)를 2023년 이후 인상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다만 국·공립유치원의 교육비는 동결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학비를 인상하면 학비 소요는 늘어나지만 2015~2020년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평균 증

감률을 인하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별 실익이 없다고 보았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비·보육료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3만원씩, 2027년에는 2만원씩 인상하여 2027년에 40만원을 달성하는 것으로, 방과후과정 교육비는 2023년에 3만원 인상하여 10만원을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별로 차등있는 방과후과정 교육비는 2023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엄문영과 정혜영의 연구(2020)에 따르면, 표준유아교육비는 월 54만 2천원으로 산출되었지만, 여기에는 학비 지원분뿐만 아니라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비 지원목표로 설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유치원 알리미에 공개된 전국 유치원 월평균 학부모부담 교육과정비와 방과후과정비 합계는 17만원 정도였고, 서울시 평균은 28만원 정도였다(교육과정 교육비는 경기도가 최고였으나, 교육과정 교육비와 방과후과정교육비를 합하면 서울시가 최고였음). 따라서 학부모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현재의 학비 단가 26만원을 40만원으로, 방과후과정 교육비 단가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고 보았다.

〈표 V-3-2〉 유치원 월평균 학부모부담 교육과정비와 방과후과정비(2021)

단위: 원

구분			유치원 수	만 3세	만 4세	만 5세 이상
국·공립	전국 평균	교육과정 교육비	4,898	444	574	552
		방과후과정 교육비	4,898	5,090	5,183	5,288
		계	4,898	5,534	5,757	5,840
	서울시 평균	교육과정 교육비	273	3,537	3,371	3,472
		방과후과정 교육비	273	2,208	2,214	2,256
		계	273	5,745	5,585	5,728
사립	전국 평균	교육과정 교육비	3,424	147,947	146,240	143,653
		방과후과정 교육비	3,424	24,439	24,235	23,883
		계	3,424	172,386	170,475	167,536
	서울시 평균	교육과정 교육비	494	227,201	225,696	225,324
		방과후과정 교육비	494	55,376	55,400	55,345
		계	494	282,577	281,096	280,669

자료: 유치원 알리미 <https://e-childschoolinfo.moe.go.kr/> (2021. 10. 15 인출).

소요재정을 추계하는 기초자료로, 2022~2027년 누리과정 원아 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3-3〉 2022~2027 누리과정 원아수 추정

단위: 명

설립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공립유치원	153,326	142,008	134,091	129,016	127,906	130,775
사립유치원	369,097	341,853	322,793	310,577	307,906	314,812
어린이집 3~5세	468,860	434,252	410,040	394,522	391,129	399,902
계	991,283	918,113	866,924	834,115	826,941	845,489
3~5세 인구추계	1,045,201	968,051	914,078	879,484	871,921	891,477

주: 연구진 작성

연도별 기관별 원아 수에 연도별 학비 지원 단가와 방과후과정비 단가를 적용하여 소요재정을 추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교육부가 매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적용하는 방과후 과정 적용률은 유치원의 경우 80~90%, 어린이집의 경우 100%이나 여기서는 유치원의 경우 90%를 적용하였다.

〈표 V-3-4〉 유아교육·보육료 소요재정 추계

단위: 명, 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국공립 유치원	원아수	153,326	142,008	134,091	129,016	127,906	130,775
	교육비 연간단가	96	96	96	96	96	96
	교육비	14,719,255	13,632,774	12,872,689	12,385,512	12,279,004	12,554,406
	방과후과정 연간단가 (90%)	54	86.4	86.4	86.4	86.4	86.4
	방과후과정	8,279,581	12,269,497	11,585,420	11,146,960	11,051,104	11,298,965
	소계	22,998,836	25,902,271	24,458,108	23,532,472	23,330,108	23,853,370
사립 유치원	원아수	369,097	341,853	322,793	310,577	307,906	314,812
	교육비 연간단가	312	348	384	420	456	480
	교육비	115,158,271	118,964,725	123,952,476	130,442,153	140,405,042	151,109,617
	방과후과정 연간단가(90%)	75.6	108	108	108	108	108
	방과후과정	27,903,735	36,920,087	34,861,634	33,542,268	33,253,826	33,999,664
	소계	143,062,006	155,884,812	158,814,109	163,984,421	173,658,868	185,109,281
유치원 합계	교육비	129,877,526	132,597,500	136,825,164	142,827,664	152,684,046	163,664,022
	방과후과정	36,183,316	49,189,584	46,447,054	44,689,228	44,304,930	45,298,629
	합계	166,060,841	181,787,084	183,272,218	187,516,893	196,988,976	208,962,651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어린이 집	원아수	468,860	434,252	410,040	394,522	391,129	399,902
	교육비 연간단가	312	348	384	420	456	480
	교육비	146,284,324	151,119,623	157,455,509	165,699,277	178,355,029	191,952,936
	방과후 과정 연간단가(90%)	84	120	120	120	120	120
	방과후과정	39,384,241	52,110,215	49,204,847	47,342,651	46,935,534	47,988,234
	소계	185,668,566	203,229,838	206,660,356	213,041,927	225,290,563	239,941,171
학비 총계	유치원	166,060,841	181,787,084	183,272,218	187,516,893	196,988,976	208,962,651
	어린이집	185,668,566	203,229,838	206,660,356	213,041,927	225,290,563	239,941,171
	합계(A)	351,729,407	385,016,922	389,932,574	400,558,820	422,279,539	448,903,822
현행 유지시 학비 총계(B)		351,729,407	325,767,010	307,604,100	295,962,581	293,417,492	299,998,447
추가 소요액(A-B)		0	59,249,912	82,328,474	104,596,239	128,862,047	148,905,375

주: 연구진 작성

다. 누리과정 지원비 외 비용 추계의 실효성 판단

누리과정 지원비 이외 비용을 추계하기 위하여 2011년 이후 유아교육비 결산액과 보육예산액을 정리한 결과, 다음 <표 V-3-5>, <표 V-3-6>과 같다.

<표 V-3-5>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유아교육비 결산 변화추이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설립별	교육회계 세출결산 총액(A)	유아교육재정						비율 (B/A,)
			인건비	학생배치 시설	유치원 전출금	유아학비 지원	기타	계(B)	
2011	공립	-	497,609	63,435	219,074	44,457	21,265	845,840	
	사립	-	100,948	-	110,559	704,392	6,012	921,911	
	계	46,814,067	598,557	63,435	329,633	748,849	27,277	1,767,751	3.78
2012	공립	-	537,647	68,580	259,662	82,917	30,160	978,966	
	사립	-	133,974	-	122,861	1,064,057	7,200	1,328,092	
	어린이집	-	-	-	-	433,705	-	433,705	
	계	50,433,937	671,620	68,580	382,523	1,580,679	37,360	2,740,762	5.43
2013	공립	-	605,347	131,438	323,297	119,609	32,029	1,211,720	
	사립	-	149,089	-	159,698	1,344,781	16,352	1,669,920	
	어린이집	-	-	-	-	1,171,401	-	1,171,401	
	계	53,295,765	754,436	131,438	482,995	2,635,792	48,381	4,053,042	7.6

회계 연도	설립별	교특회계 세출결산 총액(A)	유아교육재정						비율 (B/A, %)
			인건비	학생배치 시설	유치원 전출금	유아학비 지원	기타	계(B)	
2014	공립	-	635,385	201,992	317,958	146,884	27,779	1,329,998	
	사립	-	187,236	-	122,534	1,585,197	41	1,895,008	
	어린이집	-	-	-	-	1,612,540	-	1,612,540	
	계	56,789,353	822,621	201,992	440,493	3,344,621	27,820	4,837,547	8.52
2015	공립	-	714,727	219,542	310,397	160,499	19,714	1,424,879	
	사립	-	193,235	-	97,401	1,652,130	36	1,942,802	
	어린이집	-	-	-	-	2,120,715	-	2,120,715	
	계	56,597,924	907,962	219,542	407,798	3,933,344	19,750	5,488,396	9.7
2016	공립	-	805,786	338,013	325,408	165,787	24,024	1,659,018	
	사립	-	200,025	-	100,086	1,692,184	-	1,992,295	
	어린이집	-	-	-	-	2,019,979	-	2,019,979	
	계	60,041,898	1,005,811	338,013	425,494	3,877,950	24,024	5,671,292	9.45
2017	공립	-	870,475	182,212	373,790	165,096	134,061	1,725,634	
	사립	-	84,478	-	114,617	1,642,333	-	1,841,428	
	어린이집	-	-	-	-	2,080,647	-	2,080,647	
	계	65,611,419	954,953	182,212	488,407	3,888,076	134,061	5,647,709	9.13
2018	공립	-	986,808	173,468	439,580	164,334	159,143	1,923,333	
	사립	-	88,409	-	224,835	1,633,848	-	1,947,092	
	어린이집	-	-	-	-	2,117,565	-	2,117,565	
	계	71,612,652	1,075,217	173,468	664,415	3,915,747	159,143	5,987,990	8.36
2019	공립	-	1,109,611	344,080	509,834	170,691	182,163	2,316,379	
	사립	-	92,441	-	224,835	1,513,979	-	1,831,255	
	어린이집	-	-	-	-	2,042,941	-	2,042,941	
	계	80,401,054	1,202,052	344,080	734,669	3,727,611	182,163	6,190,575	7.7
2020	공립	-	1,227,852	137,101	1,934,799	162,814	236,027	3,698,593	
	사립	-	93,017	-	430,676	1,498,858	-	2,022,551	
	어린이집	-	-	-	-	2,136,931	-	2,136,931	
	계	77,705,459	1,320,869	137,101	2,365,475	3,798,603	236,027	7,858,075	10.11

주: 연구진 작성

〈표 V-3-6〉 국가 보육예산 변화 추이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 영유아보육료지원	1,934,611	2,391,291	2,598,219	3,333,028	3,145,209	3,188,035	3,138,267	3,267,194	3,416,288	3,432,821	3,416,809
-영유아보육료 지원	1,934,611	2,391,291	2,594,419	3,329,228	3,137,702	3,176,076	3,129,242	3,257,470	3,405,282	3,416,221	3,395,239
-시간제보육지원	-	-	3,800	3,800	7,507	11,959	9,025	9,724	11,006	16,600	21,570
○ 어린이집 기능 보강	14,650	11,867	24,060	42,432	67,461	36,681	49,272	98,986	98,867	96,409	67,747
-어린이집기능보강	14,650	11,867	7,595	7,144	34,015	6,447	6,447	30,602	30,027	19,777	6,866
-어린이집 확충	-	-	16,465	35,288	33,446	30,234	42,825	68,384	68,840	76,632	60,881
○ 어린이집 관리	21,000	21,403	45,158	26,868	26,556	30,855	24,758	25,971	33,297	42,447	39,621
-보육사업관리	1,515	3,247	4,059	1,645	1,405	7,822	3,301	4,003	3,783	3,999	4,085
-육아종합지원서비스제공	5,860	7,040	19,636	5,662	4,887	11,267	9,508	8,931	11,789	16,459	11,728
-어린이집 교원양성지원	1,888	1,838	2,054	2,054	1,956	2,731	2,727	2,815	2,826	2,474	2,474
-보육프로그램개발·연구	225	225	202	208	-	-	-	-	-	-	-
-보육전자바우처 운영	6,762	3,027	11,395	6,911	6,192	-	-	-	-	-	-
-보육실태조사	-	-	-	-	792	-	-	700	-	-	690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	-	1,144	1,288	1,324	1,192	1,192	1,131	905	1,282	1,242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	-	-	500	200	190	174	165	165	100	100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	-	-	-	-	-	-	-	13,098	17,021	18,183
-부정 이용불편신고 등	-	-	-	-	-	-	-	-	731	1,112	1,119
-어린이집평가인증	4,975	6,026	6,668	8,600	9,800	7,653	7,856	8,226	-	-	-
○ 어린이집 지원	418,100	501,360	598,238	656,172	735,400	865,548	970,174	1,058,787	1,249,744	1,528,385	1,674,747
-공공형 어린이집	7,984	16,942	33,379	38,528	44,071	48,730	55,827	60,999	62,915	62,955	60,624
-교직원 인건비·운영 지원	410,116	484,418	564,859	617,644	691,329	816,818	914,347	997,788	1,186,829	1,465,430	1,614,123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89,794	102,646	880,950	1,215,319	1,211,510	1,219,200	1,224,184	1,089,137	892,330	842,855	760,779
□ 국가사업비 합계	2,478,380	3,028,567	4,146,625	5,273,819	5,186,136	5,340,319	5,406,655	5,540,075	5,690,526	5,942,917	5,959,703

교육비특별회계 유아교육비 결산액에는 누리과정 학비 지원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교육비만 추출하여 2015-2020년 평균 증감률을 산출하고자 하였으나, 2020년에 초등학교회계에 포함되었던 병설 유치원 인건비와 운영비가 분리됨으로써 유아교육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시계열 추이를 보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2015-2019년 평균 증감률을 산출하였고, 보육예산의 경우에는 2016-2021년 예산증감률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V-3-7>, <표 V-3-8>과 같다.

<표 V-3-7> 2015-2019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유아교육비 결산액 변화 추이

단위: 백만원

설립별	비용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공립	인건비	714,727	805,786	870,475	986,808	1,109,611	0.116240
	학생배치시설	219,542	338,013	182,212	173,468	344,080	0.118885
	유치원전출금	310,397	325,408	373,790	439,580	509,834	0.132082
	기타	19,714	24,024	134,061	159,143	182,163	0.743496
	소계	1,264,380	1,493,231	1,560,538	1,758,999	2,145,688	0.141359
사립	인건비	193,235	200,025	84,478	88,409	92,441	-0.168340
	유치원전출금	97,437	100,086	114,617	224,835	224,835	0.232608
	소계	290,672	300,111	199,095	313,244	317,276	0.022136
합계		1,555,052	1,793,342	1,759,633	2,072,243	2,462,964	0.121833

주: 연구진 작성

<표 V-3-8> 2016-2021 보육예산의 변화와 연평균 증감률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률
○ 영유아보육료지원	3,188,035	3,138,267	3,267,194	3,416,288	3,432,821	3,416,809	0.0140
○ 어린이집 기능 보강	36,681	49,272	98,986	98,867	96,409	67,747	0.1306
○ 어린이집 관리	30,855	24,758	25,971	33,297	42,447	39,621	0.0513
○ 어린이집 지원	865,548	970,174	1,058,787	1,249,744	1,528,385	1,674,747	0.1411
- 공공형 어린이집	48,730	55,827	60,999	62,915	62,955	60,624	0.0446
- 교직원 인건비·운영 지원	816,818	914,347	997,788	1,186,829	1,465,430	1,614,123	0.1459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219,200	1,224,184	1,089,137	892,330	842,855	760,779	-0.0900
□ 국가사업비 합계	5,340,319	5,406,655	5,540,075	5,690,526	5,942,917	5,959,703	0.0222

주: 연구진 작성

보육예산의 경우 연평균 2.22%씩 증가하여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치로 볼 수 있으나, 유아교육비 결산의 경우, 연평균 12.2%씩 증가하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유아교육비는 세입규모에 따라 지출액이 결정되는 측면이 있는 바, 2016-201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 변동이 컸고, 2017년 이후 공립 유치원 확충 정책으로 결산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육예산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사업에 대해 대응투자를 하고, 독자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국가의 보육예산 증가율대로 추계하기는 어렵다.

영유아 인구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지원단가를 인상해도 전체 예산액은 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중장기 재정소요를 예측하는 것이 크게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2021년 보육예산의 경우,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를 인상했지만(0~2세 보육료 4% 인상, 장애아 보육료 5% 인상) 영유아보육료 전체 예산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따라서 유아교육예산과 보육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기존 세입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 관계부처합동(2020a).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안)(‘20~‘24).
- 관계부처합동(2020b). 제4차(2021-202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관계부처합동(2021).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안)-취학전 아동을 중심으로
- 교육부(2018).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 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교육부.
- 교육부(2020).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
- 교육부(2021a).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
- 교육부(2021b).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모든 학생의 코로나 19 극복 지원.
- 교육부(2021c).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안)
- ‘교육부(2021d). 2020 국정과제 실적보고서. 내부자료
- 교육부 보도자료(2020. 10. 5).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 시안 발표.
- 교육부 보도자료 (2021. 4. 20).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 교육과정 논의 본격 착수 -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1-2020).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https://kess.kedi.re.kr/index> (2021.3.10. 인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김진희(2015). Post 2015 맥락의 세계시민교육 담론 동향과 쟁점 분석. 시민교육연구. 47(1), 59-88
- 문무경, 강은진, 강현미, 성은영, 이혜민, 박석환(발간 중). 코로나시기 영유아 교육과 돌봄 기관 공간활용 실태 및 컨설팅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육아정책연구소·건축공간연구원.
- 문무경, 김동훈, 정도영(2021).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의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 박창현, 송기창, 김문정(2017). 2018-2022 유아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 정호연(2021). OECD국가 사례분석을 통한 유아교육에서의 디지털기술

활용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2018). 영유아부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이행과제. 발표자료. 교육 2030 SDG4.2 포럼 [양질의 보편적 영유아 교육: 국내 이행 현황 및 향후 과제] 2018. 10.30. 서울.
- 문무경(2021). SDG 4.모니터링 이행 현황 2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박환보(2016. 11. 15). 왜 세계시민교육을 해야 하는가? 에듀인뉴스.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o+7036>
- 박환보, 조혜승(2016). 한국의 세계시민교육 연구동향 분석. 교육학연구, 54(2), 197-227.
- 박환보, 조대훈, 박경희, 엄정민(2020). 2020 세계시민교육 국내 모니터링 체제 구축 연구.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보건복지부(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7. 1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7, 2018, 2019, 2020, 2021).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0). 2019 국정과제 실적보고서.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2021). 2020 국정과제 실적보고서,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2021). 2021년도 보육 시행계획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12.15.).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더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수립.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8.27.). 아동 중심·아동 권리 실현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 엄문영, 정혜영, 이수지, 한지예(2020). 표준유아교육비 개선방안연구. 교육부.
- 유구종(2012). 유아교육기관 스마트폰, 태블릿 PC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유아의 과학적 사고에 미치는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7(3), 85-110.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15).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유혜영, 김남순, 박환보(2017). 시·도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 정책 현황 분석, 글로벌교육연구, 9(4), 3-33.

- 이강주, 권순형, 양채원, 계보경, 김기현, 김은설, 남창우, 박선화, 송선영, 심한식, 양정승, 임완철, 진민주(2021). 디지털 전환시대의 학습생태계 조성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이주연(2011). 유아교육용 스마트폰 앱에 대한 부모 인식 조사: 유아의 행동패턴에 따른 부모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 조진일, 최형주(2020), 미래형 학교시설 규모 자동 산정 프로그램, 한국교육개발원 이슈페이퍼 IP2020-10.
- OECD(2012). Starting Strong III: A quality tool box. Paris: Author.
- OECD(2017). OECD Key Indicator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ris: Author.
- OECD(2020). Early learning and child well-being: A study of five-year-olds in England, Estonia, and the United States. Paris: Author
- OECD(2021). Using digital technologies for early education during COVID-19 Paris: Author.
- Rich, P. E. Myrick, R. D., & Campbell, C. (1983). Changing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elderly. *Educational Gerontology*, 9(5-6), pp 483-491.
- Shaeffer, S. (2020). The World Post-Covid might be the World Pre-Incheon-or even Pre-Dakar. Asia-Pacific Regional Network for Early Childhood(ARNEC).
- UNESCO(2015).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Paris: Author
- UNESCO(2021). 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 Paris: Author
- UNICEF(2021). Early Childhood Development Index (ECDI) 2030: A new tool to measure SDG indicator 4.2.1.

【서면자문】

- 한정란 (2021. 6월). 저출산 고령사회와 유아교육
- 손찬희 (2021. 6월). 유아교육에의 ICT 활용

【관련 사이트】

국가통계포털-통계청. 인구동향조사-출생,합계출산율 통계(2011-2020)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000F_01&conn_path=I2 (2021.3.11. 인출)

국가통계포털-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11-2020).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2 (2021.3.11. 인출).

국가통계포털-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자료(출산율-중위/기대수명-중위/국제순이동-중위) <http://kosis.kr> (2021. 4. 11. 인출).

국정과제. <https://www1.president.go.kr/government-projects#page3> (2021. 7. 10 인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2021. 4. 20 인출).

유치원알리미. <https://e-childschoolinfo.moe.go.kr/> (2021. 10. 15 인출).

한국보육진흥원 연도별 아린이집 평가현황 <https://www.kcpi.or.kr/kcpi/cyberpr/childcaresat2.do> (2021. 6. 18 인출)

OECD Family database <https://www.oecd.org/social/database.htm> SF.2.1 Fertility rates (2021. 6.17. 인출)

UNICEF 홈페이지.

<https://www.unicef.or.kr/what-we-do/building-future/climate-change> (2021. 6. 18 인출)



Abstract

A Mid-term Plan for the Develop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2022–2027) in Korea

Mugyeong Moon, Misun Yang, Kichang Song & Moonjeong Kim

The study intended to review the outcomes and limitations of the previous 5-year plan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and to suggest directions and key policy tasks of the next 5 year (2022–2027) Plan for the new government by reflecting upon possible changes of the future society and international trends of ECEC policy.

Representative outcomes of 2018–2022 Plan of ECEC are securing finances for the Nuri subsidy until the end of 2022, expanding places for public ECEC services, initiating child-centered and play-based the Nuri curriculum, and providing child allowances to all children 0 to 7 in accordance with national agenda of the current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some limitations include quality gaps in ECEC services, stable funding for Nuri subsidy after 2022, low qualification, initial training systems and low salaries of childcare teachers, high teacher-child ratios, operation of after-school services in kindergartens, and provision of seamless childcare services during the prolonged COVID-19 pandemic.

Data were gathered through questionnaires with diverse stakeholder groups including officials from 17 local governments and local offices of education, 56 experts from academia, and about 3,000 citizens including 1,000 parents of children aged 0 to 6. More than ten meetings were held with kindergarten and childcare associations and practitioners across different ECEC settings. Based on major findings of questionnaires and outcomes and limitations of previous mid-term plans of ECEC, four regional workshops were held with a total of about 80 stakeholders in

order to discuss future directions and key policy tasks for the next 5 years in Korea.

All responded citizens, academia and officials of local governments considered low-birth rates, causing dramatic decreases of the number of children 0 to 5, will continue to have strong impacts on ECEC policies in the future. The responded stakeholder groups emphasized health, emotional regulation, and creativity in young children. The selected priority policy tasks by the respondents are to achieve free ECEC, to integrate ECEC and to enhance quality of ECEC services.

Keywor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Policy, Mid-term plan

부록
부록 1. 다부문 전문가 서면자문(심층면담) 질의서
**2022-2027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한
다부문 전문가 서면자문(심층면담) 질의서**

전문가 성명		소속	
--------	--	----	--

※ 미래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방향성 설정을 위하여 **귀하의 전문분야** 동향과 주요 이슈와 우리사회, 그리고 유아교육과 보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질문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전문분야에서 현재는 물론, 미래 5년-10년간 우리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와 동향은 무엇입니까?

2. 귀하 전문분야의 미래 동향과 주요 이슈를 고려할 때, 귀하께서는 장래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에서 어떠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아교육과 보육의 비전, 목표와 관련) 또는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이 지향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귀하의 전문분야와 관련하여 향후 5년간 유아교육과 보육에서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공통	유아교육	보육
교육/보육과정 관련			
교사 관련 (양성 및 현직교육, 근무여건 등)			
행정			
재정			
기 타			

5. 최근 취학 전 영유아 대상 정책과 서비스를 보다 통합적, 포괄적으로 시행(또는 실시)하기 위하여 부처간, 각종 서비스간(예: 의료, 영양, 교육 등), 학문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또한 실제로 협력이 증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 귀하의 전문분야에서 유아교육과 보육분야와 향후 협력이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며, 2) 보다 효과적으로 부문간 협력하기 위한 전략들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2. 유아교육·보육 학계 전문가 조사 설문지

2022-2027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육아관련 정책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2021년도 기본과제로 「2022-2027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과 제3차 보육중장기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5개년 동안(2022-2027)의 유아교육과 보육 발전 방향 및 실행 과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방향성과 우선적인 정책과제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에 근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본 연구에만 활용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처〉

문무경 선임연구위원 ☎ 02) 398 - 7710, mgmoon@kicce.re.kr

김문정 전문연구원 ☎ 02) 398 - 7719, moon@kicce.re.kr

응답자 정보

1. 성 별	① 남 ② 여	2. 연령	① 30대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3. 소속 및 직위	소속: _____ 직위: _____		
4. 전공	① 유아교육 ② 보육 ③ 기타 ()		
5. 경력	① 대학교수 경력 _____년 _____개월 ② 유치원 총 경력 _____년 _____개월 ② 어린이집 총 경력 _____년 _____개월 (교사, 원감, 원장 경력 합산) ※ 유치원/어린이집 경력이 없는 경우 '0'으로 표기해 주십시오		

I. 2018-2021 유아교육과 보육의 성과 평가

1. 지난 4년간(2018~2021년) 유아교육과 보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은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유아교육					
보육					

- 1-1. 질적 향상 정도가 낮거나, 매우 낮다고 응답하신 경우, 그 이유를 간단히 적어주십시오.

2. 아래에 제시된 문재인 정부의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 1) 정책의 이행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해당란에 표시하시고, 2) 가장 성과가 높다고 여기시는 정책을 우선순위대로 3가지 (1순위, 2순위, 3순위)를 선택해 주십시오.

구 분	이행 정도					성과가 가장 높은 정책 우선순위 (3가지)
	매우 낮음	낮음	높음	매우 높음	잘 모름	
	1	2	3	4	5	
1.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국가에서 누리과정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 및 지원.)						
2.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 기관 이용률 2022년까지 40% 목표 달성 위해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신설)						
3. 취약계층 영유아의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확대 (현재도 실시되고 있는 취약계층 가정[저소득, 다문화, 장애 특수, 조손가정 등의 영유아가 공립기관에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4. 격차 해소를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제고						
5.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및 운영						

구 분	이행 정도					성과가 가장 높은 정책 우선순위 (3가지)
	매우 낮음	낮음	높음	매우 높음	잘 모름	
	1	2	3	4	5	
6. 영유아 대상 사교육 억제 및 놀이와 쉼 중심 프로그램 (취학 전부터 과도한 학원이용을 하지 않도록 하여 부모의 비 용부담을 줄이고 유아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6.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돌봄 기능 확대 (유치원 방과후 과정 및 돌봄교실, 어린이집 연장보육 및 야 간연장보육, 시간제보육 확대)						
7.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안전 (안전교육 확대, 교사 연수 강화, CCTV 설치 확대 등)						
8. 아동 수당 지원 (0-7세 모든 아동에게 월10만원씩 지원하고 있음)						
9. 코로나19 대응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역						

II. 향후 5년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방향 및 추진 과제

1.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우리사회의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순위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저출산으로 인한 취학 전 유아 수 감소
- ② 코로나19 감염병의 영향
- ③ 기후·환경 변화
- ④ 사회 양극화 및 지역 격차의 심화
- ⑤ 글로벌화(사회경제문화의 세계화 및 다문화 추세)
- ⑥ 지식정보사회의 가속화 및 과학기술의 첨단화(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
- ⑦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직업 및 인력수요의 변화
- ⑧ 개개인의 개성, 가치관 및 생활방식의 다양화
- ⑨ 가족형태의 변화(한부모의 증가 등)
- ⑩ 맞벌이 가정의 증대

1-1. 이외에 고려해야 할 사회변화가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2.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우선순위를 보기에서 골라 기입해 주십시오.

1 순위 _____ 2 순위 _____ 3 순위 _____

〈보 기〉

- ① 영유아 심신의 안녕(well-being)/행복
- ② 모든 영유아의 출발점 평등 보장
- ③ 급변하는 사회변화(코로나19, 기후변화, 초저출산 등)에 대한 적응력 강화
- ④ 미래인재 양성(디지털기술 역량 강화 등)
- ⑤ 각종 차별없는(사회경제적 배경, 다문화, 특수장애 등) 포용과 공존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생활(통합교육)
- ⑥ 영유아의 요구/관점 존중 및 참여 강화
- 교육보육활동 및 일상생활 등에 있어서 영유아의 참여 및 주도성
- ⑦ 다양성 존중
- ⑧ 유아교육과 보육의 지속가능발전 추구
- ⑨ 부모의 자녀양육과 돌봄 지원 강화(틈새없는 돌봄서비스)

2-1. 보기 이외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3.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하여 영유아기부터 함양해야 할 능력(역량, 기술) 중 우선적으로 주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창의성

③ 정서/감정 조절 능력

⑤ 문제해결력

⑦ 기본생활습관

⑨ 도덕성

⑪ 시민의식

⑬ 봉사정신
- ② 신체건강

④ 타인 배려

⑥ 의사소통 능력

⑧ 협력

⑩ 정보기술 활용 능력

⑫ 리더십

3-1. 이외에 함양해야 할 능력(역량, 기술 등)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4. 미래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정부가 취학 전 영유아 시기 중 정책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시기는 다음 중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1세 미만

② 만 1~2세

③ 만 3~4세

④ 만5세 (취학 직전 연령)

4-1.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히 적어주십시오.

예) 만1세 미만: 1세 미만의 두뇌발달이 가장 급속히 이루어지므로,
만5세: 초등학교 교육 준비

5. 다음은 2022-2027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 영역 및 세부과제 관련입니다.

5-1. 향후 **정책영역**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정책주제들을 모두 표시하고, 새로이 추가 또는 통합 및 조정되어야 할 정책주제 영역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보 기〉

- ☐ 1.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 완성
- ☐ 2. 만5세 무상의무교육 (초중등교육과 같이 공교육체제에 포함)
- ☐ 3.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 해소 및 체제 통합
- ☐ 4. 취약계층 유아와 가정 지원
- ☐ 5. 아동학대 예방
- ☐ 6. 틈새없는 돌봄 제공
(아침돌봄, 방과후, 저녁돌봄, 야간연장보육 및 시간제보육 등)
- ☐ 7. 영유아, 부모, 교사가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교육보육과정
- ☐ 8. 영유아교원의 수급, 근속 및 전문성 강화
- ☐ 9.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 및 부모역량 강화
- ☐ 10. 유아교육과 보육의 행재정 지원체계 강화
- ☐ 11. 정책수립, 실행 및 효과평가를 위한 연구와 데이터 수집 및 활용

5-1-1. 새로이 추가할 필요가 있는 정책주제영역을 적어주십시오.

5-1-2. 통(폐)합 및 조정이 필요한 정책주제영역이 있으면,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용어, 문구 수정 필요 등)

5-2. 이상의 정책영역(주제)별 우선순위 5가지를 선정하고,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각 해당 정책영역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세부과제들을 적어주십시오.

정책영역	세부 과제 * 필요한 만큼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1) 2) 3)
2순위	1) 2)
3순위	1) 2)
4순위	1) 2)
5순위	1) 2)

6.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관련하여 차기 정부에 대한 건의 또는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3. 시도교육청 담당공무원 조사 설문지

2022-2027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담당공무원 의견 조사 (시도교육청용)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육아관련 정책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연구기관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21년도 기본과제로 「2022-2027 유아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4년간의 유아교육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5년간 정책의 방향성 및 추진과제 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에 근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본 연구에만 활용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처〉

문무경 선임연구위원 ☎ 02) 398 - 7710, mgmoon@kicce.re.kr

김문정 전문연구원 ☎ 02) 398 - 7719, moon@kicce.re.kr

I. 응답자 배경 정보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① 30대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3. 소속 및 직위	① _____(시도)교육청의 _____ 교육지원청 ② 직위: _____		
4. 전공	① 유아교육 ② 기타 _____		
5. 경력	①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전문직 경력 _____년 _____개월 ② 유치원 총 경력 _____년 _____개월 (교사, 원감, 원장 경력 합산) ※ 유치원 현장경력이 없는 경우 '0'으로 표기해 주십시오.		

II.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1) 성과 평가

1. 지난 5년간(2018~2020년) 유아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은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 1-1. 질적 향상 정도가 낮거나, 매우 낮다고 응답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히 적어주십시오.

2. 다음은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2-2027)에서 추진해 온 세부 핵심과제들입니다. 각각의 실행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해당란에 표시해주시십시오.

정책분야	구 분 핵심 과제	실행 수준					2-1. 실행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유아교육 기회 확대	1) 유아 무상교육 지속 확대 (누리과정 연차적 지원단가 상향 조정/						
	2) 국공립유치원 이용율 증대 (공사립 유치원 설치 비율 균형 개선/연령별 학급당 유아 수 제시 등)						
	3) 취약계층 유아 지원						
	4)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급·간식, 보건, 안전의 철저한 점검 실시)						
유아놀이중 심 개정 누리과정 운영	5) 개정 누리과정의 안착화 및 질적 발전						
	6) 교사 누리과정 운영 역량 강화 지원						
	7)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						
부모와 함께 유아의 건강한 발달지원	1) 안심유치원 운영						
	2) 돌봄 공백 해소						
	3)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한 참여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1)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도입						
	2) 유치원 평가 개선						
	3) 행정시스템 고도화						

2-1. 이상의 핵심과제 중 향후 가장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5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4순위 _____, 5순위 _____

3. 귀하가 소속된 시도교육청 유아교육정책 또는 정책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해 주십시오.

3-1. 지난 5년간 (과거에 비하여) 가장 크게 발전/향상된 대표적인 정책(사례)
1) 정책(사례)명: 2) 근거/ 이유
3-2. 귀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유아교육정책 우수사례
1) 우수정책 사례명: 2) 근거/ 이유
3-3. 현재 귀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개선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유아교육 현안 2가지
1) 2)

Ⅲ. 향후 5년간 유아교육정책의 방향 및 추진 과제

1. 향후 유아교육정책의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우리 사회의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순위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저출산으로 인한 취학 전 유아 수 감소
- ② 코로나19 감염병의 영향
- ③ 기후환경 변화
- ④ 사회 양극화 및 지역 격차의 심화
- ⑤ 글로벌화(사회경제문화의 세계화 및 다문화 추세)
- ⑥ 지식정보사회의 가속화 및 과학기술의 첨단화(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
- ⑦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직업 및 인력수요의 변화
- ⑧ 개개인의 개성, 가치관 및 생활방식의 다양화
- ⑨ 가족형태의 변화(한부모의 증가 등)
- ⑩ 맞벌이 가정의 증대

1-1. 이외에 고려해야 할 사회변화가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2. 새 정부에서 향후 유아교육정책의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다음 보기 사항들의 우선순위를 기입해 주십시오.

1 순위 _____ 2 순위 _____ 3 순위 _____

〈보 기〉

- ① 유아 심신의 안녕(well-being)/행복
- ② 모든 유아의 출발점 평등 보장
- ③ 급변하는 사회변화(코로나19, 기후변화, 초저출산 등)에 대한 적응력 강화
- ④ 미래인재 양성(디지털기술 역량 강화 등)
- ⑤ 각종 차별없는(사회경제적 배경, 다문화, 특수장애 등) 포용과 공존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생활(통합교육)
- ⑥ 유아의 요구/관점 존중 및 참여 강화
 - 교육보육활동 및 일상생활 등에 있어서 영유아의 참여 및 주도성
- ⑦ 다양성 존중
- ⑧ 유아교육의 지속가능발전 추구
- ⑨ 부모의 자녀양육과 돌봄 지원 강화(틈새없는 돌봄서비스)

2-1. 보기 이외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3.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하여 유아기부터 함양해야 할 능력(역량, 기술) 중 우선적으로 주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 | |
|---------------|--------------|
| ① 창의성 | ② 신체건강 |
| ③ 정서/감정 조절 능력 | ④ 타인 배려 |
| ⑤ 문제해결력 | ⑥ 의사소통 능력 |
| ⑦ 기본생활습관 | ⑧ 협력 |
| ⑨ 도덕성 | ⑩ 정보기술 활용 능력 |
| ⑪ 시민의식 | ⑫ 리더십 |
| ⑬ 봉사정신 | |

3-1. 이외에 함양해야 할 능력(역량, 기술 등)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4. 미래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정부가 취학 전 영유아 시기 중 정책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시기는 다음 중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1세 미만
- ② 만 1~2세
- ③ 만 3~4세
- ④ 만5세 (취학 직전 연령)

4-1.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히 적어주십시오.

예) 만1세 미만: 1세 미만의 두뇌발달이 가장 급속히 이루어지므로,
만5세: 초등학교 교육 준비

5. 다음은 2022-2027 유아교육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 영역 및 세부과제 관련입니다.

5-1. 향후 정책영역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정책주제들을 모두 표시하고, 새로이 추가 또는 통합 및 조정되어야 할 정책주제 영역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보 기〉

☐ 1. 무상 유아교육 완성

☐ 2. 만5세 무상의무교육 (초중등교육과 같이 공교육체제에 포함)

☐ 3.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 해소 및 체제 통합

☐ 4. 취약계층 유아와 가정 지원

☐ 5. 아동학대 예방

☐ 6. 틈새없는 돌봄 제공

(아침돌봄, 방과후, 저녁돌봄, 야간연장보육 및 시간제보육 등)

☐ 7. 유아, 부모, 교사가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교육보육과정

☐ 8. 유아교원의 수급, 근속 및 전문성 강화

☐ 9.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 및 부모역량 강화

☐ 10. 유아교육의 행정지원체계 강화

☐ 11. 정책수립, 실행 및 효과평가를 위한 연구와 데이터 수집 및 활용

5-1-1. 새로이 추가할 필요가 있는 정책주제영역을 적어주십시오.

5-1-2. 통(폐)합 및 조정이 필요한 정책주제영역이 있으면,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용어 수정 필요 등)

5-2. 이상의 정책영역(주제)별 우선순위 5가지를 선정하고,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각 해당 정책영역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세부과제들을** 적어주십시오.

정책영역	세부 과제 *필요한 만큼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1) 2)
2순위	1) 2)
3순위	1) 2)
4순위	1) 2)
5순위	1) 2)

5. 향후 유아교육 정책 관련하여 건의 또는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4. 시도청 담당공무원 조사 설문지

2022-2027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담당공무원 의견 조사 (시도청용)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육아관련 정책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연구기관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21년도 기본과제로 「2022-2027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17개 시도청과 군청의 보육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4년간의 보육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5년간 정책의 방향성 및 추진과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에 근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본 연구에만 활용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처〉

문무경 선임연구위원 ☎ 02) 398 - 7710, mgmoon@kicce.re.kr

김문정 전문연구원 ☎ 02) 398 - 7719, moon@kicce.re.kr

I. 응답자 배경 정보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① 30대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3. 소속 및 직위	① _____(시도/군청) ② 직위: _____		
4. 전공	① 아동/사회복지 ② 아동학 ③ 기타 (행정학 등 기입해 주세요)_____		
5. 경력	① 시도청 행정직 경력 _____년 _____개월 ② 보육 관련 담당업무 경력 _____년 _____개월		

II. 제3차 보육 중장기 발전계획(2018-2022) 성과 평가

1. 지난 4년간(2018~2021년) 보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은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 1-1. 질적 향상 정도가 낮거나, 매우 낮다고 응답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히 적어주십시오.

2. 다음은 제3차 보육 중장기 발전계획(2018-2022)에서 추진해 온 세부 핵심과제들입니다. 각각의 실행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해당란에 표시해주시십시오.

정책분야	구 분 핵심 과제	실행 수준					2-1. 실행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보육의 공공성 강화	1)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증대(40%)						
	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강화 (컨설팅, 취약보육 서비스 확대 등)						
	3)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보육체계 개편	4) 어린이집 이용 및 지원체계 개선						
	5) 표준보육비용 산정 및 적정 보육료 지원						
	6) 보육과정 개편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	7)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8) 보육교사 적정 처우 보장						
	9)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10) 상시적 품질관리 강화 (평가제 전환, 건강영양안전 관리)						
부모 양육 지원 확대	11)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지원						
	12)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13) 취약보육 지원 개선						

2-1. 이상의 핵심과제 중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우선과제를 5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4순위 _____, 5순위 _____

3. 귀하가 소속된 시도/군청의 보육정책 또는 정책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해 주십시오.

3-1. 지난 5년간 (과거에 비하여) 가장 크게 발전/향상된 대표적인 정책(사례)
1) 정책(사례)명: 2) 근거/ 이유
3-2. 귀 시도/군청 보육정책 우수사례
1) 우수정책 사례명: 2) 근거/ 이유
3-3. 현재 귀 시도/군청에서 개선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보육 현안 2가지
1) 2)

Ⅲ. 향후 5년간 보육정책의 방향 및 추진 과제

1. 향후 보육정책의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우리사회의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순위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저출산으로 인한 취학 전 유아 수 감소
- ② 코로나19 감염병의 영향
- ③ 기후환경 변화
- ④ 사회 양극화 및 지역 격차의 심화
- ⑤ 글로벌화(사회경제문화의 세계화 및 다문화 추세)
- ⑥ 지식정보사회의 가속화 및 과학기술의 첨단화(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
- ⑦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직업 및 인력수요의 변화
- ⑧ 개개인의 개성, 가치관 및 생활방식의 다양화
- ⑨ 가족형태의 변화(한부모의 증가 등)
- ⑩ 맞벌이 가정의 증대

1-1. 이외에 고려해야 할 사회변화가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2. 새 정부에서 향후 보육정책의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다음 보기 사항들의 우선순위를 기입해 주십시오.

1 순위 _____ 2 순위 _____ 3 순위 _____

〈보 기〉

- ① 영유아 심신의 안녕(well-being)/행복
- ② 모든 영유아의 출발점 평등 보장
- ③ 급변하는 사회변화(코로나19, 기후변화, 초저출산 등)에 대한 적응력 강화

- ④ 미래인재 양성(디지털기술 역량 강화 등)
- ⑤ 각종 차별없는(사회경제적 배경, 다문화, 특수장애 등) 포용과 공존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생활(통합교육)
- ⑥ 영유아의 요구/관점 존중 및 참여 강화
 - 교육보육활동 및 일상생활 등에 있어서 영유아의 참여 및 주도성
- ⑦ 다양성 존중
- ⑧ 유아교육과 보육의 지속가능발전 추구
- ⑨ 부모의 자녀양육과 돌봄 지원 강화(틈새없는 돌봄서비스)

2-1. 보기 이외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3.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하여 영유아기부터 함양해야 할 능력(역량, 기술) 중 우선적으로 주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 | |
|---------------|--------------|
| ① 창의성 | ② 신체건강 |
| ③ 정서/감정 조절 능력 | ④ 타인 배려 |
| ⑤ 문제해결력 | ⑥ 의사소통 능력 |
| ⑦ 기본생활습관 | ⑧ 협력 |
| ⑨ 도덕성 | ⑩ 정보기술 활용 능력 |
| ⑪ 시민의식 | ⑫ 리더십 |
| ⑬ 봉사정신 | |

3-1. 이외에 함양해야 할 능력(역량, 기술 등)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4. 미래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정부가 취학 전 영유아 시기 중 정책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시기는 다음 중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1세 미만 ② 만 1~2세
③ 만 3~4세 ④ 만5세 (취학 직전 연령)

4-1.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히 적어주십시오.

예) 만1세 미만: 1세 미만의 두뇌발달이 가장 급속히 이루어지므로,
만5세: 초등학교 교육 준비

5. 다음은 2022-2027 보육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 영역 및 세부과제 관련입니다.

5-1. 향후 **정책영역**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정책주제들을 모두 표시하고, 추가되어야 할 정책주제 영역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보 기〉

- ☐ 1.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 완성
- ☐ 2. 만5세 무상**의무**교육 (초중등교육과 같이 공교육체제에 포함)
- ☐ 3.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 해소 및 체제 통합
- ☐ 4. 취약계층 유아와 가정 지원
- ☐ 5. 아동학대 예방
- ☐ 6. 틈새없는 돌봄 제공
(아침돌봄, 방과후, 저녁돌봄, 야간연장보육 및 시간제보육 등)
- ☐ 7. 영유아, 부모, 교사가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교육보육과정
- ☐ 8. 영유아교원의 수급, 근속 및 전문성 강화
- ☐ 9.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 및 부모역량 강화
- ☐ 10. 유아교육과 보육의 행정지원체계 강화
- ☐ 11. 정책수립, 실행 및 효과평가를 위한 연구와 데이터 수집 및 활용

5-1-1. 새로이 추가할 필요가 있는 정책주제영역을 적어주십시오.

5-1-2. 통(폐)합 및 조정이 필요한 정책주제영역이 있으면,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용어 수정 필요 등)

5-2. 이상의 정책영역(주제)별 우선순위 5가지를 선정하고,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각 해당 정책영역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세부과제들을** 적어주십시오.

정책영역	세부 과제
	* 필요한 만큼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1) 2)
2순위	1) 2)
3순위	1) 2)
4순위	1) 2)
5순위	1) 2)

6. **향후** 보육정책 관련하여 건의 또는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5. 대국민 조사 설문지

2022-2027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육아관련 정책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연구기관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22년도 기본과제로 「2022-2027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대 국민 및 0세~초등 1학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유아교육 과 보육 정책의 방향성 및 정책과제 중요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에 근거하여 비밀이 보장 되며, 본 연구에만 활용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처〉
문무경 선임연구위원 ☎ 02) 398 - 7710, mgmoon@kicce.re.kr
김문정 전문연구원 ☎ 02) 398 - 7719, moon@kicce.re.kr

1. 응답자 배경 정보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만 ()세
3. 교육수준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4년제 대학 재학 ③ 전문대 졸업 ④ 4년제 대학 졸업 ⑤ 대학원 재학 이상		
4. 취업여부	① 취업 ② 휴직 ③ 학업 중 ④ 미취업		
5. 현재직업	① 관리직 ③ 사무직 ⑤ 기술/기능직	② 전문직 ④ 판매/서비스직 ⑥ 일반작업직(노무직)	

	⑦ 농어업/임업/축산/원예업 ⑨ 무급 가족종사자(전업주부)	⑧ 자영업(소규모 업소주인) ⑩ 기타 ()	
6. 결혼여부	① 미혼 ② 기혼(이혼, 별거, 동거 포함)	7. 맞벌이 여부	① 맞벌이 ② 외벌이 ③ 비해당(미혼)
8. 자녀유무	① 있음 ② 없음	9. 자녀 수 및 연령(출생연도)	총 _____명 ① 만 _____세 (출생연도_____) ② 만 _____세 (출생연도_____) ③ 만 _____세 (출생연도_____) ④ 만 _____세 (출생연도_____)
10. 거주지역 (패널이여 불필요)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읍/면/동		
11. 월평균 가구 소득	※ 미혼인 경우,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답하시오. ※ 세전기준으로, 근로소득 및 비근로소득[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을 모두 합한 소득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⑦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⑧ 7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⑨ 8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⑩ 1,000만원 이상		
12. 다문화가정 여부	① 해당 없음 ② 다문화 가정(해당인: 본인/배우자/ 부모)		
14. 장애아 자녀 유무	(유자녀 기혼자만 응답) ① 없음 ② 있음		

[0세-초등 1학년 부모 대상]

I.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경험

1. 자녀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거나, 다닌 적이 있습니까?

- ① 과거 유치원 이용 경험 있고 현재 유치원 다니고 있음 (☑ 1-1번으로)
- ② 과거 어린이집 이용 경험 있고 현재 어린이집 다니고 있음. (☑ 1-1번으로)
- ③ 과거 어린이집 이용 경험 있고 현재 유치원 다니고 있음 (☑ 1-1번으로)
- ④ 과거 유치원 경험 있고 현재 어린이집 다니고 있음 (☑ 1-1번으로)
- ⑤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경험 없음 (☑ 3번으로)

1-1.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 유형에 표시해 주십시오.

유치원	① 공립단설 ④ 사립 법인	② 공립 병설 ⑤ 기 타(국립)	③ 사립 개인
어린이집	⑤ 공립어린이집 ⑨ 법인어린이집	⑦ 민간어린이집 ⑩ 직장어린이집	⑧ 가정어린이집 ⑪ 기타(국립, 부모협동어린이집 등)

1-2. 그 동안 이용한(또는 이용하고 있는) 기관을 선택한 이유를 우선순위로 2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집과의 거리
- ② 프로그램이 우수함
- ③ 교사의 전문성
- ④ 비용이 저렴함
- ⑤ 운영시간이 충분함(장시간 운영)
- ⑥ 시설환경이 안전하고 좋음
- ⑦ 돌봄서비스 이용(아침돌봄, 긴급돌봄, 저녁돌봄 등)
- ⑧ 차량운행으로 등하원이 편리함
- ⑨ 주변에 보낼만한 다른 기관이 없음
- ⑩ 형제자매가 함께 다닐 수 있어서
- ⑪ 초등학교 적응을 위해서
- ⑫ 기 타(적어주세요:)

2.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있음 (☞ 2-1번으로) ② 없음(☞ 3번으로)

2-1. 유치원과 어린이집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신 항목을 모두 선택하고, 가장 차이가 크다고 여기시는 항목을 2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보기 항목	차이가 있는 모든 항목 선택	차이가 가장 큰 항목 선택
① 프로그램		1순위
② 시설환경		
③ 교사의 전문성		
④ 운영 시간		
⑤ 비용		2순위
⑥ 교사 대 아동 비율		
⑦ 기타(적어주세요:)		

3.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로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를 통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 3-1번으로) ② 반대 (☞ 3-2번으로)

3-1. 찬성하시는 경우는 그 이유를 간단히 적어주십시오.

3-2. 반대하시는 경우는 그 이유를 간단히 적어주십시오.

⑥ 영유아의 요구/관점 존중 및 참여 강화
- 교육보육활동 및 일상생활 등에 있어서 영유아의 참여 및 주도성

⑦ 인종, 문화, 사용언어, 성별 등의 다양성 존중

⑧ 유아교육과 보육의 지속가능발전 추구

⑨ 부모의 자녀양육과 돌봄 지원 강화(틈새없는 돌봄서비스)

⑩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3.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하여 영유아기부터 함양해야 할 능력(역량, 기술) 중 우선적으로 주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창의성

② 신체건강
- ③ 정서/감정 조절 능력

④ 공감 및 타인 배려
- ⑤ 문제해결력

⑥ 의사소통 능력
- ⑦ 기본생활습관

⑧ 협력
- ⑨ 도덕성

⑩ 정보기술 활용 능력
- ⑪ 민주시민의식

⑫ 리더십
- ⑬ 봉사정신

⑭ 기 타(적어주세요: _____)

4. 미래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정부가 취학 전 영유아 시기 중 정책적으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시기는 다음 중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1세 미만

② 만 1~2세
- ③ 만 3~4세

④ 만5세 (취학 직전 연령)

4-1.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히 적어주십시오.

예) 만1세 미만: 1세 미만의 두뇌발달이 가장 급속히 이루어지므로,
만5세: 초등학교 교육 준비

5. [미혼만 응답] 향후 자녀가 생긴다면, 귀하는 자녀가 어떠한 교육보육기관(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기를(이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집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

② 프로그램이 우수함
- ③ 교사의 전문성

④ 비용이 저렴함
- ⑤ 운영시간이 충분함(장시간 운영)

⑥ 시설환경이 안전하고 좋음
- ⑦ 돌봄서비스 이용(아침돌봄, 긴급돌봄, 저녁돌봄 등)
- ⑧ 차량운행으로 등하원이 편리함
- ⑨ 급간식의 질이 좋음
- ⑩ 초등학교 교육 준비, 적응을 잘 할 수 있음
- ⑪ 기 타(적어주세요:)

6.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아래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대하여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정책 중요도					1-1. 우선순위 기입 (1, 2, 3, 4, 5 순위까지)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1)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 완성(0-5세)						
2) 만5세 의무·무상교육 (초·중등학교 교육과 같이 공교육체제로 포함)						
3)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의 체제 통합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할부처가 각각 교육부와 복지부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관할부처를 일원화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과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4) 취약계층 영유아와 가정 지원 강화						
5)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6) 틈새없는 돌봄서비스 제공 (코로나19 시기와 같이 긴급돌봄, 아침/저녁 돌봄, 초등돌봄과의 연계)						
7) 아동학대 예방						
8) 부모의 자녀양육 역량 강화 지원 (부모교육, 상담 제공 등)						
9) 초등학교교육과의 연계 강화						
10) 기타(적어주세요: _____)						

7. 향후 영유아교사가 되려면 적합한 자격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영유아교사는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를 합하여 지칭한 것임)

- ① 고졸 후 일정기간 교육 ② 2,3년제 전문대 졸
- ③ 4년제 대학 졸 ④ 대학원 졸(석사)
- ⑤ 기타(적어주세요: _____)

8. 정부는 2022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아동 1인당 월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향후 2025년까지 월50만원까지 지급 예정임). 귀하는 0-1세 자녀양육 관련하여 어느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영아수당을 지급받아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한다.
- ② 영아수당을 받지 않고 보육기관(어린이집)을 이용하여 자녀를 양육한다.

[0세~초등1학년 자녀 부모 대상]

Ⅲ. 지난 4년간(2018-2021)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평가

1. 아래에 제시된 문재인 정부의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 1) 정책의 이행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해당란에 표시하시고, 2) 가장 성과가 높다고 여기시는 정책을 우선순위대로 3가지(1순위, 2순위, 3순위)를 선택해 주십시오.

구 분	이행 정도					성과가 가장 높은 정책 우선순위 (3가지)
	매우 낮음	낮음	높음	매우 높음	잘 모름	
	1	2	3	4	5	
1.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국가에서 누리과정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 및 지원.)						
2.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 기관 이용률 2022년까지 40% 목표 달성 위해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신설)						
3. 취약계층 영유아의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확대 (현재도 실시되고 있는 취약계층 가정[저소득, 다문화, 장애 특수, 조손가정 등의 영유아가 공립기관에 우선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함)						
4. 격차 해소를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제고						
5.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및 운영						
6. 영유아 대상 사교육 억제 및 놀이와 쉼 중심 프로그램 (취학 전부터 과도한 학원이용을 하지 않도록 하여 부모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유아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6.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돌봄 기능 확대 (유치원 방과후 과정 및 돌봄교실, 어린이집 연장보육 및 야간연장보육, 시간제보육 확대)						
7.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안전 (안전교육 확대, 교사 연수 강화, CCTV 설치 확대 등)						
8. 아동 수당 지원 (0-7세 모든 아동에게 월10만원씩 지원하고 있음)						
9. 코로나19 대응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역						

6. 지난 4년간(2018~2021년) 다음 각 부문에서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에 대하여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만족도					1-1. 만족도가 매우 낮거나 낮은 경우, 그 이유를 간단히 적어주십시오.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1) 유아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2) 보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3) 보육료 지원 수준(2021년 0~2세 보육료 0세)						
4) 누리과정 지원비 수준 (2021년 현재 3~5세 유아 1인당 월26만원)						
5) 놀이중심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충실성						
6) 교사교육 및 컨설팅 활성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						
7) 부모와의 소통 및 참여 수준 (유치원/ 어린이집)						
8) 교사 대 아동 비율						
9) 급간식의 질적 수준						
10) 시설환경(위생 청결, 안전 강화 등)						
11) 돌봄서비스(아침돌봄, 방과후, 저녁돌봄, 야간연장보육 및 시간제보육 등)						
12)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13)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의무 평가제 전환						

[0세~초등1학년 자녀 부모 대상]

Ⅳ.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중장기 정책

1.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아래 정책 과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대하여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정책 중요도					1-1. 우선순위 기입 (1, 2, 3, 4, 5 순위까지)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1)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 완성(0-5세)						
2) 만5세 의무·무상교육(초중등학교 교육과 같이 공교육체제로 포함)						
3)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의 체제 통합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할부처가 각각 교육 부와 복지부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관할부처를 일 원화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과 재정의 효율성 을 도모한다.)						
4) 취약계층 영유아와 가정 지원 강화						
5)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6) 틈새없는 돌봄서비스 제공(코로나19 시기와 같이 긴급보육, 아침/저녁 돌봄, 초등 돌봄과 연계)						
7) 아동학대 예방						
8) 부모의 자녀양육 역량 강화 지원 (부모교육, 상담 제공 등)						
9) 초등학교교육과의 연계 강화						
10) 개별아동의 요구와 참여를 반영한 교육보육과정 운영						순위 응답 없음
11) 우수한 교사의 채용과 근무를 위한 처우개선 및 복지 향상						
12) 원장의 전문성과 리더십 강화						
13) 스마트 교육과 돌봄 시설환경						
14)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한 IOT(AI) 보육교육 환경 조성						
15)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2. 향후 정부가 다음에 제시된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과제를 추진할 필요성 정도에 대하여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① 전혀 필요하지 않음	② 별로 필요하지 않음	③ 어느정도 필요	④ 배우 필요	⑤ 모르겠음
1) 영유아가 가정에서 부모와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방과후 돌봄 및 야간연장보육 이용대상을 현재의 모든 가정 영유아에서 맞벌이가정 영유아로 제한한다.					
2) 유치원 무료급식 제공					
3) 아동 1인당 보육실(교실) 면적 확대					
4) 감염병 대비 방역, 위생 청결, 안전 강화					
5) 향후 시도교육청과 시도청의 자율권을 보다 강화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이 실행되도록 한다.					
6)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에 공립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동시에 정부의 관리감독을 유사한 수준으로 받도록 한다.					
7)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 및 제반 교육보육활동에의 부모참여와 소통을 강화한다.					
8)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다른 아동서비스(의료, 보건, 영양 등)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3. 귀하께서 향후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과 관련하여 바라시거나 건의하시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2-2027
유아교육·보육 종장기 발전방안 연구